‘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 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

조갑제닷컴

■ 머리글

‘총성 없는 교실 쿠데타’의 武器

중국의 毛澤東(모택동)은 “國力은 한 상자의 武器(무기)를 만들어 내지만, 武器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은 이데올로기[理念]”라고 했다. 이는 戰爭(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간의 信念(신념)체계를 지배 ·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한 말이다.

독일의 나치는 1930년대부터 청소년들을 그들의 선전 · 선동 메시지 전달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수백만의 독일 청소년들이 교실과 특별활동에서 독일민족지상주의와 人種論(인종론)에 기반을 둔 국가사회주의의 洗腦(세뇌)교육을 받았다.

그 결과 1933년 5만 명에 불과했던 히틀러의 소년단원은 1936년 54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1939년에는 모든 청소년의 가입이 의무화 됐다. 나치는 또 기존 공립학교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교육계에서 퇴출시켰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자들을 ‘국가사회주의 교사연합’에 加入(가입)시켰다.

1936년 경 독일 공립학교 교사의 97%에 해당하는 30만 명의 교사들이 이 조직에 가입했다. 나치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어떤 직업보다 교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나치가 만든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입학하는 첫날부터 히틀러에 대한 사랑,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인종주의, 反유태주의를 가르쳤다.

나치 교사들로부터 洗腦교육을 받은 독일 청소년들은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도 ‘늑대인간들’이라는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 전투를 계속했다. 연합군은 이듬해 이들 조직을 一網打盡(일망타진)한 뒤 ‘脫나치’ 교육을 실시하고, 12년간의 나치 통치의 洗腦를 씻어내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처럼 한물간 洗腦교육이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李明博 정부 들어 새로 발간된 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독재는 비호 · 美化하고, 대한민국 현대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정상적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로 點綴(점철)되어 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총 9명의 교수 필진 가운데 8명이 左派성향이며 28명의 교사 필진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대한민국 建國(건국)을 기술하면서 ‘建國’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6種 중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 26번에 걸쳐 '독재' 라 지칭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 라는 표현을 5회만 썼다. ▲남한 인권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북한 인권문제(강제수용소, 주민 학살 및 공개처형)는 다루지 않았다. ▲정부의 허락 없이 入北, 反국가 활동을 한 문익환과 임수경을 法에 따라 처벌한 것을 두고 '탄압'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공산당이 주도한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및 '농민저항운동' 이라고 미화했다. ▲6 · 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양민학살을 국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보복 및 인민재판이라고 비호했으며, 北核문제를 기술하면서 북한의 核실험을 다루지 않았다. ▲6種 중 3종의 교과서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을 일체 다루지 않았다. ▲反軍 선동영화 '화려한 휴가' , 反美선동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을 보도록 권했다.

이들 교과서는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左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左派정권 시절 보다 더 左派적인 불온문서 수준의 교과서가 나왔다. 이러한 좌경적 교과서 기술은 집필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사학계의 구조적 문제점과도 연관이 있다. 親北 · 계급史觀이 지배하는 국사학계 일각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左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 와 '북한에 대한 환상' 을 키워줄 것이다. 이는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이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했던 바로 그 방식이다. 북한은 우리가 갖지 못한 전략적 무기 두 개를 갖고 있다. '核무기' 와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 이다.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남한을 압박하고 여론을 변화시켜

容共(용공)정권을 세운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1 對 1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전교조 교사들과 左편향 교수 필진에 의해 쓰인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희망을 더욱 굳힐 것이다. 年間 7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反대한민국-친북적 교육을 받고 10년만 기다리면 700만 명의 友軍이 생길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 레닌은 "나에게 한 世代의 젊은이들을 달라. 그러면 世上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대로 두면 반역적 교과서로 洗腦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반역적 世代가 되어 대한민국 體制(체제)를 뒤엎는 紅衛兵(홍위병)이 될 것이다.

左편향 6種 교과서는 부분적인 수정으로 毒性(독성)을 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검정을 취소하고, 필진 및 검정과정을 조사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에 회부해야 할 성질의 책이다. 정부가 국가정체성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左傾 교과서를 무기로 국가의 理念을 뒤집는 일종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 '총성 없는 쿠데타' 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울 때 이 책은 하나의 물증으로 제출될 것이다.

2011년 8월

金泌材(筆陣을 대표하여 씀)

차례

머리글 '총성 없는 교실 쿠데타'의 武器 6

1부 누가 썼나?

1장 筆陣 분석: 51%가 전교조 교사 및 좌편향 교수

1. 집필진 이념 성향 16
   - ▲ 삼화출판사: 교사 필진 6명 中 4명 전교조 출신
   - ▲ 천재교육: 교수 필진 5명 中 4명 左편향 인사
   - ▲ 미래엔컬처그룹: 교수 필진 2명, 左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거부
   - ▲ 지학사: 정재정 교수, 2007년 7월 국보법 폐지 서명
   - ▲ 비상교육: 도면회 교수, 左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거부
   - ▲ 법문사: 교사 필진 5명 中 2명 전교조 출신
2. 대한민국 建國 정당성 부정자들 29
3. 국회 敎科委 소속 의원 이념성향 33

2장 憲法과 理念을 외면한 敎科部의 '교과서 집필 기준'

1. 헌법 정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결여 38
2.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是非 판단 실종 39
3. 트루먼의 결단 소개해야 42
4. 李承晩·朴正熙의 부정적 측면 강조하도록 유도 43
5. 北의 對南도발 게재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어 45
6. 憲法이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 외면 46

3장 더 나빠진 新種 교과서

1. 金大中 교과서보다 더 왼쪽으로 간 李明博 교과서 48
2. 앞은 '필수', 뒤는 '선택' 65

4장 선진국의 歷史 교과서 논쟁 사례

1. 護憲(호헌) 세력의 승리로 끝난 美國 70
2. 국가수반이 직접 나서 自國史 긍정 교육 도입한 英國 77
3. 프랑스 歷史교육의 핵심가치: '개인'과 '자유' 81

2부 어떻게 썼나?

5장 建國의 정당성 부정

1. '대한민국 建國'이란 표현 말살 84
2. 中道·中立을 美化 87
3. 制憲(제헌) 헌법의 정신을 '민족 사회주의'로 왜곡 107
4. 공산주의자 呂運亨(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美化 111
5. 金日成의 抗日(항일) 집중 부각 119
6. 교과서에서 사라진 李承晩의 독립운동 130
7. 공산당의 10월 폭동을 '10월 봉기'로 美化 137
8. 建國 초기 美군정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146

6장 편향된 편집

1. 사진 분석: 군복에 굳은 얼굴 朴正熙, 웃으며 악수하는 金大中 154
2. 北의 선전문구 같은 제목들 163
3. 反軍, 反美, 反韓的 소설 · 영화 추천 169
4. 성공한 독일통일은 단점만 記述, 베트남 共産통일은 발전상 부각 176

7장 建國 · 건설 세력 일방적 매도

1. 이승만 · 박정희는 업적 축소 · 외면, 김대중 · 노무현은 美化 180
2. 두 교과서, 南韓정부에 26회, 北정권에 5회 '독재' 지칭 206
3. 李承晩, 朴正熙는 과연 독재자인가? 210
4. 對共수사 비방 217

8장 6 · 25 왜곡 및 反軍 선동

1. 김일성의 전쟁 범죄 서술 소홀 226
2. 中共軍의 不法침략을 '참전'이라 표현 230
3. 인민군에 의한 학살 축소 · 비호 235
4. 6 · 25 參戰 결단한 트루먼, 인천상륙작전의 英雄 맥아더 언급 배제 239
5. 피카소의 反美선동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소개 246
6. 建軍이 建國의 초석 253
7. 5 · 16 군사혁명의 업적 貶下 259
8. 광주사태 서술하면서 계엄군만 집중 비판 263
9. 국방비를 '反평화' 비용으로 매도 267

9장 철저한 계급 史觀

1. 노동자 · 농민 · 貧民 중심의 서술 276
2. 전태일 vs. 이병철 · 정주영 285
3. 용산放火사건을 도시貧民 문제처럼 소개 292
4. 反세계화 시위로 '할복자살'한 농민도 등장 295

10장 北의 잘못 덮어주기

1. 교과서가 빼버린 사실들 300
2. 민족공멸의 北核도 비호 306
3. 北의 사회주의 건설 운동에 대해 긍정적 서술 일관 311
4. 실패한 北 토지개혁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南은 부정적으로 318
5. '화폐개혁' 은폐하고 '북한식 개혁개방' 선전 326
6. 北의 주체사상 선전영화가 교과서에 등장 330
7. 北의 전체주의 교육을 비판 없이 소개 333
8. 실패한 北의 비날론 생산, "北 의복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소개 335

11장 천안함 폭침 등 北의 도발 은폐

1. 南 인권문제는 신랄하게, 北 인권문제엔 침묵 340
2. 對南 도발에 침묵 353

1부
누가 썼나?

1장 筆陣 분석: 51%가 전교조 교사 및 좌편향 교수
2장 憲法과 理念을 외면한 教科部의 '교과서 집필 기준'
3장 더 나빠진 新種 교과서
4장 선진국의 歷史 교과서 논쟁 사례

1장

筆陣 분석: 51%가 전교조 교사 및 좌편향 교수

1. 집필진 이념 성향

좌경학회 소속
親北 · 계급 史觀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교수도 집필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는 左派(좌파)성향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했다. 9명의 교수 출신 필진 가운데 8명이 좌파성향이며, 28명의 교사 출신 필진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특히 법문사와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는 친북적 · 계급史觀(사관)이 두드러져 말썽이 된 '한국 근 · 현대사'(금성출판사刊) 집필에 참여했던 2명의 교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37명의 필진 가운데 적어도 19명(51%)의 필진이 左派성향으로 확인됐다.

▲ 삼화출판사: 교사 필진 6명 中 4명 전교조 출신

삼화출판사刊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6명의 일선교사로, 전교조 및 전교조의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전역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중현(양재高, 전역모), 박범희(중앙高, 전역모), 김쌍규(잠실高), 정행렬(도봉高) 등 4명의 교사 필진이 전교조 회원이며, 이인석(문정高)은 전역모 회원이다. 이인석은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 · 현대사' 집필에도 참여했다.

전역모는 전교조의 前身(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 출범 시기와 비슷한 1988년 '역사교육을위한교사모임'으로 창립되어 199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역모는 현재 2000여 명(전체 역사교사의 1/3)의 역사교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단체는 그 동안 전교조와 함께《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일본의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韓日(한일)공동역사교과서인《조선통신사》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전역모는 2003년 3월2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가 주도한 國軍의 이라크 파병 반대성명에 '역사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단체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세력의 후예들이 자행한 또 다른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른바 '역사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전역모는 각 지역 산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조직되는 비상시국회의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

과 모든 역사교사들의 탄핵무효 운동 적극 참여를 결의했다.

▲ 천재교육: 교수 필진 5명 中 4명 左편향 인사

천재교육刊 교과서에는 6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은 8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교수 출신 집필자 5명 가운데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국사학과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임성모 연세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이 좌편향적인 '역사문제연구소'(이사장 서중석)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다. 주진오, 박찬승 교수는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반대해온 학자이다. 교사 출신 집필진 3명 중 경규칠(세화여高), 송옥란(신현高) 2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교수 출신 집필진 가운데 주진오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근대화를 긍정한 '교과서포럼'(대표 박효종)의 대안 교과서를 끊임없이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2월3일 전북민주동우회 12월 월례회의(제목: 위험한 대안, 위기의 역사 교육)에서 대안 교과서가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 서술을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교과서포럼은 대안 교과서를 출간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에서 현행 교과서가 북한 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은 체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북한 수령 체제의 역사와 '한 지평에서 병렬적으로 서술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역사는 '보론'의 형식으로 체제를 달리하여 책 말미에 붙였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 후기 정통론적 역사의식과 서술을 연상시킨다."

그는 또 남북한 분단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소련과 北의 지배 집단이 먼저 분단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여기에 맞서 남쪽도 분단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었을까? 같이 분단 정부를 수립해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는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분단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민족의 통합과 미국과 소련의 타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단을 저지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한쪽에 정권이 서고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한쪽은 국가도 군대도 만들지 말고 가능성이 全無한 美蘇 타협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공산정권에 먹히는 자살의 길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이 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建國(건국)을 했느냐고 비방하는 모양새이다.

박찬승 교수(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상임부위원장)는 《마을로 간 한국전쟁》의 저자로 주진오 교수와 함께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를 비판해왔다. 그는 계간 〈역사비평〉을 통해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는 개화파, 식민지배, 이승만, 박정희 등을 정당화하려는 편파적 서술이 많고, 곳곳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를 잘못 적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5월28일자 인터넷 〈한겨레신문〉)

박 교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2001년 2월 강정구(동국대), 조희연 · 정해구(성공회대), 주진오(상명대) 교수 등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교수 1인 시위'를 벌였다. (2001년 2월14일자 〈오마이뉴스〉, 2001년 2월19일자 〈교수신문〉)

"北,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 · 25 일으켜"

이신철 교수는 국보법 폐지론자로 2008년 11월21일 〈위클리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시대에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것은 정당하다.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 · 25를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김일성의 남침을 정당화했다. 그는 또 '북한에도 국보법과 같은 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北의 사회안전법도 국보법과 논리적 구성이나 처벌이 유사하다고 들었다. 정치범수용소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관건인데 고문 여부는 알 길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전향장기수 돌려줄 때 북한에 국군포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북파시켰던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마치 우리는 북파한 간첩이 없는 것처럼 잡아뗀다"면서 북한 정권을 옹호했다.

임성모 교수는 2002년 10월5일 역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 경험과 박정희 시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2009년에는 5월27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 후 같은 해 6월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주도한 이른바 '역사연구단체 6 · 10 시국성명'에 참여했다. 당시 시국성명은 李明博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民生(노동자 · 장애인 · 빈민을 위한 사회정책), 民主(집회 · 결사의 자유 보장), 民族(남북 화해 정책) 문제와 관련된 대책 마련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따른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 출신 필진 5명 중 4명은 역사문제연구소 출신이다. 문제의 연구소(1986년 설립)는 정관에서 "민족사학을 지향하는 역사학의 연구 활동 및 교육지원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활동을 보면 《민족해방운동사-쟁점과 과제》, 《민중과 유토피아》, 《카프문학운동연구》 등 사회주의 운동 중심의 역사 단행본을 비롯, '한국전쟁은 민중에게 무엇이었나'(2000년), '1920년대 사회주의와 청년담론'(2004년), '박헌영 전집 출판기념 심포지엄'(2004년) 등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및 대중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서중석, "대한민국 '建國'이란 표현, 맞지 않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학자로 2008년 8월24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이 더 정확한 말이지요.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좀 창피한 일 아닌가요?"

그는 또 이승만이 "친일파로 하여금 독재정치나 부정선거를 하는 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정 수립은 미국의 對韓(대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승만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애써 建國세력의 주체적 역할을 부인했다. 이야말로 민족의 결단을 폄하하는 사대주의적 自虐(자학)사관이다.

역사문제연구소에는 강만길(고문), 박원순(감사), 임헌영(운영위원), 강정구(연구위원) 등의 친북-좌파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 가운데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은 줄곧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한총련 합법화를 주

장해온 인물이다.

박원순(변호사)은 2008년 2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이다"(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3》 160페이지)라는 주장을 해왔다. 북한 정권의 학살과 탄압을 몸으로 증언하는 2만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독일 지식인들보다 더 나쁘다.

임헌영(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 사건 등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남민전 사건은 1960년대 인혁당, 통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 · 농민 ·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된 지하공산혁명조직이다. 이 사건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간첩사건으로 관련자만 해도 84명(불구속자 포함)이 넘었다. 남민전은 安龍雄(안용웅) 등이 越北(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았으며, 남한 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戰線旗(전선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강정구(前 동국대 교수)는 줄곧 '6 · 25 南侵(남침) 유도설'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0년 6월1일 모교에서 가진 고별강의에서 "천안함 事件化(사건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구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주도한 발악"이라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건화'"라고 주장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2010년 발표한 '친북반국가행위자 100인' 명단에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계(전 · 현직) 관계자가 총 17명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 · 운영위원 · 자문위원 · 연구위원이다. 해당 명단은 △리영희(2010년 사망, 前 한양대 교수) △강정구(前 동국대 교수)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한홍구 ·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이다.

▲ 미래엔컬처그룹: 교수 필진 2명, 左편향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수정 거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6명으로 교수 출신이 2명, 교사 출신이 4명이다.

교수출신 집필자인 韓哲昊(한철호) 동국대 교수와 金基承(김기승) 순천향대 교수는 2008년 10월8일 역사교육연구회 등 21개 단체와 함께 교과부의 左편향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거부했던 학자들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인 韓哲昊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겨우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1940년대 냉전시대의 산물인 좌 · 우 편향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역사가 퇴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韓 교수는 2004년 10월27일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성명'에 참여했으며,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 주도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 金基承(김기승) 교수와 함께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金基承 교수는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사 연구－배성룡의 진보적 민족주의론》,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배성룡과 안광천의 국가건설 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등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을 주로 연구해왔다.

4명의 교사 출신 필진 가운데 김인기(등촌高, 고려대 사학과卒), 조왕호(대일高, 고려대 사학과卒)는 2006년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진영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006년)을 내놓자, 이에 대응하여 같은 시기에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이 책은 근현대사를 서술하면서 김일성의 抗日(항일)행적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이승만 ·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월 혁명',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승리' 등의 제목을 달아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主役(주역)인 두 대통령을 '독재자'로 폄하했다.

두 교사는 2006년 5월 親北성향의 월간잡지 〈민족21〉(62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에게만큼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를 펴낸 마흔아홉 동갑내기 김인기(서울 등촌고), 조왕호(서울 대일고) 교사……. (중략) 이들은 '근현대사 논쟁'의 새 판짜기까지를 과감히 선언한다. 같은 대학 사학과 동기로 만나 지난 2003년에는 한국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의 공동 집필까지 맡았던 이들이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불리는 근현대사 논쟁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냐는 물음에 조왕호 교사가 웃으며 답한다. 하지만 이들이 펴낸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에는 어딘지 모르게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책이라고나 할까. 한

예로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서술을 들 수 있다.

"동북항일연군은 유격전을 통해 일제에 타격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중략) 백두산 지구로 진출한 조선인 유격부대들은 국내 진공작전도 전개하여 일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일성이 인솔한 2군 6사의 보천보 전투입니다."〉

김일성의 역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파출소 습격사건 정도인 보천보 사건을 대규모 군사작전인 것처럼 美化하고 과장한 사람이 대한민국 교과부가 검정해준 한국사 교과서의 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왜곡의 제도화를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보장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 지학사: 정재정 교수, 2007년 7월 국보법 폐지 서명

지학사刊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5명으로 교수 출신이 1명, 교사 출신이 4명이다. 교수 출신 집필자인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0년 7월1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이 주도한 국보법 폐지 성명에 75개 대학 1472명의 교수들과 함께 서명했다.

민교협은 좌파성향 교수들의 협의체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중연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좌파 단체와 연대해왔다. 단체는 2002년 5월30일 250개 단체 공동성명에서 김정일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해 온 한총련, 범민련에 대해 "애국애족과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한결같이 걸어온", "조국통일의 이름으로 치하를 해도 모자랄 판", "일신의 안락을 마다하고 오직 조국사랑과 민족사랑에 의거하여 한발 한발 걷고 있는" 운운하며 합법화를 주장했다.

정재정 교수는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2005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는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 파기 촉구 성명에 1008명의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교사 출신 필진 4명 가운데 장종근(경기高) 교사는 전교조 소속이며, 오창훈(반포高) 교사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이다. 나머지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비상교육: 도면회 교수, 左편향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수정 거부

비상교육刊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7명으로 교수 출신이 1명, 교사 출신이 6명이다. 교수 출신 필진으로 현대사 부분 집필에 참여한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교과부의 左편향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거부해온 학자다. 그는 2008년 11월11일 역사학자 676명이 참여한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 의 서명 및 모금 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교과부의 수정권고 조치에 대해 선언문은 "교과부의 수정권고는 정부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 서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도 교수는 고은(시인), 백기완(사회주의자), 서중석(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등과 함께 남로당 首魁(수괴) '而丁(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강정구(前 동국대 교수),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6명의 교사 출신 집필자 가운데 2명이 교총 소속이며, 나머지 교사 출신 필진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문사: 교사 필진 5명 中 2명 전교조 출신

법문사刊 교과서는 5명의 현직 교사가 필진이며, 이 중 최준채(잠신高), 윤영호(한성과학高) 등 2명이 전교조 소속이다. 이인석(삼화출판사刊 필진)과 함께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 · 현대사' 필진이었던 남궁원(서울高)이 법문사刊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교과서의 이 같은 左편향 문제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과서 필진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출판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교수 필진을 事前에 걸러낼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과서 필진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느냐' 는 질문에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교수, 교사)이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A4용지 18페이지(세계사 부분 제외) 분량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을 만들어 놓고 전교조 출신 교사 등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필진들을 걸러낼 '법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했던 A교수는 위와 같은 교과서 필진 선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검정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 11명의 검정위원 대다수가 40대 중후반이다. 이 가운데 교사 출신이 5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검정위원들에게 교과서 서술과 관련, 따로 서류를 작성해 문제를 제기했지

만 '이건 어렵다' 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교수는 "내용개정과 함께 정부가 집필진을 선정 · 관리하는 國定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이 다시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種 교과서 필진 37명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구성

"이승만-박정희 美化, 민주주의 성과 부정하는 것"

새로 발간된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 중 천재교육 筆陣(필진)으로 참여했던 주진오 교수가 보수 진영의 교과서 좌편향 문제 제기에 대해 '색깔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주 교수는 2011년 5월8일 〈경향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고 체제를 옹호하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보수 진영의 잇따른 '좌편향 교과서' 수정요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고 동의할 수 없다.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에 그는 최근 6種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37명 전원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북한보다 남한의 역대 지도자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 데 대해 "서술 분량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당연한 차이"라고 말했다. 左편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國定(국정)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육 내용을 재단하려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 등과 함께 천재교육刊 교과서를 집필한 주 교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해온 학자다. 주 교수와 박 교수는 2008년 계간 〈역사비평〉을 통해 보수성향의 '교과서포럼'(대표 박효종)이 발간한 대안 교과서에 대해 "개화파, 식민지배, 이승만, 박정희 등을 정당화하려는 편파적 서술이 많고, 곳곳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를 잘못 적었다"고 평가했었다.

2. 대한민국 建國 정당성 부정자들

建國節 제정 반대 학자들 대거 참여

'建國' 대신 '정부 수립' 또는 '출범'으로 용어 통일

출판사	교수출신 집필진	建國節(건국절) 제정 반대 단체 참여 인원
천재교육	5명	4명(역사문제연구소)
비상교육	1명	1명(한국역사연구회)
미래엔컬처그룹	2명	1명(한국근현대사학회)
지학사	1명	1명(역사문제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삼화 · 법문사	無	無
총원	**총 9명**	**총 7명**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 필진에는 교수 출신이 모두 9명이다. 이 중 7명이 2008년 건국절 제정 철회를 요구했던 역사학회에 소속되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는 2008년 8월12일 정부 주도의 '건국 60주년' 사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건국절과 現代史(현대사) 박물관 건립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을 바꾼다면 이는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을 경축하자는 것으로 된다"면서 '건국절 제정'이 광복절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日帝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특정인을 國父(국부)로 만들려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편향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특정인'은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다.

성명은 정부가 현대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학계의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일부 학자들의

편향된 시각만 담긴 박물관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박물관 건립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성명에 참여한 14개 단체 가운데 高校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속한 단체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4개 단체로 압축된다.

천재교육의 경우 교수 출신 집필진 5명 中 주진오 상명대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 연구교수, 임성모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이사장 서중석)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학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남북한 '정부수립론'을 주장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엔컬처그룹의 경우 2명의 교수 출신 필진 가운데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한국근현대사학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비상교육의 유일한 교수 출신 필진인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이다.

지학사의 경우 정재정 시립대 교수가 유일한 교수 출신 필진으로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역사교육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문사와 삼화출판사의 필진은 전원 교사 출신으로 교수 출신 집필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이란 표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史觀은 새로 발간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種 교과서 모두 '建國'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출범'으로 용어를 통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탄생을 불행한 사건처럼 치부해 놓았다. 반면 憲法상 反국가 傀儡(괴뢰)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수립'(천재교육, 비상교육), '북한 정부가 수립되다'(미래엔컬처그룹), '북한의 정부 수립'(법문사), '북한에서 수립된 정권'(삼화출판사), '북한 정권의 수립'(지학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자료 전교조 참교육의 실체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건설 위해 초 · 중 · 고등학생까지 혁명戰士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 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誤認(오인)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민주 · 민중 · 민족 교육'을 상정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全學聯 三民鬪委(전학련 삼민투위) 사건 이후 '민주 · 민중 · 민족'이란 三民(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이다.

'民族(민족)'은 우리나라를 美帝의 식민지 내지 新식민지로 인식, 美帝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다.

'民主'(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독재로 인식,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民衆'(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민이념이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利敵(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 · 민중 · 민족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 놓은 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三民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민중'과 '인

간화 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 전술의 함정이 있다.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 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1989년 5월27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다시피 이들은 참교육이 의식화 교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당히 자부하면서 다만 이를 '좌경' 의식화 교육이라고 왜곡 · 매도하는 정부가 잘못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 · 민주 · 민중 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적 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이념을 가르치는 의식화 교육이란 결국 좌경의식화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초 · 중 · 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는 1989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 · 복권(1993년 12월24일)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여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햇볕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對北 · 對共 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교조가 親北 · 親共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버렸고 그 여파로 여태까지도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초 · 중 · 고등학생에 대해서부터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전교조 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가공할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불문가지)라 할 것이다.

물론 전교조 참여 교사 중에는 주도세력의 불순의도를 모르고, 진실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전교조 운동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善意(선의) 내지는 無知(무지)만을 믿고 위험한 전교조 활동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공안수사 당국으로서는 선량한 교사 · 학생 · 국민들이 전교조 主導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도,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이 원래는 좋은 뜻인데 최근에 들어 우연히 좌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본래 이념 자체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혁명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高永宙(고영주, 변호사, 前 서울남부지검장)

3. 국회 敎科委 소속 의원 이념성향

교육 관련 입법기관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敎科委) 소속 의원들 중 새로 발간된 6종의 左편향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敎科委는 현재 변재일(민주당)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12명의 한나라당 의원, 6명의 민주당 의원, 권영길(민노당), 이상민(선진당), 유성엽(무소속) 등 총 21명이 활동 중이다.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규탄에 반대한 이

변재일 국회 교과위 상임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0년 6월23일 천안함 폭침 사태와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對北규탄결의안 표결 당시 김부겸, 박지원, 정동영 등 69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변 위원장은 또 2004

년 전국교수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좌파단체가 주도한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의 지지후보 명단에 김대중, 김희선, 임종석 등 친북 · 좌파성향의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 敎科委 소속 의원 중 안민석 간사는 '6 ·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2005년 7월29일 한총련 사면 촉구 성명에서 한총련 관계 수배 및 수감자들에 대한 전원 사면을 요구했다.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주도한 '6 · 15 선언 국가기념일제정 촉구결의안'에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노동당 강기갑 등의 의원들과 함께 서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전교조가 주도한 '교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교과부가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2010년 10월 보수성향의 대구시 · 경상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민노당 의원과 함께 "대구 · 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등의 막말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2004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배일도(前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의원 및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등 64명과 함께 국회 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 ·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10월 교과부가 左편향 高校 교과서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히자 "역사편찬위원회가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교과서는 중립적"이라며 "교과서 수정 작업은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과부를 비난했었다.

김유정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2009년 4월14일 북한이 UN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6者회담 불참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같은 날 정부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고 충돌 가능성만 더욱 높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左편향 한국사 교과서 문제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 全無

국회 敎科委 소속 12명의 한나라당 위원 중 전교조 등 좌파에 대항해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의원은 조전혁 의원 정도다.

趙 의원은 2010년 4월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 · 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趙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는 전교조를 비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실명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간접 강제신청을 냈고, 그달 27일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趙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국회 敎科委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세연(부산 금정구),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배은희(비례대표), 서상기(대구 북구을),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주광덕(경기 구리시), 황우여(인천 연수구)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정두언 의원은 2008년 國監(국감) 당시 금성출판사刊 한

국 근 · 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집필진을 상대로 "북한 역사관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발간된 6種의 左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鄭 의원은 2011년 4월21일 좌파매체 〈프레시안〉에 'DJ가 정치적 거목인 이유'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鄭 의원은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해 "군사정권으로부터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그는 권좌에 올랐을 때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평가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개방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구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황우여 의원은 2011년 5월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국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국회가 다음, 대통령은 그 다음이다. 국정도 그 순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황 의원은 建國을 부정한 反헌법적-反사실적 내용투성이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리아연방공화국' 주장한 권영길 의원, 교과위 위원으로 활동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빨치산의 아들'이라며 스스로 '眞骨左翼'(진골좌익)임을 커밍아웃 했던 인물이다. 權 의원은 2007년 大選을 앞두고 가진 광주 · 전남 연설에서 "다 알 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19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山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대선에서 권 의원은 공약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노동자 · 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고 남북한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상생 · 협력하는 1국가 2체제 연방국가로, 사실상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2008년 교과부 국정감사 때는 금성출판사刊 교과서의 左편향 문제에 대해 "근 · 현대사 교과서 논쟁은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0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2장

憲法과 理念을 외면한 敎科部의 '교과서 집필 기준'

1. 헌법 정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결여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은 교과서 著者(저자)들이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 으로, 현행 기준은 2007년 7차 교육과정이 수정 · 고시되면서 채택됐다.

교과부는 새로운 집필기준의 특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建國과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총 18페이지(세계사 영역 제외)의 집필기준은 크게 전반적인 역사 서술 지침을 밝힌 總論(총론) 성격의 '서술방향' 과 시대별 서술에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한 '各論' (각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0개 항목의 서술방향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4항과 7항이다.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摘示(적시)되어 있다.

언뜻 보면 두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憲法(헌법)정신과 이념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위를 대등하게 놓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역사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主된 관점이 전제되어 있을 때 局限(국한)되는 원칙이다. 主된 관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 자체가 설정될 수 없다.

어느 사회든 이념, 계층, 지역,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역으로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묶는 큰 틀이 없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 큰 틀이 바로 國家와 國益(국익)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傳統(전통)과 文化이며, 그 사회를 규율하는 憲法과 법률이다.

2.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是非 판단 실종

집필기준은 各論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부분' 에서 '대한민국의 수립', '6 · 25 전쟁', '4 · 19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개발과 자본주의 발달', '사회 문화의 변화',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 문제과제' 등 8개 항목에 대한 서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립' 부문에서 "광복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국가, 특정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특정국가, 특정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라'는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미국의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소련의 이념은 공산독재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건설된 나라이며, 북한 정권은 소련을 따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과서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긍정적이고, 소련과 공산주의에 비판적이야 한다. '특정국가나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좌경적 필진은 이를 우방국과 敵國(적국),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이념을 놓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는 敵과 我, 善과 惡 사이에서 중립하라는 뜻이다. 李明博 정부의 중도노선과 비슷하다.

집필기준은 또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지도자인 李承晩이 참여하거나 주도한 애국 · 민권 · 독립 운동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단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또한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는 간략한 기준을 제시했다.

제대로 된 국가의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의 建國 과정은 建國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북한 정권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사실에 기초하여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기술한다"고 작성했어야 한다.

國史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국가와 체제에 대해 긍정적 생각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를 상대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死活(사활)을 걸고 대결하는 조건에서 국가가 國史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우방국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평가를 제외하도록 명령한 것은 自我상실과 자기부정의 극치이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기술하는 집필기준이라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에 앞서 '총선거', '국회구성', '헌법제정', '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수립은 건국의 마지막 단계이다. 새로 발간된 高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좌파성향 필진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남한과 동일선상에 놓았다. ▲대한제국 말기의 선각적 애국 · 민권 · 계몽운동인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을 소개해야 하며, 李承晩이 이들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 ▲3 · 1 운동 직후 美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주 지역 동포들의 독립촉구 대회와 행진 등을 소개하며, 그 주도자 중 한 명이 李承晩이었음을 언급해야 한다. ▲해외 각지의 다양한 세력의 독립운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시기 李承晩의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소개해야 한다. ▲李承晩의 대표적 외교 활동인 신탁통치 반대, 단독정부 수립 추진, 韓美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을 소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국과정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 유지 ·

발전을 방해한 북한과 남한 내 좌익세력들의 방해책동에 대한 집필기준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어야 한다.

▲1920년대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한 것임을 지적한다. ▲1923년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를 소개하고, 그것이 소련공산당이 제공한 공작금을 사용해 개최됐으며, 공산당의 임시정부 와해공작 음모와 연관된 것이었음을 소개한다. ▲신간회 관련 서술에서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침에 따라 신간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신간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자 그것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을 밝힌다. ▲일제 치하 노동자 · 농민 운동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연결 관계를 언급한다. ▲미국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을 서술하면서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일방적으로 38선을 봉쇄, 한반도를 분단의 길로 몰아넣은 점을 소개한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북조선 공산당이 정립한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소개해야 한다. '북조선 민주기지론'은 북한의 對南정책의 기조[赤化(적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김구와 김규식의 南北협상을 서술하고, 그와 관련된 북한 정권의 동향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통해 평양에서의 남북협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의 내용이 사실상 '공산화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었음을 소개한다.

3. 트루먼의 결단 소개해야

집필기준은 '6 · 25 전쟁' 부문에서 북한의 南侵 사실과 함께 전쟁의 처참한 피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국군이나 학도병 등 국민의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UN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6 · 25 전쟁과 관련된 집필기준은 반드시 안보교육의 요건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즉 6 · 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불법 南侵(남침)이며, 여기에 대항해 국군과 學徒兵(학도병), UN군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 이 과정에서 북한 공산군의 정체를 체험함으로써 국민의 反共(반공)의식이 더욱 굳어졌고, 나아가 戰後(전후)에도 안보를 위해 집단안전보장 훈련, 韓美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의 노력을 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남다른 용기와 결단력으로 신속한 6 · 25 전쟁 참전 결정을 내린 트루먼 美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을 소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李承晩 대통령의 영도 아래 반공포로 석방 등을 통해 끝까지 休戰(휴전)에 반대했음을 소개해야 한다. 반공포로 석방은 그들을 자유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UN 참전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해진 조치로 李承晩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외교 업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4. 李承晩 · 朴正熙의 부정적 측면 강조하도록 유도

집필기준은 '4 · 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항목에서 "4 · 19 혁명은 장기 집권을 위한 李承晩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 선거 등에 맞서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그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계를 서술한다", "李承晩 또는 李承晩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기준을 정해 建國 대통령 李承晩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도록 해놓았다.

朴正熙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朴正熙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 · 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고 규정해 놓아 李承晩 대통령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있다. 建國의 아버지 李承晩과 近代化(근대화)의 기수 朴正熙에 대한 집필기준의 부정적인 서술방향은 새로 발간된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李承晩에 대해 '야당과 반대세력을 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했다' 고 쓰면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국내파를 제거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고만 했다. 李承晩은 언론 · 선거의 자유와 의회의 활발한 토의를 인정했지만, 김일성은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을 능가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었다는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6種 교과서의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私的(사적) 소유권을 인정한 李承晩 주도의 남한 농지개혁과 그것을 부인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 였으므로 북한의 개혁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기술, 세계적 성공사례인 남한을 비판하고 세계적 실패사례인 북한을 칭찬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공산당의 '10월 폭동' 을 '10월 봉기', '농민 저항 운동' 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반면 고도성장의 출발점이 된 5 · 16에 대해서는 '군사독재가 시작되다' 는 제목으로 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개방에 나서다' 라고 터무니없는 선전을 해주었다.

▲朴正熙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 운동' 이 교과서에서는 維新(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고(미래엔컬처그룹刊), 朴正熙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비상교육刊),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했다(천재교육刊)는 비판을 받았다고 서술해 놓았다.

집필기준은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의 항목에서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술한다. 이후 독재 정치 아래서 억압되었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신장되었음을 유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盧泰愚(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 · 29 선언' 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 세력 가운데 혁명적 학생운동 세력이 침투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左傾(좌경)세력의 발호와 이에 따른 理念的(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 北의 對南도발 게재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어

집필기준은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부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정도로 기술하고 6 · 25 전쟁 휴전 후 북한의 對南 도발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南北관계를 저해하는 최대 문제인 북한의 核개발과 이로 인한 위험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집필기준이라면 '1 · 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

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美 EC-121기 피격사건'(1969년), '8·15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1974년),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1983년), 'KAL기 폭파 테러사건'(1987년),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주요 도발사건과 함께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등 북한의 西海도발 사례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6. 憲法이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 외면

집필기준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평화통일 과제' 부문에서 "남북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오랜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서 남북한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과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을 서술하라"고 해놓아 대한민국 憲法 제4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중에서 '평화적 통일'의 관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서술에서 대한민국 憲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원칙은 1987년 이후 개정된 모든 교과서에서 무시되어 왔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과제는 통일이며, 현행 憲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제5, 6차 교육과정에서는 분단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결태세의 완화를 강조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7월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6種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강조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관점에서 통일정책에 접근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歷史 교과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흡수통일을 전제해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독재가 무너지고 북한 동포가 결의해 대한민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憲法 제4조를 제대로 해석하면 '자유통일+평화통일=흡수통일'로 요약된다. 결국 대한민국 憲法 제4조의 내용은 '흡수통일을 하라'는 국민적 합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교과부도 흡수통일 정책을 집필기준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추진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할 때는 憲法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세상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多文化(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고 또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나 모든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틀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틀은 바로 史觀(사관)이며, 그 史觀의 基礎(기초)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3장

더 나빠진 新種 교과서

1. 金大中 교과서보다 더 왼쪽으로 간 李明博 교과서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와 2001년 國定 국사 교과서 내용 비교

201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각 출판사가 제작해 정부의 檢定(검정)을 거쳐 출간됐다. 現 檢定 교과서 '한국사'(이하 한국사)와 과거 사용됐던 國定(국정) 교과서 '국사'(이하 국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비교해보았다. 사용된 國定 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 시기에 사용된 2001년刊 '고등학교 국사(하)'(1996년 초판 발행)이다.

과거 國定 교과서 '국사'에서 다루어진 현대사 내용은 45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각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다. '국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사'는 대부분 3인칭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을 나열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사'는 '우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우익'으로 표현하면서 거리를 둔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였다"(국사)의 표현이 "대다수 국민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익은 반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간 반면, 좌익 세력은 축소되어 갔다"(한국사)가 되는 식이다.

건국 초기의 정세에 대해서도 "(김구, 김규식의 남북 협상에 대해) 그들의 노력은 미 · 소 냉전 체제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 (중략)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당시의 국내외 정세 상 불가피한 일이었다"(국사)의 내용이 "남북 협상은 광복 이후 처음 있었던 남과 북의 지도자 회의였으며,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 연합 전선 운동과 그 맥이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한국사)로 바뀌었다. 외세의 방해를 받아 남북협상이 좌절되었다는 듯한 설명이다.

① 贊託과 反託

▲ 6차 교육과정 國定 교과서

신탁 통치는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민족에게는 식민지 지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은 우리 민족에게는 모욕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제2의 광복 운동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였다. (192~193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지학사: 오랫동안 독립을 열망해 온 대다수 한국인들은 신탁 통치를 식민지 지배의 연장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김구를 비롯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다.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으나 임시 정부의 수립이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지지로 돌아섰다. 이에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의 반대와 찬성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대결했다. 대다수 국민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익은 반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간 반면, 좌익 세력은 축소되어 갔다. (263페이지)

–천재교육: 이 결정은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졌고, 전 민족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 (중략) 이런 와중에 좌파 세력은 반탁 입장을 철회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8도선 이북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도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임시 정부 수립 결정을 중시하고, 미 · 소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지지하였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중도파와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미 · 소 공동 위원회를 통한 임시 정부 수립이 최우선의 과제이고, 신탁 통치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들도 미 · 소 공동 위원회 개최에 찬성의 입장을 취하였다. 반탁 운동 세력은 이들 미 · 소 공동 위원회 개최 지지 세력을 소련의 조정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이며 매국노라고 공격하였다. … (중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반탁 운동은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우익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좌우 정치 세력은 광복 이후 최초의 3 · 1 운동 기념식도 따로 할 정도로 격렬히 대립하였다. (310~311페이지)

–비상교육: 즉각 독립을 바라던 우리 민족은 신탁 통치안에 크게 실망하였다. 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세력은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익 세력 역시 초기에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의 본질이 신탁 통치보다 임시 정부 수립에 무게가 있다고 보고, 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312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 이에 대해 좌익과 우익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 등을 중심한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는 한국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들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신탁 통치를 '후견' 혹은 '원조 협력' 으로 해석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327페이지)

–삼화출판사: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 통치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두고 좌우익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는 식민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반면 좌익은 임시 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였다. 여운형 등 중도 세력은

미 · 소 공동 위원회에는 적극 협조하되, 신탁 통치는 반대하였다. (306페이지)

② 좌우 합작 · 남북 협상

▲ 6차 교육과정 國定교과서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는 유엔의 결의는,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 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 등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미 · 소 냉전 체제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5페이지)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당시의 국내외 정세 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소련의 팽창 정책과 북한에서 사실상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때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였던 남북 협상파는 총선거에 불참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이들까지도 이용하려 하였다. (196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지학사: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무기한 중단되자 좌우 세력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 김규식과 여운형 등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263페이지)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이 남한 단독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은 정부 수립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 아래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라는 정부 형태의 권력 기구가 출범한 상황이었다. 한국 독립당의 김구와 민족 자주 연맹의 김규식 등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함께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 (중략) 이와 함께 김구 ·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 · 김두봉과 별도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 4자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1948. 4. 19~4. 30). 남한에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각각 한국 독립당과 민족 자주 연맹을 이끌며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단독 정부의 수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267페이지)

–천재교육: 중도파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미 · 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과 임시 민주 정부 수립 좌절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좌우 합작을 모색하였다. 미군정도 이런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런데 좌우파는 각각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합작의 원칙을 발표하였고, 토지 개혁 문제나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후 좌우 합작 운동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과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구성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하면서 활기를 띠었으나 이후 좌우파의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312~313페이지)

–삼화출판사: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자 남한에서는 이를 소련 탓으로 돌려 반소 · 반공의 분위기가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정읍 발언). 1946년 제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가자, 김규식 · 여운형 등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지지를 높여 미 · 소 공동 위원회에서 소련과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이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중도 정부의 수립을 지향하던 좌우 합작 운동은 한동안 활기를 띠었으나, 좌우의 대립이 격심해지고 중심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자 실패하고 말았다. (307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 좌우 합작 7원칙에 대해 좌우 합작과 민족 통일을 중시하는 중도파 세력들은 이를 지지했고, 한국 독립당의 김구도 '8 · 15 이후 민족이 거둔 최대 수확'이라고 하면서 적극 찬성하였다. 그러나 반공주의를 내세워 단독정부 노선을 취했던 우익 측과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리의 급진적 해결을 추구했던 좌익 측은 좌우 합작 운동에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파괴적 행동을 일삼고 좌우 합작을 반대하는 공산분자와 합작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한국 민주당은 유상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하였다. 공산당의 박헌영은 토지의 유상 몰수는 지주를 위한 것이며, 입법 기구는 미군정의 거부권을 넘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게다가 1947년 7월에 이르러 좌우 합작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재개되었던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고, 좌우 합작 운동의 지도자 여운형이 암살당하였다. 결국 좌우 합작 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47년 12월 해산되고 말았다. (331페이지)

김구와 김규식 일행은 서울로 돌아온 후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들은 남북 양쪽에서 추진하는 정부 수립 작업을 모두 민족 분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민족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북 협상 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된 후 단절되고 말았다. (332페이지)

–법문사: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5명의 좌익 인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5명의 우익 인사는 7월에 좌우 대립을 막고 민족의 단결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중략)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구성 이후에도 좌우 합작 위원회의 활동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좌우 합작 운동은 미군정, 우익 · 좌익 세력의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310페이지)

남북 협상은 광복 이후 처음 있었던 남과 북의 지도자 회의였으며,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 연합 전선 운동과 그 맥이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311페이지)

③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反民特委)

▲ 6차 교육과정 國定교과서

먼저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중략)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반공 정책을 우선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친일파 처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지학사: …이러한 열망에 따라 제헌 헌법은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중략)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중략)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결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였으며,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1949년 8월말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해체되었다. (270~271페이지)

–비상교육: 광복 직후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미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수립 후 국회는 본격적인 친일파 청산에 나섰다. … (중략) 그러나 반민 특위의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경찰 고위급이 연행되자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때 국회 프락치 사건에 일부 반민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었다. 그러자 국회 앞에서는 '공산당의 앞잡이인 반민 특위에 체포된 사람들은 공산당과 싸운 애국지사' 라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경찰 출신이었던 일부 경찰들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22페이지)

–천재교육: 친일 경찰 출신의 현직 경찰 간부였던 노덕술이 체포되자 경찰이 반민 특위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공 우선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반민 특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반민 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화되고, 친일 잔재 청산의 과제 해결은 좌절되고 말았다. (319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 (반민 특위에 대한 방해 공작)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에 부딪혔는데, 반민 특위에서 독립 운동가를 고문한 경찰 노덕술을 검거하자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 특위 활동은 3권 분립에 위배' 되며, 좌익 반란분자들이 살인, 방화 등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경험 있는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반민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338페이지)

④ 李承晩(이승만)

▲ 6차 교육과정 國定교과서

이승만 정부는 공산군의 남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외교에 힘을 쏟았다. 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으며, 후방에서도 공산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였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국민의 직

선으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 헌법의 개정을 반대하였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조직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 견제하였다. 그 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추구하면서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심화되었다. (203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지학사: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무소속)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279페이지)

민심 이반으로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진보당을 탄압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며 선전한 조봉암 후보에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였다(1958. 7). 또한 언론 통제와 반공 강화를 골자로 한 신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280페이지)

–법문사: 개정 헌법에 따라 실시한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장면이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는 부통령에 당선되고,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예상 외로 크게 득표를 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혁신 정당인 진보당을 탄압하고, 반공 체제의 강화를 내세우며 국가 보안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327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개헌으로 연속 집권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야당과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 독재 권력은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는 정경유착을 낳아 부패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45페이지)

–천재교육: (반공 독재의 강화) 이승만의 무리한 정치는 결국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부통령 후보가 낙선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 (중략) 조봉암의 선전에 놀란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죄와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332페이지)

⑤ 朴正熙(박정희)

▲ 6차 교육과정 國定교과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용하였다.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은 공업화의 급속한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도입하였다. (205페이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켰으며, 그 뒤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또,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

워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1972).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그것은 곧 국가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해서 사회를 조직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제약한 독재 체제였다. (206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 (중략) 이를 틈타 평화 통일 운동과 군비 축소 계획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군인들이 5 · 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1961). 이로써 4 · 19 혁명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장면 내각은 9개월 만에 그 뜻을 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361페이지)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과 반공을 내세워 장기 집권을 추구한 독재 정권이었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더욱 강조된 반공은, 국민을 통제하고 반정부 움직임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364페이지)

이와 같이 유신 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실현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기만한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였다. 유신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2%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장기 독재를 지속하였다. (365페이지)

–천재교육: 군사 독재가 시작되다. (단원제목, 358페이지)

박정희 정부가 심각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 · 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유에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과정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기반이 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한 · 일 회담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360페이지)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1인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동안 민주화의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판사들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반대하여 집단 사표로 저항하였다(사법 파동). (362페이지)

–비상교육: 장면 정부가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를 축소하려 하자 일부 군인 세력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들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1961년 5월16일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장악한 후 전국에 계엄을 내렸다(5 · 16 군사정변). (351페이지)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 (중략) 한편, 군사 정부는 반대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 활동 정화법, 반공법 등을 실시하여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정당 · 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 더 나아가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을 없애거나 언론인을 구속하였으며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였다. (352페이지)

–지학사: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 안보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경제 개발을 위해 군정 시기부터 시행하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 개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매우 부족하여, 광부와 간호사를 해외에 파견해야 할 처지였다. (304페이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와 민주 공화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과 학생, 재야 세력을 억누르고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

과시켰다. 이후 국민 투표를 거쳐 개헌안이 확정되었다(1969). (305페이지)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이 완화되었다. 그 여파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주한 미군의 감축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의 유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06페이지)

⑥ 새마을 운동

▲ 6차 교육과정 國定교과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농촌 새마을 운동을 도시에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즉, 도시의 이웃끼리도 공통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협동하는 사회 기풍을 일으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 또,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작업장 내에서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룩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전개하였다. (217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소득과 문화 격차가 갈수록 커지자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1970). … (중략) 이로 인해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하였으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381페이지)

–천재교육: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 (중략)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과도한 영농 설비 투자,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의 부재, 불투명한 판로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등락은 농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도시 문화의 급속한 유입은 농촌의 소비도 급증시켰다. 국가의 기획에 의한 새마을 운동은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379페이지)

–비상교육: … (중략) 이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1970).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주민 계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지역 개발 사업도 벌였다. 새마을 운동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근대화에도 이바지하였지만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새마을 운동(사진설명): 새마을 운동 기간 농사의 소득은 10.5배나 늘었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도 21배나 늘어났다. (369페이지)

–법문사: 농촌 문제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 근대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근면 · 자조 · 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지원 아래 도시 지역에도 파급되어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356페이지)

–삼화출판사: … (중략) 이에 정부는 1970년부터 근면 · 자조 · 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 증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도시에도 파급되어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는 주곡 자급을 목적으로 쌀 증산 정책을 추진하였다. … (중략) 그 결과 농촌의 생활환경

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367페이지)

–지학사: 1970년대에는 제3 ·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 (중략)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312페이지)

⑦ 反共

▲ 6차 교육과정 國定교과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민족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60년대까지는 반공을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주 국방에도 힘을 쏟게 되었으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 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209~210페이지)

△ 現 6종 檢定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6 · 25 전쟁은 무력 통일의 무모함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남북 간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남북의 두 지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은 이를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1960년대 남한에서는 5 · 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가 반공을 내세워 4 · 19 혁명 이후 분출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평화 통일 운동을 탄압하고, '승공 통일'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도 남조선 혁명론을 바탕으로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391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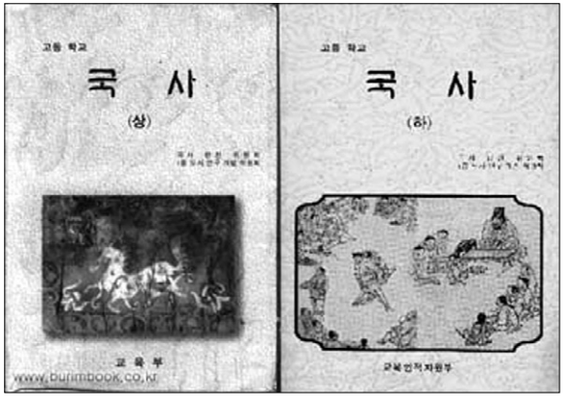
–천재교육: 1958년 겨울 정부 여당은 국가 보안법 적용 대상과 이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는 등 사회에 대한 강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야당은 이 법이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국회 안팎에서 강력히 저항하였다. 여당은 무술 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10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332페이지)

–삼화출판사: 이승만 정부는 반공 체제를 강화하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 (중략) 남북한은 장비와 무기의 개발에 힘써 군사력 증강을 중시하였다. 남북한에서 증강된 군대는 전쟁의 두려움을 남북 모두에게 갖게 하였다. 남북의 이러한 대결 상황은 군부의 발언권을 강화시켰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326페이지)

–비상교육: (반공의 나라)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반공을 국가 시책으로 내세웠고, '반공'은 체제를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도 이용되었다. 당시에 '반공'이라는 말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반공 운동회가 열렸고, 도로, 학교, 시장 등 나라 곳곳에 반공 포스터와 표어가 걸려 있었다. 유신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포스터와 표어로 본 1960~80년대' 中, 375페이지)

2. 앞은 '필수', 뒤는 '선택'

제6차 교육과정인 2001년까지 고등학교 國史는 필수 과목이었다.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사회탐구



제6차 교육과정에서 쓰인 국사 교과서. 필수 이수 과목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공통과목으로 포함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영역의 공통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이때 사용된 교과서는 國定(국정)으로, 선사문화부터 근세(16세기 후반)까지를 다루는 '국사'(上), 근대태동기(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를 다루는 '국사'(下)로 나뉘어져 있었다.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육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國定교과서인 '국사'를 배우는데, 上·下가 사라지고 한 권짜리가 되었다. 목차에는 근·현대의 부분도 등장하나 내용의 중심은 근세 시기까지다. 그 이후의 근·현대사 부분은 高 2~3학년 중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6개의 출판사가 발간한 檢定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택한 책으로 배우게 되었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이때부터 한국의 근·현대사를 자세히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근세 시기까지의 부분은 필수, 근·현대사 부분은 선택이 된 것이다.

2005년 수능시험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수능 사회탐구영역의 공통과목이었던 국사가 11개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사회문화, 정치, 법과 문화, 경제, 윤리 중에서 학생이 최대 4개까지 골라 시험을 보도록 했다. 여기서 '최대 4개'까지라는 것은, 1개부터 4개까지 개수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自律(자율)이라는 뜻이다. 학생들은 수험 과정에서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 과목이나 과목 개수를 충족시키는 내에서 선택과목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사를 포함한 3개 과목'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A대에 지원하려면 국사와 나머지 2개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과목을 적게 선택해 집중하여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선택과목을 2개만 정해서 수능을 치렀을 경우, 선택과목 3개의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적게 선정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선택 개수가 최대 3개까지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 존재감 잃은 國史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된 '국사'는 수업 현장에서 존재감을 잃게 됐다. '교육과정' 상의 필수일 뿐, 高校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표인 '대학 진학'에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의무적으로 수업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게 되면서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는 학생들의 관심사에서 멀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쓰인 국사 교과서.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6種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지게 됐다.

실제로 대부분 高 3학년들은 '국사'를 기피하고 있다. 현재 국사를 입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뿐인 탓에 상위권 학생들만 수능 선택과목으로 국사를 택하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국사를 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중 · 하위권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필수로 국사를 배워야 하는 1학년 때도 한 학기 정도 수박겉핥기식으로 배울 뿐, 이후에는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게 된다.

2011년 또다시 잡음 속에 새로운 高校 한국사 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2009 개정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철학 및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여 8차로는 부르지 않음)을 거친 교과서이다. ㈜미래엔컬처그룹, ㈜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법문사 등 6개의 출판사가 발간한 檢定 교과서로, 선사 문화부터 한국 근 · 현대사의 기간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이 체제부터 반쪽짜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존의 國定 교과서 국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새롭게 등장한 '한국사' 교과서 체제는 2011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어 수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한국사 수업은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능에서도 선택과목인 만큼, 학교 및 학생에 따라 한국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편향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기존의 한국 근 · 현대사 檢定 교과서와 국사 國定 교과서는 2010년 高校 입학생, 즉 현 高 2학년 학생까지 적용되어 수업 현장에서는 2012년까지 사용된다)

비중 자체를 줄여서 논란을 없애자는 무책임한 발상

선택과목으로의 전락 및 左편향적 내용 등으로 국사 교육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4월, 2012년부터 한국사를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 국사편찬위원회는 6월 말 公聽會(공청회)를 열고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시대별 분량을 전근대 30%,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기 60%, 광복 이후 10%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교과서의 현대사 분량이 약 30%였던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안으로, 조선시대 분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사'가 아닌 '조선사'가 될 판이다. 현대사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아예 비중 자체를 줄여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성급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國史 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학교 수업 내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의 선정과 수능 내 필수 과목으로의 선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때부터 지적되어 온 교과서의 左편향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적 · 수정하는 작업이다. '잘못된 내용'을 '필수'로 배우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4장

선진국의 歷史 교과서 논쟁 사례

1. 護憲(호헌) 세력의 승리로 끝난 美國

反문화적, 反서양적, 非미국적 관점에서 쓰인 美 역사표준서
인디언 학살과 흑인의 노예화만 강조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지나가는 인물로 묘사될 뿐이다. 미국 헌법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대신 대공황은 세 차례나 언급된다. 학생들이 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에 대해 배우지 않게 된다. 全 세계를 보다 낫게 만든 미국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중략) 매카시즘은 19차례나 언급하면서 미국이 자유국가의 방패가 되고자 했던 냉전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았다." (美 상원 역사표준서 논쟁, 1995년 1월18일, 슬레이드 고튼 美 상원의원)

조지 부시(George Bush) 美 대통령은 1989년 미국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역사학을 포함한 5개 과목의 표준서 개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91년 '전국 역사표준서 프로젝트' (National History Standards Project)가 수립되어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을 위한 표준서' (이하 역사표준서) 개발 작업이 추진됐다.

출간 · 공표 전부터 맹렬한 비판받은 '역사표준서'

1992년 봄부터 시작된 역사표준서 개발 작업은 역사교육의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 및 논의과정을 거친 뒤 1994년 완성됐다. 그러나 역사표준서는 출간 · 공표되기도 전에 '미국史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애국적 인물들을 누락시키고, 소수의 관점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면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역사표준서 출간을 위해 巨額(거액)을 지원했던 린 체니(Lynne Cheney) '전국인문학기금' (NEH) 前 의장은 "역사표준서가 정치화된 역사를 통해 반란을 꾀하는 기성학자(좌파)들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린 체니의 뒤를 이어 미국의 보수 진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역사표준서를 비판하고, 표준서를 작성한 학자들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등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내 보수인사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좌파세력이 역사표준서를 통해 미국의 역사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역사표준서에서 서양 문화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인문주의우파' (The Humanist Right)로 알려진 교육 비평가 집단의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앨런 블룸(Allan Bloom), 린 체니, 거트루드 힘멜파브(Gertrude Himmelfarb) 등은 "인문학 교육은 서양 문화에 뿌리를 둔 이상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의 정치적, 철학적, 문학적 유산이 미국의 多元(다원)적인 국민을 결속시켰지만, 미국의 이러한 문화적 통일성이 1960년대 이후 대학을 장악하고, 서양 대신 인종, 계급, 性에 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막시즘'(Marxism)과 '페미니즘'(Feminism) 성향의 좌파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양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는 두 번째 집단은 앨버트 샌커(Albert Shanker)가 의장으로 있는 '미국교사연합'(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전국 본부가 중심이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冷戰(냉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지속 여부는 미국인을 결속시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비전(vision)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는 데 달려있다. 이를 위해 서양 민주주의의 역사가 교과 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문주의우파'와 '미국교사연합'은 학생들이 고대 아테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17세기 영국 등지의 고전 문헌에서 언급한 정치·철학·미적 진리를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사건이나 변화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古典(고전)의 진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99 對 1로 역사표준서 반대 결의안 통과

1994년 11월14일 미국의 저명한 보수논객인 존 레오(John Leo)는 '미국 역사의 납치'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미국의 표준서가 1960년대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의해 反문화적 관점에서 쓰였다"고 비판했다. 존 레오는 당시 "역사표준서가 크든 작든 모든 봉기와 반란을 언급했는데, 이는 그들이 미국을 억압적인 국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백인에 대항해 점점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사표준서는 다문화주의가 과도해서 백인이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온데간데없고, 인디언·흑인·여성(페미니즘)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미국이 이제껏 자유와 평등을 강조해 온 것은 엘리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서 인디언 학살과 흑인의 노예화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존 레오는 역사표준서를 공식표준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보수진영의 적극적 대응은 결국 의회 논쟁으로 이어졌다. 공화당의 슬레이드 고튼(Slade Gorton) 상원의원은 1995년 1월18일 상원 연설을 통해 "표준서는 反서양적이고 미국 역사교육에 위협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상원은 99대 1로 역사표준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여야 滿場一致(만장일치)였다.

당시 역사표준서는 상원으로부터 非미국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은 세계 자유와 번영을 증진 시킨 미국 역사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받았다. 미국에서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줄곧 州정부의 소관이던 교육문제에 상원이 관여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컸다.

1994년 가을부터 시작된 역사표준서에 대한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는 1996년 봄까지 무려 18개월이나 지속됐다. 이로 인해 좌파 성향의 표준서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좌파적 수정주의 史觀에 입각해 만들어졌던 역사표준서를 개정, 1996년 4월 새로운 표준서를 출간했고, 이로써 역사교과서 논쟁은 막을 내렸다.

당시 역사표준서 개정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육회의(Council for Basic Education)를 비롯해 몇몇 재단이 구성한 패널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됐던 '학습예제'를 삭제했다. 둘째, 과학, 기술, 경제사, 지성사를 강화했다. 논란이 됐던 '헌법'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등의 이름이 삽입됐다.

자료 美國의 護憲(호헌)세력을 결집시킨 린 체니

"우리 미국인은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美國史를 소개하면서 建國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과 페미니스트 단체 '全美(전미)여성동맹'(NOW)의 설립은 대대적으로 다루고, 美 의회소집 등 역사적인 사건은 다루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며 조만간 공개될 '미국 역사표준서'의 역사인식 수준이다.

이러한 역사표준서가 클린턴 행정부가 주도한 '2000년을 위한 목표'(Goal 2000) 법안 통과로 조직된 '국가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의 5~12학년 학생들은 표준서의 지침에 따라 美國史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역사표준서는 미국사를 10개 시기로 나누고, 이들 각 시기에 2~4개씩 총 31개의 표준을 제시해 놓았다.

각 표준은 시기별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짧게 설명한 뒤 교사들에게 학습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50페이지에 달하는 역사표준서에는 미국의 憲法(헌법)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역사표준서의 집필진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물, 장소, 사건들에 대한 근거 없는 경외심을 정치적 의도를 섞어 표현해 놓았다. 일례로 "1450년 이래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가 의미심장한 상호 교류를 시작했다"면서 "14세기 말리 국왕 '만사 무사'(Mansa Musa) 통치 시기의 사회 관습과 富에 대해 분석하라"고 쓰고 있다. 아프리카 국왕 '만사 무사'의 통치는 美國史를 이해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 美國의 기업가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에 대해서는 "개인의 富를 증대시키기 위해 公共의 법을 위반하는 등 非도덕적인 관행을 남겼다"고 기술하고 있다.



린 체니는 左派들의 歷史 교과서 왜곡을 막고자 역사표준서 출간에 거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 美 정부기록 사진

이와 함께 역사표준서는 모든 社會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 주민들과 美國 원주민들의 失敗史(실패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는 "건축술, 노동시스템, 그리고 농업기술이 발달했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즈텍이 人身供養(인신공양)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역사표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조셉 매카시'(Joseph Raymond McCarthy)와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총 19차례 언급되어 있다.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Ku Kulux Klan)도 17차례 등장했다. 역사적 인물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노예 신분에서 탈피, '언더그라운드 철도사'에서 성공적인 감독관이 된 해리엇 터브먼(Harriet Tubman)에 대해서는 6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同時代(동시대)에 백인으로 남북전쟁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E. 리(Robert Edward Lee) 장군에 대해서는 1번, 율리시스 S. 그랜트(Ulysses Simpson Grant) 장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조나스 샐크(Jonas Salk,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와 같은 美國史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筆者(필자)는 이 같은 역사표준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筆者는 '전국인문학기금'(이하 NEH) 의장으로 활동하며 역사표준서의 개발을 지원했다. NEH는 역사표준서 제작을 위해 총 52만 5000달러를 제공했으며, 교육부는 86만 5000달러를 지원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학생들이 美國史와 世界史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지원비를 받아 역사표준서를 제작한 단체는 UCLA의 '전국역사교육센터'로 과거 《Lesson From History(역사의 교훈)》와 같은 훌륭한 역사 관련 著作(저작)을

낸 조직이다. 그러나 역사표준서는 《Lesson From History》와 비교해 수준이 한참 낮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Lesson From History》는 19세기 미국 흑인 여성으로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를 포함한 주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공정한 기술과 함께 로버트 E. 리 장군,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Lesson From History》는 또 자본주의 富의 개념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1815~1850년대 미국의 도시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서술했다. 미국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서술했으며,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는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갈망하는 미국인들의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역사표준서는 多文化에 초점을 맞춰 美國혁명의 의의를 서로 다른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Lesson From History》의 경우 미국의 정치 시스템 및 정치 조직을 구성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공정한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헨리 클래이(Henry Clay)와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 같은 정치가를 두 번에 걸쳐 기술했다. 반면 역사표준서는 클래이와 웹스터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명한 연설에 대해 단 한 줄도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팻 부캐넌(Pat Buchanan)의 1992년도 공화당 全黨大會(전당대회) 연설을 학생들이 분석하도록 했다. 역사표준서는 또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을 '오만한 치어리더'라고 했던 팁 오닐(Tip O'Neill) 前 하원의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역사표준서의 문제점을 눈감아 준 '역사표준서 국가회의'(이하 NCHS)의 한 관계자는 이미 1992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던 인물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NCHS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역사수정론자였다. 그는 미국 내 흑인조직 및 인디언 그룹 등 다양한 정치 조직들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 역사표준서와 함께 세계 역사표준서가 곧 공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표준서는 미국 역사표준서보다 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역사표준서는 서구 문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양심적인 NCHS의 한 관계자는 세계 역사표준서 작성을 주도한 미국역사협회(AHA)에 대해 "세계사가 AHA에 납치당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UCLA의 '전국역사교육센터'는 자신들이 작성한 역사표준서에 대해 '아직 결정판이 아니며 작업이 진행 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역사표준서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한 곳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의 역사표준서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일 가치는 있다. 우리 美國人은 역사표준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1994년 10월20일자 美 〈월스트리트저널〉)

린 체니[美 전국인문학기금(NEH) 前 의장]

2. 국가수반이 직접 나서 自國史 긍정 교육 도입한 英國

"가장 진보한 시기를 가장 암울한 시기로 묘사"

영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역사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역사교과목의 비중 축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무엇보다도 사회 일각의 역사교육 無用論(무용론)이 위기감을 부추겼다. 이에 영국의 보수진영은 1970년대부터 이념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對좌파 공세를 취했다. 이들 가운데 新보수세력은 역사학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지하고 '역사학의 위기'를 나름의 방식대로 해석해 대안을 마련했다.

당시 영국의 교육현장 일반이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위기로 받아들였다면, 新보수는 좌파적 급진사학, 곧 수정주의에 입각한 현대 역사학의 대두를 위기의 징후로 판단했다. 新보수는 또 1960~1970년대의 비판사학과 이른바 '밑으로부터의 역사'의 득세를 우려했으며, 이 같은 좌파적 현대역사학의 성과가 교육현장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비판

했다. 일례로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정치적 소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항상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경험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주고 색깔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경제학자 하트웰(Ronald M. Hartwell)의 경우 "지식인들은 계몽시대 이후 진보적인 관점을 가졌다. 그들은 18~19세기에는 민주적, 평등주의적 관점을, 20세기에는 개입주의적, 평등주의적 관점을 가졌다"면서 좌파를 공격했다.

'산업혁명, 빅토리아 시대'를 암울한 시기로 묘사

당시 수상이었던 '철의 여인'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역시 발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세대가 우리 國史(National History)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평가 절하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성향의 학자와 저술가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진 시기(산업혁명,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다른 국가보다 가장 앞서 나갔던 바로 그 시기를 가장 암울한 시기로 묘사했다"고 했다.

영국은 대처 수상의 취임과 함께 그동안 보수진영이 우려해온 역사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대처 수상은 1981년 보수당의 실세였던 키스 경(Sir Keith Joseph)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으며, 장관은 보수성향 역사학자인 엘튼(Geoffrey Elton), 토머스(Hugh Thomas) 등의 도움을 받아 중등 교육과정에서 歷史 교과과정의 國定化(국정화)를 추진했다.

이들은 모두 영국사를 긍정하는 역사 서술을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데 주력했다. 핵심요소는 祖國(조국)과 祖國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하는 애국주의, 역사적 변화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참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주의 등이었다. 이들은 노예무역, 제국주의, 외국에서 저지른 악행 등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하는 것을 '自虐(자학)사관'으로 여겼다.



마가렛 대처 前 영국 수상은 '역사 수정주의 운동(History Revisionism)'을 전개해 영국史를 긍정하는 교과서 서술을 추진했다. ⓒ 마가렛 대처 재단

영국의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은 권위, 규율, 위계질서, 국가, 강력한 정부를 강조했다.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영국의 보수 세력은 종래의 영국교육, 즉 교사가 마음대로 주제를 선택해 가르쳐 왔던 것을 중지시키고 국가가 교육에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과목 등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1986년 케니스 베이커(Kenneth Baker) 교육부 장관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됐다. 보수성향의 베이커 장관은 정부 중심의 교육통제와 국가교육과정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1987년 1월 베이커 장관은 한 모임에서, '영국 교육의 실패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개별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맡긴 데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교육과정을 영국에 도입할 계획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베이커 장관의 이 같은 계획은 결국 '역사논쟁'을 일으켰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학습 성취 목표와 학습 프로그램

좌파 성향 역사학자와 교사들,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역사 논쟁에 참여했다. 역사학자들은 내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역사 교육의 중요

한 목표인 '역사적 탐구 기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노동당 정치인들 및 일부 일반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1988)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1989년 1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초안할 '역사분과 초안그룹'(History working Group)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작업에 들어가 1990년 1월 최종보고서가 완성됐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1995년 첫 번째 개정을 했고, 두 번째 개정이 1999년 9월9일 확정되었으며, 11월에 각 학교로 보내져 2000년 9월부터 시행됐다.

대처의 후임자인 보수당 출신의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은 교육에 관한한 대처보다 더 보수적 경향을 보였다. 그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제2차 국가교육과정은 영국史 부분이 더 강화됐다. 제3차 국가교육과정은 영국사 중심의 학습내용을 계속 지켜 나가면서 교사들에게도 많은 재량권을 주었다.

영국 역사교육의 성공은 잘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학습 성취 목표와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兩者 사이의 체계적인 연결이 영국 역사교육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대처 수상 집권 이후 지금까지 영국의 역사교육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등학교에서도 역사교육은 타 교과목에 비해 두드러진 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에 고무 받아 自國史(자국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프랑스 歷史교육의 핵심가치: '개인'과 '자유'

現代史 위주로 世界史와 연계한 내용 구성
중·고등학교 내내 역사교육 받아

어느 나라나 역사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正體性(정체성) 함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역사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역사학을 先導(선도)하는 나라답게 역사교육도 일찍부터 이뤄졌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역사학이 修辭學(수사학)에 포함되어 교육되다가 이후 대학에서 역사 강좌가 개설됐다. 19세기 들어서는 중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1814년 역사과목이 중등학교에 도입됐다.

프랑스 역사교육은 현대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80년대 이르러 중등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은 절반을 넘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20세기 현대사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古代에서 19세기 중엽까지를 2학년에서, 19세기 중엽에서 1945년까지를 1학년에서, 그리고 1945년 이후 현재까지를 최종 학년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1982년은 프랑스 역사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해였다. 프랑스 교육부가 '교과목 서술지침'을 통해 1945년에서 끝나던 역사 서술을 當代(당대)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학생들은 1995년 이후 세계사와 연계해 自國史(자국사)를 함께 배우고 있다.

프랑스는 역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내내 역사교육을 한다. 중학교에서는 고대~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역사교육 사이클을 구성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 고대~현대까지 역사를 다시 배운다.

전체주의 비판 통해 自國 체제의 정당성과 당위성 교육

프랑스 교육당국이 역사 교육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가치는 '個人'(개인)과 '自由'이다. 프랑스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個人과 自由가 보장되는 自國 체제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킨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역사교육에서 다양한 1차적 문건들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건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같지만 지식의 구성과 자료의 해석에 있어 학생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역사교육은 敍述(서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와 많은 차이가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교과서에서 풍부한 地理的(지리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리교육의 시너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학, 미술, 사진 등 풍부한 인문 · 예술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학을 통해 인문학적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프랑스 역사교육은 흥미유발–개념적 이해–사례적 이해–복습–작문 등의 과정을 통해 역사문제를 주제로 논술을 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점을 뒀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역사교육은 전통적인 修辭學(수사학) 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한국의 역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2부
어떻게 썼나?

5장 建國의 정당성 부정
6장 편향된 편집
7장 建國 · 건설 세력 일방적 매도
8장 6 · 25 왜곡 및 反軍 선동
9장 철저한 계급 史觀
10장 北의 잘못 덮어주기
11장 천안함 폭침 등 北의 도발 은폐

5장

建國의 정당성 부정

1. '대한민국 建國'이란 표현 말살

대한민국을 反국가 단체인 북한과 同格으로 취급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建國'(건국) 대신 '정부 수립' 또는 '출범'으로 표현해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格下(격하)시켰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建國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미래엔컬처그룹), '대한민국 정부 수립'(천재교육), '대한민국의 수립'(지학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비상교육, 법문사),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다'(삼화출판사) 등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수립'(천재교육, 비상교육), '북한 정부가 수립되다'(미래엔컬처그룹), '북한의 정부 수립'(법문사), '북한에서 수립된 정권'(삼화출판사), '북한 정권의 수립'(지학사)으로 썼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즉 국가가 두 개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다. 특히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刊 교과서는 '북한 정권'이라고 해야 하는데 '정부'라고 호칭함으로써 헌법상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反국가집단을 국가로 승격시켜 주었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수립되다'(미래엔컬처그룹),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법문사),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비상교육)처럼 아예 대한민국과 북한을 함께 나열해놓은 표현도 있었다.

여기에는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교과서 필진들의 左편향된 이념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집필 기준은 전체적인 서술 방향에서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고 적고, 各論(각론)의 '대한민국의 수립' 부문에서 "광복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국가, 특정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국가나 특정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고'란 말은 객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이념을 놓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祖國(조국)의 국가이념을 높이지 말고 敵國(적국)인 북한과 공산주의를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교과서 필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

의를 격하시키고 남북한을 동격으로 놓게 되는 길을 열어놓았다.

現 高校 한국사 교과서 6種의 교수 출신 필진 9명 중 7명은 2008년 건국절 제정 철회를 요구했던 역사학회에 소속되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는 2008년 8월12일 정부 주도의 '건국 60주년' 사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단체들은 '건국절과 現代史(현대사) 박물관 건립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을 바꾼다면 이는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을 경축하자는 것으로 된다"면서 '건국절 제정'이 광복절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建國' 표현에 부정적 견해 가진 필진의 史觀 반영

성명은 이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日帝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특정인을 國父(국부)로 만들려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편향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특정인'은 李承晩 대통령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탄생을 '정부 수립', '출범'으로 기술해 불행한 사건처럼 치부한 것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建國'이란 표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史觀(사관)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필진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출판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 · 교수 필진을 사전에 걸러낼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A4용지 18페이지(세계사 영역 제외)에 달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전교조 소속 교사 등 이념적으로 문제될 만한 필진들을 걸러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高校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했던 A교수는 위와 같은 교과서 필진 선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검정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 11명의 검정위원 대다수가 40대 중후반이다. 이 가운데 교사 출신이 5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검정위원들에게 교과서 서술과 관련, 따로 서류를 작성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건 어렵다'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건국에 앞서 '총선거', '국회구성', '헌법제정', '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부수립은 건국의 마지막 단계이다. 교과서 필진들이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남한과 동일선상에 놓았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또 "한국사 교과서에서 남북한의 역사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역사는 부록 내지 補論(보론)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2. 中道 · 中立을 美化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호의적으로 서술했다. 성사되지 못한 두 움직임을 교과서는 '실패'로 표현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놓친 듯 아쉬워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마치 중립화에 '실패'한 결과처럼 기술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中立化에 실패한 결과처럼 기술

6種 한국사 교과서의 광복 직후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서술된다. 右翼(우익), 左翼(좌익), 그리고 中道(중도)다. '우익', '우익 측', '우익인사', '우익세력', '우파'라는 표현은 교과서 내에서 反共자유민주주의를 따랐던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지칭할 때 등장한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좌익', '좌익 세력', '좌파', '공산당 세력'으로 불린다. '중도'는 양쪽의 주장을 일부씩 수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과거 제6차 교육과정의 國定(국정) 국사 교과서는 '우익', '좌익', '중도' 같은 구분 없이 '이승만 등의 정치 지도자들', '여운형, 안재홍 등',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 등으로 표기했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한 과거 국정교과서에 비해, 現 6종 교과서는 3인칭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 관계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4항의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와 7항의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과서가 兩非論(양비론)에 빠진 나머지 '中道'(중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익, 좌익, 중도세력이 격렬하게 대립한 사건이었던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의 내용에 잘 나타난다.

교과서들은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을 추진한 中道 세력에 대해 호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총선거를 통한 남한의 단독 정부수립 움직임을 '민족 분단', '민족(동족)상잔의 비극 초래', '민족 분열 행위'라고 비판한 中道파의 주장이 교과서에 자세히 소개된다.

▲ 미래엔컬처그룹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 좌우 합작과 민족 통일을 중시하는 중도파 세력들은 이를 지지했고, 한국 독립당의 김구도 '8 · 15 이후 민족이 거둔 최대 수확'이라고 하면서 적극 찬성하였다. (331페이지)

(총선거를 통한 남쪽 지역의 정부 수립에 대해) 반면, 김구가 이끄는 한국 독립당과 김규식 등의 중도파 세력들은 남쪽만의 선거는 민족 분단의 길이며, 장차 한민족이 미소 전쟁의 전초전을 벌이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중략) 김구와 김규식 일행은 서울로 돌아온 후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들은 남북 양쪽에서 추진하는 정부 수립 작업을 모두 민족 분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민족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32페이지)

▲ 법문사

남북 협상은 광복 이후 처음 있었던 남과 북의 지도자 회의였으며,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 연합 전선 운동과 그 맥이 통하는 것이었다. (311페이지)

8 · 15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좌우의 대립과 냉전 체제의 심화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14페이지)

▲ 천재교육

김규식, 홍명희 등 중도파들은 민족 자주 연맹을 결성하고 미소 양군 철수와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정치 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를 주요한 정책으로 내걸었

다. 그런데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김구가 민족 자주 연맹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의견을 표명하자, 이후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중략) 분단 정부 수립과 동족상잔의 전쟁 발발을 우려한 김구와 김규식은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16페이지)

▲ 비상교육

김구 등은 이남에서 총선거를 거쳐 정부가 수립되면, 이북 역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이는 결국 남북 분단을 초래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를 막기 위해 김구, 김규식 등은 이북에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 이른바 '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다. (315페이지)

▲ 지학사

한국 독립당의 김구와 민족 자주 연맹의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함께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267페이지)

이에 반해 당시 치열했던 한국 左右(좌우) 세력의 이념 대립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파 지도자들이 단독정부 노선을 취했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左右의 대립을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의 급진적 해결 對 反共(반공)주의의 구도로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우익 측'은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공주의를 내세워 단독 정부 노선을 취했던 우익 측과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리의 급진적 해결을 추구했던 좌익 측은 좌우합작운동에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파괴적 행동을 일삼고 좌우 합작을 반대하는 공산 분자와 합작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한국민주당은 유상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하였다. 공산당의 박헌영은 토지의 유상 몰수는 지주를 위한 것이며, 입법 기구는 미군정의 거부권을 넘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31페이지)

그 외 교과서들도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 등에 있어서 좌우익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패했다는 간단한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北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것에 불과한 '남북 협상'에 대해서도 결렬된 탓을 南北 모두에게 돌렸다.

▲ 법문사

…합작 7원칙 가운데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에서 좌익과 우익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좌우 합작 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 (중략)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구성 이후에도 좌우 합작 위원회의 활동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좌우 합작 운동은 미군정, 우익 · 좌익 세력의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310페이지)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311페이지)

8 · 15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좌우의 대립과 냉전 체제의 심화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14페이지)

▲ 천재교육

그런데 좌우파는 각각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합작의 원칙을 발표하였고, 토지 개혁 문제나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312페이지)

(남북 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서에 대해) 이 성명은 이남의 단독 선거 추진 세력

들에게 환영받기 힘들었으며, 유엔이나 미군정도 단독 선거 일정을 변경하거나 중지하지 않았다. (316페이지)

▲ 비상교육

그러나 7원칙 중 신탁 통치 문제, 토지 개혁 문제, 친일파 처벌 문제에서 좌익과 우익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게다가 당시 영향력이 컸던 김구와 이승만, 조선 공산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합작 운동은 약화되었다. … (중략) 냉전이 격화되자 미군정은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우익을 옹호하였다. 게다가 운동을 이끌었던 여운형마저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통한 중도 통일 정부 수립 시도는 중단되었다. (314페이지)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지도자 회의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 협상은 당시 형성된 냉전 체제라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역시 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협상은 힘을 잃었다. (315페이지)

▲ 지학사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소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국내외 좌우 세력은 궁극적으로 통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지만, 한반도의 분단을 몰고 오는 냉전의 파도를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264페이지)

김구, 김규식의 建國방해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美化

특히 교과서들은 거의가 金九(김구), 金奎植(김규식)이 1948년 4월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한 것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美化하고 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생각 열기'란 항목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반쪽을 낼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이야 어찌 차마 더 보겠나이까"(김구, 김규식이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 315페이지)란 감상적 문장을 소개하면서 '김구, 김규식은 왜 남북협상에 나섰을까'라는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이 교과서는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사실을 소개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다. 평양회담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란 제목 하에서 기술, 김구 · 김규식 · 김일성 · 김두봉이 통일국가 수립을 위하여 만난 것처럼 왜곡했다. 네 金 씨의 회동은 대한민국의 建國을 방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했다.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赤化를 위한 노력'이었다.

李承晩의 建國 노선에 반대한 金九, 金奎植은 1948년 북한으로 올라가 김일성과 회담하고 4월30일에 '남북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金九, 金奎植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이 철저하게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여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하려 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명서는 5월10일로 예정된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음을 분명히 한 뒤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련은 북한과 接境(접경)하고 있어 군대를 철수하더라도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지만, 미군은 한번 철수하면 한국이 남침을 당하더라도 제때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兩金 씨는 공산주의자들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동조한 것이다. 이 성명서는 또 "남북정당사회단체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퇴한 후에 內戰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



1949년 6월29일 한반도에 진주했던 미군의 마지막 부대가 인천항을 떠나고 있다. 美軍철수는 결국 북한의 침략계획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년 뒤 북한군의 南侵(남침)으로 6 · 25 전쟁이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는 南侵의 초대장이었다. 그럼에도 金九, 金奎植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인 셈이다. 지도자가 속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다.

이 성명서는 또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下記 諸정당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全 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선거를 통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주도할 '下記 諸정당단체들'은 북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근로인민당, 북조선농민동맹 등 56개 단체였다. 金九, 金奎植 세력과 남북한 좌익단체 연합체가 건국을 주도한다는 말이다. 즉 李承晩 세력 등 자유진영을 제외하고, 남북한 공산세력이 뭉쳐 공산국가를 만드는 데 김구, 김규식이 가담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도 김구, 김규식은 철저히 이용당했다.

이에 대해 梁東安(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렇게 평했다.

"이것은 美蘇공위(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주장해온 것, 즉 남한의

우익진영을 배제하고 통일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단지 美蘇공위 때는 소련이 배제하려 했던 김구와 김규식 및 그들의 추종정당과 단체들을 추가로 참여시킨 점이 다를 뿐이다. 김구, 김규식 등이 이제는 소련의 제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공산당 지배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모든 일이 성명의 내용대로 진행되어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권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생길 통일정부가 소련이 원하는 공산정권이 될 것은 너무나도 自明(자명)한 것이었다. 요컨대 4 · 30 성명도 공산당의 한반도 지배를 위한 소련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문건이었다."

金奎植은 평양에 가 있을 때 김일성이 주최한 초대연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북조선으로 오니 북조선은 살 토대가 있다. 남쪽은 공장이 없고 미국 차관만 가져오고 여기 공장은 일하고 있으며 남쪽은 망하는 집안 같고 여기는 새로 잘 되는 집안 같다."

그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5월6일)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남조선에는 도처에 부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 북조선의 공장은 남조선의 공장보다도 충실한 생산을 하고 있다. 소련인은 그다지 표면에 나서지 않는데 남조선 미국인은 너무나 간섭이 심하여 현재 군정부에는 부패가 심하다."

金九, 金奎植은 5월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두 사람은, 4 · 30 성명이 통일조국을 건설할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自讚(자찬)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북조선 당국자도 單政(단정)은 절대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확언했

다."

4 · 30 성명대로 통일조국이 건설되면 자유진영이 배제된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金奎植, 金九는 사실상 공산국가 건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북조선 당국자도 單政은 절대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확언했다"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당시 이미 북한엔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다. '북조선 당국자'란 말 자체가 정부를 전제로 한다. 남한엔 '남조선 당국자'로 불릴 만한 조직도 사람도 없었다. 美軍政(미군정)이 있을 뿐이었다.

4 · 30 성명은,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 발표한 6 · 15 선언이 연합제-연방제 혼합방식의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구, 김규식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役을 김대중이 再演(재연)했다.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의 대변자 비슷한 말을 한 것이나 김대중이 김정일의 대변자 같은 말을 계속했던 점에서도 비슷하다.

5 · 10 선거를 惡評한 金九, 金奎植

두 金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 · 10 선거는 투표율 90% 이상의 참여로 공정하게 치러졌다. 김구는 그러나 "선거가 부자유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는 논평을 냈다. UN 감시기구도 공정하다고 평한 선거를 惡評(악평)한 것이다. 양동안 교수는 이렇게 논평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김구와 김규식은 대한민국 건국을 훼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제헌국회가 開院(개원)되고 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한 데 대하여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보다 조직적으로 5 · 10 선거 무효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키로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구, 김규식은 나중엔 북한에 대해서도 정부 수립 움직임을 비판하여 兩非論을 보이기도 하였다. 梁東安 교수는 "그러나 그들의 분단정권 반대는 남한의 대한민국에만 타격을 줄 뿐 북한의 단독정권에는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고, 남한의 정치체제가 개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李承晩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공산화되어 이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으니 남한의 갈 길은 북에 조직된 공산군의 武力(무력) 앞에 굴복하여 공산화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정통성을 가진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서 반공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해 자유통일을 진행하든지 두 가지가 있었다. 제3의 길이란 한국엔 없었다. 金九와 金奎植, 兩金은 북한에 가서 이미 양성된 공산군의 실태를 보고 남한에 정부를 수립해도 곧 붉은 군대가 쳐내려와 인민공화국이 될 터이니 대한민국을 建國할 필요가 없다고, 끝까지 소련과 북한 공산정권의 편을 들어 정부수립을 반대하다가 마침내 해방정국의 迷兒(미아)가 되고 말았다." (자료: 金九-劉馭萬 대화 비망록 참조)

그는 또 이렇게 설명했다.

"金九와 金奎植은 북의 공산집단이 머지않아 남침해 올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두 金은 그럴 일은 없다고 거짓성명을 하였다. 정부를 수립해 봐야 곧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강력한 建國 반대였다. 그대로 있다가 공산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민족통일이었다. 金九는 西山大師(서산대사)의 漢詩(한시) 구절, '눈 덮인 들

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를 愛誦(애송)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눈길을 金九는 옳게 걸어갔는가 과연 김구를 따르는 容共(용공)통일의 길이 옳았던 것인가 반세기 이상을 신문과 방송이 김구 찬양 일색인데 과연 그 추종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말이다. 김구는 저항민족주의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판을 유지하였던 공로는 1945년까지 혁혁하였다.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도 金九 예찬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UN 한국위원회의 중국 대표인 劉馭萬(유어만) 公使는 1948년 7월11일 오전 11시 金九의 자택으로 방문,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劉 공사는 대화의 내용을 英文으로 요약하여 국회의장 李承晩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梨花莊(이화장)에 보존되어 있다. 이 대화는 대한민국 建國에 반대하는 일에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은 金九의 심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서울 주재 중화민국 공사였던 劉馭萬은 장개석 총통의 뜻을 받들어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화합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협조하도록 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다)

金九와 劉 공사 대화 비망록에는 金九가 보인 행동의 모순점이 드러난다. 金九는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注: 북한군)을 南進하는 데 써 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즉,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평양에서 발표한 4 · 30 성명서 중 "외군이 철수해도 內戰은 없다"는 대목은 완전한 속임수가 된다.

金九는 북한군이 반드시 남침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이었다. 金九는 이 안전판의 제거를 요구한 것이 된다. 즉,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 장애물을 치우는 일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자료 金九-劉馭萬(유어만) 대화 비망록

劉馭萬: 나는 선생님의 어떤 면보다도 정직한 분이란 점에서 존경해 왔습니다. 나도 비록 외교관이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부임하게 된 것은 나로선 최초의 외교관 임무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지 모르지만 정직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金九: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떡일 뿐)

劉: 유엔 위원단의 한 사람으로 上海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며느님과 아드님께서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엄 씨도 선생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나를 통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자주 여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金: 귀하가 말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없어도 귀하를 위하여 통역할 사람은 있어요.

劉: 나는 오철성이 보내는 편지를 갖고 있는데 공사관에 두고 왔습니다. 중국 외무장관 왕시굴도 직접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蔣介石(장개석) 총통께서도 편지를 직접 쓰려고 하였는데, 외무장관이 오늘 대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쓰시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 통의 편지가 같은 메시지를 선생께 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李 박사와 협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李 박사와 선생과 金奎植 박사가 남한 정권을 수호하는 데 협조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중국 格言(격언)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이 다툴 순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自招(자초)해선 안 된다." 선생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해도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선 다 형제들입니다. 나는 선생의 아들 김신을 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제가 하는 말이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아들이 자신의 아버님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선생께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가담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만) 제발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 敵手(적수)로서 서로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金: (심각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최측근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 당신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지요.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내 친구들이 좋아하든 않든 간에. 귀하는 기다려주실 거죠?

劉: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도록 권하고 싶어요. 저에게 부과된 메시지 전달은 끝났으므로 허락해주신다면 선생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金: (찬성은 아니지만 예의상 승낙한다는 표정을 지음)

劉: 내가 李 박사에게 선생과의 협조 가능성을 타진할 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변함없이 "만약 그가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 환영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李 박사께서 부통령직을 선생에게 제의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나는 귀하께서 그런 자리를 초월하신 분이라 그런 점에 대하여 제가 언급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선 "부통령 같은 것은 집어치워!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께서 李 박사와 협력하시고 싶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과 당황하고 있는 선생의 지지자들에게 右翼진영의 단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선 애국활동의 찬란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선생께서 최근 평양에서 열린 소위 남북한 지도자협의회에 관계하신 일은 그런 기록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북중국에서 조선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되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겠지만 "우리는 김구 지지자들입니다. 그 분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의 모든 동지들은 선생의 찬란한 과거 업적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金: 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자신들의 협력자로 간주합니다. 내가 귀하께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입장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한 정부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李 박사는 한민당의 포로가 되어, 말하자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내가 만약 정부로 들어가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바깥에 머무는 게 낫습니다. 나는 그 더러운 정치싸움에 연관되는 게 싫습니다.

劉: 선생님의 말씀은 오히려 바깥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정부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논리를 갖게 합니다. 李 박사께서는 한때 선생님의 동지이셨던 신익희, 이범석, 이청천 씨 같은 분들을 麾下(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선생께서 참여하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게 한민당 뜻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李 박사께서 國益(국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으셔도 혼자서 그 정당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께서 정부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견제하면 李 박사를 강화시켜줄 것이고 만약 버리신다면 李 박사를 한민당의 수중에 떨어지게 할 것인데, 선생께서도 한민당이 국가의 운명을 견제 없이 함부로 농단하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金: (정치싸움 등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 한 다음) 더구나 나는 한 특정 정당의 비방전에 의하여 反美주의자로 광범위하게 색칠 당하였습니다. 나는 중국과 미국만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웃나라라고 생각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정부를 구성할 때 그 안에 있으면 미국인의 동정심에 찬물을 끼얹어 국가이익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劉: 선생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李 박사도 한때 반미주의자로 惡評(악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 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결국 한국인의 고유한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선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장군도 명예롭게, 창피를 당하지 않고 소환될 것입니다. 가도 괜찮습니다. 귀측이 단결하고 유엔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미국 측이 떠나가는 일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金: 귀하는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劉: 나는 자신있게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영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金: 미국이 (지금 입장을)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劉: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확고하게 지지하니까요.

金: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注: 북한군)을 南進(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劉: 러시아가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두 번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으로부터, 또 한 번은 요동반도로부터 물러났습니다. 유엔을 통하여 세계 여론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그 충격 앞에서 다시 굴복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정부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꼭두각시인 것처럼 미국의 꼭두각시라면 나는 선생께서 어느 쪽과도 협력하지 않으려 하는 입장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유엔의 지지 덕분에 한국 정부는 主權국가가 될 것이고, 통일을 성취할 基地가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 한국이 약하게 보일수록 선생께선 조건 없이 (建國을 위하여) 투신하셔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左右합작'과 '中立化'의 좋은 예로 소개

교과서가 中道에 치우쳐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광복 직후 및 6·25 전쟁 직후 부분에서 오스트리아를 바람직한 예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재교육과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오스트리아가 '좌우 합작'과 '중립화'로 분단을 피한 좋은 예라고 설명한다.

▲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의 책임을 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그러나 좌우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여 종전 직전에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모태로 연합국 점령 아래에서 10년간 통일된 행정 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합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1955년 5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의 재건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고, 10월에는 4개국 점령군이 모두 철수하였다. (천재교육刊, 312페이지, '연합국의 분할 점령을 슬기롭게 극복한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종전 후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합국 4개국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었다. 그러나 분단된 속에서도 모든 정당이 참여한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후 좌우 진영의 인사가 포함된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고, 분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식의 영세 중립화가 이상적 모델임을 깨달았다. 국민당과 사회당은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정치 강령으로 채택하였으나 냉전으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연합국은 오스트리아 독립을 위한 회담을 실시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제대로 진전되질 못하였다. 그러나 중립화를 내건 오스트리아의 끈질긴 노력으로 1955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 재건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을 계기로 연합국 점령군은 철수하고 통일된 독립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 (삼화출판사刊, 333페이지, '역사의 창' 좌우합작으로 분단을 피한 오스트리아)

위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左右합작으로 중립화되어 통일되었어야 하는데 당시 좌우익의 무리한 대립으로 지금까지 분단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남한보다 앞서 단독 정부수립을 추진하면서 '남북 협상'을 이용한 북한 측의 언급도 없으니,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 등 대한민국 건국 세력인 '우익'과 소련을 배경으로

한 김일성 및 공산주의자의 '좌익'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양동안 교수는 "남한에서 좌우합작이 성공하고 그를 토대로 남북합작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통일정부에서는 좌익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 분명했다"고 말한다. 좌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확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부가 통치하는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좌우합작이 성공하여 통일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가 공산화 통일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 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左右 합작으로 통일 임시정부 수립됐어도 곧 와해 됐을 것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치열했던 이념 대립이 단지 '미 · 소의 협상', '냉전의 파도', '좌우의 대립과 냉전 체제의 심화' 등의 양비론적 서술로 처리된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다. 이로 인해 '좌우 합작'을 뿌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가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세력 연구》의 저자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著書(저서)에서, 당시 상호타협이 불가능한 이념을 가진 우익과 좌익 세력이 동거하는 연합 정권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설사 일시적으로 좌우 연합 정권의 통일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좋은 예가 박헌영이 수립한 자칭 조선인민공화국의 실패다. 그런 연합정부가 탄생하여 와해되는 과정을 거쳤다면, 해방 직후의 한반도는 통일 이전의 중국 대륙이나 베트남 또는 예멘처럼 혁명과 內戰(내전)의 수라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의 흐름이 38선을 중심으로 停戰(정전)하는 쪽으로 흘러가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쳤다(1951년 8월7일)

1945~1948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全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대립 양상이 가장 첨예한 시기였다. 당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들의 체제와 이념에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국력에 있어서도 전성기였다.

그 당시 한반도 내 좌우세력 간의 사상 대립 역시 치열했다. 교과서의 짧은 설명처럼, 단지 합작 7원칙 가운데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에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소련의 지원 하에 순조롭게 권력을 장악한 북한의 김일성 세력은 처음부터 타협을 모르는 스탈린주의자들이었고,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 등 남한의 공산주의자들 역시 해방 직후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 남한 지역에서 기선을 잡고 '사회주의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 소련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이 같은 '좌익'에 대해 '우익'들은 경계심과 불신, 증오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 타협이지 혁명세력과의 타협은 불가능했고, 여기에 중간파의 입지는 처음부터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좌우합작을 위해 노력했으나 좌우세력으로부터 이용당했을 뿐이다. (《한국 보수세력 연구》, 남시욱 著)

양동안 교수 역시 당시 한반도의 정치 세력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의 공산화 등을 고려할 때,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거쳐 독립이 됐을 경우 한반도는 전체가 공산화되거나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상황은 한반도와 달랐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오스트리아에 대해선 강대국들이 신탁통치를 실시한 바가 없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5월 오스트리아를 분할 점령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신탁통치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점령 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선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를 실시하려 했다.

2. 외국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직후부터 오스트리아의 정치세력들은 통일된 임시정부를 구성했으며, 한 번도 4개 외국 군대 점령지역별로 별개의 독립된 정치, 행정기관이 구성된 일이 없었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美蘇(미소) 양국 군대의 점령 지역 진입과 동시에 남북한에 별도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각 지역을 상이한 내용으로 통치했다.

3. 오스트리아에서는 각국 군대의 분할, 점령지역 간에 교통, 통신, 상거래가 단절되지 않았다. 각국 군대 간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했지만 그 분계선은 군사 활동에 관한 경계선에 그치고 통치분계선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교통, 통신을 차단하여 북한 지역을 남한으로부터 분리함으로서 미소 양국 군대 간의 군사분계선이 통치분계선으로 변질되었다.

4. 오스트리아의 좌익 세력은 소련에 대해 자주적 자세를 취하고 좌우연합에 의한 통일정부 유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는 우익진영에 인민당(舊기독교사회당), 좌익 진영에 사회당(舊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있었다. 온건 좌익 노선의 사회당은 공산당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黨勢(당세)를 유지하고 있어 좌익 진영 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오스트리아가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것은 절대 피하려는 입장이었으며,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미, 소, 영, 프 4개 외국 군대에 대응함에 있어 우익 정당인 인민당과 확고한 공동보조를 취했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좌익 진영의 주도권을 소련에 맹종하는 極左(극좌)노선의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공산당은 우익 진영과의 협력을 외면하고 소련의 한반도 정책 실천에 협력하려고만 했다〉

남시욱 교수 역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달랐던 환경을 지적한다.

〈오스트리아는 미, 영, 불, 소, 4개 연합국 군대가 진주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인 칼 레너 박사가 수반이 되어 각파를 망라한 연합 정권인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오스트리아 전역을 통합구역으로 하는 행정을 실시했다. 즉, 오스트리아에는 美蘇 두 나라가 국토의 반씩을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일성 같은 소련의 대행자나 박헌영 같이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수립하려는 볼셰비키도 없었다〉 (《한국 보수세력 연구》, 남시욱 著)

3. 制憲(제헌) 헌법의 정신을 '민족 사회주의'로 왜곡

삼화출판사刊 한국사 교과서는 '탐구활동'(313페이지)에서 '제헌 국회 속기록'을 例文(예문)으로 제시하고, 당시 制憲 憲法(제헌 헌법)의 정신을

아래와 같이 '민족 사회주의 국가'로 소개했다.

다음 제헌 국회 회의록을 읽고, 제헌 국회가 만들려고 하였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말해 보자.

"우리의 노선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재주의 공산 국가를 건설하느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헌법 정신은 민주주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한 기본 설계도를 여기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헌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어데 있는고 하면 우리들이 민주주의 민족 국가를 구성해서 우리 3천만은 물론이고 자손만대로 하여금 현 시국에 적응한 민족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자는 그 정신의 골자가 이 헌법에 총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 기초 위원장 국회의원 서상일, '제헌 국회 속기록' 제1회 17차– (313페이지)

위 자료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徐相日(서상일) 의원이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 제1독회(1948년 6월23일,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한 첫 보고 내용이다. 徐相日은 독립 운동가이자 정치가로 1945년 광복 후 송진우, 장덕수 등과 함께 韓民黨(한민당) 창당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1946년 비상국민회의 의원에 취임했으며, 1947년에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민선의원으로 당선됐다. 1948년에는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헌법기초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헌국회 말기에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기해 최초로 헌법개정안을 제기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신병으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병사했다. 서상일은 혁신계 사회민주주의 정당 활동을 벌여 進步黨(진보당), 사회대중당 등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삼화출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建國 주체 세력으로서의 국내 保守右派(보수우파) 그룹과 이승만을 비롯한 在美(재미)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축소 · 배제했다. 그 결과 脫식민 사회의 예정 코스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 혹은 '자주적 민족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당시 사회 전체의 默示的(묵시적) 합의였던 것처럼 誤導(오도)했다. 교과서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화보다는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제헌국회가 만들려 했던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서상일이 언급한 것처럼 '민족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制憲 헌법은 애초부터 主權(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체제와 질서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와 자유경제체제임을 확실히 했다. 권력구조로는 내각제적인 요소가 결합된 국회 선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다.

制憲 헌법에는 당시 현실을 감안해 주요 자원과 산업에 대한 국유화 내지 국 · 공영 원칙이나 노동자의 이익배분 均霑權(균점권)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신생독립국가에서 나타나는 초기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착실히 실현해 오늘에 이르렀다.

자료 制憲 憲法의 주요 내용 및 의미

우리 역사 최초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 현대적 의미의 통치 질서 마련

1948년 7월17일 공포된 制憲 憲法은 자유권의 보장, 권력분립, 단원제 국회, 대통령중심제, 통제경제정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전문에서 3 · 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것임을 밝혔다.

둘째, 총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고 천명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 즉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 밖에도 一事不再理(일사부재리)의 원칙, 구속適否(적부)심사제 등의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으로는 교육받을 권리 및 초등 의무 교육,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근로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결혼 ·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권 등을 규정하였다.

넷째, 정부형태는 3權 분립을 통해 권력집중을 막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다. 임기 4년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중임을 허용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에게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법률안 제출권, 법률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조약체결 및 비준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이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을 중요정책의 의결기관으로 설치하였다.

다섯째, 국회는 단원제 국회를 채택했으며, 보통 · 직접 · 평등 ·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제헌국회의 의원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免責(면책)특권을 가졌다.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을 비롯하여 예산심의권 및 의결권, 법률제정권, 대법원장 임명승인권, 중요 공무원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이 있었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다. 정기회는 매년 12월20일에 집회 하였으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었다.

여섯째,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 승인제와 법관의 임기제(10년)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위헌법률의 심사 · 결정을 위해 헌법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 질서를 마련하였다. 중요 지하자원, 수산자원 등을 국유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도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였고 대외 무역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었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았다.

여덟째, 국회는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홉째,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었으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토록 하였다.

제헌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하였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 현대적 의미의 통치 질서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마련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4. 공산주의자 呂運亨(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美化

공산주의자 金午星의 글 그대로 인용 게재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기 左翼(좌익)의 간판 인물인 夢陽(몽양) 呂

運亨(여운형)을 기술하면서 그의 親日행적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건국에 惡영향을 끼친 左右合作(좌우합작) 활동에 대해 긍정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교과서들은 呂運亨이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建準)과 조선인민공화국(人共)이 '종이정부'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人共은 미군의 진주를 앞두고 수세에 몰린 建準이 택한 자구책이었고, 李承晩(이승만) 등 명망 있는 지도자들을 인민대표위원으로 임명했으나 과시용 展示(전시) 내각에 불과했다.

법문사刊 교과서는 두 번(288, 304페이지)에 걸쳐 여운형의 사진을 게재하며 그의 좌우합작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과서는 공산주의자 金午星(김오성, 본명 김형준)의 《지도자 군상》을 그대로 인용해 親日 행적이 명백한 呂運亨에 대해 "모든 지사들이 절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對日 협력을 감행하고 있을 때에도 呂運亨 씨는 끝끝내 고상한 절개를 지키고 불응하였다"(288페이지)고 기술했다.

金午星은 공산주의 이론가로 1944년 8월 呂運亨과 조동호가 결성한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1946년 11월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3黨이 합당한 남조선로동당의 창당과 함께 남로당 중앙위원이 됐다. 그리고 이듬해 1947년 越北(월북)했다. 김오성은 1948년 8월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됐다. 이후 북한에서 문화선전부 부상을 지내는 등 요직을 겸한 인물이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도 법문사와 더불어 여운형의 親日행적에 대한 언급 없이 1945년 8월16일 呂運亨의 휘문고보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 교과서는 사진설명에서 呂運亨이 조선총독부 엔도(遠藤柳作) 정무총감을 만나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대신 조선인들의 건국 활동을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받고, 建準을 결성하였다고 썼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呂運亨 중심의 建準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정부 수립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미군이 들어오기 전인 9월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각지의 조직을 인민위원회로 바꾸어 나갔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외형적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승만, 김구, 김일성 등을 각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해외에 있던 당사자들과 우파 정치인들은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노선에 반대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306페이지)

교과서는 이처럼 呂運亨이 左右를 아우르는 정치조직을 구성하려 했던 점만 강조하고, 親日행적과 建國에 악영향을 끼친 左右합작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

建國에 惡영향을 미친 左右합작 활동 긍정 서술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 呂運亨의 조선건국동맹에 대해 기술했다. 교과서는 구체적으로 呂運亨의 조선건국동맹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건국동맹은 각각 활동하는 지역이 달랐지만, 모두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건국을 준비하였다. 세 단체가 만든 건국 강령은 광복 후 민주 공화국을 만드는 데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였다"(288페이지)고 기술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신탁통

치 문제를 계기로 벌어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좌우익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하여 민족 전체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결과 1946년 7월 미군정의 지원 아래 좌익의 여운형과 우익의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이 개최되었다"(330페이지)고 서술했다.

비상교육과 지학사의 경우도 다른 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呂運亨의 조선건국동맹과 좌우합작 운동을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한 건국 준비 활동"(비상교육刊, 296페이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한 활동"(지학사刊, 263페이지) 등 긍정적인 서술로 일관했다.

親日-親北으로 얼룩진 '呂運亨의 생애'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呂運亨을 민족주의자로 포장하고 그가 마치 建國에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운형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이는 명백한 역사歪曲(왜곡)임을 알 수 있다. 소련공산당 선언을 최초로 우리말로 옮긴 呂運亨과 그가 주도한 建準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정국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1945년 8월10일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패전으로 인해 한반도 내의 일본인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해 宋鎭禹(송진우)에게 국내 치안유지의 모든 권한을 맡아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宋鎭禹는 이를 거절했으며 金俊淵(김준연)도 동일한 교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宋鎭禹와 金俊淵의 거절에 놀란 총독부는 1945년 8월15일 아침 8시, 제3의 인물로 呂運亨을 정무총감 관저로 급히 초대해 조선이 해방을 맞아 정치적 공백기에 처했을 때의 치안유지의 협력을 요청했다. 呂運亨은 이를 즉석에서 흔쾌히 승낙했다.


1946년 남조선노동당 결성 밀담을 나누는 여운형(右)과 박헌영(左)

'치안유지의 협력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呂運亨은 그 날로 좌익계의 鄭栢(정백), 崔容達(최용달) 등과 함께 建準을 조직하고 동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建準의 깃발 아래 1945년 8월30일까지 145개의 建準 지방위원회가 결성됐다. 조직 기반이 취약한 여운형은 남로당의 당수 朴憲永(박헌영)과 제휴, 建準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呂運亨은 建準 결성 후 '건국치안대'를 조직 했는데, 이 치안대는 9월2일자로 建準에 통합됐다.

그러나 建準이 좌경으로 변질되자 부위원장 안재길 및 민족진영 인사들은 建準을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建準은 1945년 9월3일 2차 개편대회를 열고 이강국을 비롯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을 간부로 등용한 뒤, 박헌영 계열의 공산당과 연합했다. 같은 해 9월4일 建準은 박헌영, 여운형, 정백 등 4명에 의한 人共 설립준비위원회를 거친 뒤, 9월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人共)을 선포했다.

建準은 人共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1945년 9월6일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도 않은 민족진영 인사들 가운데 李承晩을 주석으로, 金九를 내무장관에 정해 놓는 등 일방적으로 내각 명단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더욱이 人共의 중앙인민위원회의 내각구성원을 살펴보면 전

체 인원 52명 가운데 72%인 38명이 공산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변질되어가는 한국사의 진상(上)》, 김종오 著)

이처럼 呂運亨의 建國 구상과 행적은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전위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呂運亨은 또 일제치하에서 입건되어 서울지방법원 재판과정에서 일본을 위해 獻身(헌신)하겠다는 '충성서약'을 한 親日(친일) 세력의 일부이기도 하다.

〈대동신문〉 1946년 2월 17, 18일자에 따르면 呂運亨은 1943년 2월6일 일본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일본을 위해 對중국 공작을 할 수 있으니 기회를 달라"며 漢詩(한시)까지 지어 충성을 맹세했다. 詩의 내용은 "포연탄우 속에 문필로 보답하고(砲煙彈雨又經筆, 포연탄우우경필) 나라 위해 젊은 목숨 바치기를 청하네(爲國請纓捨一身, 위국청영사일신) 천억이 결성하여 공영을 이루는 날(千億結成共榮日, 천억결성공영일) 태평양 물에 전쟁의 티끌을 씻으리(太平洋水洗戰塵, 태평양수세전진)"이다. 여기서 '千億'은 일본이 중심이 된 東洋을 말한다.

일제 패망 후 서울에 진주한 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1945년 9월12일자로 작성한 비밀문서 'G-2 Periodic Report'에서 여운형에 대해 "한국인들 사이에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정치가"이며 "조선총독으로부터 거금(2000만 엔)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950년 11월 UN군이 노획한 조선공산당 문서도 그를 "변명할 이유가 없는 친일분자"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趙炳玉(조병옥) 박사는 《나의 회고록》에서 여운형의 親日 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여운형, 안재홍 두 사람은 日政(일정) 말기에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전에는 항일파요, 민족적 지도자로 관록을 가진 여운형, 안재홍 씨 두

분은 영국령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필리핀의 마닐라가 일본에 의하여 점령당한 후 미-영 연합국이 패전하고 일본이 승리한다고 오산한 나머지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끼(小磯國昭)에게 불려가서 소위 대동아 전쟁에 협력할 것과 황국신민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여기에 그 증거로서 매일신보에 실린 담화와 논문과 사진들이 있으니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누구의 필적이며 누구의 사진인가를(이하 생략)."

수차례 越北해 김일성과 비밀 회담

이기하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 급조》와 한국일보사가 1987년 발행한 《한국의 정당》에는 呂運亨을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韓人(한인) 제1호'라며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여운형은) 임시정부 議政院(의정원) 대의원, 임정 외교부 장관과 노동청년단장을 역임하는 한편 고려공산당에 가입한 뒤, 이르쿠츠크 재건공산당 상해지부당원, 소련 공산당 韓人 제1호 입당, 조선공산당 해외부원, 中共黨江蘇省黨(중국 공산당 강소성당) 입당 활동 중 상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체포, 본국에 압송되어 3년간 복역 후 中外日報 사장 등을 거치며 활동하다가 權泰錫(권태석)을 만나게 된다. … (중략) 그러나 얼마 후 日本世話會(일본세화회) 주선으로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여운형의 약속으로 일본인 대표로부터 70만 원의 거액을 받고 사태가 수습됨으로써 건준 활동은 재개했다."

한민성의 《추적 여운형》에는 呂運亨이 처음부터 '대한민국'이란 國號(국호)를 극력 반대하고 '조선공화국'을 주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越北한 여운형의 자녀들이 金日成을 만나고 있다.

"공산주의자로서의 여운형의 족적이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소련공산당의 세계 赤化 공작에 뛰어들어 그 走狗(주구)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赤化 공작에 앞장서서 그 하수인으로서 죽는 날까지 놀아났다. 일급 하수인답게 그의 黨籍(당적)도 화려하다. 즉 상해파 고려공산당원, 이르크츠크파 공산당원, 소련공산당원, 조선공산당원, 중국공산당원, 중국국민당원(중국 赤化 공작을 위해 침투), 장안파 공산당의 비밀당원 공산분자들이 一夜(일야)에 捏造(날조)한 소위 인민공화국의 부주석, 인민당 당수, 가짜 김일성파인 사회노동당 위원장, 북로당계인 노동인민위원장 등으로 소련공산당 지령에 따라 조국과 민족도 헌신짝같이 버리고 공산당원답게 공산당을 위해 광분하였다."

〈현대공론〉(이현택, 1988년 9월호 432~433페이지)에 게재된 '여운형의 딸들은 왜 서울에 올 수가 없는가'에는 越北(월북)한 呂運亨 일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몽양의 유가족들이 생존의 보호막을 찾아 월북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가슴 속에서 통곡한 사람은 여운구 씨의 선친인 여운홍(편집자注: 여운형의 동생) 씨였다. 1985년 가을 이산가족 방문단이 평양에 갔을 때 여연구(注: 여운형의 차녀) 씨가 인민회의 부의장으로 환영회장에 나왔었다는 것이 공식적 확인이었다. 그 밖에는 단편적인 미확인자료이지만 큰 누님(注: 여운형의 장녀) 鸞九(난구)는 이미 연로했으니까 알 길이 없고, 둘째 연구는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 그리고 4남 鵬九(붕구)는 수산업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3남 영구의 소식은 전혀 모르겠다고 여운형 일가의 최근 상황까지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呂運亨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정국을 올바른 길로 수습해야 할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越北해 김일성과 비밀 회담을 가졌다. 그의 딸 여연구(1996년 사망)는 생전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북한 정권에 충성을 바쳤다. 여연구는 문익환, 유원호 등의 訪北을 알선하기도 했다. 이러한 呂運亨을 순수한 민족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誤導(오도)하는 극히 위험스러운 행위다.

5. 金日成의 抗日(항일) 집중 부각

북한과 국내 左派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법문사를 제외한 5種의 교과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계열의 抗日(항일)운동을 집중 부각시켜 서술했다. 반면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2種의 교과서가 독립협회 활동, 1930년대 이후 독립 운동만을 간략하게 다뤘다.

5種의 교과서는 김일성의 '東北抗日聯軍'(동북항일연군)을 기술하면서 이들이 물자 보급을 위해 일본인, 조선인, 현지인을 구별하지 않고

강탈행위를 했던 점, 몸값 목적의 유괴 등 폭력적 약탈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점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일성 · 최현 · 김책 · 최용건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세력이 '동북항일연군' 의 주요 정치 · 군사간부로 활동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 및 문헌을 일본에서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등 親北성향 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 저작 활동을 했다. 하루키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은 북한에 있으며,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국내에 소개된 하루키의 저서로는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1992년), 《역사로서의 사회주의》(1994년), 《한국 전쟁》(1999년), 《북조선-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2002년),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2004년) 등 다수가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서동만, 이종석 등 좌파 학자들이 하루키의 저서를 대거 수용,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정사실화 했다. 1992년 이종석은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의 번역서를 출간했으며, 서동만은 2002년 《북조선-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를 번역했다. 새로 발간된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5種 교과서는 김일성의 抗日운동 문제를 기술하면서 위와 같은 국내외 좌파학자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8명의 집필진 가운데 6명이 좌파성향인 천재교육은 7장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 에서 한 페이지(280페이지)를 할애, 韓人공산주의자 주도의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와 중국 공산당 주도의 '동북항일연군' 을 집중 부각시켜 서술했다.

미래엔컬처그룹 역시 7장에서 중국 공산당 중심의 '동북인민혁명군' (훗날 '동북항일연군' 으로 발전)의 抗日 및 '보천보 전투' 를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 북한의 정치-경제 변화' 에서 反김일성 세력 숙청을 소개하며 "북한 정권은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항일 유격대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후 복구 사업을 주도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301페이지)고 기술했다.

비상교육은 7장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투쟁' (290~291페이지)에서 "1920년대 초부터 만주 지방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우리 농민들의 의식도 변화하였다"며 '동북항일연군' 과 '조국광복회' 를 소개했다. 비상교육은 '조국광복회' 를 '동북항일연군' 내의 민족 운동가들이 이념 차이를 초월해 反日 공동 전선을 만들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설명했다.

삼화출판사는 7장 279페이지에서 "동북 인민 혁명군은 항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이름을 동북 항일 연군으로 고치고,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단결을 추구하였다"면서 '동북항일연군' 이 마치 만주 지역 抗日운동 주도단체인 것처럼 서술했다. 같은 페이지에서 '조국광복회' 를 "이념과 민족을 초월해 민족적 단결을 이루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기술했다. 또 '역사의 창' 에서 한낱 난동에 불과했던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를 소개했다.

지학사는 7장 242페이지에서 '만주에서의 항일 유격 투쟁' 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만주에서는 일찍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었다"면서 '동북항일연군' 을 소개했다.

북한은 '조국광복회' 를 "조선인민의 역사에서 최초의 주체형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며,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통일전선운동에 철저히 구현한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다. 특히 '조국광복회 결성으로 항일무장투쟁 승리를 가져왔고 결국 조선해방을 앞당기게 되었다' 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력사》, 1979년 판, 118~140쪽/《력사사전Ⅱ》, 1985년

판, 299~301쪽/《현대조선력사》, 1983년 판, 제4장 2절)

김일성 抗日운동의 실체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金日成 일가의 革命史(혁명사)로 모두 왜곡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1871년 辛未洋擾(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金日成의 증조부인 金膺禹(김응우)가 주도한 것으로 조작했다. (《조선력사》, 3권 93~94쪽) 金日成은 또 자신의 경력을 조작해 북한 정권 수립을 正當化(정당화) 하고 스스로 수상이 됐다.

金日成[본명: 金成柱(김성주)]은 李承晩의 대한민국을 가리켜 "親日부역배들인 한민당과 李承晩이 결탁하여 세운 美帝(미제)의 괴뢰정부이므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그 근거는 抗日 빨치산 투쟁을 했던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한대로 親日派(친일파)를 등용했다. 金日成의 동생이자 현재까지 북한의 실력자인 金英柱(김영주)는 과거 일본 관동군 소속이었으며 국가부주석을 지낸 김일성의 외척 강양욱도 종교 · 문화 부문의 친일파였다. 과거 남로당 실력자로 6 · 25 전쟁 기간 중 서울시 인민위원장이었던 이승엽의 경우 일제시대 인천양곡조합 간부였다. 남로당 간부였던 정백도 친일파였다.

金日成은 또 뼈 속 깊이 事大主義者(사대주의자)였다. 젊은 시절 滿洲(만주)를 전전하던 金日成은 1940년 소련군 특무공작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소련군 장교로 임관해 5년 동안 복무하며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직후 스탈린은 한반도 분할과 소련군 진주에 대비해 극동군 정치부와 정보당국에 38도선 이북의 지도자를 찾으라고

북한 김일성 내각	대한민국 초대 내각
■김영주: 부주석,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일제시대 헌병 보조원)	■이승만: 대통령(상해임시정부 초대대통령)
■장헌근: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일제시대 중추원 참의)	■이시영: 부통령(임시정부 내무총장)
■강양욱: 임시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일제시대 도의원)	■이범석·국무총리·국방장관(광복군·참모장)
■정국은: 문화선전성 부부상(日本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신익희: 국회의장(임시정부 내무총장)
■김정제: 민족보위성 부상(일제시대 양주군수)	■김병로: 대법원장(항일변호사)
■조일명: 문화선전성 부상(親日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이윤영: 무임소장관(국내 항일)
■홍명희: 부수상(일제시대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청천: 무임소장관(광복군 총사령관)
■이 활: 초대공군 사령관(일제시대 일본군 나고야항공학교 정예 출신)	■장택상: 외무장관(청구구락부 사건)
■허민국: 인민군 9사단장(일제시대 일본군 나고야항공학교 정예 출신)	■윤치영: 내무장관(흥업구락부 사건)
■강치우: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일제시대 일본군 나고야항공학교 정예 출신)	■이 인: 법무장관(항일변호사, 한글학회 사건)
■김달삼: 조선로동당 4 · 3사건 주동자(일제시대 소위)	■김도연: 재무장관(2 · 8독립 사건)
■박팔양: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편집부장(일제시대 〈만선일보〉 편집부장)	■임영신: 상공장관(독립운동가, 교육가)
■한낙규: 김일성대 교수(일제시대 검찰총장)	■안호상: 문교장관(抗日교육)
■정준택: 행정 10국 산업국장(일제시대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전진한: 사회장관(국내 항일)
■한희진: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시대 함흥철도 국장)	■윤석구: 체신장관(국내 항일, 6 · 25 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총살)
■이승엽: 남조선로동당 서열 2위, 월북 후 빨치산 유격투쟁 지도(일제시대 식량수탈기관 '식량영단' 이사)	■민희식: 교통장관(在美 항일)
	■김병연: 총무처장(국내 항일)
	■이순탁: 기획처장(국내 항일)
	■김동성: 공보처장(국내 항일)

북한 김일성 내각의 친일파(左)와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독립운동가(右) 비교

지시했다. 그런데 소련극동군 산하 88특별여단 제1대대장 金日成이 8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다. 스탈린은 "북조선을 소련의 뜻에 맞게 이끌 조선인 지도자를 추천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련 극동군이 金日成 심사에 나섰다.

당시 스탈린의 비공개 심사에서 "소련의 혁명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충성을 맹세하여 합격한 金日成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서 추석 전날 부하들과 함께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으로 귀국하면서 자신을 金成柱라 소개했다. 마중을 나간 원산인민위원회는 소련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金日成 장군은 없다"고 하자 소련 사령부는 "金成柱가 바로 金日成"이라고 했다. 이 날은 소련 극동군 산하 제25군이 평양에 주둔군 사령부를 개설한 1945년 8월26일로부터 24일이 지난 9월19일이었다.

金日成이 열차 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것은 1945년 9월22일. 10월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군중대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스탈린이 의도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소련의 비호로 귀국한 것이다. 당시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군중대회'에 등장한 김일성은 33세 애송이였다. 그는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을 선포하고, 7월에 스탈린에 의해 북한 정권의 통치자 최종 낙점을 받았다.

1945년 10월14일 金日成의 입국환영 평양 군중대회에서 사진을 보면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소련군 고위급 장교들이 소련깃발 아래 서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소련군의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공식간행물에 나오는 사진에는 소련군 장교들과 소련旗가 지워져 있다.

보천보 전투의 實體

북한은 그동안 金日成의 '보천보 전투'를 역사적 사변으로 일컬으며 金日成의 抗日무장투쟁사 가운데 가장 큰 업적으로 선전해왔다.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는 '김일성이 1937년 3월 西崗(서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경찰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고 보천보 일대를 해방했다. 거리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金日成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환영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몇 명의 전투원이 참가하고 몇 명을 사살했다는 등 구체적 戰果(전과)에 대해 일체 설명이 없다. 단지 보천보 전투를 통해 "조선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할 것을 외쳤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金日成 및 일부 북한연구가들에 따르면, 당시 보천보에는 일본인 26호에 50명, 조선인이 280호에 1323명, 중국인이 2호에 10명 등 총 308호에 138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무장인원으로는 5명의 경찰이 주재소에 있었다. 1937년 6월4일 金日成은 90여 명을 인솔해 보천보를 습격했다. 우선 전화선을 절단한 후 주재소부터 공격했다. 먼 거리에서부터 기관총 사격을 하며 들어가는 바람에 총소리에 놀란 경찰관들은 모두 피신했다. 이 과정에서 엄마의 등 뒤로 피하던 어느 경찰관의 딸이 총을 맞고 사망했다.

金日成은 총기고에서 경기관총 1자루, 소총 6자루, 권총 2자루, 탄약

역사적 사실	실제 사실	북한 역사서 왜곡
만주항일무장투쟁의 주체	중국공산당, 동북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군장	양정우	김일성
ㅌ · ㄷ 동맹 창설자	이종락, 1929~1930년	김일성, 1926년
명월구호의 소집자, 1931. 12:항일무장투쟁 결의	동만특위 서기 동장영	김일성
조선혁명군 창설 및 지휘	이종락, 양세봉	김일성
대횡외회의 – 민생단문제 토론	동만특위 서기 위증민	김일성
요영구회의 – 북만원정 결정	위증민	김일성
동녕현성 전투지휘	주보중	김일성
북호두회의 – 통일전선 신방침	공산국제 7차회의 결정사항 위증민	김일성
미혼진회의 – 동만에서 신방침 결정	위증민	김일성
동강회의 – 2군3사의 백두산 진출을 결정	왕덕태 2군 군장	김일성
2군6사 창설	공산국제 7차회의 결정, 미혼진회의	김일성
조국광복회 조직	공산국제 7차회의 결정	김일성
노령회의/남패자회의 – 방면군으로 개편	위증민, 양정우	김일성
두도류회의/소할바령회의 – 소련월경	위증민, 양정우	김일성
88여단 여장	주보중	김일성
조선해방전투	소련극동군 25군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김일성 항일투쟁 관련 북한 역사서 왜곡 사례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통일연구원刊)

수백 발을 탈취했다. 이어 농사 시험장, 삼림보호구,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여 불을 질렀다. 이렇듯 보천보 전투는 戰果(전과)로 치면 미미한 전투였다. 敵의 무기를 탈취한 것이 戰果라면 戰果지만 2명의 민간인도 희생됐다. 북한 교과서가 보천보 전투의 구체적인 戰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보천보 전투는 중국 공산당 주도의 '동북항일연군' 1군 2사, 4사와 2군 6사 등 연합 부대의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金日成 부대의 單獨(단독) 작전인 것처럼 조작해왔다.

抗日유격대 수십 명이 金日成 이름 사용

일제시대 滿洲와 극동지역 일대의 抗日유격대에는 수십 명이 金日成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보천보 전투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金日成 장군을 연구하다 수년 전 타계한 이명영 前 성균관대 정치학과 교수는《김일성 열전》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역사조작을 지적한 바 있다. 李 교수는 자신의 著書에서 "보천보 전투의 金日成 장군은 1887년 태어난 일본육사 출신의 본명이 金光瑞(김광서)라는 사람"이고 "김일성이 보천보 항일투쟁의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한 것은, 소련 정권이 해방 후 북한의 공산정권수립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명도 높은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련 지휘 하에서 훈련받았던 滿洲의 공산유격대 출신인 金日成의 본명은 金成柱(김성주)로 북한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金英煥(김영환)이란 變名(변명)으로 행세했다. 이후 김성주는 1945년 10월11~12일, 소련군 정치사령부 로마넨코 소장의 각본으로 평양시내 '다미야'라는 일본 요리집에서 평남인민정치위원회(위원장 조만식) 멤버들에게 처음으로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14일 평양공설운동장

에서 이른바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군중대회'가 열렸고, 金成柱로 하여금 金日成으로 행세케 해 金成柱가 金日成 장군으로 둔갑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평안남도 양덕이 고향인 前 평안남도지사 박인각 씨는 "연설에 앞서 스티코프 점령군사령관(대장)이 그를 김일성 장군이라고 소개했으나 참석했던 사람들은 33세의 젊은 金成柱가 金日成 장군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의주가 고향인 전직 교장 출신의 이영훈 씨는 "군중들의 술렁이는 분위기를 파악한 스티코프는 여기 있는 金日成이 항일투쟁의 김일성 장군이 맞거나 틀리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소련도, 金成柱 자신도 보천보 전투의 金日成 장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金成柱가 抗日투쟁의 金日成 장군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언이 있다. 《김일성 평전 續》을 발간한 허동찬 고려대 교수이다. 在日동포로 조총련 전문가인 허 교수는 "보천보 전투 후 金日成 장군을 뒤쫓던 일본군이 그해 11월 무송현에서 그가 죽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그 후 4개월 뒤에 金日成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평소 우쭐대기 좋아하는 성격의 金成柱였다"고 말했다.

1945년 〈해방신문〉 기자로 6 · 25 동란 후 越北(월북), 북한 외무성 국장까지 지냈던 박갑동 씨도 있다. 그는 "평양에서 있었던 金日成 장군 환영식 사진을 보천보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본군에게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박달과 박금철에게 보여주며 확인시켰더니, 사진 속 인물이 金日成 장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며 "박달과 박금철에 관해서는 보천보 전투의 일본 측 판결문인 '혜산사건 판결'에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1945년 10월,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군중대회'에 참석한 김일성. 그는 본명 김성주를 버리고 '抗日투쟁의 영웅'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했다.

美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은 1952년 7월31일 작성한 북한군 보고서를 통해 김일성(Kim Il Sung)의 본명은 김성주(Kim Sung Chu)이며, 1885년 출생해 1935년 사망한 '장백산의 호랑이' 金日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90~91페이지에서 金日成으로 알려진 金成柱는 길림성의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했고 1929년 학교를 떠나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해방 이후 소련군 대위로 북한에 돌아온 金成柱는 曺晩植(조만식)에게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라며 정체를 속이면서 접근했고, 曺晩植은 그해 10월3일 평양에서 열린 해방 기념 행사에서 金日成을 민족주의자로 소개함으로써 金日成이 일약 북한의 지도자로 급부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극동사령부는 金日成을 개인적으로 아는 非공산주의자들은 金日成이 목이 굵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행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기록한 뒤, 게릴라 지

도자로서는 유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과 국내외 기록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金日成의 抗日투쟁이 美化되고 왜곡 · 과장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6. 교과서에서 사라진 李承晩의 독립운동

언급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으로 깜짝 등장 후 바로 탄핵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서 李承晩(이승만)은 '현대사' 부분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 시기에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6種 교과서 모두 이승만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다룬 내용에서다. 앞부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깜짝 등장하는 셈이다.

6種 교과서 중 특히 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默殺(묵살)하고 있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서 이승만의 첫 등장은 1919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술 부분의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임되었다"(238페이지)는 문장에서다. 교과서 상으로는 독립운동 부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갑자기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뒤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두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활동 설명 후, "이에 임시정부는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고, 헌법을 고쳐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240페이지), "미국 정부에 일본 대신 국제 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통치해 줄 것을 청원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241페이지, '탐구활동'에서 신채호의 주장으로 소개)가 '독립운동' 시기 이승만을 언급한 내용의 전부다.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도 이승만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부분의 한성정부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에서다. 이후 "9월11일 제6차 임시의정원은 개정 헌법을 공포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통합 임시정부의 내각을 조직하였다", "대통령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11월 3일에 내각 취임식이 있었다"(235페이지), "1921년에 열린 워싱턴 회의에는 이승만 등이 독립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6페이지)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그리고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 사실이 언급된 후, "국민대표 회의 이후 임시 정부는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대신할 대통령 대리 제도를 두려 하였다. 이승만은 이에 반대하여 미주 동포들로부터 거둔 독립자금의 송금을 끊었다"(239페이지)는 설명과 함께 대통령 탄핵의 내용이 등장한다. 활동 내용으로는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를 워싱턴에 설치하고 외교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21년 하와이에서 동지회를 설립하였다"(247페이지)는 내용이 전부다.

李承晩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건에도 생략

그 외 李承晩이 주도 · 참여한 사건이나 행사에서도 그는 생략되어 있

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 경우,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의 무효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는 부분에서, "특히 미국에 지원을 호소했다"(176페이지)는 내용이 소개되지만 이를 위해 밀사로 파견된 이승만은 언급되지 않는다. '미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232페이지) 부분에서도 이승만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한인국민회 소개와 함께 실린 안창호의 사진, 스티븐스를 사살한 장인환 · 전명운,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무장투쟁론자 박용만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할 뿐이다.

3 · 1 운동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미주 지역 동포들이 모여 3일간 한인 자유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벌였다"(236페이지)에서도 행사를 주도한 이승만, 서재필 등은 생략되어 있다. '독립군 자금 지원에 앞장 선 미주 동포들'(265페이지) 부분에서도 안창호가 중심이 되었던 '대한인국민회'만 소개될 뿐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등은 언급되지 않았고, '미주 지역에서도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다'(309페이지)에서 임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려는 외교 활동을 소개하면서도 이승만은 언급되지 않았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미주 지역 교민들의 활동을 다루는 내용이나 3 · 1 운동 후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한인자유대회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이승만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군 OSS(美 육군 전략처)가 임시 정부와 협의하여 50명의 대원들을 선발하여 시안에서 첩보 훈련을 시작하였다"(279페이지)는 내용에서도 처음 미국 측에 이를 제안하고 추진한 李承晩의 노력은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두 교과서로 학습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남는 '李承晩'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李承晩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여 박사를 취득한 명망



1920년 12월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취임식. 이승만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하와이에서 네덜란드 선적의 화물선에 실린 관 속에 숨어 상해로 왔다. 당시 이승만에게는 일본에 의해 3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손정도, 이동녕,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안창호.

하나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완전독립에 반하는 위임통치를 요청하기도 하고, 대통령 대리 제도를 두려고 하자 자금을 끊어버린 외세의존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기억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뒤에 등장하는 현대사 부분에서는 '독재자' 이미지이니 앞뒤가 맞는 셈이다.

李承晩 비난 유도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분열 시기에 등장하는 李承晩에 대한 비판이다. 미래엔컬처그룹刊 등 5種 교과서가 모두 李承晩의 3 · 1 운동 직전에 있었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요청'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법문사刊 교과서만이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정부 내 지도자들 사이에 대립이 나타났다"(232페이지)고 설명했다.

비상교육刊 교과서는 '활동'(240페이지)에서 李承晩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요청'이 담겨진 청원서와 '반대파'들이 제출한 '이승만 불신임안 주문' 내용 일부를 수록한 후, '이승만이 생각하는 독립의 방향을 말해보자'라는 질문을 던진다. '불신임안 주문'에는 "현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미 외교 사업을 빙자하고, 미주에서 동포가 정부 상납하는 재정을 모아서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 (중략) 헛된 선전으로 동포를 유혹하며 외교비 모집을 계속하여서 그 재정으로 자기의 지지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는 탐구활동(237페이지)에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이승만의 ( )위임 통치 사건을 계기로 임시 정부의 ( )노선을 비판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괄호 넣기 문제가 등장한다.

'위임통치 청원'의 진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파리강화회의를 소집했다. 在美(재미) 한인사회는 이 회의가 한국 독립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승만, 정한경을 평화회의 대표로 선출했지만, 이들은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승만과 정한경은 서재필 등과 의논한 결과,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차선책으로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을 내는 것이 미국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한 것으로 봤다. 2월25일자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완전독립을 담보로

한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보냈으며, 실제 제출된 날짜는 3월3일이었다. 이 일은 이승만이 반대세력으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 3·1 운동이 일어났는데도 위임통치를 요청했다는 것은 독립 의지를 버린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승만은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대로 추대된 사실을 5월 하순경에야 알게 되었는데, 한성정부는 정통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진다. 다양한 노선이 함께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로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안창호였다. 6월28일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한 그는 露領(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美洲(미주)의 이승만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해 양자의 중재에 나선다. 안창호는 7월20일 이승만에게 전보를 통해, 한국인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위임통치 청원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상해로 와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나간 일'인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국무총리 이동휘였다. 1920년 12월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한 후 1921년 1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동휘는 첫날부터 위임통치청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승만은 위임통치는 3·1 운동 이전의 일이고 독립을 전제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맞섰다. 이동휘는 제2차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에게 대통령이 상해에 없을 때 행정의 결재권을 국무총리, 즉 자신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만이 대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자, 이동휘는 1월26일 국무총리를 사직한다고 선언했다. (이동휘는 이후 고려공산당 창당에 나선다)

이어 다른 간부들이 사표를 던지게 되면서 여론은 악화되어 갔다. 외교독립론을 주장한 이승만의 반대파는 주로 러시아 일대에 근거지를 둔 무장투쟁론파였는데, 이들은 한중러 3국이 협력해 독립전쟁을 치를 것

을 주장하면서 임시정부의 군사관계 기관은 노령이나 만주로 옮길 것을 내세웠다. 그동안 외교노선에 큰 성과가 없었고, 미국에서 건너온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던 이승만으로서는 이들을 제압하거나 설득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상해 임시정부는 계속 사분오열되어 갔다. 임시정부에 희망을 찾지 못한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결국 대통령에서는 탄핵되었으나, 이후에도 임시정부를 존중하면서 임시정부의 미주 지역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무장투쟁론파 등 反이승만파의 비난구실이었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제안' 건을 5種 교과서에서 크게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그 문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단지 이승만이 그의 비판자들로부터 맹렬히 비난을 받는 구실이 되었을 뿐이다. 사실 그 문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와 〈신한민보〉가 그 내용을 싣고, 그것을 상해에 전달함으로써 이승만을 비난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평가한다.

위대한 생애

대략적으로나마 이승만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는 교과서는 삼화출판사와 법문사刊 교과서 정도다.

이승만이 배재학당을 다닐 당시 서재필의 제자였다는 것, 그 유명한 '독립협회'의 열성 청년회원이었다는 것, '만민공동회'의 인기 연사였다는 것, 1898년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한 것,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5년 7개월의 옥살이를 한 것, 그의 첫 渡美(도미)는 대한제국의 독립 지지를 미국에 요청하는 고종 황제의 밀사 자격(민영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와이에서 박용만과 함께 한인고등교육 기관을 세우고 양성한 것,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버드, 프린스턴 등에서 수학해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점, 유학 당시 일본에 호의적인 분위기였던 미국 내에서 어렵게 독립운동을 벌여나간 것, 미국 시민권을 거부하고 무국적자로의 불편과 위험을 겪으며 독립운동 여행을 다닌 것, 독립운동 시절에도 좌우합작 등으로 치열했던 이념전 속에서 反共(반공)을 지킨 것, 미국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당당하고 깐깐했던 독립운동가이자 反共주의자였던 점 등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일부의 '미국의 앞잡이, 친일파 이승만'이라는 오해는 풀릴 수 있을 것이다

7. 공산당의 10월 폭동을 '10월 봉기'로 美化

한국은 단일 민족이 오랫 동안 모듬살이 한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종교 분쟁, 종족 갈등이 비교적 적었다. 同族끼리의 대규모 학살은 2000년간 한 번도 없었다. 1946년 10월1일부터 대구에서 시작된 공산폭동은 한국인이 계급적 증오심을 품고서 다른 한국인을 학살한 최초의 사건이다.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同族끼리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주동자들은 민족반역의 反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해방 직후 남한 전역에서는 조선공산당과 좌익세력이 일반대중을 선동하여 전개한 대규모 폭력투쟁이 잇따랐다. 특히 1946년 남한을 뒤흔들었던 9월총파업 당시 북한의 소련軍政(군정)은 조선공산당 측에 200

만 엔을, 이어 발생한 10월 폭동 기간 중에도 세 차례 추가자금(300만 엔 이상)을 지원했으며, 파업투쟁에 대한 행동지침까지 지시했다. 이는 당시 소련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연해주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겸 군사평의회위원이었던 테렌치비치 스티코프(1907~1964)가 작성한 일기에 나타나 있다.

스티코프는 1945년 4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으로 부임하면서 한국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47~1948년 연해주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이면서 북한군정청의 사실상 총사령관 역할을 했고, 1948~1951년에는 북한주재 초대 소련특명전권대사를 지냈다. 그는 북한 정권 수립(1948년)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권수립 후에도 특명전권대사를 맡는 등 북한의 최고 실력자였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 북한정권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니콜라이 레베제프(예비역 소장)는 후에 '그(스티코프)가 조선에 있건 연해주군관구에 있건 또는 모스크바에 있건 간에 그의 참여 없이 북조선에서 이뤄진 조치란 하나도 없었다' 고 회고했다.

천재교육刊 한국사 교과서는, 1995년에 발굴된 '스티코프 일기' 라는 중요한 史料(사료)를 무시하고 10월 폭동을 '민중봉기' 및 농민 '저항운동' 으로 기술해 사실을 왜곡했다.

한편 일부 상인과 지주의 매점매석으로 식량 위기가 오자 미군정은 강제로 쌀을 사들이는 수매제를 시행하였다. 농민들은 강제 수매를 공출로 받아들였고, 이는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와 같은 저항 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314페이지)

이 교과서는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10월 폭동' 으로 통용되던 단어를

'10월 봉기' 및 '농민 저항운동' 으로 바꿨다. '폭동' 을 '봉기' , '저항' 으로 바꾸면서 폭동 주동자인 공산주의자들의 민족 반역적 惡行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美化했다. '봉기' 와 '저항' 이란 낱말을 결합시키면 민중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용감하게 들고 일어났다는 뜻이다. 교과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동족학살 행위를 '저항운동' 으로 성격 규정한 뒤, 이런 결론을 위해 공산당이 주동한 폭동이란 사실, 공산당이 경찰관과 농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을 생략, 은폐하였다. 이 교과서 필자는 동맹국인 미국을 비방하고, 主敵인 공산당을 비호할 목적으로 이런 왜곡된 記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재교육은 또 9월총파업과 10월 폭동이 미군정의 수매제 때문에 자연 발생한 것처럼 썼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9월총파업과 10월 폭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미군정의 미곡 수집제 실시 설명) 그럼에도 경제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빈곤에 허덕이는 가운데 美군정의 정책에 불만이 커져갔다. 이는 미곡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美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314페이지)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蘇군정 지시 받은 조선공산당의 流血폭력투쟁

9월총파업과 10월 폭동은 1946년 7월 조선공산당(후에 남로당)이 美군정에 타협적이었던 자세를 철회하고 채택한 유혈폭력투쟁 노선, '新戰術' (신전술)의 결과물이다. 7월 중순 조선공산당 산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은 '신전술' 에 따라 더욱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대중적

파업투쟁을 10월에 전개하기로 계획했으나, 조선공산당은 이 계획을 바꿔 총파업을 9월로 당기라고 지시한다. 이는 조선공산당이 그해 8월말 美軍政 운수부가 운수부 노동자 25%를 감원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 月給(월급)제를 日給(일급)제로 바꾸기로 한 구조조정을 호기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왔으나, 스티코프의 일기는 이것이 소련군정의 지시였음을 말하고 있다.

스티코프의 1946년 9월9일자 일기에 따르면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련당국에 문의했다. 스티코프는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와 항의집회를 조직할 것'을 9월11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지시했다. 이때는 조선공산당이 전평 지도부에 10월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한 달 당기도록 지시한 무렵으로, 파업시작단계에서부터 조선공산당이 소련당국의 지령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탈린-소련군정-조선공산당-전평'의 지휘계통에 의해 발생

1946년 9월23일 부산철도 노동자 7000여 명이 일급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계획대로 파업에 들어갔다. 24일 조선공산당은 '남조선 노동자 제군에게'라는 제목의 파업선동전단을 살포했다. 전국의 철도 종업원도 이날 파업에 들어간다. 26일 전평 산하 출판노조가 철도 총파업에 동조하여 ▲좌익계 신문의 복간 ▲좌익인사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한다. 이를 기점으로 29일까지 전평 산하의 전국 각 산업별 노동조합들(전신, 전화, 전기, 운수, 섬유, 금속, 화학, 신문 등)이 전평 주도하에 파업에 들어가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의 스티코프 일기에는 소련군정이 9월26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의 투쟁 방향을 지시하고 투쟁기금 200만 엔을 지급했음이 기록되어있다. 일기에서 드러난 소련군정의 파업투쟁 지시사항과 남한 파업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9월총파업이 스탈린-소련군정(스티코프)-조선공산당-전평의 지휘계통에 의해 발생된 사건임을 잘 보여준다.

〈9월26일: 로마넨코(평양 주재 소련군 민정부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의 취소, 좌파의 석방, 테러중지를 요구할 것.

9월28일: 로마넨코가 보고하다. 남조선에서 파업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파업투쟁에 합류했다. 요구조건 및 요구조건의 관철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묻다. 경제적인 요구들,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권력의 양도 요구를 잠시 철회해도 되는지 묻다. 500만엔을 요청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위해 200만엔을 지급하다. 회담에는 로마넨코, 샵쉰(前 서울 주재 소련총영사관 부영사), 여운형, 김일성, 문일(김일성의 부관)이 참석했다.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다. 경제적인 요구들, 임금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한다. 이 요구들이 충족될 때 파업투쟁을 중지할 것이다. 인민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성명한다. 파업투쟁의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은 미군정이 탄압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여운형과의 회

담 및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스탈린 동지에게 암호전문을 보낸다〉

파업투쟁 지침 내용까지 지시

소련군정이 하달한 파업투쟁 지침 내용에는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 정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관철할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946년 5월 미군정은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으로 조선공산당 간부를 포함한 당원 16명을 체포하고 전국의 공산당 본부를 수색했다. 정판사는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의 인쇄소로, 일제 때 조선은행의 지폐를 찍던 조폐공장이었다. 경찰은 조선공산당이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찍어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공산당 활동 불법화'를 공표하고 공산당 간부들(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내리는 한편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현대일보〉의 3개 좌익신문을 폐간, 10여 명의 신문사 간부들을 체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공산당이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태도를 바꿔 '신전술'을 선언하고 소련군정의 지시로 9월총파업을 계획 · 실행한 것이다.

9월총파업은 10월 폭동으로 연결됐다. 10월1일 대구에서 1000여명의 부녀자가 식량배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 등이 가세해 시위가 확대되자 경찰이 진압을 위해 위협발사하는 과정에서 군중 한 명이 유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사실조차 확실치 않다). 다음 날 조선공산당은 좌익학생들을 동원해 시체 한 구를 전날 경찰의 총탄에

사망한 학생이라고 주장하며 들것에 싣고 각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선동했다. 학생과 시민 등 흥분한 시위자들은 대구경찰서 등 26개 지서와 파출서를 습격, 무기를 탈취했다. 무기를 탈취한 폭도화된 시위자들은 경찰관과 행정관리, 우익인사의 집을 습격해 방화하고 그 가족들을 학살했다. 美군정은 2일 오후 대구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병력을 파견해 소요를 진압했다. 그러나 폭동은 대구 인근지역으로 번졌고, 12월까지 경북 全지역과 경남, 강원, 전남, 서울 등에서 계속됐다. 폭동이 끝난 후 각 농촌지역의 좌익분자들은 산악지대로 잠입, 게릴라화됐다.

박헌영, 10월 폭동 중 소련군정에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한 '교시' 요청

스티코프 일기는 10월 폭동 역시 조선공산당 지도부와 소련군정이 직접 관여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10월 폭동이 계속된 약 3개월 동안 소련군정이 남조선 투쟁기금으로 조선공산당에 보낸 돈은 300만 엔(10월2일), 39만 엔(12월6일), 122만 루블(12월7일)이었다. 10월 폭동이 한창이던 10월 일기에는 조선공산당 및 전평이 소련군정의 '투쟁방침'을 받아 폭동에 개입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있다. 소련군정의 '지시'를 얻기 위해 전평 의장이 방북하고,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조두원과 박헌영 역시 향후의 투쟁 방침에 대한 '교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월8일: 남조선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의장 허성택이 도착했다. 김일성이나 로마넨코와 회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시를 내리다. (注: 허성택은 10월7일 평양에 나타나 이그나찌예프와의 회담에서 파업투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이 동지들과 접촉하여 지시를 얻기 위해 방북했다"고 설명했다)

10월21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조두원이 향후의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문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빨치산 부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반동진영과 민주진영 사이에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빨치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해야 할지 혹은 자제해야 할지를 문의하고 있다. 박헌영과 대화하다. 파업투쟁은 폭동으로 성장진화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 그들의 향후 투쟁방침에 대해 교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다. 가까운 시일에 농민들의 투쟁이 개시될 수 있다〉

자료 사실은 이렇다

공산당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 10월 폭동에 가담했던 학생의 증언

金桂澈(김계철)은 대구사범 학생으로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가 월북, 공산주의의 실상에 절망한 뒤 중국으로 탈출, 1994년 44년 만에 귀향한 사람이다. 김계철은 광복이 되자 좌익 학생들이 대구사범 김용하 교장을 연단으로 끌고 나와 여러 학생들이 보는 데서 '민족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이 특별하게 親日행동을 한 적도 없는 김 교장의 머리를 신발짝을 벗어 때리는데 교사들은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었다.

1946년 9월 하순 한 좌익 선배가 김계철에게 쪽지를 봉투에 넣어 주면서 대구의대 학생 대표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金군은 봉투를 들고 가다가 쪽지를 펴보았다. '시체 네 구를 준비하라'로 시작되는 메모였다. 쪽지를 전달받은 학생 대표는 읽어보더니 옆에 있는 학생에게 "되는가"하고 물었다. 그 학생이 金군을 데리고 해부실로 가더니 약물에 잠겨 있는 시체와 붕대에 감겨 있는 송장들을 보여주면서 "본 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10월1일 대구에서 좌익 노동자들이 '쌀 배급' '日給制 반대'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하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자위적인 발사로 시위대원 한 사람이 맞았다. (이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아 과연 사망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다음날 흰 가운을 입은 대구의대 학생들이 들것에 들고 나와 시위를 선동하는데 이용한 시체는 전날 경찰의 총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계철 소년이 보았던 해부실 시체였다.

이날 대구경찰서는 폭도화한 시위 군중에 항복하고 경찰관들은 달아났다. 무기를 탈취하고 수감자들을 풀어준 극렬세력은 同族을 상대로 한 살육의 祭典을 벌인다. 표적은 경찰과 地主들이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살육의 방법도 그 뒤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공산당식 이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그 가족까지 때려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찍어 죽였다. 공산당이 加虐(가학)취미적 학살을 즐긴 것은 이른바 '반동학살'을 '위대한 혁명적 행위'로 합리화해 양심을 마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익이 선동한 폭동에는 깡패와 양아치, 부화뇌동한 민중이 대거 참여하여 절제되지 않는 살육에 도를 더했다. 좌익 의대생과 의사들이 人命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도립의원에 실려 온 부상 경찰관들은 화단 주변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맞아죽었다.

"그중 몇 사람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음 직전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를 보고 청년들은 '저놈들 아직 덜 죽었다'고 확인 사살을 했다(당시 대구의대 3년생 김만재 증언)"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 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의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 의사가 떠밀었다.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폭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 나왔다.(《나의 政經 50년》, 이원만 著)"

이날 10월2일 오후 미군은 대구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장악했다. 좌익 폭도들은 그러나 대구 근교로 진출하여 살상의 피바람은 경북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칠곡군 약목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폭도들은 약목지서를 먼저 습격하여 주재 중인 세 경관을 기둥에 결박한 다음 낫과 도끼로 全身을 참살했다. 또 왜관경찰서를 습격하여 서장 사택을 파괴하고 서장, 수사 과장 외 4명의 경찰관을 도끼로 참살했다. 특히 장 서장은 頭部(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깨 죽였다."(《대구시보》 1946년 10월13일자)

8. 建國 초기 美군정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軍政을 '감시 · 탄압'이라 표현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8 · 15 광복 이후 建國 과정을 記述(기술)하는 부분에서 美군정의 정치 · 경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주로 미래엔컬처그룹과 천재교육,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서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미군정은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한 반면, 한국인들이 조직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은 모두 부인했다.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분할 점령함으로써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 작업은 양국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23페이지)

…임시정부는 1945년 12월31일 내무부장 신익희 명의로 '현재 행정청 소속의 경찰 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 임시정부 지휘 하에 예속케 함', '일반 국민은 금후 우리 정부 지도하에 제반 산업을 부흥하기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미군정은 이를 '임시 정부의 쿠데타'로 받아들여 신익희를 체포했으며, 임시 정부 요인의 처단과 국외 추방을 검토하였다. 임시 정부 주석 김구와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만나 사태가 수습되었으나, 이후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27페이지, '그때 그 사건')

…미군정 시기 계속된 재정 적자와 과도한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1947년 말 물가는 2년 전에 비해 33배나 올랐다. 초기에 자유 시장 정책을 취했던 미군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의 수집과 배급을 통제했지만,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39페이지)

▲ 일본의 자본과 기술들이 빠져나가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경영을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업 생산량마저 줄어들었다. 물자의 부족과 함께 물가 상승이 지속되었다. 광복 당시 조선 총독부와 이후 미군정에서의 과도한 화폐 발행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였다. … (중략) 노동자들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빈곤에 허덕이는 가운데 미군정의 정책에 불만이 커져갔다. 이는 미곡 수집제 폐지, 토지 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삼화출판사刊, 314페이지)

▲ 미군정은 쌀 공출제를 폐지하여 곡물의 자유 시장제를 실시하고, 소작료를 수확의 3분의 1로 낮춘 3.1제를 채택하여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책은 토지 개혁, 소작료 추가 인하와 금납제 등을 바라는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한편 일부 상인과 지주의 매점매석으로 식량 위기가 오자 미군정은 강제로 쌀을 사들이는 수매제를 시행하였다. 농민들은 강제 수매를 공출로 받아들였고, 이는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와 같은 저항 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천재교육刊, 314페이지)

美군정의 실시와 한국 사회의 변화

▲ 美군정의 성격: 한반도가 해방되자마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성명(1945년 8월18일)을 발표하고 "서울에서의 일본군 항복은 평화를 사랑하는 영웅적인 한국인의 해방을 알리는 것이다. 일본 軍閥(군벌) 지배하의 오래고도 참혹한 노예생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민족적 자유와 그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에 대한 헌신적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자유 독립국가의 기능과 책임은 한국인 스스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美군정은 일본 도쿄(東京)의 맥아더 사령관이 주도하는 극동군 사령부 산하에서 하지 장군이 이끄는 美 제24군이 맡았다. 美 군정청의 각종 정책은 국무부의 지시를 받고 이뤄졌다. 당시 美軍은 한국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았고,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런 한국 사회에서 軍政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美군정은 가능한 한 빨리 한민족이 독립국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정부 이양에 앞서 軍政 업무도 가능하면 한국인 중심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였다. 1946년 9월부터 美군정은 한국인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美군정의 民政長官(민정장관)에는 좌우합작 중심인물의 하나인 안재홍이 임명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제시대 행정 경험을 갖춘 관리와 경찰들이 대거 등용됐는데, 이는 美군정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등용을 결정한 데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일제시대에는 행정직에 있어 고급 직위의 18%, 중간 직위의 32% 정도만을 한국인이 맡고 있었지만, 美군정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직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한국인들이 맡았다. 1947년 6월부터는 행정기관이 '남조선 과도정부' 라 불렸고, 19개 각 부서 책임자와 각 道知事(도지사)는 모두 한국인이 맡았다.

▲ **美國의 建國 지원**: 해방 후 소련의 한반도 赤化(적화) 야욕이 드러나면서 冷戰(냉전)이 격화되자, 1947년 3월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미국의 향후 정책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트루먼 독트린' 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소련과의 합의를 통한 신탁통치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미국의 전략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은 남한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47년 2월 제2차 美蘇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소련과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한국 문제를 UN으로 넘겼다. 미국은 1947년 11월 UN결의안을 통해 UN 감시 하에 남북한 모두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부터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구성되어 한국에서의 선거 관리를 맡았다. 소련의 거부로 위원단이 북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UN은 다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마련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다.

▲ **美군정의 종결과 美軍 철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체제에서 평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미국은 한국 내 독자적 방위 체제의 구축을 위해 한국과 1948년 8월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을 체결하고, 한국군의 무기 장비의 조달과 군사훈련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리고 1949년 10월에 맺은 '상호방위 원조법' 에 의거해 방위 물자 및 교육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는 중국에 毛澤東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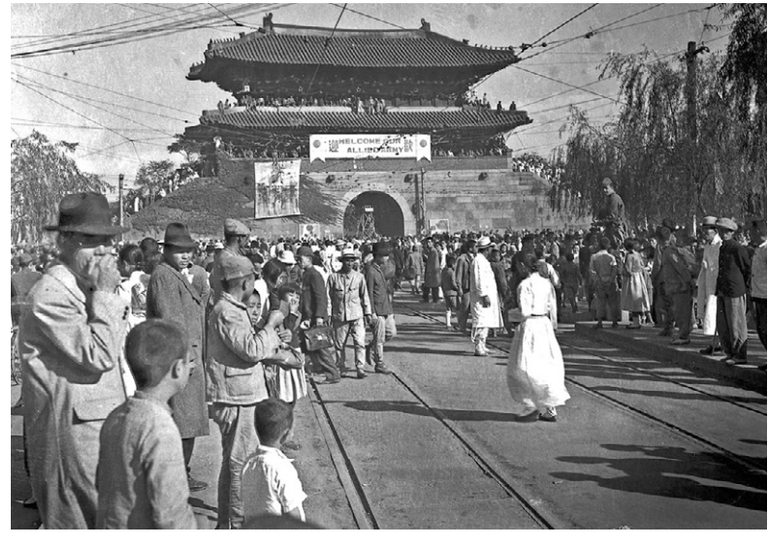
미국 정부는 한국 주둔 미군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군인 수를 줄여야 한다는 美국민의 여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부터 3만 명에 이르렀던 미군 중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 놓은 채 철수하기 시작했다. 철군은 1949년 6월 말에 완료됐다. 나아가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일본-필리핀으로 되어 있고, 한반도가 제외됐음을 발표했다. 미군 철수와 애치슨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소련과 김일성 체제에 의한 대남 침략 전쟁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 美國의 경제 원조: 해방 직후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미국의 원조였다. 1945년 9월 일본총독부 권력을 승계해 등장한 미군정은 곧바로 한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구호원조'(GARIOA)와 '점령지역에 대한 경제부흥원조'(EROA)를 제공했다. GARIOA 원조는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 질병 등에 따른 긴급구호용의 식량, 의류,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것이고, EROA 원조는 점령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한 석유, 석탄, 철광석, 면화, 건축자재 등 원자재 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원조의 도입 실적을 보면 1945년 군정 초기에는 주로 식량과 연료(석탄)가 들어오고, 1946년부터는 식량, 비료, 석유, 석탄, 피복류, 의약품, 건축자재, 철도기자재 등이 들어왔다. 1948년 말까지 총액 4억 1000만 달러어치의 구호물자가 들어왔다. 이는 당시 생필품 절대 부족 상태에 있던 한국의 민생문제 해결에 크나큰 공헌을 했다. 美군정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막대한 구호 원조의 제공에서 찾을 수 있다.

▲ 美군정의 농지개혁: 美군정청은 1945년 10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해방 직후 서울 남대문 앞에서 열린 연합군 환영 서울 시민 군중 대회(1945년 10월)

가을 추수부터 일제시대의 공출제를 폐지해 자유거래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군정법령 제9호를 통해 소작료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었던 高率制(고율제)를 폐지하고 3분의 1만 받도록 하는 3 · 1제를 적용했다. 美군정은 또 1947년 일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拂下(불하)를 추진하기 위해 新韓公社(신한공사)를 만들어 일본인이 소유했던 당시 남한 총경지의 13.4% 해당하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분배방식은 토지 생산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을 현물로 20%씩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유상분배였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한 농지 개혁의 근간이 됐다.

美군정은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도 인수해 일반인에게 불하했다. 美군정은 원래 일본인의 私有財産(사유재산)을 보호하려 했었으나 당초의

방침을 바꿔 軍政法令(군정법령) 제33호를 통해 "조선 내의 일본인 재산은 조선인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은행과 보험회사 등 약 3053억 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유재산이 미군정으로 귀속되었다가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로 넘겨졌다.

美군정은 新韓公社를 통해 공장, 과수원, 주택, 대지, 점포 등을 처분했다. 미국인 재산관리관의 감독 아래 총 3551개의 귀속 사업체가 한국 민간인들에게 불하됐다. 美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본격적으로 자유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곡물자유거래제를 시행하고 고율의 소작료를 금지한 것은 모두 자유로운 개인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마을 공동체를 넘어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인 소유 토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소유하도록 해 민간인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때 軍政의 歸屬財産(귀속재산)을 불하받아 사업을 확장한 기업으로는 현대토건, 삼성물산, 럭키화학, 한진상사 등이 있었다. 이 기업들은 나중에 한국 경제 개발의 주역이 됐다.

美군정의 경제안정과 재건을 위한 노력은 조선시대의 봉건경제와 일제하의 통제경제를 넘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공산주의의 확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중국 문화와의 교류와 그 이후 형성된 일본 문화와의 교류를 넘어 민족사 최초로 미국 중심의 서양 문화권과의 대대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 일본의 전쟁 동원에 따라 미국과의 전쟁에 끌려가거나, 미국을 원수라고 규탄하던 사회에서 갑자기 미국 중심적 사회로 변모하는,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함께 보기

《해방전후사의 재인식2》 (박지향 외 4명 著, 책세상刊)
《대한민국 건국사》 (양동안 著, 현음사刊)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고정휴 著, 연세대학교 출판부刊)
《우남 이승만》 (최종고 著, 청아출판사刊)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포럼 著, 기파랑刊)
《한국 현대사의 이해》 (이대용 외 8명 著, 경덕출판사刊)

6장

편향된 편집

1. 사진 분석: 군복에 굳은 얼굴 朴正熙, 웃으며 악수하는 金大中

등장 횟수(대통령 비교): 박정희-이승만-김대중-전두환-노무현 順

現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을 듣게 되는 고등학생들은 1994~1996년 사이에 출생해 2010~2011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이다. 2000년대에 유년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격동의 한국 현대사는 흑백 자료화면으로 접하게 되는 아득한 옛 이야기쯤으로 다가올 뿐이다. 그나마 현대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의 역사 수업인 만큼,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진 등 視覺(시각) 자료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진 이미지는 어떨까. 이 사진을 통해 학생들은 각 정권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 대한민국 1~17대 대통령 10명의 사진 등장 횟수를 조사했다.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지학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법문사, 삼화출판사刊 각 책에서 현대사 부분에 해당하는 8~9과에 등장하는 사진과 삽화 자료(그래프, 표 등)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이 된 사진과 삽화 자료의 수는 총 1195건이었다. (숫자는 사진에 나온 횟수로, 같은 사진이 여러 번 등장할 경우 중복하여 수치를 잡았다. 한 사진 속에 두 인물이 나올 경우 각각의 수치에 넣었다)

대통령 10명 중 最多(최다)를 기록한 이는 17회의 朴正熙(박정희)이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를 제외한 5種 교과서에 등장했다(미래엔컬처그룹刊에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와 의장 박정희' 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으나 사진 속 얼굴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했다). 이 중 7회가 5 · 16 당시의 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이었다. 5種 교과서에 등장했으며, 두 번씩 반복 등장한 경우(천재교육, 삼화출판사)도 있어 '박정희' 에 대한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유신 관련 신문기사 내의 증명사진 5회, 서거 기사 속 증명사진 3회, 남한에 온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만나는 박정희(1972년 12월1일) 1회, 퇴역 당시 사진 1회이다.

두 번째는 16회를 기록한 李承晩(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비상교육刊 교과서를 제외한 5종에 실렸다. 이 중 증명사진 형태 5회(자료 및 포스터에 사용됨), 김구와 손잡은 사진 3회, 신문기사 속 사진 3회, 건국 취임 선서 장면 2회, 귀국연설 1회, 웃는 얼굴 1회,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 사진 1회로 나타났다.



교과서 속 박정희의 모습은 17회중 7회가 5 · 16 당시의 군복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이었다.

3등은 13회 등장한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다. 유일하게 6種 모든 교과서에 등장했다. 이 중 8회가 제1차 평양회담(비상교육 2회, 법문사 2회)이었고, 노벨평화상 수상 장면이 3회,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 2회였다.

4등은 7회를 기록한 全斗煥(전두환) 대통령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장면 2회, 육군대장 전역식 연설 1회, 야구장에서 始球(시구)하는 모습 1회, 囚衣(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모습 1회, 5공 청문회 장면 1회, 12 · 12 사태 주체 장교들 단체 사진 1회 등으로 나타났다.

5등은 6회를 기록한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제2차 평양회담(2007년) 장면 2회, 과거사관련위원회 오찬장으로 이동 중인 장면 1회,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 1회, 아세안+3 정상회담(2007년)의 기



유일하게 6種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는 김대중은 대부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념촬영 1회, 李明博 대통령 취임식 당일 악수하는 장면 1회로 집계됐다.

다음은 5회 등장한 盧泰愚(노태우) 대통령이다. 해외 인사와 회담 및 서명 중인 장면(고르바초프 2회, 옐친 1회) 3회, 12 · 12사태 주역들 단체 사진 1회, 囚衣(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모습 1회로 나타났다. 7등은 4회를 기록한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다. 尹潽善(윤보선) 대통령은 3회, 金泳三(김영삼) 대통령은 2회 등장했다. 崔圭夏(최규하) 대통령의 사진은 없었다.

朴正熙 vs. 金大中 이미지 비교

등장한 사진의 이미지에서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은 朴正熙와 金大中이



이승만은 6種 교과서 중 5種에 총 16회 등장했다.

었다. 朴正熙의 경우 군복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굳은 표정을 지은 사진이 7회나 등장하는 등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됐다. 신문 기사 속에 사용된 증명사진類도 8회인데, 내용 역시 비상계엄령 선포, 유신헌법 관련, 逝去(서거) 등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였다.

이에 반해 金大中의 경우, 13회 중 8회가 제1차 평양회담의 장면이었다. 모든 사진이 북한의 김정일과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3회 등장하는 노벨평화상 수상 장면과 2회의 대통령 취임식 장면도 밝은 표정의 사진이다.

사진 설명 역시 대조적이다.



박정희는 군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굳은 표정의 사진이, 김대중은 환하게 웃고있는 사진이 주로 사용됐다.

〈朴正熙의 경우〉

▲ 군사 정변의 주역들: 박정희 소장 일행이 육사 생도들의 군사 정변 지지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맨 왼쪽 인물이 박정희 소장이다. (비상교육刊 351페이지)

▲ 5 · 16 군사 정변: 1961년 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천재교육刊, 342페이지)

▲ 5 · 16 군사 정변 직후의 박정희 모습 (지학사刊, 304페이지)

〈金大中의 경우〉

▲ 남북정상회담(2000년):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비상교육刊, 384페이지)

▲ 오늘 이 취임식의 역사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지학사刊, 309페이지)

▲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천재교육刊, 371페이지)

이 같은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각 정권과 역대 대통령에 대해 사

진이 주는 이미지대로 기억하게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박정희' 하면 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굳은 얼굴의 흑백사진을, '김대중' 하면 환한 얼굴로 김정일과 악수를 하고 노벨평화상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자료 4 · 19 혁명 35회, 5 · 18 사건 17회, 서울올림픽은 3회 등장

사진 분석: 주요 사건 등장횟수, 6 · 25–4 · 19–5 · 18–평양회담 순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건 이미지는 6 · 25 전쟁이었다. 총 86회로, 많게는 삼화출판사刊에서 22회, 적게는 미래엔컬처그룹刊에서 7회 등장했다. 전쟁 경과를 설명하는 삽화와 전쟁 피해를 담은 慘狀(참상) 사진이 주를 이뤘다.

2등은 35회 등장한 4 · 19 혁명이었다. 시위대에 발포하는 경찰, 탱크에 올라탄 시위대, 대학교수단 시위 사진, 경찰 발포에 항의하는 초등학생들 등의 사진이 있었다.

3등은 5 · 18 광주사태로 17회 등장했다. 武裝(무장)한 시민,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 장면, 속옷 차림으로 군에 연행되는 시민, 금남로 집회 등의 장면이 교과서에 실렸다. '1980년 5월, 도대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군대를 향해 총을 들었을까?'(미래엔컬처그룹刊),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저항하여 무장하였다'(삼화출판사刊), '5 · 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모델이 되고 영감을 주었다'(천재교육刊) 등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4등은 평양회담(10회)으로, 2000년 제1차 회담이 8회, 2007년 제2차 회담이 2회 등장했다. 사진 밑에는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비상교육刊), "남북의 정상들이 남북 공동 선언을 교환하고 있다"(법문사刊), "남북한 정상은 분단 이후 최초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삼화출판사刊) 등의 긍정적 설명이 있었다. 對北불법 송금 사건이 언급된 교과서는 없었다.



제10회 아시안 게임은 1986년 9월20일~10월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27개 국가에서 3345명의 선수가 참가, 27개 종목이 치러졌다. 아시안 게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스포츠는 물론, 문화 ·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립하여 2년 뒤로 다가온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되살리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상징하는 업적인 88서울올림픽, 86아시안게임, 새마을 운동, 경부고속국도, 포항제철, 수출 관련 사진은 현저하게 적었다. 특히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는 이 중 '100억 불 수출기념 아치' 사진 만이 1회 등장하는 데 그쳤다.

6種 교과서를 통틀어 서울올림픽은 3회 등장에 그쳤다. 천재교육刊에 2회, 지학사刊에 1회 등장했으며 나머지 4種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천재교육刊에만 "1980년과 1984년의 올림픽과는 달리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동서 양 진영의 국가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159개국 참가)"라는 설명이 있었다. 86아시안게임도 천재교육刊에만 1회 등장했다.

새마을 운동 관련 이미지는 5種 교과서에 총 6회 등장했다. 새마을 운동 깃발 사진 1회를 비롯해, 마을길 넓히기 공사 중인 향토예비군 등의 이미지가 등장했으며, "농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삼화출판사刊), "농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이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천재교육刊)는 사진 설명이 있었다. "새마을 운동 기간 농가의 소득은 10.5배나 늘었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도 21배나 늘어났다"(비상교육刊)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다.

경부고속국도 관련 이미지는 4種 교과서에 총 6회 등장했다. "1968년에 착공하여 연인원 900만 명이 참여하여 1970년에 완공되었다"(비상교육刊), 서울–부산 간을 잇는 고속도로로 196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0년에 개통하였다(법문사刊) 등의 설명이 있었다. 그 외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은 4種 교과서에 4회, 100억 불 수출기념 아치 사진은 4種 교과서에 5회, KTX 개통식은 1회 등장했다.

대한민국을 '南側'(남측)이라 표기

'김대중의 햇볕정책' 설명은 30줄이 넘고,
'남측의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은 한 줄이다

"(제네바 정치협상 결렬) 이후 북측은 평화통일론을 앞세우며, 전후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반면 남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

천재교육이 2011년 펴낸 高校 한국사 교과서 330페이지의 上記 기술은 문제가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美 국무장관 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953년 10월1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18일부터 발효되었다. 제네바 정치협상은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므로 韓美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은 그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다. 교과서는 북한 정권은 평화통일과 戰後(전후)복구를 추진한 데 반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고 대칭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김일성 정권은 긍정적인 일을 하고 李承晩 정부는 부정적인 일을 한 것처럼 그릇된 인상을 심을 가능성이 크다. 평화, 통일, 복구 같은 낱말과 동맹강화, 군사력 보강 같은 낱말이 주는 인상은 北에 유리할 것이다.

이 교과서는 남북한을 '북측', '남측'이라고 적었다. 이는 憲法(헌법)정신 위반이다. 한반도엔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진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뿐이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고 남침전쟁을 일으킨 '反국가단체'이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同格으로 놓아선 안 된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가진 정통성과 정체성을 헌법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를 同格으로 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國格(국격)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수준으로 추켜세워 주었다. 북한 정권에 유리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일종의 利敵(이적)행위이다.

역사적 영향력에 있어서 '韓美상호방위조약 체결'은 북한 정권의 거짓 평화통일 전술과 대칭하여 설명할 수준이 아니다. 戰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韓美동맹이란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의한 韓美동맹 확보는, 李承晩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고, 민족사의 가장 성공적인 외교활동이다. 이 동맹을 만들어내기 위해 李 대통령은 단독 北進論(북진론)을 펴고, 1953년 6월18일에는 反共포로를 석방하여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압박하는 등 처절한 노력을 다했다.

이 교과서는 햇볕정책이란 利敵행위는 金大中의 이름을 들면서 美化하고 韓美동맹 구축이란 偉業(위업)은 주인공 李承晩의 이름을 '남측'으로 대체하여 그 의미를 축소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설명은 30줄이 넘고, '남측의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은 한 줄이다. 민족사의 가장 큰 쾌거 중 하나인 韓美동맹을 '남측 군사력 보강' 운운하면서 그 의미를 흐리고 폄하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건설세력에 유리한 사건은 축소 내지 묵살하고, 북한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과장 불리한 사건은 축소 내지 묵살하는 左편향성을 일관성 있게 보인다.

문제는 '남측'이란 反헌법적 용어를 삭제하지 않고 검정해준 李明博 정부의 敎科部(교과부)이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남측', 북한의 민족반역정권을 '북측'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정의감, 애국심, 통일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2. 北의 선전문구 같은 제목들

대한민국엔 과격한 표현

6개의 출판사에서 각각 발행되어 2010년 정부의 檢定을 거친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1~9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현대사 부분은 8과와 9과로, 세부 구성은 다르지만 큰 줄기는 6種 모두 비슷하다. 8과 '냉전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냉전 체제에 들어선 세계정세와 함께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 6 · 25 전쟁과 분단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9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4 · 19 혁명부터

현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의 목차에 쓰이는 표현을 살펴봤다. 특히 미래엔컬처그룹刊과 천재교육刊 교과서에는 주관적인 표현이 다수 등장했다. 비교적 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는 지학사刊과 법문사刊였다. 한 과의 제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지학사

2.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1) 4 · 19 혁명과 장면 내각의 수립 2)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3) 전두환 정부 출범과 6월 민주 항쟁 4)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의 정착

▲ 법문사

2. 민주주의의 발전 1) 4 · 19 혁명과 장면 내각 2) 박정희 정부와 민주화 운동 3) 민주화 운동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진전

▲ 비상교육

2. 민주주의의 발전 1) 4 · 19 혁명 2) 장면 정부의 성립과 활동 3) 5 · 16 군사 정변 4) 박정희 정부의 활동 5) 유신 체제의 성립과 전개 6) 유신 체제의 붕괴와 신군부의 등장 7) 5 · 18 민주화 운동 8) 전두환 정부 9) 6월 민주항쟁 10)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

▲ 삼화출판사

2. 4 · 19 혁명이 일어나다 3. 5 · 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4.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 미래엔컬처그룹

2.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1) 4 · 19 혁명,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다 2) 4 · 19 혁명의 기대 속에 출범한 장면 내각 3) 5 · 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 4) 유신 체제, 민주화 운동 앞에 스스로 무너지다 5) 신군부에 맞선 5 · 18 민주화 운동 6) 6월 민주 항쟁, 민주주의가 승리하다 7) 한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 천재교육

2. 민주주의 굴곡과 진전 1) 4 · 19 혁명이 일어나다 2) 군사 독재가 시작되다 3) 유신 체제에 맞서다 4)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5)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다

6 · 25 전쟁 직후 부분에는 '반공 체제와 독재의 강화'(비상교육刊),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천재교육刊) 등의 제목이 등장했다. 본문에는 이승만 정부, 특히 反共(반공)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등장한다.

대한민국 건국과 북한 정권의 탄생을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교과서 대부분이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는 세부 목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유일하게 '북한 정권'이라고 표기한 교과서는 지학사였다. 지학사刊은 김정일과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세습'이라는 표현을 썼다.

▲ 미래엔컬처그룹

3.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수립되다 1)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2) 정부 수립을 전후한 남한 사회의 갈등 3)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과 좌절 4)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5) 북한 정부가 수립되다

▲ 삼화출판사

4.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다

▲ 법문사

3.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 북한의 정부 수립

▲ 비상교육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1)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3) 북한 정부의 수립 4) 농지 개혁 단행 5) 좌절된 친일파 청산

▲ 천재교육

2. 8 · 15 광복과 새로운 국가 건설 운동 1) 새 나라 건설에 모두 나서다 2)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3)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4)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 지학사

2. 대한민국의 수립과 국가 체제의 정비 1) 5 · 10 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2) 국가 체제의 정비와 국민 생활의 변화 3) 북한 정권의 수립과 사회주의의 추진

남북의 '분단'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은, 앞 단원에 등장하는 목차와도 연관이 있다.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다'(미래엔컬처그룹刊),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법문사刊),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천재교육刊) 등, 左右합작 운동이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것처럼 소개되다가 左右의 갈등에 의해 좌절되어 남북이 분단, 각각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구도를 이룬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당시 상황 설명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분단'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이 부분에 대한 과거 國定 '국사' 교과서의 명쾌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중략) 이미 소련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를 세워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남한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광복 이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활동은 점점 무력 투쟁의 양상을 보여 주게 되었다. … (중략)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당시의 국내외 정세 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소련의 팽창 정책과 북한에서 사실상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때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였던 남북 협상파는 총선거에 불참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이들까지도 이용하려 하였다. 〈고등학교 국사(하), 2001년 3월1일 발행, 195~196페이지〉

주관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남한 관련 목차에 비해, 북한 관련 목차에는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이 사용됐다. 목차 내용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폐쇄적인 개인독재 체제, 인권 유린, 對南(대남) 도발 등을 예상하기 힘들다. 목차에 '독재'라는 표현이 등장한 곳은 지학사刊(김일성, 김정일 독재 체제의 확립)과 비상교육刊(김일성 독재 체제와 주체사상의 확립) 교과서였다.

▲ 미래엔컬처그룹

4.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1) 북한, 지배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를 맞다 2)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다

▲ 천재교육

4.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의 과제 1)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 2) 위기의 남북 관계, 평화의 길을 찾다 3)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계속하다 4)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란 거짓말

이 같은 목차의 분위기가 반영하듯, 실제로 교과서 본문에서 개인독재 체제의 폐해, 북한 주민의 대량 餓死(아사) 사태, 인권 유린 문제 등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남북교류만이 크게 다뤄질

뿐,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테러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는 '1 · 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美 EC-121機 피격사건'(1969년), '8 · 15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74년),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1983년), 'KAL기 폭파 테러사건'(1987년), '천안함 爆沈(폭침)사건'(2010년) 등의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주요 對南 도발사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지학사, 천재교육刊 교과서에 1 · 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아웅산 테러사건이, 비상교육刊 교과서에 1 · 21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다.

김정일 정권도 민망해 할 교과서 문구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제목들은 특히 李承晩 · 朴正熙 정부에 대한 비판과 김일성 ·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호와 美化가 대조적이다. 이 교과서는 李承晩 · 朴正熙 정부를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 '군사독재가 시작되다', '유신체제에 맞서다'라고 비판하면서, 김일성 ·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라고 비호하고 美化한다.

위대한 建國 대통령과 建設 대통령을 '독재'라고 비판하려면 700만 학살에 책임이 있는 김일성 · 김정일 정권은 '전체주의 체제'나 '학살정권'이라고 해야 맞다. 그런데 '독재'란 낱말을 회피하고 '유일사상 체제'라고 美化했다. 마치 김일성이 대단한 사상가나 되는 것처럼 糊塗(호도)한 것이다. 북한은 '유일사상 체제'가 아니라 '유일독재 체제'이다. 이 책은 本文에선 북한 정권을 '독재'라고 표기하였지만 제목은 읽는 이들의 판단을 크게 좌우한다. 제목에서 '독재'를 뺀 것은 편향적 편집이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라는 제목은 김정일 정권도 민망해 할 문구이다. '개방'의 참뜻은 사람과 물건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이다. 북한은 한 번도 그런 교류를 허용해본 적이 없다.

책의 제목은 著者(저자)가 가진 가치판단 기준과 우선순위, 그리고 이념성향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위의 제목들에서 우리는 저자가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에 대하여는 反感(반감)을,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好感(호감)이나 동정심을 가진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사실적 생각을 고등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反국가적 교육을 李明博 정부가 허용하고 국가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이다

3. 反軍, 反美, 反韓的 소설 · 영화 추천

영화와 소설을 선동에 이용

한정된 지면에 모두 다룰 수 없는 한국 현대사를 다양한 자료로 접근하는 것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史料(사료)에 접근할 때는 엄격성이 요구되며, 자료를 인용할 때에도 1차 原자료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2차 자료에는 연구자의 시각이나 입장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성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영화와 문학 등의 예술 분야로 역사를 다루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따른다. 사실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고 해도 작가의 주관과 虛構(허구)가 가미되는 문학 장르의 특성상,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문학과 영화는 구체적인 묘사와 감정 전달이 가능한 만큼 그 영향



영화 '화려한 휴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 순간. 실제 그날 전남도청 앞에서는 이러한 '무릎 쏴 자세'의 사격도, 그런 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었다.

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진다. 白紙(백지) 상태의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교과서에 反美(반미), 反軍(반군), 反韓(반한)적인 영화, 소설을 참고자료로 소개하는 것은 예술을 선전 · 선동에 이용하는 공산당 수법을 연상시킨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 대부분에서 原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2차 연구자료 사용이나 자료를 변형한 예가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엔컬처그룹,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특정 영화와 소설을 참고자료로 추천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작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 미래엔컬처그룹

소설– 태백산맥(1989년, 조정래)/ 무기의 그늘(1988년, 황석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년)/ 웰컴 투 동막골(2005년)/ 효자동 이발사(2004년)/ 박하사탕(1999년)/ 화려한 휴가(2007년)

▲ 삼화출판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년)/ 웰컴 투 동막골(2005년)

두 교과서가 공통으로 추천하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와 '웰컴 투 동막골'은 6 · 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심각한 편향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 · 25 전쟁 당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피난 도중 강제 징집된 동생을 따라 함께 입대한 형은, 동생을 제대시키기 위해 공을 세우며 전쟁 영웅이 된다. 그러다 동생이 국군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오해하여 국군을 떠나 인민군 부대장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제대 하루 전날 형을 구하기 위해 戰線(전선)으로 나가 우여곡절 끝에 형을 만나지만, 형은 끝내 죽음을 맞는다는 줄거리이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전쟁의 광기에 휩쓸린 두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과 형제애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선전됐다. 그러나 6 · 25 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고, 국군 · 美 공군의 폭격 및 그에 따른 참상을 지나치게 묘사 · 강조하며, 국가를 천시하고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反軍 · 反기득권 · 反정부 정서가 강조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영화가 교과서에서는 '국군과 인민군 형제가 겪는 분단의 비극을 그린 영화'(미래엔컬처그룹刊), '비참한 전쟁 속에서 따뜻한 가족애와 함께 인간의 내면을 읽게 하는 영화'(삼화출판사刊)로 소개되고 있다.

'웰컴 투 동막골'은 6 · 25 전쟁 당시 한 마을에 국군과 인민군, 연합군이 우연히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 세 주체가 힘을 합쳐 미군의 폭격(동막골을 적군기지로 오해하여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킨다는 내용이다.

사실 관계를 생략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한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막연한 反戰(반전)의식과 反美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 영화를 본 한 초등학생은 "역시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서로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이 감동적이

다"라는 감상평을 남겼다. 교과서에는 '6 · 25 전쟁에 휘말린 강원도 오지 마을 이야기'(미래엔컬처그룹刊), '평화의 가치와 그를 지키기 위한 인간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삼화출판사刊)로 美化되어 있다.

광주사태를 다룬 '화려한 휴가' 역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영화다. 영화 속 공수부대는 아무 감정 없이 시민들을 공격하는 '살인기계'로 그려진 반면, 궐기한 광주시민 측의 인물들은 至高至善(지고지선)의 영웅 혹은 천사로 그려졌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집단발포 장면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造作(조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도입부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造作 수준의 反軍 영화가 교과서를 통해 버젓이 소개되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무런 지적이 없다. 교과서에는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그린 영화'(미래엔컬처그룹刊)로 소개되어 있다.

'박하사탕'은 광주사태 당시 진압군 출신인 '386 세대'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로, 진압 중 여고생을 실수로 죽인 후 타락해가는 주인공을 그렸다. 교과서에는 '설경구 주연의 5 · 18 진압군 출신 형사의 고뇌'(미래엔컬처그룹刊)로 소개되어 있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는 주인공인 이발사의 관점에서 사사오입 개헌을 시작으로 4 · 19와 5 · 16, 10 · 26과 5 · 18에 이르는 사건들이 등장한다. 영화는 나라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순박한 이발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억지스럽게 戱畵(희화)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송강호 주연의 박정희 시대 풍자 영화'(미래엔컬처그룹刊)로 소개되어 있다.

이 영화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발사의 실제 모델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實話(실화)로 받아들인 관객들이 적지 않았다. 朴正熙 대통령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실제 인물인 이발사 박수웅 씨는 박지만 군의 머리를 깎아주다가 육영수 여사의 추천에 의해 朴 대통령의 이발사가 되었는데, 그가 기억하는 朴 대통령의 모습은 소탈함 그 자체다.

조정래 · 황석영 소설을 추천

조정래의 소설《태백산맥》역시 대표적인 문제작이다. 1948년 여수 · 순천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한 마을 사람들의 사상적 대립과 희생을 다루고 있는데, 남로당의 대한민국 타도투쟁을 美化하는 등 짙은 利敵性(이적성)을 지적받아왔다. 교과서에는 '분단을 배경으로 한 조정래의 장편 소설'(미래엔컬처그룹刊)로 소개되어 있다.

저자 조정래는 교과서에 소개하기 적절하지 않는 발언도 많이 했다.

"우리가 체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꽃송이에 담긴 인민의 순결한 마음 그 자체야 왜곡할 건덕지가 없지요."(2007년 10월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일성 동상 밑에 놓인 꽃다발을 보며 김용옥에게 한 말)

"김정일 위원장도 빨리 잘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어한다."(2007년 12월호 〈레이디경향〉 인터뷰)

"한반도는 엄연한 1민족 2국가 체제이므로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은 지켜야 한다. 정부는 6 · 15 선언 등 지난 정권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을 성실히 지켜라."(2009년 3월2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태백산맥 200쇄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비참하고 처

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써야 할 이야기가 그만큼 많아서 역사가 저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한 거죠." (2010년 10월1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서)

"(자녀들이랑) 시위장 가서 소리 한 번 질러보세요…. 그게 산교육입니다", "자식 교육 시키는 데 수학, 영어만 하라는 것은 자식 죽이는 겁니다. 손잡고 시민단체 찾아가서 '돈 만 원이라도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는 거야' 라고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자녀들이 방학하면, 손잡고 시위장에도 가서 소리 한 번 질러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이 산교육입니다." (2010년 10월29일, G20정상회의 폐막기념 강연)

황석영의 소설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戰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反戰(반전) 소설이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베트남 전쟁의 숨겨진 본질' 을 조명하고, '전쟁을 조종하는 미국의 실체를 파헤쳤다' 는 평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에는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묻는 황석영의 소설' (미래엔컬처그룹刊)로 소개되어 있다.

2006년 발간된 《무기의 그늘》 개정판에 실린 작품해설은 베트남 전쟁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이 가장 야만적인 폭력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전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미국이 과거의 제국주의를 더욱 폭력적이고 전면적인 방식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 소개한다. 다음은 이 책에 실린 작품 해설의 일부다.

〈이 소설에는 침략주체인 미국과, 미국의 역할에 종속된 한국, 그들의 조력자로 동족을 수탈, 억압하는 남베트남의 권력층, 그리고 이 모든 세력에 맞서 싸우는 민족해방전선의 움직임이 적확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 (중략) 그에 대항해 싸우는 해방 전사들의 움직임이나 미군에 의해 양민에게 가해지는 야만적 잔혹행위 또한 한국인의 눈으로는 최대치의 극적 단면들로 포착되어 있다. … (중략) 베트남 전쟁은 일단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로 끝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막강한 제국에 맞선 싸움에서 베트남 민중은 너무나 가혹한 희생을 치러야 했고 베트남의 대지는 회복불능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다(임홍배, 문학평론가 ·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일성은 세종대왕 같은 위인"

황석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1989~1991년 사이 다섯 번의 密入北(밀입북)을 하고 김일성을 일곱 번 만났으며,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黃 씨는 訪北(방북) 이후 4년간 해외 망명생활을 하며 북한기행문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출간했으며, 1993년 4월 귀국 후 구속되어 1998년 3월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특히 김일성에 대해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일성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 … (중략) 그(김일성)는 어쨌든 사상의 차이는 도외시하더라도 두 번이나 세계 최강의 외세와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大國(대국)인 중국혁명의 지도자 모택동보다도 훌륭한 점이 있으며 베트남의 호지명에 절대로 뒤지는 인물이 아닌 제3세계적 革命家(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 〈노둣돌〉 창간호 인터뷰 中. 이 글은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교과서가 추천한 위의 작품들을 본 학생들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수많은 작품 중에서 굳이 과장되고 왜곡된, 反軍, 反美, 反韓的인 것들만 골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허구를 사실로 믿

도록 유도하여 조국을 미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4. 성공한 독일통일은 단점만 記述, 베트남 共産통일은 발전상 부각

독일의 자본주의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해 유도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8단원 탐구활동 '각국 통일과 그에 따른 문제점' (349페이지)을 통해 성공한 독일통일은 단점만을 記述(기술)하고 베트남 共産(공산)통일은 발전상을 부각시켰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였던 北베트남의 무력통일이었고, 독일의 경우 자본주의 국가였던 西獨 주도의 평화적 흡수통일이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베트남은 1985년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개혁에 성공해 발전을 이룩했다는 식의 긍정적인 면을 서술한 반면, 독일은 "서독의 자본과 엘리트에 의해 흡수통일 방식이 내적통일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었다"고 부정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료를 보고 베트남과 독일에서 통일 후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자"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 자료를 참고한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서술된 독일통일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는 독일통일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과거의 통계를 제시하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서서 장벽 붕괴를 축하하는 동서독 시민들(左). 200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자유의 축제'(右)

고 있다. 본문 중 "東獨(동독) 경제가 빨리 부흥되지 않고 20%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이 지속… (중략)"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廉燉載(염돈재, 現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박사의 著書《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에 따르면,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舊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2006년(19.2%)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9년 실업률은 13.0%다.

廉 박사는 "동서독 주민 모두 통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東獨 주민들은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고 있으며 서독 주민에 비해 '2등 국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메르켈 총리, 플라첵 사민당 당수, 티어제 前 연방하원 의장 등 동독 출신 인사들이 통일독일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과서는 이런 사실은 간과하고 "동독인 사이에 통일 현실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며 대다수의 舊 동독 주민들이 통일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했다.

廉 박사에 따르면, 동서독 간의 생산력 격차는 완만하지만 계속 좁혀지고 있다. 1992년 이후 2004년까지 신연방주의 국내 총생산량(GDP)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해 1991년 국내총생산에서 7%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8년에는 11.7%로 상승했다.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의 35%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2%, 2008년에는 79%에 달하는 등 舊동독 지역의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동서독 지역 간의 격차해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에서 거의 벗어나 과거 서독 수준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코노미스트〉誌는 2009년 貿易(무역)수지 黑字(흑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2009년 4월~2010년 3월 사이 무역흑자는 2072억 달러로, 2위인 러시아의 1388억 달러, 3위 중국의 1387억 달러를 앞섰다. 2010년 3월의 독일의 산업생산액은 1년 전에 비해 8.6% 증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것이다. 실업률도 프랑스의 10%보다 낮은 7.8%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199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독일은 세계 수출 1위 국가였다.

반면 베트남은 월맹에 의한 共産통일 이후 독재체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는 월남처럼 부패해졌다.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의 私有재산을 말살했으며 언론 · 출판 · 결사 · 종교의 자유를 壓殺(압살)했다. 월남 정부의 부패에 대항해 시위를 벌였던 지식인, 학생, 종교인들을 탄압해 공산당 주도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일본 共同(교도)통신사가 발행한 《1992년 世界年鑑(세계연감)》에 따르면 1990년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0달러로, 이는 1975년 통일 이전보다도 적은 액수다. 共産통일 후 계획경제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人들의 삶은 궁핍해졌고, 결국 통일 이래 90여 만 명이 조국을 버리고 미국 등으로 도망쳤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모방한 '도이모이'를 차용, 체제개혁에 착수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베트남인들의 사유재산 소유와 자유기업체제를 부분적으로 허락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가 미비하고 공산당 一黨 독재체제도 유지되고 있어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엔 이르다. 2011년 1월9일字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베트남은 개방경제 체제의 초기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난 상태로 아직 경제 규모와 체제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크지도 않고 자유화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베트남 경제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통제정책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함께 보기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著, 박영사刊)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염돈재 著, 평화문제연구소刊)

영화 '포화속으로' (이재한 감독, 2010년 作)

7장

建國 · 건설 세력 일방적 매도

1. 이승만 · 박정희는 업적 축소 · 외면, 김대중 · 노무현은 美化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었다. 6種 교과서 중 左편향이 심한 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刊 교과서를 대상으로 대통령 관련 記述(기술)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 全斗煥(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축소 · 누락하고 金大中(김대중),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업적을 미화하는 편향된 서술이 많았다.

두 교과서에서 다뤄진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2002년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와 한국대통령학연구소[소장 咸成得(함성득)]가 공동으로 엮은 《한국 역대 대통령 평가》 등에 수록된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 [재임기간이 짧았던 張勉(장면) 총리, 尹潽善(윤보선) · 崔圭夏(최규하) 대통령은 제외했다]

	업적	천재교육刊	미래엔컬처그룹刊
이승만	정부수립의 정통성, 反共정책, 의무교육, 농지개혁, 해양평화선, 韓美상호방위조약, 국가보안법 제정, 반공포로 석방, 근로기준법 제시, 남녀평등권 및 참정권 보장, 전쟁복구 경제안정화	韓美상호방위조약, 농지개혁, 의무교육	韓美상호방위조약(주체 無), 농지개혁, 戰後 경제복구, 공산주의 방어, 자본주의 정착, 통일에의 의지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 · 4 남북공동성명, 평화통일 3대 원칙 천명, 포항제철, 구미공단, 경부고속도로, 사채동결 조치, 새마을 운동, 국토종합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직장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법, 국민연금제도, 베트남 파병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 · 4 남북공동성명, 새마을 운동, 중화학공업 육성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베트남 파병, 7 · 4 남북공동성명
전두환	올림픽 유치, 7년 단임제(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3低 호황(경제안정화시책), 이산가족 방문단 실현, 아시안게임 개최, 일본 공식 방문, 시중은행 민영화, 공정거래 법률제정, 수입자유화, 경상수지 흑자 실현, 물가 안정화 정책	3低 호황, 물가 안정화 정책	3低 호황, 야간통행금지 철폐, 교복자율화
노태우	북방정책, 남북한 UN동시가입, 지자제 실시, 남북기본합의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러시아와 수교, 주택 200만호 건설, 최저임금제, 서해안개발착수, 신도시 건설,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확충,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韓中수교, 대학평가안정제 도입, 영종도 新공항(現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KTX) 추진	북방정책, 남북한 UN동시가입,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북방외교, 올림픽 개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김영삼	금융실명제, 세계화 정책, 정치개혁법안 입법, 월드컵 유치, 고용보험제도 실시, OECD 가입, 대전 EXPO 개최, 여성발전기본법, 노동관계법 제정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OECD 가입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OECD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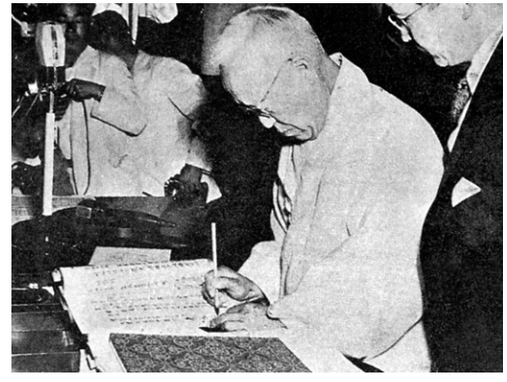
李承晩의 업적 축소, 누락시켜

李承晩 대통령의 경우 업적이 다수 누락되었고 부정적인 서술이 主를 이루었다. 업적이 다루어져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교과서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李承晩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제목에서도 나타난다.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경우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 '반공독재의 강화'가 사용됐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도 '4 · 19 혁명,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다'라는 中제목 하에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 · 19 혁명'이라는 小제목이 再등장한다.

李 대통령의 중요 업적 중 하나인 韓美상호방위조약의 경우, 조약을 추진 체결한 主體(주체)를 흐리거나 아예 미국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측이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다. 6 · 25 전쟁 이후 한반도 赤化(적화)를 우려한 李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UN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남측은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330페이지)라고 서술, 대한민국이나 李 대통령이 아닌 '남측'이라는 말로 韓美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주체를 흐리고 격하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은 "6 · 25 전쟁 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켰고…"(344페이지)라며 아예 그 주체를 미국으로 묘사했다. 대한민국이 추진하여 성사시킨 성공적인 韓美동맹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헌법에 서명하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 · 발효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그 외에도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정비'(335페이지)에서 광복 이후의 교육 개혁을 다루면서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은 6-3-3년제의 교육제도가 마련되었고…. (중략)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1950년 6월 초등 교육에 의무 교육제가 도입되면서 뒷받침되었고, 이는 이후 세계 최저의 문맹률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면서 李承晩 정부의 업적임을 소개하지 않았다.

교육 확충은 李 대통령의 큰 업적 중 하나로, 이때 양성한 인력이 산업화의 主役(주역)이 된다. 특히 초등의무교육제도는 광복 이후 78%였던 문맹률을 1959년 10%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 反共정책 실시, 동해 평화선 설정(이승만 라인)과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戰後(전후) 경제복구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李承晩 정부의 노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제1공화국의 경제안정 정책도 다루지 않았다. 특히 1950년대 미국 원조를 다룬 부분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 교과서는 "전후의 경제 재건은 미국의 원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서술하면서도 원조액(대충자금)의 절반 정도가 미군의 유지비와 무기 구입 자금으로 쓰이면서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현상

이 나타나게 됐다고 왜곡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미공법 480호(미국의 농산물 무역 촉진 원조법)에 의해 농산물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국은 원조 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그 대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였다. 이 예치금을 대충자금이라 하는데, 정부는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의 감독 아래 이를 사용하였다. 재정 수입에서 대충자금의 비중은 평균 38%였다. 대충자금은 절반 정도가 미군의 유지비와 무기 구입 자금으로도 쓰임으로써 한국군의 국방력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의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중략) (346페이지, '알아봅시다', 대충자금과 미공법 480호)

우선 미국의 對韓원조가 농산물 중심이었다는 記述(기술)은 과장이다. 1950년대 미국 및 UN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제공된 원조는 ECA&SEC, CRIK, FOA&ICA, UNKRA, PL480 등이다. 이 중 PL480(Public Law 480)이 바로 농산물과 관련된 美公法(미공법) 480호로, 1945~1959년까지의 전체 원조액 중 미공법 480호에 의한 원조액은 5.12%, 미공법 480호가 개시된 1956~1959년간을 보아도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 여러 원조를 통해 수입된 물품 중 농산물은 약 17% 정도였으며, 원료 중간재를 포함한 공산품이 더 많았다.

對充資金(대충자금)이란 對外원조의 한 형태로, 미국이 예치한 자금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타국에서 물자를 구매한 후 그것을 국내에 판매한 돈을 한국은행에 적립하는 방법이다. 미공법 480호에 의한 판매 대금뿐만 아니라, 모든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이 대충자금으로 적립되었다. 대충자금은 한국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이전되었는데, 1953~1960년 대충자금은 총 재정수입 중 평균 38%를 차지, 1957년에는 50%를 넘기도 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再建(재건)의 밑바탕이 되었다. 주로 농지개량 사업, 治山治水(치산치수) 사업, 토목 사업, 상하수도, 통신 등 정부의 공공사업에 투입되거나 민간 부분에 융자로 제공됐다. 대충자금 중 미공법 480호에 의한 농산물의 판매대금은 주로 국방비로 분류되어 쓰였는데, 1950년대 연평균 국방비의 34.7%에 달했다.

1950년대 국방비 중 77.2%가 봉급 및 급식비로 지출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이 대충자금의 절반이 美軍의 유지비와 무기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駐韓(주한)미군 유지에 부분적으로나마 직접적인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로, 1953~1973년까지는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세금 및 공공요금의 면제나 감면 혜택 같은 간접비용을 분담하는 데 그쳤다.

무기 구입 자금에 쓰였다는 서술과 관련해서는, 1950년대 국방비 지출 내역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李承晩 정부는 전쟁의 수행, 전란 수습 및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연평균 정부 일반재정의 50.7%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편성했다. 이 중 77.2%가 봉급 및 급식비를 포함한 개인유지비로 지출됐으며, 17.9%가 부대 유지비, 전력증강비와 전투준비비는 각각 2.3%, 2.6%였다. 한국군이 사용한 무기는 경제원조와는 별도의 경로인 군사원조를 통해 제공된 것이었다. 1954~1961년까지 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원조는 약 13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李承晩 정부 당시 부흥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宋仁相(송

인상) 前 장관은 "미국 원조는 우리 산업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日帝가 물러난 이후 그들의 자본과 기술력이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의 원조가 있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대충자금은 산업자금에 융자 · 투자 방식으로 방출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2700만 달러와 대충자금을 묶어 4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대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자동차 같은 기계공업을 지원했고, 종로3가에서 안경점 하던 분이 플라스틱 안경테 제조를 신청하여 자금을 배정했다. 이 자금이 경제 각 분야에 지원되어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불씨가 됐다》(《전경련 40년史》 '이승만의 경제리더십 연구' 中)

당시 원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생각이 달랐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원조財源(재원)의 구성 비율과 운용 방식을 두고 자주 충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원조를 사회 기반설비와 생산재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었지만, 미국은 원조가 생활 물품 및 자재의 공급과 정부財政(재정)의 균형유지에 사용되길 희망했다. 이 사이에서 고군분투한 李承晩 대통령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李承晩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을 지낸 印泰植(인태식) 씨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경무대로 들어갔다. 李 대통령은 印泰植 장관에게 "지금까지 재무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이 미국 측에 대충자금(원조물자 판매대금) 사용방향을 바꿔 달라고 여러 수십 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나로서는 경제건설을 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대충자금은 공장을 세우는 데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서 있다. 나의 뜻을 명심하고 미국 사람들을 이해시키도록 힘써 달라…"》(《전경련 40년史》 '이승만의 경제리더십 연구' 中)



유엔 구호물자 배급소 앞에 운집한 서울 시민들. 전쟁 후 굶주린 한국인들은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와 무상원조로 기아를 간신히 면했다.

허술했던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高校 교과서의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몰이해와 악의적 평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8년 좌편향적 서술로 수정권고를 받은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정권고안에서 "대충자금(對充資金, counterpart fund) 한자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代充이라고 표기했었음). 또한 고등학교 수준에서 미공법 480호와 같은 사료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만 간단히 지적하는 데 그쳤다.

6種 中 지학사刊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가 자유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 지원, 戰後

복구 및 경제 재건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노력이 明示(명시)되어 있다.

이승만 정부는 미 군정의 정책을 이어받아 일제 말기의 통제 경제를 철폐하고 자유 경제를 확립해 나갔다. 1948년 9월에 수립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농업과 공업의 균형 발전, 소작 제도의 철폐, 기업 활동의 자유,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귀속 재산의 정부 인수, 인플레이션의 극복과 미국 경제 원조의 적극 도입이었다.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침을 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한 · 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 안정과 시설 복구를 위한 원조를 받았다(1948. 12).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의 공공성 유지와 경영 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 북한이 전력 공급을 중단하자 미국의 협조로 발전선을 도입하여 긴급 송전을 실시하고, 수력 ·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부족에 대비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여 1950년 초에는 면방직 공업이 일제 말기의 생산 수준을 넘어섰고, 물가도 안정되어 갔다. (지학사刊, 273페이지)

자료 黑白論理로 매도된 이승만의 경제 업적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조선 건국기의 科田法 이래 최대의 토지개혁

좌파 진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무관심 내지 無知(무지)했기 때문에 그의 집권기간 남한에서의 경제발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젊은 시절 "이젠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라고 喝破(갈파)했고, 이에 따라 상공업과 무역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구상을 했다. 그는 집권 초 우선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면서 상공업과 무역을 발전시키려 했다. 이승만의 집권기간 남한에서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1953~1960년간 年평균 경제성장률은 4.9%였다. 다른 후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4.4%였다.

1960년에 달성된 1인당 국민소득 83달러 역시 다른 후진국들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었다. 李 대통령은 6 · 25 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31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아내어 戰後복구사업을 추진, 1955년까지 전화로 파괴된 경제시설 및 기타 설비를 거의 완전히 복구할 수 있었다.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김인서 著)

1958년 復興部(부흥부) 산하에 신설된 '산업개발위원회'는 경제발전계획 수립에 착수, 1960년 4월15일 '3개년 경제발전계획 시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은 며칠 후 발생한 '4 · 19 군사혁명'으로 인해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하였지만 그 후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활용됐다.

李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농지개혁이다. 그는 과거 조선공산당의 지도급 간부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 '과도정부 당면정책 33항'에 제시된 농지개혁의 구상을 실현하려 했다. 정부에서 마련한 농지개혁 법안은 地主(지주)출신 의원이 다수였던 국회에서 견제를 받다가 1950년 3월에 통과, 4월에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3町步(정보, 약 9000평)를 上限으로 하여 그 이상의 농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다시 3정보의 한도 내에서 영세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주의 토지를 연평균 생산액의 1.5배로 사들여 小作人(소작인)들에게 분배하고, 5년간 現物(현물)로 상환토록 했다.

농지개혁은 6 · 25 전쟁 발발 후 일시 중단됐다가 1951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을 통해 재개되어 남한 전역에 실시됐다. 그 결과 총경지의 약 40%에 달하는 89만 2000정보의 땅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됐다. (《개정판 한국통사론》, 변태섭 著/ 《우리역사》, 한영우 著)

李 대통령이 실현한 '농지개혁'은 삼림과 임야 등 非경지가 제외되고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첫째, 농지개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개혁은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한 양반 지배층의 몰락을 초래, 지주 배경의 한국민주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사회 · 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 셋째, 6 · 25 발발 직전에 개시되어 전쟁 중 완료된 이 개혁은 전쟁기간 남한 농민들이 북한군에 호응하는 등의 내부 동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산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완결된 농지개혁은 조선왕조 건국기에 李成桂(이성계)

가 단행했던 科田法(과전법) 이래 최대의 토지개혁이었다. 黑白論理(흑백논리)에 의해 매도된 이승만의 경제분야 업적은 이제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억지와 트집잡기로 貶下된 朴正熙의 업적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룰 때 천재교육, 미래엔컬처그룹刊 두 교과서는 억지나 트집잡기로 그 의미를 희석시켰다. 두 교과서는 '한강의 기적' 이었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과정을 서술하는 장면에서 경제개발 주역인 朴正熙 대통령을 빼고 '정부' 로 표기했다. 반면, 부정적인 부분은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폄하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박정희' 란 단어를 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은 훈민정음의 創製(창제)를 '세종대왕' 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1964년 체결된 韓日國交(한일국교) 정상화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박정희 정부가 심각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 · 일 기본 조약을 체결한 이유에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과정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기반이 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한 · 일 회담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360페이지)

교과서는 "집권 과정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해 업적을 폄하하고 5대 대통령에 직선제(1963년)로 선출된 朴正熙 정부를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묘사했다.

베트남 파병을 다룰 땐 "외화 획득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썼지만, 파병 결단의 주체가 朴正熙 대통령이었음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의 국가안보, 韓美관계, 경제발전 등 여러 환경에 대한 설명 없이, 고엽제 문제나 민간인 학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을 덧붙여 베트남 파병의 業績(업적)을 흐렸다.

베트남 파병은 1964년 9월 이동 외과 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으로 시작되었고, 전투병의 파병은 196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브라운 각서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었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 현지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여 외화 획득과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 (중략) 이들 중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밖에도 수만명의 고엽제 피해,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많은 문제들을 남기게 되었다. (361페이지)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다' 는 제목의 본문에서 박정희가 주도한 '한강의 기적' 을 설명하며 '박정희' 란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교과서는 '한강의 기적' 의 礎石(초석)이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주체를 '군사 정부' 나 '정부' 로만 썼다.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의 성공 여부에 군사 정변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여겼다. … (중략) **군사 정부**는 장면 내각의 계획을 바탕으로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 (중략) **군사 정부**는 1964년부터 면직물과 가발 등 노동집약적 생산물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모자라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에 나섰다. (375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高度(고도)성장을 설명하



1976년 5월31일 포항제철 제2고로 火入式(화입식)에서 직접 불을 당기는 박정희 대통령. 자본도 기술도 없이 추진한 제철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0년이 지난 2007년 현재 포스코는 조강 규모 3105만 톤의 세계 5위 철강회사로 성장했다.

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편,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은 재벌 중심의 한국적 기업 문화를 형성하였다.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서로 다른 업종에까지 진출하여 재벌이 되었다. 이때 **기업이 정부의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부적절한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내수보다 수출입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재벌 중심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직면한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 (376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교과서는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중략) 기업이 정부의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부적절한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정부가 대기업을 비호했다고 誤認(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97년 IMF도 朴正熙 정부탓?

박정희 대통령의 대기업 육성정책은 대기업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와 대기업이 유착된 것처럼 편향적으로 서술했다. 이 교과서는 朴正熙 정부의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를 부른 원인 중 하나라고 기술했다. 朴 대통령 死後(사후) 18년이 지난 뒤 발생한 IMF 사태를 朴正熙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무리한 서술이다.

朴正熙 정부 때 재벌이 성장한 것은 당시의 국가 사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산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1960년대 초반에는 기간산업 구축을 담당할 기업이 몇 개 없었다. 기초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기업 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 운동을 다루면서도 교과서들은 朴正熙 대통령의 압도적 역할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박정희'에 대한 유리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그에 대한 好感(호감)을 막으려는 의도인 듯하다.

朴 대통령이 主唱(주창)한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국민운동이었다. '한국적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불리며 개발도상국가 등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朴正熙 정부 때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

낸 박진환 박사는 "6 · 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勤勉(근면), 自助(자조), 協同(협동)을 기반으로 한 새마을 운동의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대한 50년,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1위(1998년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 4위(2002년 한국갤럽),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1위(2007년 서울경제신문-한국리서치), '지난 50년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계기' 2위(2009년 서울경제-한국리서치) 등 새마을 운동은 최근까지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마을 운동에도 트집잡기

이런 새마을 운동이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維新(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되고(미래엔컬처그룹刊),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비상교육刊),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했다(천재교육刊)는 비판받고 있다.

마을길 넓히기 공사 중인 사진 밑에 "새마을 운동 기간 농가의 소득은 10.5배나 늘었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가 21배나 늘어났다"(비상교육刊, 369페이지)는 설명도 있었다. "그 결과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삼화출판사刊, 367페이지)는 표현도 등장한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과도한 영농 설비 투자,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의 부재, 불투명한 판로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등락은 농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도시 문화의 급속한 유입은 농촌의 소비도 급증시켰다. 국가의 기획에 의한 새마을 운동은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천재교육刊, 379페이지)

▲ 이에 정부는 1970년부터 근면 · 자조 · 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 증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도시에도 보급되어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전국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 (중략) 그러나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에 농민들은 농민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에 맞서 추곡 수매 투쟁, 농협 민주화 투쟁 등을 벌였다. (삼화출판사刊, 367페이지)

▲ 이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1970). 새마을 운동은 근면 · 자조 · 협동을 바탕으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주민 계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지역 개발 사업도 벌였다. 새마을 운동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근대화에도 이바지하였지만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비상교육刊, 369페이지)

▲ 새마을운동은 처음에는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시멘트 등을 이용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면 · 자조 · 협동'을 강조하는 국민정신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했으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81페이지)

全斗煥(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천재교육刊은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운동 세력을 강



'勸農(권농)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1966년 6월10일)

력하게 탄압하였다"고 썼다. 全 대통령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졸업 정원제' 등의 치적을 다룰 땐 '宥和(유화)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 운동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외를 금지하고, 중 · 고등학생의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였으며,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였다. … (중략) 이러한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독재 운동은 계속되었다. 대학생들의 학생 운동은 점차 조직화되었고… (중략) (368페이지)

'경제성장률 세계 1위' 업적도 생략

全斗煥 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 과잉 및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해 경제 안정화 시책을 단행, 물가 안정을 이뤘다. 그 결과 유래 없는 3低 호황(低금리, 低유가, 低환율) 시대를 맞이했다. '3低 호황'은 '3저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등장하지만(383페이지), 全斗煥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明示(명시)하지는 않았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3低 호황'에 대해 "전두환 정부가 중복 투자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며 주체가 '전두환 정부'임을 밝혔다. 그러나 역시 부정적인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두환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 ·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으나, 친인척 비리, 정권 장악 과정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으로 국민의 저항에 시달렸다. … (중략) 민주화 운동 세력은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과 고문 살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68~369페이지)

천재교육과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 모두 全 대통령의 업적인 올림픽 유치, 憲政史(헌정사)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수입자유화 및 경상수지 黑字(흑자) 달성 등은 소개하지 않았다. 全斗煥 정부 시절과 겹치는 1980년대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盧泰愚(노태우) 대통령 업적 기술은 두 교과서 모두 비교적 객관적이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서울올림픽 개최',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北方(북방) 외교의 시작', '남북한 UN 동시가입' 등을 서술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역시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中蘇와 수교',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수록했다.

그러나 두 교과서 모두 盧泰愚 정부의 경제 치적인 경부고속철도(KTX), 영종도 新공항(現 인천국제공항), 新도시 건설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육성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金泳三(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서술도 비교적 사실에 입각해 썼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금융 · 부동산 실명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OECD 가입' 등을 실었다. 미래엔컬처그룹刊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공직자 윤리법 제정', '금융실명제 실시', 'OECD 가입' 등이 실렸다.

金大中 · 盧武鉉 대통령은 업적만 부각

건국 · 건설派 대통령들에게 가혹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두 교과서지만 金大中 · 盧武鉉(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 金 · 盧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失政(실정)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업적만 부각시키는 식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선 '정부'라고 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식으로 표기했다.

▲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국제 통화기금(IMF)의 지원금을 앞당겨 상환할 수 있었지만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매각되고 빈부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또, 여성부를 신설하여 성차별 극복에 힘쓰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 장애인 · 노동 복지를 향상시켰다. … (중략)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 · 15 남북 공동 선언을 이끌어냈다(2000). 그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화해 협력과 민주 투쟁의 업적으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71페이지)

▲ **김대중 정부**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뜻으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 하에서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등을 통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려 하였다. … (중략)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 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1988년 9월17일 세계 160개 국이 참가한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盧泰愚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 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추진 등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천재교육刊, 371페이지)

두 교과서는 金大中 대통령의 업적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 수상 부분이 두드러졌다. 반면 金 대통령의 실정 부분은 아주 적은 분량이 수록됐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측근들의 비리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고,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실정 자체를 수록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 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不法 송금, 매수한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었다. 2002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의 不正비리가 드러나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두 교과서에서 이 같은 사실은 묵살됐다.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朴正熙 · 全斗煥 대통령에 대한 서술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술도 김대중 대통령과 大同小異(대동소이)하

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권위주의를 탈피한 대통령' 이라는 우호적인 中제목을 붙였으며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라는 표현도 했다.

▲ 2003년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정경 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 보안법 폐지가 좌절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여 왜곡된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72페이지)

▲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지역 정당 탈피를 내걸고 새천년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였다. 2004년 3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위반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탄핵 사태는 종결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경 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친일 · 독재 등 과거사의 정리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시민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개성 공단을 본격 가동시키고, 2007년 10월에는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 시켰다. (천재교육刊, 372페이지)

6종의 교과서 중 천재교육과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노무현 정부를 소개하면서 각각 "친일 · 독재 등 과거사의 정리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여 왜곡된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기술했다.

'친일파' 후손이 주도한 '친일' 진상규명을 극찬

노무현 정부는 '치욕적인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하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 2004년 3월22일 공포했다. 당시 친일진상규명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국회 내 단체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약칭 민족정기의원모임)으로 1~2대 회장을 김희선 前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았다. 문제는 김희선을 포함, 당시 법 제정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소속의 신기남 의원이 이른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독립군의 딸'이라고 주장했던 김희선은 아버지 金一鍊(김일련) 씨가 만주국 유하경찰서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特務(특무)였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警察戰史(경찰전사)》의 저자인 金珖燮(김광섭) 씨는 2004년 11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만주국 경찰의 特務라면 일제 강점기의 일본 비밀경찰인 특별고등경찰과 같다"면서 "비밀 정치경찰, 고등경찰 등을 약칭해서 特高(특고)라고 불렀고, 이들은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에 대한 '잔학한 고문' 으로 '악명' 이 높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기남은 2004년 7월14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농사꾼이 논에서 잡초 뽑을 때 가리지 않는다"면서 "몇몇 친일 언론사 등에 대한 관심은 주가 아니며 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신 씨의 父 신상묵 씨는 1938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 화순군 청풍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40년 일본군에 지원 총독부 국군병 지원자 훈

련소에 입대 했던 사실이 2004년 〈신동아〉의 보도로 밝혀졌다.

일본식 이름인 시게미쓰 구니오(重光國雄)로 창씨 개명한 신기남의 父는 훈련소를 수료한 뒤, 반도호텔에서 일본군 지원병 수료생 자격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좌담회에 참석했고, 〈매일신보〉는 당시 좌담회를 8회에 걸쳐 장기 연재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상묵은 좌담회에서 "나는 반다시(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복종하야(해야) 되겟다는(되겠다는) 정신수양을 하게 되엇습니다(되었습니다)"라고 일본군 입대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신상묵의 대구사범학교 5기 동기생인 송재천 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1943년 6월 충북 옥천 죽향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일본군 伍長(오장 · 지금의 하사) 군복을 입은 신 씨가 말을 타고 집으로 찾아와 '일본군 헌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본군 징병 기피자들을 찾고 있는데 정보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 고 해 '모른다' 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기남 자신도 이 같은 〈신동아〉 보도와 관련, "선친은 일제시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사생활 하다 군에 입대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부친의 일본군 복무사실을 시인했다.

이처럼 자기 파괴적 선전 · 선동에 불과했던 친일진상규명법은 2010년 '對日(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한편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되었다' 고 표현, 학생들에게 지난 60여 년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냈던 자유민주체제 유지법을 악법인 것처럼 주입하도록 했다. 두 교과서는 2009년 불거진 노무현 대통령 一家의 부정비리, 핵심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등은 수록하지 않았다.

햇볕정책 홍보

두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서술은 특히 남북관계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파격적인 지면을 할애해 美化하고, 햇볕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묵살하거나 축소했다.

▲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정책)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후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 되었다.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 · 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된(2000) 결과, 남북 철도 연결, 이산가족 방문 재개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확대되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92페이지)

▲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등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두 정상은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발표하였다. … 6 · 15 선언 이후 남북교류는 크게 진전되었다. 남북 장관급 회담, 군사 회담, 경제 회담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 진행되었다. 또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사업도 크게 활성화 되어 문화, 예술, 언론 등 전분야에 걸친 교류가 증진되었다. (천재교육刊, 397페이지)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對北송금을 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對北퍼주기를 하고도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한 사람도 송환받지 못했다. 두 교과서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北이 不法 핵개발을 하여 핵실험까지 한 사실도 거의 묵살했다. 北이 햇볕정책 기간에 西海에서 두 차례 군사적 도발 한 사실도 쓰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지적하지 않았다.

6種 교과서들은 이승만 · 박정희는 깎아내리고, 김대중은 추켜세우고, 김일성 · 김정일은 민족반역적-反인류적 범죄행위까지도 감싸주는 일관된 기술방침을 보인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이런 역사관은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국가관과 도덕관을 심을 것이다. 김대중 · 김일성 · 김정일에겐 好意的(호의적)이고, 이승만 · 박정희에겐 敵對的(적대적)이란 사실은 교과서 집필진이 가진 이념적 성향에서 나온 가치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료 삼화출판사, 법문사刊 교과서, 서울 올림픽 未수록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는 암울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 냉전의 갈등으로 한동안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서의 兩국가들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160개 국가, 1만 4000여 명의 선수)의 세계적인 체육 제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올림픽은 향후 스포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듯 한국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인 '서울 올림픽'이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 중 삼화출판사, 법문사刊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노태우 정부 업적을 서술하며 "또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370페이지)라고 간략히 서술했다. 비상교육刊 교과서는 "한편,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였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대회를 유치하여 이 대회에서 종합 4위에 올랐고…"(395페이지)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지학사刊 교과서는 서울 올림픽에 대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다"(309페이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319페이지),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328페이지)고 평가했다.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하는 사진(319페이지)이 1회 쓰였다.

천재교육刊 교과서에는 사진이 2회, 본문이 2회 등장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370페이지), "1980년과 1984년의 올림픽과는 달리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동서 양 진영의 국가 거의 대부분이 참여(159개국 참가)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370페이지), "한국의 스포츠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자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32년의 再평가

통계로 입증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경영자들

세계은행이 1965~19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1965~1980년 사이, 즉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年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 세계 9위였다. 1980~1990년의 11년간, 즉 全斗煥-盧泰愚(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 · 16 혁명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로서 말레이시아(271달러), 필리핀(169달러), 태국(115달러)보다 못했다. 軍人 출신 대통령이 國政(국정)을 운영하던 30여 년간 한국은 GNP 규모에서 세계 37위(1960년)→15위, 1인당 GNP에선 83위→30위, 무역부문에선 세계 51위→11위로 도약하였다. 한국은 人權(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아시아의 두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軍人 출신 세 대통령들이 국가를 끌고 가던 시절 한국은 경제성장과 고른 분배 및 人權향상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이야기이다. 朴正熙-全斗煥-盧泰愚 대통령은 1961~1993년의 32년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경영자였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이 세 대통령의 在任(재임) 기간에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학생, 지식인, 언론은 민주화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위하여 싸

웠다. 이들의 민주화 노력은 세 군인 출신 대통령이 독재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군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였으므로 민주화 세력은 나라가 망가지는 걱정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서로 싸웠지만 결과적으론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경쟁한 셈이다. 단,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從北세력은 이런 好評(호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실이 이럼에도 軍人 출신 대통령들을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從北분자들을 '민주투사'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다. 교과서가 이런 억지를 담고 있다. 세 군인 대통령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역사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사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학을 수학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2. 두 교과서, 南韓정부에 26회, 北정권에 5회 '독재' 지칭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독재'라는 단어를 북한 전체주의 체제보다 민주화 과정을 밟아온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種 교과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남한에는 39회, 북한에는 21회 '독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미래엔컬처그룹刊, 이승만과 김일성을 '同級'의 독재자로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총 17회에 걸쳐 '독재'라고 표현을 사용했다. 이 교과서의 현대사 記述이 가장 심한 左편향을 보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반면 북한 체제를 '독재'라고 쓴 횟수는 3회에 불과했다. 北에 대해서는 "독자적 자주 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388페이지)고 한 데 비해, "이승만 정부는 反共(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야당과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345페이지),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과 반공을 내세워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 정권이었다"(364페이지)고 기술한 식이다.

이 교과서는 박정희 체제를 '영구집권', '종신집권'이라고도 표현했다. "영구집권을 꾀한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실현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기만한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365페이지)라고 감정적으로 규정지었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父子 세습 독재체제에는, "김정일, 권력을 계승하다", "김정일은, …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388페이지)고 썼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단속도 독재라는 말과 연결해 설명했다.

> 한편, 군사독재 정권은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대중문화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방송에서는 반공 의식을 고취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였다. … (중략) 대중문화와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와 억압 속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미래엔컬쳐그룹刊, 385페이지)

이 교과서가 북한 체제를 '독재'로 지칭한 부분은 세 군데였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라는 단어가 1회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남북의 두 지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은 이를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391페이지)라고 서술하며 이승만과 김

일성을 同級(동급)의 독재자로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천재교육刊, 北의 세습독재를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로 美化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남한 정부를 총 9회 독재라고 표현했으나 북한 정권을 독재라고 칭한 횟수는 2회뿐이었다. 교과서는 "북한의 권력 투쟁과 김일성 독재가 등장했다"(333페이지), "1인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였다"(391페이지)고만 짧게 언급했다. '김일성 개인숭배'(391페이지)라는 표현이 2회 등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김일성 반대파가 숙청된 8월종파사건을 설명할 때 등장한 '김일성 반대파'의 의견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반면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하여는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을 탄압하고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 기소하여…"라는 식의 비판적 서술이 主를 이뤘다. "(이승만 정부가)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330페이지), "이승만 독재 하에서 진보 혁신 정당을 결성하여…"(332페이지), "(박정희 정부가) 3선 개헌을 통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다"(362페이지)며 거의 예외 없이 '독재'라고 표현했다.

법문사刊 교과서는 남한에 3회, 북한에 2회 독재라고 표현했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남한에 2회, 북한에 2회였다. 이 교과서는 '북한에서 유일체제가 확립되다'(378페이지)라는 章에서 독재라는 표현보다,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용어인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더 많이 소개했다.

지학사와 비상교육刊 교과서는 북한을 독재라고 표현한 횟수가 더 많았다. 지학사는 '독재'라는 단어를 남한에 4회, 북한에 7회 사용했고,

미래엔컬처그룹	남한 (17)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야당과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345페이지) 독재 권력은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고…(345페이지) 4 · 19혁명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다(中제목, 358페이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 · 19 혁명(小제목, 360페이지) 4 · 19 혁명은 고등학생들이 앞장서고 대학생과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 혁명이었다(360페이지)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과 반공을 내세워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정권이었다(364페이지) 유신 체제는 … 민주주의를 기만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였다(365페이지) 박정희는…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장기독재를 지속하였다(365페이지) 미국 대통령 카터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난했다(366페이지) 6월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369페이지) (많은 개헌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집권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던 까닭이다(373페이지) 이와 같은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저항을 계속하였다(373페이지) 한편, 군사 독재 정권은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대중문화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385페이지) 장발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통하였다(385페이지)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385페이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록 개발을 위한 독재를 했지만 그 덕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 덕에 중산층이 두터워져 민주화도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403페이지) 독재가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반이라니…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403페이지)
	북한 (3)	그러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1인 독재와 부자세습이 이뤄졌으며… (388페이지) 사회주의 헌법 제정되어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다(388페이지) 남북의 두 지도자인 이승만 김일성이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391페이지)
천재교육	남한 (9)	(이승만 정부에 대해)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中제목, 330페이지) 반공 독재의 강화(小제목, 332페이지) (조봉암 사건을 설명하며) 이승만 독재 하에서 진보 혁신 정당을 결성하여 평화 통일을 주장한 것이 죄라면 죄였다(332페이지)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의 행진(356페이지) 군사 독재가 시작되다(中제목, 358페이지) 3선 개헌과 1인 독재 체제 구축(小제목, 362페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1인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동안 민주화의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되었다(362페이지) (전두환 정권에 대해) 이러한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독재 운동은 계속되었다(368페이지) 노무현 정부는 정경 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친일 · 독재 등 과거사의 정리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372페이지)
	북한 (2)	북한의 권력 투쟁과 김일성 독재의 등장(小제목, 333페이지)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김일성 독재 체제가 성립되었다(333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 ·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 사용된 '독재' 표현 현황

비상교육은 남한에 4회, 북한에 5회 사용했다. 지학사刊 교과서는 북한 정권이 한국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저지른 아웅산 테러를 사진과 함께 실어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였다.

3. 李承晩, 朴正熙는 과연 독재자인가?

南에는 서구식 기준, 北에는 북한식 기준 적용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기술하면서 '역사성'을 빼버려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선전물 같은 책이 되고 말았다. 역사성이란 시간의 흐름이다. 西歐(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어떤 기복과 進退(진퇴)가 있었고 한국은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았느냐를 설명해야 역사를 알게 된다.


1948년 5월10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는 9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 대한민국 수립 지지 여론을 증명했다.

1948년 8월15일부터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과연 수백년이 걸린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느냐를 학생들에게 설명한 다음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를 비판해야 한다. 교과서 筆陣(필진)은 그런 역사성을 생략한 채 李承晩, 朴正熙 정부에 대하여는 서구식 민주주의 기준을 적용, 독재라고 비판하고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북한식 기준을 적용, 비호한다. 李承晩, 朴正熙를 독재자라고 호칭하는 것은 反역사적이다.

서기 1215년 영국의 존(John) 왕은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귀족회의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는 자유민을 구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마그나 카르타[大章典, 대장전]의 탄생이다. 그 후 국회와 王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內戰(내전), 암살, 처형 등으로 피를 흘리다가 1688년 명예혁명 이후 王의 권한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主權(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세계 민주주의 발달의 최선진국 영국에서도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 약 800만 명의 3.5%인 28만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다. 차츰 선거권이 확대되어 갔다.

1884년에는 세금을 내는 영국의 모든 家口主(가구주)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1918년엔 세금납부 與否(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成人(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들에 대한 보통 선거권은 1928년에 주어졌다.

프랑스에서도 1790년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1815년엔 30세 이상의 年 300프랑 이상 납세자가 투표권을 가졌다. 1820년엔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有權者(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830년엔 25세 이상의 年 200프랑 이상 납세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인구는 전체 成人의 170분의 1이었다. 1848년 모든 남자 成人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가 2년 뒤 '3년 이상 거주 납세자'로 제한되었다. 1851년에는 다시 남자 보통선거권으로 돌아갔다. 모든 여성 성인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1945년이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64년 民權法(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된 이후였다. 흑인의 경우 한국보다 정치적 자유를 맛보는 것이 늦었다.

수백 년에 걸친 과정 생략한 대한민국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거권 확대'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폭이 확대되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동시에 선거권 확대는 점진적이었고 신분중심(봉건체제)-납세중심(부르주아 체제)-男女 모두(대중민주주의 시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투표권의 확대는 法개정을 통하여 이뤄졌다. 法治(법치)의 확립과정이 민주주의 발달 과정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1948년 헌법 제정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하게 되었다. 재벌 총수도 한 표, 직원도 한 표이다. 無職者(무식자)도 한 표, 교수도 한 표이다. 세금을 수백억 원 내는 사람도 한 표, 안 내는 사람도 한 표이다.

유럽에서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고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물로서의 男女불문한 1인 1표제를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에 無賃乘車(무임승차)한 셈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의 苦鬪(고투)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 셈이다.

1948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서양에서 수백 년 걸려 [영국의 경우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정부터 시작하면 보통선거 쟁취까지 약 800년이 걸렸다] 발전

시킨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연극, 민주주의란 연습을 해온 셈이다. 연극과 연습을 많이 하면 實演(실연)이 되긴 하지만 외래 제도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선 엄청난 代價(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 李承晩 · 朴正熙

西歐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李承晩과 朴正熙를 독재자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메이저리그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네 야구 선수들을 혹평하는 것과 같다. 세종대왕에게 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퍼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의 先進(선진) 민주주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李承晩, 朴正熙가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10~30년 만에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 세계사에는 물론 그런 예가 없다. 李, 朴 두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 19세기의 유럽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었다. 10~30년짜리 한국 민주주의가 유럽의 수백 년짜리 민주주의보다 더 발전되었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과연 자신 있게 독재자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링컨이 1950~1970년대의 한국을 다스려도 李, 朴 대통령만큼 하진 못하였을 것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李, 朴 두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 1910~1920년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보다 못하지 않다. 북한과 중국은 아예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좌익들은 李承晩, 朴正熙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일까. 그들이 가진 기준은 地上(지상)의 것이 아니라

天國(천국)의 기준이든지 자기 꿈속의 기준일 것이다. 그들의 잣대는 북한 정권에 들이댈 때는 갑자기 눈금이 넓어지는 요술 자[尺]이기도 하다.

李承晩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적이 없고, 憲政(헌정)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 그를 독재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자진하여 물러난 점에서도 그렇다. 朴正熙는 물론 두 번(5 · 16과 유신) 쿠데타를 했다. 그러나 1963, 1967, 1971년 세 차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이 기간은 독재가 아니었다. 따라서 독재적 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독재자 운운하며 그의 통치기간 전체를 독재로 모는 방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부정한 적도 없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후진국에,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에 무조건 적용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민주주의의 조건을 먼저 만들겠다고 작심한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제도를 만든 점에서 그를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로 보는 게 타당한 역사적 평가일 것이다.

자료 朴正熙를 미워하다가 존경으로 바뀐 카터 참모의 고백

"포퓰리즘을 꺾고 민주주의로 가는 제도, 중산층, 국가적 개혁을 이룩한 사람"

윌리엄 H.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가 1990년대 중반에 쓴 책 《중국의 浮上(부상)》(The Rise of China)은, 한때 카터 선거캠프의 참모였고 反韓的 성향이었던 著者가 朴正熙의 한국을 재평가하면서 開途國(개도국)의 근대화와 중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오버홀트는 '중국의 근대화 전략이 朴正熙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왜 朴正熙식 개발 전략의 정당성에 설득 당하게 되었나를 고백한다.

이 책 집필 당시 홍콩의 미국 금융회사에서 국제정세 분석가로 일하고 있던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추종하는 民權(민권)운동가로 활약했고 에즈라 보겔(Ezra Vogel) 교수의 권유를 받아 하버드에서 중국 文化대혁명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文化대혁명을 연구하면 할수록 엄청난 규모의 학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하버드에서 제기해 보아도 毛澤東(모택동) 신봉자들이 講壇(강단)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당시 분위기 때문에 비판만 받았다고 했다.

예일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허드슨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장은 유명한 미래학자 허먼 칸(Herman Kahn)이었다. 칸은 한국의 근대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젊은 오버홀트와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오버홀트는 1970년대 중반, 한국을 방문하고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농촌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때의 충격을 그는 이 책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장 악독한 독재자로 알고 있었던 朴正熙 정권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국가를 근대화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필리핀에서 목격한 한심한 미국식 근대화와는 너무나 달랐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그는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학자, 정치인, 기자들의 위선적이고 圖式的(도식적)인 관점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1976년에 그는 카터 후보의 선거 참모로 들어가 對아시아정책 그룹을 이끌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뒤 생각이 달라진 그에게 있어서는 서구식 우월의식으로 꽉 찬 카터 진영의 참모들이 철없는 사람들로 비쳐졌다. 당시 카터 진영에서는 駐韓미군의 철수를 공약함으로써 독재정권을 응징하는 人權외교의 챔피언으로서 카터의 이미지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오버홀트에게는 이것이 바보짓으로 보였다. 그는 미국식 人權개념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발전단계 차이를 무시한 미국식 오만이라고 보았다. 이 경험 때문에 그는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人權문제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서구 이념의 사기성은 정치발전은 항상 경제발전보다 先行(선행)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시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사기성은 정치적 자유화 없이도 경제적 자유화가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세계의 현대사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後進(후진)국가가 민주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제발전을 하는 식으로 현대적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모델은 西歐서

구)의 학자들과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왔고 서구의 원조를 받아왔다. 이런 원조는 正門으로 들어가자마자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려 자본의 도피만 발생할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평양 연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먼저 권위적 정부가 들어서서 근대적인 제도를 만들고 경제를 자유화하며 교육받은 중산층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변화를 원하든 원치 않든 자유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책에서 오버홀트는 후진국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후진국엔 인기주의적 선동으로부터 國益(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화된 국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후진국엔 농지개혁이나 국영기업의 私有化 같은 개혁을 저지하는 기득권 세력은 강하나 이를 극복하고 추진할 국가주의 세력은 약하다. 셋째, 후진국엔 분별력을 갖춘 교육 받은 중산층이 약하다.

오버홀트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후진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인기주의의 장벽'(Populist Barrier)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朴正熙가 바로 이 포퓰리즘을 꺾고 민주주의로 가는 제도와 중산층과 국가적 개혁을 이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군사비를 삭감했다. 북한의 위협이 있음에도. 이런 일은 민간 정치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朴 대통령은 敵對관계에 있던 일본과 수교했다. 이것도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외국인 혐오증이 심한 군중심리를 누르고 外資유치와 무역을 장려했다. 그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율을 인하했다. 이는 南美의 정부라면 할 수 없는 조치이다. 南美의 지배층은 과대평가된 환율을 이용하여 사치품을 수입하고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재기하기 때문이다. 朴 대통령은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고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내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런 개혁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지식인과 過보호에 안주하는 기업인으로부터 同時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라 민주주의를 채용하는 開途國(개도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朴正熙는 현대식 國家기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군은 美軍보다도 더 효율적인 집단이 되었다.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장관과 은행가들을 추방하고 연구소를 만들어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을 초빙했다. 그는 이들이 고위 관료가 되도록 하여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날씬한 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미국식 민주화를 추진한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청탁을 받아 공무원들을 임명하다가 보니 정부는 커지고 효율성은 떨어졌으며 유능한 장관들은 집단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되었다. 朴 대통령의 개혁이 그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화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감동적인 박정희式 근대화를 현장에서 목격한 오버홀트는 동아시아式 개발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고르바초프式 서구형 개혁 개방의 실패도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式 개혁은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서구가 좋아하고 부추긴 방법이기도 했다.

오버홀트는 한국의 성공사례와 이를 모방한 鄧小平(등소평)의 중국 근대화 성공사례에서 세계사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을 떴다는 얘기이다. 오버홀트의 이 책은 중국에 관한 주요 저서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朴正熙를 보는 시각의 교정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맑아져간 그의 과정은 감동적이다.

4. 對共수사 비방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親北인사 윤이상 · 이응노를 '평화통일 운동가'로, 不法방북해 처벌받은 문익환 · 임수경 대해 '탄압했다'고 기술하는 등 적법한 對共(대공) 수사를 비방하고 이들이 벌인 親北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親北인사 윤이상 · 이응노를 '평화통일 운동가'로 소개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364페이지 '그 때 그 사건'에서 '東伯林(동백림,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3선 개헌을 위한 의석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중앙정보부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 평화통일 운동을 하던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등을 간첩으로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인 천상병이 장애인이 되는 고문수사로도 이들의 간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2006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치적 의도로 사건이 확대 · 과장되었음을 밝히고, 불법 연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364페이지)

東柏林 사건은 1967년 7월8일, 중앙정보부(現 국가정보원) 발표로 알려졌다. 1957년부터 북한은 동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해 서독과 유럽에 거주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섭 공작을 펼쳤다. 이에 남한 유학생과 장기체류자들이 포섭됐으며, 그 중 11명은 평양에 다녀온 후 평화통일방안 선전과 각계 요인에 대한 포섭, 선거에서 '革新(혁신)인사를 지지하라' 는 지령을 받았다. 1967년 12월3일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 반공법 · 형법(간첩죄) ·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해 조영수 · 정규명에게는 사형, 정하룡 · 강빈구 · 윤이상 · 어준에게는 무기징역 등 피고인 36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가 2007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7년 4월14일, 西獨(서독) 주재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이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 대회' 취재차 체코 입국 이후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中情(중앙정보부)은 1967년 4월24일, 한국여자농구선수단 이재학 감독을 통하여 최초로 李 기자 실종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접한 임석진(당시 국내 대학교수)은 북한이 李 기자를 납치한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對北접촉 前歷(전력)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돼 자수를 결심했다. 그는 이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홍세표(朴正熙 대통령의 처조카)에게 설명했다. 홍세표는 朴 대통령과 임석진의 만남을 몰래 추진했으며 1967년 5월17일, 2시간가량 면담이 진행됐다. 朴 대통령은 임 교수로부터 유럽 유학생들의 對北 접촉상황을 듣고 "신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는 임석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對共혐의자 40여 명에 대한 명단 및 對北 접촉 내용을 파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朴正熙 대통령은 6 · 8 국회의원 선거 이전(1967년 5월17일)에 임석진의 진술을 통해 유럽 주재 유학생들의 간첩 의심활동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가 밝힌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중앙정보부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朴 대통령이 부정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정보부에 對共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동백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부정선거 여론 차단이 아닌, 한 기자의 행방불명과 그것을 북한 소행이라고 직감한 한 대학교수의 자수로 비롯됐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간첩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

金日成이 '애국지사' 라고 칭찬한 윤이상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던 윤이상과 이응노를 '평화통일 운동가' 로 왜곡하고 있다.



1987년 10월, 김일성과 대화를 나누는 윤이상(左). 윤이상은 북한을 자주 드나들며 김일성의 신임을 얻은 대표적인 從北인사였다.

윤이상(1917~1995)은 대표적인 親北反韓(친북반한) 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김일성의 75회 생일 때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라는 노래를 선물하기도 했으며 김일성이 사망하자 "길이길이 명복을 비옵니다. 끝없이 우리 민족의 광영을 지켜주소서. 우리 력사상 최대의 령도자이신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앞길에 매진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美化(미화) · 찬양했다. 김일성 역시 윤이상을 칭찬하며 "조국통일 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올렸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애국지사"(《김일성 敎示集》, 2000년)라고 추켜세웠다.

윤이상은 1963년 처음 訪北(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수자 씨는 그의 첫 방북 이유를 "강서고분의 사신도를 보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2006년 〈한겨레신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訪北 당시 윤이상은 북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동백림 사건' 때 이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당시 중앙정보부 수사에서 윤이상은 금품수수 등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간첩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1979년 이후부터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과 잦은 만남을 갖고 親北 행보를 가속화한다. 이 무렵 김일성은 윤이상에게 "민족의 재간둥이 윤이상 선생"이라는 말을 했다.

윤이상의 실체는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入北(입북) 자수 간첩 오길남 사건' 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1985년 윤이상의 권유로 가족과 입북한 오길남 박사는 북한의 선전요원으로 활동하다 1986년 혼자 탈출에 성공한 후 독일 등지를 전전했다. 그 무렵 윤이상은 오길남 박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다시 경솔한 짓을 하면 당신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 왜 北을 욕하는 거요. 가족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소? 통일운동에 나서라고 하지 않았소? 왜 좋은 글을 써서 신문이나 학술잡지에 내지 않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통일운동을 자꾸 훼방 놓고 다니면 당신 가족은 죽는 줄 알라〉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 오길남 著)

현재 오길남 박사의 아내와 두 딸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응로 · 박인경 부부, 北傀의 지령 적힌 亂數表 소지해

'韓國畵(한국화)의 거장' 이라 불리는 이응노(1904~1989)도 부인 朴仁京(박인경)과 함께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尹應烈(윤응렬) 장군은 2010년 11월 출간된 회고록 《상처투성이의 영광》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백림 사건 연루자들의) 위반 정도가 약했다는 것은 매우 恣意(자의)적인 해석이다. 지금 잣대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당시의 급박한 대치 상황에서는 중대한 反국가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6 · 8 총

선 이전에 위법 행위 당사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애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동백림 사건의 수사를 일부 담당했던 尹應烈 장군의 회고록 내용과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 동백림 사건 관련 記述(기술)을 비교하면 사실관계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 尹 장군은 당시 駐佛(주불)공사로 재직하면서 이응노 · 박인경 부부를 서울로 압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중앙정보부 본부로부터 '李 · 朴 부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한 송수신기와 亂數表(난수표)를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베테랑 수사요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물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북한 간첩들의 난수표를 보았다. 난수표는 특수 처리된 아주 얇은 용지의 넓이 3.5㎠, 길이 3.0cm 정도 크기였다. 직경이 담배보다 약간 가늘게 둘둘 말려 프랑스 고루아(golois)담뱃갑 안에 담배와 같이 숨겨져 있었다〉 (《상처투성이의 영광》 中에서)

난수표에는 확대경으로 읽어야 할 정도의 작은 활자가 가득 인쇄되어 있었다고 한다. 尹 장군은 당시 中情 요원들이 난수표 뿐 아니라 세포조직 명단 및 검거에 대비해 마련한 자살용 청산가리까지 확보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윤이상과 이응노가 무고하게 연루된 것처럼 적고 있다.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윤이상과 이응노가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해서 간첩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 수 없으며 '이들의 간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는 섣부른 결론까지 내리고 있다. 〈月刊朝鮮〉은 2003년 7월호에서 '이응노 · 박인경 부부는 북한 공작원들과 협조, 白建宇(백건우, 피아니스트) · 尹靜姬(윤정희, 영화배우) 부부를 북한으로 납치하려 했었다' 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2006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정치적 의도로 사건이 확대 · 과장되었음을 밝히고, 불법 연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당시 과거사위는 동백림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면서 동베를린(50명) 및 북한 방문(12명), 北側(북측) 인사로부터의 금품수수(17명) 등을 통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과장은 됐지만 조작은 아니다"라며 실체가 있는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내용을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기술했다.

不法 방북해 처벌받은 문익환 · 임수경을 정부가 '탄압했다' 고 서술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는 1989년 발생한 문익환 · 임수경 不法(불법) 방북 사건에 대해서도 편파적으로 기술했다. 문익환 · 임수경 不法 방북은 남북한의 左翼(좌익)세력이 배후에서 합작, 對南(대남) 공작 차원에서 일으킨 것이다. 여대생 임수경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 전대협 대표로 선발


1989년 6월30일 不法방북한 임수경이 8월15일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되어 동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행동을 했다. 임수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中 1992년 특별 가석방된 뒤, 1999년에 복권되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상임고문이던 문익환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초청을 받아 정부의 허가 없이 1989년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북한에 들어가 조평통 위원장 허담과 회담, 연방제[赤化] 통일, 팀스피리트 훈련 반대에 합의했다. 이 사건으로 문익환은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 잠입, 탈출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3년 3월6일 사면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989년은 직선제로 당선된 盧泰愚 대통령 시절이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 39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392페이지)

이 교과서는 문익환과 임수경의 북한 방문이 不法이었음은 밝히지 않았다. 합법적 방문인데도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유도하기 위한 생략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교과서는, 민주정부와 법원의 정당한 法治행위를 '탄압'이라고 표현했다.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려는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탄압'이란 용어는 임수경과 문익환에 대하여는 好感(호감)을, 대한민국의 法治(법치)주의에 대해선 不信感(불신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공동체의 敵과 내통한 자를 法에 따라 처벌하는 행위를 '탄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편향적인 기술로 인해 학생들은 동백림 사건과 이응노 · 박인경 부부, 문익환 · 임수경을 마치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가로 인식할 수 있으며, 親北 · 反체제 활동이 정당한 것처럼 誤認(오인)할 우려도 있다. 이 교과서의 목표가 마치 북한 정권과 從北세력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안전망인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함께 보기

《상처투성이의 영광》 (윤응렬 著, 황금알刊)
《과거사의 진상을 말한다 下》 (조갑제 외 著, 월간조선刊)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 (오길남 著, 세이지刊)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로버트 올리버 著, 동서문화사刊)
《이승만 다시보기》 (인보길 著, 기파랑刊)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이한우 著, 해냄출판사刊)
《朴正熙 전집(全13권)》 (조갑제 著, 조갑제닷컴刊)
《만화 박정희(全3권)》 [조갑제(원작), 이상무 著, 기파랑刊]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62년 생애의 62개 장면》 (조갑제 著, 기파랑刊)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오원철 著, 동서문화사刊)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김상선, 금동화 외 2명 著, MSD미디어刊)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이장규 著, 울림刊)
《김대중의 正體》 (조갑제 著, 조갑제닷컴刊)

8장

6 · 25 왜곡 및 反軍 선동

1. 김일성의 전쟁 범죄 서술 소홀

6種의 교과서 가운데 지학사를 제외한 5種의 교과서는 6 · 25 전쟁을 기술하면서 전쟁의 1차적 원인 제공자인 김일성의 南侵(남침) · 赤化(적화) 야욕과 치밀한 전쟁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남북한과 美 · 蘇 · 中 모두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兩非論(양비론)적 서술로 일관했다. 이들 교과서는 또 일관되게 미국의 '애치슨 선언'을 게재해 이것이 마치 6 · 25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처럼 기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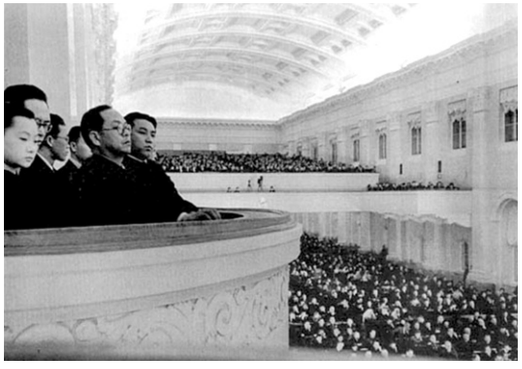
교과서의 이 같은 서술은 6 · 25 전쟁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작은 무력 충돌이 큰 무력 충돌로 확대된 것'이라는 미국의 左派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修正主義(수정주의) 학설을 연상시킨다. 수정주의는 남한의 親北左派(친북좌파)들이 김일성의 무력 南侵을 희석시키기 위해 애용하는 학설이다. 미국은 '애치슨라인' 설치로 북한 정권에게 남침의 好期(호기)를 제공해 준 역사적 과오를 범했지만 북한, 소련, 중국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6 · 25 전쟁 발발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 분단 이후 남과 북은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 (중략) 남한은 밖으로는 북진 통일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지리산 주변에서 활동하던 유격대를 토벌하고 좌익 활동가들을 색출하여 전향시키는 등 체제 정비 작업에 주력하였다. … (중략) 1950년 1월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은 중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선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한반도가 제외되었다(애치슨 선언). 이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치였다. (천재교육刊, 325페이지)

▲ 미군이 철수한 이듬해인 1950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 · 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맺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한국인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남한과 북한은 제각기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내세우고 서로 대립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42~343페이지)

▲ 냉전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무 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다고 선언하였다(애치슨 선언). 반면, 소련은 북한에 많은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여 군사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은 조선 의



제5차 소련 최고회의에 참석한 김일성(오른쪽 끝)과 박헌영(김일성 바로 옆의 안경 쓴 사람)(1949년 3월). 1949년 3월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을 면담한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과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에 대하여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물었다. ©NARA

용군 출신의 팔로군을 북한군에 편입시켜 주었다. 이렇게 한반도의 국내외적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남북 정부의 대립은 6 · 25 전쟁 이전에도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로 나타났다. (비상교육刊, 324페이지)

▲ 한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는 서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된 통일을 주장하였다. … (중략)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이런 대립을 부추겼다. 두 나라는 1948년 말에서 1949년 중반에 걸쳐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지만 군사적 ·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특히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 · 공 내전에서 승리한 후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스탈린과 마오쩌둥으로부터 전쟁 지원을 약속받았다. … (중략) 한편, 미국은 태평양 지역 방어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삼화출판사刊, 318페이지)

▲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행한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 (애치슨 선언 원문 생략) 이에 따라 한국과 중화민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6 · 25 전쟁의 발발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법문사刊, 323페이지 '애치슨 선언')

外勢를 업고 동족을 친 者

1948년 9월9일 북한 정권 수립 다음날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 발표에서 美蘇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와 '국토의 完整(완정)과 통일'을 주장했다. 김일성의 '국토 완정론'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이었다.

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과 회담했다. 이 때 김일성은 對南(대남) 무력침공 계획을 설명했다. 당시 스탈린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북한군이 남한군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면서 무력침공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탈린의 지원으로 김일성은 군 병력을 증대하고, 군 기계화 사단을 창설했으며 무기를 증강했다. 1949년 6월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김일성은 이듬해 신년사에서 "1950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완정, 조국통일을 위한 새 승리를 향하여 매진하자"고 호소하며 "적들에 대한 경각성 제고, 인민군대 · 경비대 · 보안대의 강화"와 더불어 "남조선 인민들과 유격대들은 이승만 정권 타도를 위해 총궐기"하라고 선동했다.

그해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極東(극동)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 본토-오키나와-필리핀 연결선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미국의 極東방위선에서 제외되자 김일성은 매우 고무되었다. 1950년 4월 스탈린을 다시 만난 김일성은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군은 궤멸될 것"이라며 남침 계획의 승인을 요청했다. 결국 스탈린은 南侵의 승인과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택동에게 전쟁 승인을 받았다. 6월10일에는 인민군 총참모장 姜健(강건)이 全 부대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으며, 6월18일에는 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이 전투태세의 최종검열을 명령했고, 6월23일에는 25일에 총공격(무력 남침)을 개시하라는 작전명령이 하달됐다. 비밀해제된 북한군부가 러시아語로 작성해 소련에 보낸 작전명령서, 정찰명령서를 보면 김일성의 전쟁 준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6 · 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무력 南侵 전쟁이었다. 스탈린 死後 소련의 국가원수를 지낸 흐루시초프는 회고록에서 '한국전쟁을 처음 제기한 것은 스탈린이 아니라 김일성'이라고 밝힌 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일단 무력침략을 개시하면 남한에서 대중봉기가 일어나 인민들은 李承晩의 통치에서 해방될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흐루시초프는 소련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서술했다. "마침내 예정된 시간이 되자 전쟁은 시작되었다. 전쟁은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북한은 남한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예언은 유감스럽게도 적중하지 않았다."

이상이 국내외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진 6 · 25 전쟁에 관한 사실이다.

2. 中共軍의 不法침략을 '참전'이라 표현

6種의 교과서 가운데 4種은 6 · 25 전쟁 당시 북한을 돕기 위해 한반도를 不法(불법) 침략한 中共軍(중공군 · 중국 공산군)을 서술하면서 일관되게 '참전', 또는 '파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은 국제사회(UN)의 승인을 받아 6 · 25 전쟁에 參戰(참전)한 UN군을 不法침략한 中共軍과 同格(동격)으로 놓은 것이다.

삼화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지학사刊의 4개 교과서는 中共軍, 또는 中國軍이란 표현 대신 '중국 인민 지원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인민 지원군'은 中國 공산당이 줄곧 사용해온 표현이다. 6 · 25 전쟁 당시 중국이 UN군과 공식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正規軍(정규군)이 군대가 아닌 '지원병'이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에서 유래됐다. 이러한 표현은 철저한 親共的(친공적) 서술이다.

특히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의 경우 321페이지 '사진과 지도로 보는 6 · 25 전쟁'에서 '전투 중에 사망한 중국 인민 지원군의 시신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射殺(사살)된 中共軍의 屍身(시신)을 게재해 마치 중국이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평양을 함락시키고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민 지원군**의 참전으로 퇴각하여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다. (삼화출판사刊, 319페이지)

▲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내주었고, 이어 수원이 함락되었다. 북한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은 계속 남진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병력과 장비를 정비하여 반격 태세를 갖추었고, 서울을 되찾았다. (법문사刊, 324페이지)

▲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전선은 크게 바뀌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되찾았다. 여세를 몰아 유엔군은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진출하였으나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한때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비상교육刊, 326페이지)

▲ 북한의 패전을 우려한 중국은 10월부터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학사刊, 277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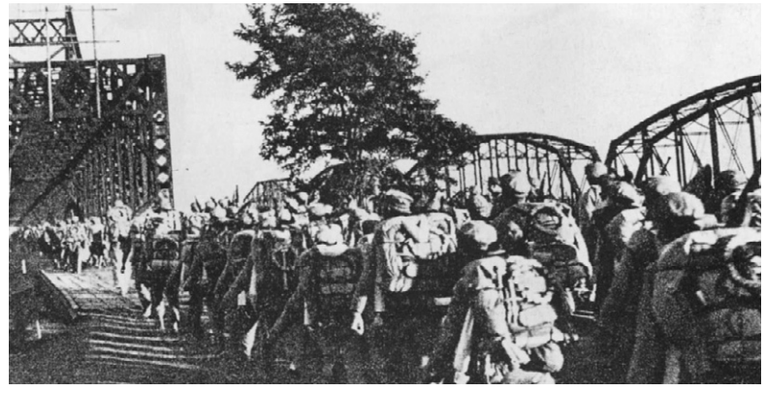
▲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중국군*의 대공세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여 1951년 1월4일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6 · 25 전쟁에 참여한 중국측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이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43페이지)

南韓 주도의 自由統一을 방해한 중국 공산당

6 · 25 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에 계속 밀리던 國軍은 UN군의 參戰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1950년 10월26일 압록강 근처 중국 국경까지 도달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다급해진 북한의 김일성은 강계로 임시수도를 옮겨놓은 뒤, 毛澤東(모택동)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대부분의 권리를 중국 공산당으로 넘겼다. 毛澤東은 스탈린과의 교감 하에 '自衛'(자위)와 '抗美'(항미)라는 명분으로 1950년 10월25일~1953년 7월27일 휴전 시까지 총 230만의 병력을 보냄으로써, 韓國 주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한반도 분단 고착의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은 1950년 11월4일 '抗美援朝(항미원조) 국토방위에 관한 전국 각 민주당파의 공동선언' 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中國人民의 抗美전쟁은 나라의 절실한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으며, 祖國(조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朝鮮人民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물론 中共軍의 실제적인 6 · 25 전쟁 不法개입의 이유는 지정학적인 脣亡齒寒(순망치한)의 방위론 이외에 여러 伏線(복선)이 깔려 있었다. 즉



압록강 다리를 건너 한반도로 침입하는 중공군. 국군과 UN군의 북진으로 통일을 눈 앞에 두고있던 1950년 10월19일, 중공군은 彭德懷(팽덕회)를 사령관으로 한 정규군을 한반도에 파병한다.

소련으로부터 무기 획득, 경제난에 직면한 국민들의 원성에 대한 국면전환, 國共內戰(국공내전) 때 북한군의 지원에 대한 보답, 미국의 대만 방위태도에 대한 불만 등 복합적인 이유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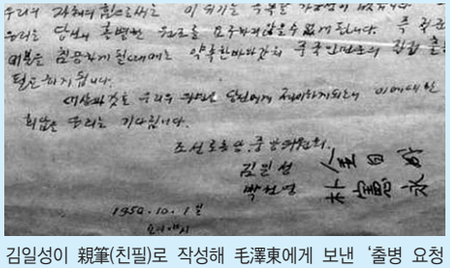
中共軍의 不法개입은 부분적이고 단순한 병력지원이 아니었다. 6 · 25 전쟁은 '공산혁명의 세계화' 라는 毛澤東과 스탈린의 신념이 지배한 理念(이념)전쟁으로, 중국은 長期戰(장기전)을 상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병력과 지원을 투입했다. 中共軍은 3년여 전쟁기간 중 2년 8개월 동안 6 · 25 전쟁의 戰線(전선)을 유지하는 공산 측 전투력의 주력군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휴전협정의 타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6 · 25 전쟁 종결까지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中共軍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도 1958년까지 약 25만 명의 병력을 북한에 주둔시켰다.

자료 김일성의 '중공군 한국전쟁 개입 요청' 편지

UN군 參戰으로 전황 불리해지자 毛澤東에게 군사지원 요청

1950년 10월1일 국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진격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戰況(전황)이 불리해지자 毛澤東에게 中共軍(중공군)의 '직접 출병'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원본은 현재 중국 당안관(문서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사본은 丹東(단동)의 '抗美援朝(항미원조)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 박헌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출병 요청 서한'(A4 용지 두 장 분량)의 제목은 '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으로 시작된다.

이 서한에서 김일성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는 우리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적들이 패전을 거듭해 남조선 최남부 협소한 지역에 몰리어 최후 결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의 군사적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그러나 "적들이 우리의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이용,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침공한다면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자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당신(모택동)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적군이 38선을 침공하면 '약속했던 대로'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공산당에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군사지원 요청을 받은 毛澤東은 "참전의 이익은 매우 크며 참전하지 않으면 손해가 클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19일 3만 명의 中共軍을 보내 남한 주도의 自由統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한반도를 不法(불법)침략했다.



김일성이 親筆(친필)로 작성해 毛澤東에게 보낸 '출병 요청 서한'의 마지막 단락이다. 김일성은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漢字를 사용하지 않았다.

[원문] "친애하는 모 동지시여… (중략) 적들이 금일 우리가 처하여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리용하여 우리에게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선을 침공하게 **되을** 때에는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써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갓치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당신에게 **제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金日成

박헌영 朴憲永

1950년 10월1일

펴야시

3. 인민군에 의한 학살 축소 · 비호

6種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과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6 · 25 전쟁의 과정을 기술하면서 인민군과 국군 · 미군을 同格으로 놓고, 이들이 모두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서술했다.

일례로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프랑스 공산당원 출신의 피카소(Pablo Picasso)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을 게재하고, 6 · 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희생당한 사람들이 남한의 保導聯盟員(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이라고 기술했다. 반면 인민군이 南侵(남침) 초기인 1950년 6월28일 서울을 점령한 시점에서 서울대 부속 병원으로 난입해 국군 부상자들을 포함해 일반인들까지 학살한 '서울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 6 · 25 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였다. 가장 먼저 희생당한 것은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 재소자들이었다. 이들은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 하에 대규모로 희생되었다.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치안대와 보도 연맹원 유가족과 인민군 등 좌익 측이 경찰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우익 인사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하는 일이 점령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북한 지역에서도 폭격과 상호 학살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전쟁의 비극은 상대에 대한 학살에 머물지 않고 자국민에 대한 협박과 보복으로 이루어졌다. … (중략) 전쟁이 남긴 상처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월북자 가족과 월남자 가족은 자신이 속한 체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차별을 피할 수 없었다. (천재교육刊, 327페이지)

▲ 전쟁에 따른 인명 피해도 엄청났고, 전쟁 중에 양측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인민군은 지주와 자본가, 군인 및 경찰과 그 가족들을 처형하였다.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국민 보도 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국군이 북으로 진격할 때는 다시 인민군에 협조하였던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인민군은 많은 수의 지식인과 정치인 등을 북으로 끌고 갔다. (삼화출판사刊, 322페이지)

▲ 미군, 민간인에게 발포하다

"발포하라! 모두 쏴 죽여라!"

저는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군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여덟 살이든 여든 살이든, 맹인이든 불구자든 미친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총을 쐈습니다. –미군 제7기병 연대 참전 군인 조지 얼리의 증언– (삼화출판사刊, 322페이지, '자료콕콕–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민군이 자행한 '서울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

1950년 6월28일 서울에 들어온 인민군은 숨어 있던 左翼들의 협조를 받아 경찰 · 군인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부상당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국군 장병들을 집단 학살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국군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총을 亂射(난사), 당시 인민군이 죽인 시민들의 시체가 혜화동 일대에 즐비했다고 전해진다. 후퇴하던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 후방에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自衛的(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

서울대 병원 영안실 옆 언덕배기에는 碑가 하나 세워져 있다. 1963년 6월20일에 건립된 '이름 모를 自由戰士의 碑' 의 碑文(비문)은 이렇게 새겨져 있다.

〈1950년 6월28일 여기에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시민이 맨 처음 울부짖은 소리 있었노라. 여기 자유 서울로 들어오는 이 언덕에 붉은 군대들이 침공해 오던 날 이름도 모를 부상병 입원 환자, 이들을 지키던 군인, 시민 투사들이 참혹히 학살되어 마지막 조국을 부른 소리 남겼노라. 그들의 넋은 부를 길이 없으나 길게 빛나고 불멸의 숲 속에 편히 쉬어야 하리. 겨레여 다시는 이 땅에 그 슬픈 역



6 · 25 당시 서울대 병원에서 북한군에게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 · 민간인들을 기리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비'

사를 되풀이하지 말게 하라〉

1950년 6월28일의 서울대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國防部(국방부)가 편찬한 《韓國戰爭史(한국전쟁사) 제1권》에는 6 · 25 전쟁 개전 초기 서울대 병원과 관련,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서울대학병원에는 약 100여 명의 아군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1개 소대의 아군 경비원들이 병원을 경비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敵이 시내로 들어오자 이들은 뒷산으로 올라가서 敵을 저지하다가 모두 전사하였다고 한다. 지휘관은 중령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지금까지 알 길이 없다. 敵兵(적병)들은 병실에 마구 난입하여 부상환자들에게 따발총으로 난사하는 蠻行(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가운데는 시민들도 끼어 있었는데 구별조차 하지 않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는 것은 天人共怒(천인공노)할 노릇이다〉

보도연맹원들이 우리 軍警(군경)에 희생된 것은 1950년 7~9월의 일이다. 서울대병원 학살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는 것은 사실 날조이다. 보도연맹 사건은 南侵한 공산군과 남한 좌익들이 軍警 가족과 부상병을 학살한 게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인민군과 좌익이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했다' 는 설명은 마치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학살이 이뤄진 것처럼 誤認(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6 · 25 전쟁 당시 보도연맹원들 중에는 左에서 右로 완전히 전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에게 사살당한 인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戰亂(전란)의 참화 속에서 그것을 구분할 여유도 없었고, 애초에 김일성이 南侵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들이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서는 인민군 치하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이 국군의 학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거짓말을 해 인민군의 만행을 두둔했다.

4. 6 · 25 參戰 결단한 트루먼, 인천상륙작전의 英雄 맥아더 언급 배제

6種의 교과서는 6 · 25 전쟁을 서술하면서 공산집단의 침략에 맞서 미군의 신속한 참전을 결단한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당시 軍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맥아더 장군에 대한 언급을 배제했다. 비상교육과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 경우 트루먼과 맥아더에 관한 기술이 全無했다. 左편향 정도가 가장 심한 천재교육刊에는 트루먼과 맥아더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 있었다. 그 내용은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원자 폭탄 사용을 주장하였지만, 전쟁의 확대를 우려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이를 거부하였다"(326페이지)는 것으로 맥아더 장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됐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의 경우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기술이 全無했다. 단지 '6 · 25 전쟁의 배경'(319페이지) 및 '사진과 지도로 보는 6 · 25 전쟁'(320페이지)에서 맥아더 장군을 각각 한 차례씩 언급했을 뿐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안에 서명하고 있다. 트루먼은 미국 全域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산제국주의와 맞설 것을 촉구했다(1950년 12월16일). 이 결정은 한국전에서 중공군이 밀고내려 오는 데 따른 조치였다. ©NARA

법문사刊도 트루먼에 대한 기술이 全無했다. 맥아더에 대해서는 '6·25 전쟁의 전개'(323페이지)를 기술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소개했다.

지학사刊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남침과 국군-유엔군의 반격'(277페이지)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수복하였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게재됐으나, 트루먼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5000만 民族의 구원자, 트루먼

1950년 6월25일 북한의 南侵(남침)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1960년대 초에 월남式으로 赤化(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駐韓美軍(주한미군)이 철수하고 韓美동맹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연 150만 명의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 우리를 구해주었던가? 美 군부는 한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주한미군을 1년 전에(1949년) 철수시켰는데, '누가' 美軍을 보내 5만 4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는 血戰(혈전) 끝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국민들'을 공산침략으로부터 구출했던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1950년 6월25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전면 南侵을 감행했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1884~1972)은 휴가 중이었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번 사태는 전면적인 대규모 군사행동"이라며 6·25 발발 사실을 알리자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딘, 그 자식들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지해야 합니다(Dean, we'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트루먼의 6·25 參戰(참전) 결정은 1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결단으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 5000만 명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트루먼의 이 같은 결단은 그가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스탈린의 소련을 지원하고 있을 때도 그는 루스벨트나 국무부 고관들처럼 소련과 공산주의에 속지 않았다. 그는 스탈린과 히틀러는 똑같은 독재자라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스탈린도 히틀러나 알 카포네 같이 믿을 수 없는 자"라고 했다.

트루먼은 미군을 투입하여 한국을 지켜내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 당시 美 군부는, 한국은 미국이 싸워서까지 보호할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는 곳이란 판단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트루먼의 派兵 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 번 더 한국을 구했다. 1950년 10월, 수십만의 중공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와 대공세를 펴고 UN군이 후퇴하게 되자 맥아더 사령관은 만주 폭격, 중국 해안 봉쇄, 蔣介石 군대 투입, 原爆 사용 검토 등을 요구하였다. 트루먼은 그렇게 되면 소련이 개입,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맥아더의 건의를 거부했다. 맥아더는 "그렇다면 한국에서 철수, 일본만 지키자"고 했다. 영국 에틀리 수상도 美英 정상회담에서 한국 포기를 건의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우리를 믿고 싸웠던 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트루먼은 맥아더에게 "싸우다가 져서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포기해선 안 된다"고 엄명했다. 교통사고로 죽은 워커

美 8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부임한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반격 작전을 지휘, 서울을 수복하고 전선을 38선 부근으로 밀어올림으로써 한국은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

맥아더의 神話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장군(1880~1964)은 6 · 25 남침 나흘 뒤인 29일 오전 자신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왔으며, 차로 한강변까지 올라가 전황을 살피고 전략을 구상했다. 그 역시 지상군 투입 없이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를 합참에 건의했다.

맥아더는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는 공식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38선 이북 지역 폭격을 명했다. 7월1일 그는 24사단 소속 스미스 대대(540여 명)를 한국으로 파견하여, 정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스미스 부대는 7월5일 오산 북방 죽미령에서 10여 대의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 병력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첫 전투에 돌입했다. 평시라 전투 훈련을 등한시했던 美 24사단은 오산과 조치원 전투에 이은 7월20일의 대전 전투에서도 연패했으나, 일본 주둔 제1기갑사단과 25사단 병력을 상륙시켜 낙동강 전선을



인천의 적색해안에 상륙한 美 해병대 5연대 1대대와 2대대, 한국 해병 1연대 3대대 병사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방파제를 기어오르고 있다(1950년 9월 15일) ⓒUS Army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맥아더가 땅보다 시간을 필요로 했었음을 생각할 때, 비록 패배했으나 딘 소장의 24사단은 나름대로 임무를 수행한 셈이다. 딘 소장은 낙오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

낙동강 전선 상황 악화로 워커 중장이 사령부의 부산 이전을 건의하자, 맥아더는 7월27일 대구를 방문해 사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워커 장군은 맥아더의 결의를 받들었다. 이틀 후, 워커 장군은 킨 25사단장 및 참모들에게 "더 이상의 후퇴나 철수 또는 방어선 재조정은 없다. 우리 뒤에는 물러설 곳이 없다. '덩케르크'나 '바탄' 철수는 없다. 부산으로의 후퇴는 역사에 남을 대 살육이 될 것이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비장한 사수명령을 내렸다.

낙동강 전선이 위태로운 중에도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 구상을 그대로 추진했다. 1950년 9월15일 맥아더 장군은 敵의 의표를 찌르는 인천상륙을 감행하여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켰다. 10월1일 UN군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했으며, 10월19일 평양을 점령했다. 맥아더는 북진을 계속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한 후, 미군 장병들이 크리스마스까지는 귀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의 武力(무력)개입 가능성과 규모를 過小評價(과소평가)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가 강행한 UN군의 11월 말 총공세는 중공군의 반격에 걸려 좌절되었다. 美 1기갑사단은 운산 전투에서, 美 2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그리고 美 1해병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고전했다. 중국의 불법 개입은 인천상륙으로 치솟은 맥아더의 명성에 큰 타격을 가했다. 맥아더는 '새로운 전쟁' 대처 방안을 놓고, 확전을 우려한 대통령 및 합참 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1951년 4월11일 맥아더는 UN군 사령관직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다

음날 리지웨이 장군이 지휘권 인수를 위해 동경에 도착했다. 미국 국민들은 쓸쓸히 귀국한 맥아더를 전쟁영웅으로 열렬히 환영했다. 미국을 비롯한 UN 참전국(전투부대 파견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이 6 · 25 전쟁에서 치룬 엄청난 인명 피해를 기억해야 한다. 워커 美8군 사령관도, 벤플리트 사령관의 아들도 전사했다. 하버드대 졸업생 17명도 죽었다. 미국은

6 · 25 전쟁 의료지원 및 시설파견국 : 5개국 (단위: 명)

국명	참전규모		
	참전延인원	근무인원	지원부대 및 시설
스웨덴	1,124	170	적십자 병원
인도	627	70(333)	제60야전병원
덴마크	630	100	병원선
노르웨이	623	105(109)	이동 외과병원
이탈리아	128	72	제68적십자병원
계	3,132		

※ 참전 규모의 병력은 전쟁 말기 최대 수준을 유지한 병력(1953.7)
※ ( ) 내의 병력은 전쟁 말기가 아닌 최대 수준을 유지한 병력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 전쟁 통계' 중

6 · 25 전쟁 UN軍 인명 피해 (단위: 명)

국명	계	전사 ·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미국	137,250	36,940	92,134	3,737	4,439
영국	4,908	1,078	2,674	179	977
오스트레일리아	1,584	339	1,216	3	26
네덜란드	768	120	645	–	3
캐나다	1,557	312	1,212	1	32
뉴질랜드	103	23	79	1	–
프랑스	1,289	262	1,008	7	12
필리핀	398	112	229	16	41
터키	3,216	741	2,068	163	244
타일랜드	1,273	129	1,139	5	–
그리스	738	192	543	–	3
남아프리카공화국	43	34	–	–	9
벨기에	440	99	336	4	1
룩셈부르크	15	2	13	–	–
콜롬비아	639	163	448	–	28
에티오피아	657	121	536	–	–
노르웨이	3	3	–	–	–
UN군 합계	154,881	40,670	104,280	4,116	5,815
한국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 전쟁 통계' 중

3만 6940명 이상, 영국은 1078명, 터키는 741명, 호주는 339명, 캐나다는 312명, 에티오피아도 121명의 전사자를 냈다.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미래 세대에 '背恩忘德'(배은망덕)을 가르친다.

자료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킨 '국군 병사'

"옛!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 수원비행장에 내린 6월 29일. 수행원을 대동하고 고지에 올라선 맥아더 장군은 한강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서울 남산과 그 주변 일대를 한참동안 망원경으로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근처의 참호로 걸어갔다.



맥아더 원수가 한국 戰線(전선)을 시찰하고 있다(1950년 6월29일). 맥아더는 시찰 후 '美 해 · 공군뿐 아니라 육군의 투입이 있어야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US Army

그곳 개인호 안에는 한 병사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의 질문과 이에 대한 병사의 자신감과 사명감에 넘친 답변은 맥아더 장군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고, 그로 하여금 미국 지원군을 한국전장에 신속히 투입할 결심을 하게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맥아더 장군: 자네 언제까지 그 壕(호)속에 있을 것인가?

국군 병사: 옛!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 그 명령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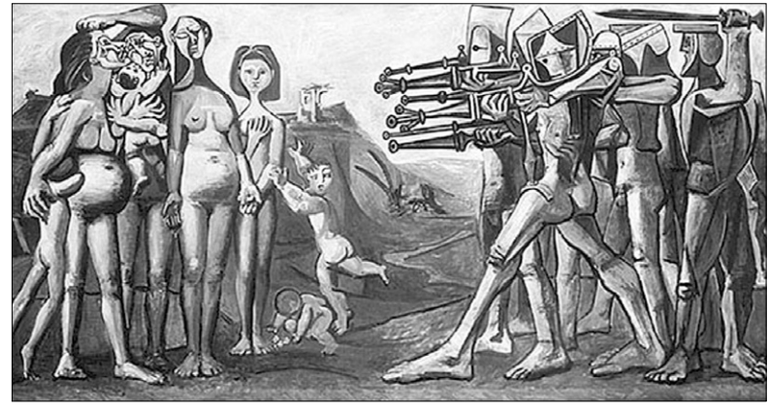
국군 병사: 옛!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 오! 장하다! 자네 말고 다른 병사들도 다 같은 생각인가?
국군 병사: 옛! 그렇습니다. 각하!
맥아더 장군: 참으로 훌륭하구나! 여기 와서 자네 같은 군인을 만날 줄은 몰랐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국군 병사: 옛!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놈들의 전차와 대포를 까부술 수 있게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맥아더 장군: 음! 그리고 또 없나?
국군 병사: 옛! 없습니다.
맥아더 장군: 알았네, 여기까지 와 본 보람이 있었군.

이때 맥아더 장군은 병사의 손을 꼭 쥐고 나서 통역을 맡고 있던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령! 이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출처: 《정일권 회고록》)

5. 피카소의 反美선동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소개

미래엔컬쳐그룹刊 교과서는 8단원 '그 때 그 사건'에서 다음 설명과 함께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1951년 作 '한국에서의 학살' (Massacre in Korea)을 실었다.

에스파냐의 화가 피카소는 6 · 25 전쟁 중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림을 그렸다.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맨몸의 여성과 어린아이를 총과 칼로 공격하는 모습은 전쟁의 참상과 공포, 인간성 파괴 등을 표현하고 있다. 6 · 25 전쟁 중 북한 측은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행했고, 남한 측은 수복한 지역에서 북한군에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협조한 부역자를 처벌하였다. 점령과 수복의 과정에서 처벌과 보복이 자행되어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경남 거창, 충북 영동의 노근리, 황해도 신천 등지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 (344페이지)

피카소와 공산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카소는 1944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공산당에 入黨(입당)한다. 그는 공산당 기관지 〈New masses〉와의 인터뷰에서 "공산당 입당은 나의 논리적 귀결이다. 나는 진정한 혁명가로서 그림을 위해 항상 투쟁해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공산당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리학자 폴 랑주뱅, 시인 폴 엘뤼아르, 루이 아라공 등과 함께 공산당에 입당해 활동했다. 노동절에는 노동조합원들과 街頭(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으며, 공산당 창당 30주년 축하를 위해 비둘기를 안고 있는 사람을 그려주기도 했었다. 피카소의 그림이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이용된 것이다.

美, 공산당원인 피카소의 입국 不許

1950년 3월, 美 정부는 프랑스 공산당원인 피카소가 '평화빨치산 세계총회' 란 단체의 대표 12명을 이끌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것을 入國(입국) 금지시켰다. FBI(연방수사국)는 피카소를 안보에 危害(위해)한 공산주의자로 분류, 그가 죽을 때까지 감시 파일을 유지하였다. '평화빨치산 세계총회' 는 소련공산당 간부 주다노프가 조종하던 공산당의 선전 조직이었다. 피카소가 美軍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실제로 이런 학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을 '한국에서의 학살' 이란 제목의 그림에 담은 것은 訪美(방미)가 좌절된 이듬해였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이 그림을 反美 선동에 악용했다. 이 선동 그림은 미국에서 그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적으로도 惡評(악평)을 받았다. 미국이 공산당원 피카소를 入國금지시켰다고 해서 미국을 욕하는 이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술이 반역의 면허증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예술엔 國境(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엔 國境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피카소는 1944년에 프랑스 공산당에 들어가 1973년 죽을 때까지 열성당원이었다. 수백만 프랑도 기부했으며 黨 선전에 필요한 그림도 그려주었다. 그림 '비둘기' 는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공세에 악용되었다. 소련과 中共(중공)의 우표에도 실렸고 휴전회담 때 판문점에도 등장했다. 6、25 전쟁 이후 휴전을 담당했던 조지 클라크 장군(前 UN군사령관)의 회고록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FROM THE DANUBE TO THE YALU)》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정각 美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北의 남일 중장이 커다란 나무건물 안(판문점 안에 있던 휴전협정 조인식이 이뤄진 건물을 뜻함)에 앉았다. 북한 공산군은 평화의 상징임을 선전하고자 피카소의 '비둘기' 그림으로 내부 전체를 꾸미려 했다. 나는 도쿄에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해리슨 장군에게 전화해 "공산당의 속임수를 상징하는 그림을 없애지 않는다면 저들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북한군이 점령지에서 행한 학살을 '인민재판' 이라고만 표현, 마치 적법한 재판을 거친 것처럼 誤導(오도)했다. 양민학살이 이뤄졌다는 地名(지명)에서도 북한군과 좌익들에 의한 학살지(서울대 병원, 대전형무소, 전라남도 등)는 제외했다. '신천대학살' 이란 미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북한 정권이 창작한 거짓말이다.

>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치안대와 보도연맹원 유가족과 인민군 등 좌익 측이 경찰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우익 인사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하는 일이 점령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북한 지역에서도 폭격과 상호 학살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전쟁의 비극은 상대에 대한 학살에 머물지 않고 자국에 대한 협박과 보복으로 이어졌다. …거창 사건과 노근리 사건처럼 민간인들이 군사 작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327페이지)

교과서의 이런 악질적인 서술에 등장한 피카소 그림을 전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정부가 좌익 정권이 아니라면 이 그림이 실린 과정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反국가적 교과서를 채택, 학생들이 조국에 원한을 갖도록 만드는 亡國的(망국적)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 인민군과 左翼에 의한 민간인 학살 통계

김일성의 지시 "국군 장교와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6 · 25 전쟁 당시 인민군과 左翼(좌익)에 의한 학살 유형은 주로 非무장한 敵에 대한 대량의 보복 처벌이었으며 그 형태는 대개 '인민재판' 혹은 '처형'의 형태를 취했다. 특히 인민군 점령지역에서는 인민군의 전폭적 후원을 받은 지방 左翼들이 右翼 인사와 그 가족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죽창이나 칼, 낫과 같은 원시적 무기를 사용해 학살을 자행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의 경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경찰이나 군인, 이들의 가족들을 체포해 그 자리에서 인민재판에 회부했다. 체포를 거부할 시에는 즉결처형을 했다. 인민군은 공무원, 군, 경찰, 학자 등 소위 인텔리 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학살했다.그 대상에는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었고, 반동분자로 낙인찍히면 가족은 물론 먼 친척까지 몰살당했다. 1950년 9월20일 김일성은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살려둔 수감인사들에 대한 '제거 조치'를 전체 점령지역의 행정기구에 하달했다. 후송을 하되 후송 곤란 시에는 즉결 처치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군량미도 다 떨어져가는 상황에 인민군이 민간인을 먹이고 재워가며 후송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상 '전면적 학살'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6 · 25 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작성일 1952년 3월31일)에는 5만 9964명의 피살자 명단이 실려 있다. 이 명부는 凡例(범례)에 "6 · 25 사변 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잔인무도한 괴뢰도당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면서 대상을 "軍警(군경)을 제외한 非전투자에 한하였다"고 밝혀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의 명단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지역 피살자만 4만 3511명(전체의 72.6%)

명부에는 5만 9964명의 피살자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 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5603명), 충청남도(3680명), 경기도(2536명), 서울시(1383명), 강원도(1216명) 순이다. 그 외 경상남도 689명, 충청북도 633명, 경상북도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군은 후퇴 도중 대전형무소에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 땅에 마구 파묻었다.

전체 피해자 중 남자는 4만 4008명, 여자는 1만 5956명이었다. 여성 피살자 중 1만 946명이 전남 지역에서 피살됐다. 피살자가 집중된 전남 지역에서도 특히 영광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남 지역 피살자 4만 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만 1225명이 영광군에서 피살됐다. 영광 지역에서의 여성 피살자는 전국 여성 피살자의 절반에 가까운 7914명이다. 전북 지역 피살자 5603명 가운데 2364명이 피살된 고창은, 행정구역 상 전북에 속해 있지만 영광과 이웃해 있는 지역이다. 전남 지역에서도 영광과 이웃한 郡인 나주(3596명), 장성(4306명), 함평(1954명) 등지에서 피살자가 많았고 영암 지역에서도 7175명이 피살됐다.

이외에도 6 · 25 전쟁 기간 중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 중 하나는 종교인들이었다. 6 · 25 당시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목사 · 신부 · 장로 · 수녀들은 신원이 밝혀진 사람만 174명에 달한다. 인민군이 퇴각하며 납북된 종교인들도 18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전남 영암읍 교회사건 등 3개월 이하의 북한 인민공화국 치하 동안 조직적으로 전개됐다. 전남 영암읍 교회에서는 신도 24명이 집단 학살됐고, 옥구에서도 20여 명의 신도가 학살됐다. 전남 서쪽 바다에 있는 임자도에서는 150여 명의 양민과 교인이 학살됐고, 충남 논산 병촌교회에서는 한 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육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60여 명의 교인들이 학살됐다.

인민군, 평양 칠골리에서만 2500여 명 학살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자 인민군은 北으로 후퇴하면서 북한 지역에서도 숱한 학살극을 벌였다. 김일성은 6 · 25 남침 때 북한 내 불순분자 색출을 모

토로 예비검속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성분조사는 악명 높은 '정치보위부'에서 실시했다. 김일성은 美軍이 압박해 들어오자 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다. 국군과 미군의 평양 입성 후에야 확인된 사실이지만 김일성의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새끼줄로 묶어 총살한 뒤 시체를 우물 속이나 창고, 방공호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평양의 칠골리에서 2500여 명, 평양 승호리 인근의 사도리 뒷산에서 4000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평양의 기림 공동 묘지터와 용산 공동묘지에서도 학살이 있었다. 함흥에서는 함흥감옥에서 700명, 충령탑 지하실에서 200명, 정치보위부가 있는 3곳의 지하실에서 300명, 덕산의 니켈 광산에서 6000명, 반룡산 방공굴에서 8000여 명이 학살당했다. 또한 함흥시에서만 모두

(1) 한국군 및 UN군 인명 피해 (단위: 명)

구분	계	전사	부상	실종 · 포로
계	776,360	178,569	555,022	42,769
한국군	621,479	137,899	450,742	32,838
UN군	154,881	40,670	104,280	9,931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3권), 2005, 144페이지

(2) 육 · 해 · 공군 전사 · 사망, 실종자, 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육군	해군(해병포함)	공군
계	608,104	598,884	9,082	138
전사 · 사망	137,899	135,858	1,903	138
실종자	19,463	19,392	71	–
부상자	450,742	443,634	7,108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33~34페이지

(3) 육 · 해 · 공군 전사 · 사망, 실종자, 부상자 현황(1950년 6월25일~1953년 7월27일)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총계	990,968	244,653	128,936	229,625	84,532	303,212
서울	129,908	29,628	8,800	34,680	20,738	36,062
경기	128,740	39,728	7,511	25,479	16,057	39,965
충북	70,003	24,320	3,409	12,658	6,312	23,304
충남	75,409	23,707	5,561	20,290	10,022	15,829
전북	91,861	40,462	14,216	15,364	7,210	14,609
전남	193,788	14,193	69,787	52,168	4,171	53,469
경북	97,851	35,485	6,609	21,061	7,584	27,112
경남	72,306	19,963	6,099	32,417	1,841	11,986
강원	130,777	17,122	6,825	15,483	10,528	80,819
제주	325	55	119	25	69	57

출처: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5, 212~213페이지

1만 2000여 명이 퇴각하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학살당했다. (《자유공화국 최후의 날》, 《지옥유폐 130일-원산 대학살 사건의 전모》, 박계주 著)

1955년판 《대한민국 통계연감》은 6 · 25 전쟁 당시 학살 당한 인원이 12만 8936명이고, 납북자가 8만 4532명, 전쟁 중 사망자는 24만 4653명이라고 밝혔다.

대량 학살 책임을 보여주는 김일성의 발언 및 지시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 도피분자, 妖言(요언) 전파 분자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밀정 및 파괴분자를 적발, 가차 없이 숙청하고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 (1950년 6월26일, 방송을 통한 김일성의 지시하달, 《남북한 관계 사료집》 22권)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라." (1950년 6 · 25 남침 직후 서울 시내에 뿌려진 김일성의 선동문, 《꽃피는 산하 - 6 · 25의 흔적을 찾아서》, 1980년, 전라북도경찰국) ▲"국군 장교와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면장, 동장, 반장 등은 인민재판에 부친다." (1950년 6월30일 포고문, 〈정치범은 자수하라〉와 〈반동분자 처리지침〉) ▲"숨어 있는 반동도배들이 자수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반동분자들과 투쟁하지 않는 경향이 당일꾼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현상은 극렬히 비판해야 한다." (1951년 1월21일, '적에게 일시 강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가입하였던 자들을 처리함에 관하여'라는 군사위원회의 결정 3개항을 설명하면서) ▲"악질반동에 대해 복수하려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195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한반도 분단의 재인식》, 양호민 著, 1993년, 도서출판 나남)

6. 建軍이 建國의 초석

6種의 교과서는 建軍(건군) 관련 내용을 기술하면서 建軍 또는 創軍(창군) 등의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創軍을 소개한 교과서도 지학사와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도 創軍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는 6 · 25 전쟁을 서술하면서 백선엽 · 김종오 장군과 같은 전쟁영웅에 대한 소개가 全無했으며, 國軍이 大勝(대승)을 거둔 '다부동 전투', '용문산 전투', '영천 전투'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았다.

祖國과 民族의 방패, 대한민국 國軍

"한국군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들은 요람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공산 침략자의 공격을 받고 무참히 짓밟혔다. 그러나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들의 조국 수호에 대한 투혼과 천부적인 자질은 이 참담한 荊棘(형극)을 딛고 일어섰다. 우리는 이 우수한 군대를 자유 수호의 역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From the Danube to the Yalu)》, 마크 W. 클라크 前 UN군 총사령관 著)

일각에서는 國軍의 정통성을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대한민국 國軍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역사 단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신생독립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군의 始原(시원)은 '조선국방경비대'(육군의 전신, 이하 경비대)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가을 美 군정 당국은 해방 정국의 치안 유지와 난립하는 사설 군사 단체로 인한 불안을 해소키 위해 경찰을 포함하는 한국인 경비대 창설을 추진했다. 이에 1945년 11월13일 군정법령 제28호가 공포됐고 '국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軍 창설 준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美 군정은 급선무였던 기간요원 양성을 위해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했다. 1945년 12월5일 개교한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5월1일 그 후신인 '경비사관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건군 주역 110

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출신별로 보면 일본군 출신 87명, 만주군 출신 21명, 중국군 출신이 2명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국방군 창설 계획을 보류시키게 된다. 이에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당면한 치안 유지를 위해 현지 사령관 재량 하에 소위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 규모를 줄인 경비대 창설을 추진해 1946년 1월15일 조선국방경비대를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것을 시작으로 대전 · 이리 · 광주 · 부산 · 대구 · 청주 · 춘천에 2연대~8연대가, 11월16일 제주도가 道로 승격됨에 따라 9연대가 창설됐다. 경비대는 1947년부터 본격적인 증편이 이뤄져 정부 수립 때까지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강돼 규모의 군대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6 · 25 직전 육군 총병력, 8개 사단 9만 5000여 명

이 과정에서 유학생을 미국에 파견해 中堅(중견)간부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는데, 1950년대 말까지 1만여 명이 美 군사학교에 유학했다. 1948년 8월15일 國父(국부) 李承晩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이 建國되고 국군이 창설됨에 따라 경비대는 國軍에 편입됐으며, 경비대에 입대하지 않은 광복군 · 일본군 · 만주군 군사경력자들과 남북한의 순수 민간인 출신들이 대거 입대했다. (정부 수립으로 경비대는 육군과 해군으로 개편되고, 1949년 10월1일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 독립함으로써 현대적인 3군 체제로 정립됐다)

이와 함께 1948년 11월에는 국군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같

은 해 12월15일 국방부에는 참모총장, 육군본부에는 총참모장과 참모부장을 보직하게 되어 초대 육군총참모장에는 이응준 준장, 참모부장에는 정일권 대령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1948년 12월에는 兵科制度(병과제도)를 창설, 보병 · 포병 · 기갑 · 통신 · 항공 · 병참 · 경리 · 감찰 · 군의 · 헌병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 참모제를 제정하는 한편 1949년 5월에는 국방부 참모총장제를 폐지하고 육 · 해군의 지휘를 국방부 장관(초대 국방장관 이범석)이 관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편제상 종전의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제7 · 8사단을 추가로 창설했으며,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護國軍(호국군) 및 각 지구 병사구 사령부를 조직했다. 이에 따라 1950년 6 · 25 직전까지 육군의 총병력은 8개 사단 9만 5000여 명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창군 과정에서 군내에 잠입한 공산주의자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허위선전과 모략으로 부대 내 좌익세력들과 함께 폭동을 획책했다. 이러한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1948년에 제주4 · 3사건을 시작으로 여수 · 순천 반란사건, 대구 6연대사건 등이 터졌다.

이에 軍은 미처 자체조직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동진압을 위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작전을 수행했다. 또한 군내 자체 정화를 위한 肅軍(숙군)작업을 단행, 1948년 10월부터 6 · 25 전쟁 직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300여 명에 달하는 불순분자를 색출했다.

6 · 25 발발 이후 反共정신으로 뭉친 國民 입대 쇄도

이런 가운데 북한은 6 · 25 남침을 앞두고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유격대를 침투시켜 지리산 · 오대산 · 태백산 지구에서 殘存(잔존)공비와 합세, 후방을 교란시켰고 1950년도 초부터는 38선상에서 빈번히 무력충돌을 야기했다. 이에 軍은 태백산 · 지리산 및 호남지구에 공비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소탕 작전을 전개했으나 미처 작전을 종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6 · 25 남침을 당하게 됐다. 전쟁 발발 전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현저했다. 남한은 일반 병력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기계화 · 특수부대를 망라해 19만 8000여 명이었다.



UN安保理는 1950년 6월27일 유엔군 한국 派兵문제를 표결, 9개국의 지지로 참전을 결정했다. 거부권을 가진 소련대사는 불참, 그 자리가 비어있다.

국군은 전차가 1대도 없었고 인민군은 242대나 됐다. 연습 · 연락기만 22대였던 국군과 달리 인민군은 전투기 · 전폭기 등 21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저한 전력 격차 속에서 전쟁은 총력전 양상을 띠었다. 反共(반공)정신으로 뭉친 국민들의 입대가 쇄도했다.

7월 초 바로 학도의용군 약 30여 만 명이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들 중에는 여자 학도의용군 심지어 재일교포 학도의용군도 있었다. 소년지원병 3000여 명이 낙동강으로 달려가 분전했고, 만 17~40세의 장정 30만 명이 국민방위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부족한 미군 병력을 메운 카투사(KATUSA) 장병 4만 3000여 명이 미군과 함께 장진호 · 군우리 · 펀치볼 등의 전선을 누볐다. 지게부대인 한

국노무단(KSC) 30여 만 명은 전선의 보급대원이 됐다. 국군과 UN군 통제 하에서 유격부대도 운용됐는데, 호림부대를 비롯, 명 · 백봉부대, 백골병단, 동키부대와 울프팩 예하의 유격부대, 그리고 제8240 · 8250부대 등이 그들이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통해 국군 정원 63만 명 확정

여자 의용군이나 일반 주민들도 무장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전세의 전환은 UN군의 참전으로 이뤄졌다. 국제적 연대에 의한 연합전력은 적어도 전선의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고, 바로 국군의 전투력 증강으로 연결됐다.

한편, 미국은 '밴 플리트 계획'으로 명명된 국군 확장계획을 클라크(Mark W. Clark, 前 UN군 총사령관) 대장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1954년 11월 무렵에 육군 66만 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등 72만 명의 대군으로 늘어났다.

무기와 장비도 육군은 M-36 전차나 155㎜ 곡사포를, 해군은 전투용 함정 50척을, 공군은 F-51 무스탕 전투기 80대를 갖추게 됐다. 특히 정전 이후 '韓美상호방위조약' 안에서 미군 철수와 현대화를 전제로 國軍 정원이 63만 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 합리적인 지휘관리를 위해 최초의 야전사인 제1군사령부(사령관 백선엽) 창설을 필두로 후방지원의 제2군사령부와 교육훈련 전담의 교육총본부를 창설해 육군의 軍 구조를 정비했다.

이로써 1960년 기준으로 육군은 제1군(5개 군단 18개 사단), 제2군(4개 군관구, 10개 예비사단,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군수기지사령부로 재편됐고, 해군은 제1함대를 대한민국 함대로 증편 2개 전단 2개 전대로, 해병대는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1개 여단으로, 공군은 제트화를 추진한 제10전투비행단과 제11전투비행단 등을 구비한 전술 공군체제로 발전했다.

6 · 25 전쟁기간 동안 국군은 창군요원의 29%를 포함, 25만 7000여 명의 희생을 통해 국가를 수호했으며,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작전 수행 시 북한 주민의 약 절반인 400만 명이 국군을 따라 피난길에 나섬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정통 정부' 임을 입증했다.

특히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가운데서도 국군은 수백 만 명에 달하는 북한 피난민의 보호활동을 전개해, 군 철수작전 수행에 지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피난민을 흥남부두에서 10만 여 명, 성진부두에서 1만 여 명을 군 수송선에 태워 철수시켰다.

또한 해군은 미리 확보해 둔 백령도 · 명천양도 등지를 근거로 서해안에서 6만여 명, 동해안에서 수만 여 명의 피난민 구출작전을 전개해 국군이 '國民의 軍隊'(군대)임을 입증했다.

7. 5 · 16 군사혁명의 업적 貶下

6種의 교과서 중 미래엔컬처그룹, 비상교육,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朴正熙 주도의 5 · 16 혁명을 기술하면서, 무능했던 張勉(장면) 내각을 옹호하고 국가 도약의 출발점인 5 · 16을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이 가운데 비상교육,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의 경우 5 · 16 혁명 이후 시행된 여러 정치 · 경제 · 사회 개혁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 장면 정부가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를 축소하려 하자 일부 군인 세력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들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1961년 5월16일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장악한 후 전국에 계엄을 내렸다.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부정부패의 일소를 내세우면서 부패 공직자와 폭력배를 처벌하였다. 또한 민생 안정책으로 농가 부채 탕감,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화폐개혁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비상교육刊, 351~352페이지)

▲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 활동 정화법 · 반공법을 제정하여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진보적 지식인과 노조 및 학생 간부들을 혁명 재판에 회부하였다. … (중략) 또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통화 개혁을 단행하고 농가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이러한 정책들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삼화출판사刊, 350~351페이지)

▲ 장면 내각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와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등을 단행하였고, 군비 축소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분열 · 대립하였다. **이를 틈타 평화 통일 운동과 군비 축소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군인들이 5 · 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1961)**. 이로써 4 · 19 혁명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장면 내각은 9개월 만에 그 뜻을 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61페이지)

박정희 少將은 왜 혁명했나?

6 · 25 전쟁 이후 李承晩 정부는 전쟁 피해의 복구와 자립적 국가경제 건설에 노력했다. 그러나 국내자원이 빈약하고 축적된 자본이 없는 가운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1958년 이후 미국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 도중 파안대소하는 박정희 의장(1962년 1월22일).

경제성장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80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할 기반으로서 시민사회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집권 自由黨(자유당)의 부패로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6 · 25 전쟁을 거치면서 軍部(군부)는 한국에서 다른 사회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잘 조직된 집단으로 성장했다. 당시 國軍 장교단 약 6만 명 가운데 약 10%가 渡美(도미)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율은 당시 외무부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1950년대의 정체와 혼란 속에서 '祖國(조국) 근대화'의 강렬한 포부를 지닌 젊은 장교들은 혁명의 기회를 모색했다. 4 · 19 이후 軍部에서는 영관급 장교들이 3 · 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거나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요구가 거부되자 이들은 군부에서 청렴한 이미지로 명망을 얻고 있던 朴正熙 소장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國軍 장교단의 혁명 계획은 4 · 19 이후 정치 · 사회적 혼란이 심화하

자 더욱 탄력을 받았다. 1961년 5월16일 朴正熙를 지도자로 하는 5 · 16 혁명은 이처럼 근대화의 지체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심한 정치 ·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했다.

朴正熙 주도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

5 · 16 혁명은 祖國 근대화라는 국민적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舊정치 세력과 그에 도전한 급진이념의 정치 세력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추를 장악한 일대 변혁이었다. 30~40대 인물들로 구성된 새로운 통치 집단은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웠다. 유능한 國軍 장교단은 당시 객관적인 현실에서 경제발전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민적 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6 · 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출신으로서 성급한 통일운동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을 확신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顚覆(전복)했다는 점에서 소위 민주화 세력의 지속적인 도전과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멍에를 안은 채, 혁명세력은 군인 특유의 추진력과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1961년 이후 35년간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1961년 82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87년에는 3218달러로 급성장하고,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기적적 성장이었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국인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 일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8. 광주사태 서술하면서 계엄군만 집중 비판

6種 교과서 중 지학사를 제외한 5種의 교과서는 광주사태를 서술하면서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사실 왜곡 및 계엄군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사건의 因果關係(인과관계)를 기술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지만 민주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 사이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이 1979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중략)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가장 격렬하게 맞선 것은 광주의 학생과 시민이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 부대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의 과잉 진압은 시위를 광주 전체로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고, 시위대는 파출소와 예비군 무기고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였다. … (중략) 5 · 18 민주화 운동은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이후 군사 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천재교육刊, 366~367페이지)



5 · 18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해 인근 광산 · 영광 · 함평 · 화순 · 나주 등지로 진출, 무기를 탈취해 자체 무장을 했다. 사진은 시위대가 탈취한 'M2 重기관총'.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한 기관총으로 장갑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방공 화기로도 사용되는 강력한 무기이다.

▲ 신군부의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도 비상계엄 해제와 민주 헌정 체제의 회복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학생과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계엄군에 맞섰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5 · 18 민주화 운동은 끝나고 말았다. (삼화출판사刊, 356페이지)

▲ 12 · 12 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계엄군은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는 점차 시민 봉기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법문사刊, 347페이지)

사건의 因果관계 기술 없이 사실 왜곡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검찰 조사(1995년)와 광주청문회(1988년)를 통해 밝혀진 당시 계엄군에 발포명령자가 없었던 점, 그리고 시민군에 의해 발생한 국군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기술하지 않았다. 특히 비상교육(357페이지)과 천재교육刊(367페이지)의 경우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내용이 담긴 '광주시민 궐기문'을 게재해 광주시민들이 총을 들고 국군에 맞선 것을 정당화했다. 이 궐기문엔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란 대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5 · 18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차별 발포 명령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단원 마무리'(402페이지)에서 광주사태 사실 왜곡 영화인 '화려한 휴가'를 '더 보기'(교과서 추천영화)로 소개했다.

문제의 영화는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던 광주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집단적 발포'를 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나 1995년 검찰수사 결과는 "공수부대 발포는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를 몰고 군인들을 향해 돌진, 공수부대원을 깔아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적, 그리고 조건 반사적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혀,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는 그런 사격도, 그런 사격 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영화 '화려한 휴가'는 "이 영화는 사실을 근거로 극화했다"고 했었다.

자료 1995년 서울지검–국방부 검찰부 합동수사 보고서

1980년 5월20일 계엄군을 겨냥한 시민군의 차량 공격

▲ 5월20일 22시경 갑자기 시위대의 11톤 트럭 한 대가 광주역 쪽에서 돌진하여 오다가 방향을 틀면서 전복되어 공수부대 하사관 한 명이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注: 당시 사망자는 3공수여단 16대대 소속의 육군상사 정관철이었음)

▲ 광주역 앞에서 공수 3여단 12 · 15대대는 5월20일 20시경 시위대가 드럼통에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여 굴려 보내고 트럭 · 버스 등 차량돌진 공격을 계속하자 인도로 피하거나 가스탄 투척 등으로 시위대를 저지했다. 22시경 돌진하는 시위대의 트럭에 하사관 3명이 깔려 중상을 입자, 일부 대대장은 권총을 차량 바퀴 등에 쏘아 돌진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 등 시위대를 체포했다.

▲ 차량 돌진 등 시위대의 강력한 공격에 위협을 느낀 대대장들이 실탄 지급 등 지원을 요청했다. 崔뿐昌 3공수여단장은 22시30분경 위협용으로 사용하되 위협용 이외의 사용 시에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경계용 실탄을 대대에 갖다 주도록 지시했다. … (이하 생략) (注: 실탄을 갖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은 21일까지는 차량, 휘발유, 투석 공격에도 조준사격은 하지 않았다)

▲ 5월21일 13시30분경 시위대 쪽으로부터 장갑차 1대가 빠른 속력으로 도청 쪽으로 또 돌진하자 그 순간 경계 중이던 공수부대원들이 장갑차를 향하여 일제

히 발포하여 장갑차 위에서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이 피격되었다. … (중략)

▲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광산, 영광, 함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송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를 확보, 무장했다. 13시경 광산 하남파출소에 시위대 80여 명이 차량 3대를 타고 와 카빈 9정을 탈취했다.

고속버스 · 트럭 등 10여 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 시위대가 함평에 도착하여 군중 시위를 벌이고 신광지서에서 총기 460정과 실탄 1만 발을 탈취했다.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 시위대가 합세하여 나주경찰서에 진입, 군용 레커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카빈 500여 정, M1소총 200여 정, 실탄 4만 6000여 발을 탈취했다.

15시35분경 화순업소에서 카빈 1108정, 실탄 1만 7760발, 화산 동면지서에서 M1 72정, 카빈 296정, AR 1정, LMG 1정, 실탄 1만 4000여 발을 탈취했다. 그 밖에도 이날 하루 동안 일산방직, 호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 석산 화약고, 한국화약, 강진 성전파출소 등을 습격하여 카빈, M1, LMG 등 총기 4900여 정, 실탄 13만여 발, TNT(폭약) 10여 상자, 수류탄 270여 발을 탈취했다.

▲ 시위대는 이들 무기를 가져와 광주공원과 학운동에서 분배한 후 총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15시경 광주공원에서 총기를 분배받은 시위대가 지프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상황을 전파했다. 17시경에는 광주공원에서 총기 사용 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組를 편성하여 정찰, 도청 감시, 외곽도로 경계 등의 임무를 부여 받고 시내 요소에 배치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市民軍(시민군)이라 불리는 무장 시위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략)

자료 시민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은 공수부대원

▲ 광주사태 진압작전 지휘관 安富雄(안부웅) 대령의 증언

"우리 앞에 시위대의 장갑차와 군용트럭, 거기에 탄 시위대가 보였는데 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보니 총을 가진 시위대가 군데군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注: 광주 진압 직후 국방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5월21일 새벽 3시30분에 광주세무서에서 카빈 17정과, 아침 8시에 20사단에서 M16 4정이 탈취당했다) 저희 병력의 뒤에는 62대대 뒤에 장갑차가 1대가 있었고, 그 장갑차 뒤에 63대대 1개 지역대 병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시경에 이르러 시위대가 장갑차와 차량의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거리는 등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대병력들에게 방독면을 착용시켰습니다. 그런 뒤 갑자기 장갑차의 빵빵 소리와 함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1개가 날아와 62대대 장갑차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장갑차와 화염병을 보고 뒤로 빠졌으며 그와 동시에 시위대 전면에 서있던 시위대 장갑차와 5톤 트럭이 계엄군 쪽을 향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차량을 막을 재간이 없어 도청을 향해 병력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위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희 병력을 향해 들어왔더라면 많은 병력이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장갑차 1대만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 1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 장갑차는 분수대를 돌아 충장로 쪽으로 갔습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해 들어옴과 동시에 시위대 쪽에서 총소리가 연발로 났습니다."

▲ 11여단 소속 통신병 慶箕萬(경기만) 씨의 증언

"우리 등 뒤에 있던 APC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불에 타기 시작했다. 우리 대열은 불을 끄려고 뒤로 물러났다. 이때를 틈타 시민 측에서 장갑차와 버스를 앞세우고 돌진해 왔다. 우리는 도청 쪽으로 달아났다. 실탄이 없었기에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달아나면서 보니까 시민 측의 장갑차 한 대가 우리 공수부대 대열에 돌진, 두 명이 깔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11여단의 권용문 상병은 머리가 장갑차 바퀴에 눌려 짓이겨진 채 즉사했고 다른 사병은 가볍게 다쳐 곧 일어나 달았다." (출처: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조갑제닷컴刊)

9. 국방비를 '反평화' 비용으로 매도

國防費(국방비)란 '국가가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데에 쓰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는 好不好(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지출이

다. 이런 중요한 국방비가 高校 교과서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다뤄지고 있는 사실은, 유독 '국방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현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이 국가살림을 과다한 국방비로 낭비하고 있으며, 국방비 비율 감소가 단순히 평화 증진으로 연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모둠 활동을 해보자.

(자료1) 평화 비용과 분단 비용

"한국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으로 세계 군비 지출 평균 보다 부담률이 높다." -국방부, "2008 국방백서"-

"1988년 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교류 문호를 개방한 이후 남한은 '평화 비용' 3조 9800억 원을 지출한 반면, 155조 8800억 원의 '분단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약 152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사회·문화적 갈등 감소 등의 실제 부가 가치는 더 클 것이다." -"통일 경제", 2009년 제3호- (394페이지, '탐구활동')

《국방백서》 내용 날조

첫 번째 자료의 내용은 출처로 밝혀져 있는 《2008 국방백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국방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국방비의 적정 규모는 안보위협에 상응한 군사적 소요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적 대치국의

【도표 8-6】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006년 기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루지아	러시아	쿠바	미국	중국	이란	파키스탄	한국
7.9	7.9	5.1	4.4	4.1	4.0	4.0	1.3 (4.3)	3.3	3.2	2.8 (2.7)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8(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8년 2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World Factbook(2008년 6월)에서는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4.3%로 발표,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정부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7%임.

《2008년 국방백서》에 수록된 분쟁·대치국의 국방비 비율

경우 '안보위협의 정도'에 비례하여 국방비 부담률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보위협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쟁·대치국에 비해 국방비가 낮은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쟁·대치국의 국방비 비율은 【도표 8-6】과 같다〉(《2008 국방백서》, 163~164페이지)

이 정도면 捏造(날조)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국방비의 수준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방비 증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스웨덴의 연구기관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의 보고서를 인용한 '세계 국방비 리스트'(2009년)를 보면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154개 국 中 11위, GDP 대비 비중은 2.8%로 48위다. 이는 한국이 休戰(휴전) 상태임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GDP 대비 15~30%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의 국방비나 戰力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국방부, 高校 교과서 軍 왜곡 서술 "모르고 있었다"

〈조갑제닷컴〉은 2011년 5월11일 국방부 대변인실에 公文(공문)을 보내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국방백서》原文(원문) 왜곡 문제(미래엔컬처그룹刊), 6 · 25 전쟁 학살책임을 國軍과 美軍에 전가한 문제(천재교육刊), 反軍(반군)영화인 '화려한 휴가' 등을 추천 영화(미래엔컬처그룹刊)로 소개한 문제 등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월16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國軍과 관련된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記述(기술)과 反軍 의식화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국방백서》原文 왜곡 기술 문제와 관련해 출판사와 집필진을 상대로 法的(법적) 문제를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부를 통해 교과서의 왜곡 기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관계자는 또 교과서에 6 · 25 전쟁의 학살 책임이 國軍에게 전가된 점, 피카소의 反美선동 그림인 '한국에서의 학살'이 실린 점, '화려한 휴가'와 '웰컴 투 동막골' 등 反軍영화가 추천 영화로 소개된 데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위와 같은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답변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남북협력기금의 효과로 국방비를 '절약'했다는 황당한 계산

교과서의 국방비에 대한 偏憎(편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교과서는 '평화 비용'과 '분단 비용'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국방비를 '反평화 비용'으로 둔갑시켰다. '분단 비용'은 이전부터 '통일 비용'이라는 용어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익숙한 단어다. 이에 비해 낯설게 다가오는 '평화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

자료 속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는 출처 〈통일경제〉는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위의 내용은 2009년 3월호인 '남북관계 평가와 개선과제-주요국 사례와 한국민의 의식 조사'에서 발췌된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평화비용'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남북 경협 확대와 인도적 지원, 북한 SOC(사회간접자원) 개발 지원 등 한반도의 안보 불안 해소와 위기관리 차원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분단 비용'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방비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사회 문화적 갈등과 불안심화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평화 비용'은 각 기간별 남북협력기금 지출 실적, '분단 비용'은 국방비의 수치였다. 이 수치를 사용해 1989년 이후 '평화 비용' 즉 남북협력기금이 3조 9800억 원이 지출된 기간 동안 155조 8800억 원의 국방비가 '절약'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국방비 감소 효과는 화해모색기(1988년 7 · 7선언 이후~김영삼 정부 이전 시기)의 3조 4900억 원에서 교류확대기(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106조 810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은 국가 차원에서 인적 교류나 남북경협 등을 위해 북한에 지원되는 돈이다. 실제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김정일 독재 체제를 延命(연명)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이는 '국가차원'에서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무

수한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목 하에 7억 3148만 달러 상당의 현금물품을 북한에 제공했다. 이는 1달러=1000원 환산으로만 해도 7314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확실시된 김대중 정권 시기의 對北(대북) 비자금 4억 5000만 달러 외에도 각종 對北비자금의 의혹이 존재한다.

4조의 '평화비용'으로 155조의 '분단비용' 절약했다는 과장

155조 8800억 원의 국방비를 '절약'했다는 것도 황당한 분석이다. 보고서에서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 페이지 표에서 '분단비용 절감'(B)의 수치는 기간 별로 국방비 비중 4.0%(대결기 마지막 년도인 1988년 비중)일 경우의 국방비를 계산해 놓은 후 실제 국방비의 수치를 뺀 것이다. 계산대로 한다면 '교류확대기'(1998~2007년)의 경우,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 중 4만 원(4%)이 필요한 국방비가 2만 6000원(기간 평균 2.6%)만 사용되었으니 1만 4000원(B)이 '절약'되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그 절약의 功을 남북협력기금의 효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비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국방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분단 비용은 늘 증가해왔다고 봐야 한다. 'GDP 대비 국방비(%)'나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등의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재정과 GDP가 증가함으로써 GDP 대비 비중은 줄고 총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1981년 이후 국방비 총액이 줄어든 해는 1999년 한 해로, 1998년보다 510억 원이 줄어든(국방비 증가율 -0.4%) 13조 7490억 원이었다.

이렇게 계산된 국방비 절약 액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뺀 수치에 대해 '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교류 문호를 개방한 이후' 얻은 이익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대결 시기'로 분류되고 있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수치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평화비용'이 없었던 두 정권 시절에도 재정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시기가 엄연히 존재했다. 이에 대한 《국방백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남북 교류 협력의 비용·편익 분석 (1989~2009년) >

(단위 : 1,000억 원)

기 간	평화비용 지출 (A)	분단비용 절감 (B)	편익 효과 (B-A)
화해 모색기(1989~92)	0.0	34.9	34.9
정체 시기(1993~97)	2.1	209.4	207.3
교류 확대기(1998~07)	34.8	1,068.1	1,033.3
조정 시기(2008~09)	2.9	246.4	243.5
합 계	39.8	1,558.8	1,519.0

자료 :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주 : 1) 평화비용 지출은 각 기간별 남북협력기금 지출 실적임
2) 분단비용 절감 효과는 대결기의 마지막 연도인 1988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4.0%를 지출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실제 국방비 지출 비중과의 차이를 절감액으로 추산함

〈통일경제〉 2009년 3월호 '남북관계 평가와 개선과제-주요국 사례와 한국민의 의식 조사' 중 '남북 교류 협력의 비용·편익 분석(1989~2009년)' 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안보 및 사회여건에 따라 변화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5%, 정부재정 대비 30% 수준을 점유하였다. 이는 율곡사업 등 19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우리 군의 자주적 전력증강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IMF 금융위기 등에 따라 국방비의 하향 배분 현상이 지속되었다.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방비 배분 수준은 다소 개선되었다〉(《2008 국방백서》)

문제의 〈자료1〉에 대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자료1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이다. 과연 위의 자료로 '통일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까.

捏造(날조)된 자료와 검증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 '분단 비용 절약'이란 자의적 개념과 황당한 기준으로 구성된 자료가 국가 검정에 통과된 고등학교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학습한 고등학생들은 남북한의 현 대치 상황과 對北지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될까. 이 보고서가 발간된 당시 한나라당 최고 ·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2009년 8월3일)도 있었으나, 교과서 제작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방비는 反평화 비용인가

국방비는 정말 必要惡(필요악),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일까. 국방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국방비의 順기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방비의 사회 · 경제적 기여에 대한 《국방백서》의 설명이다.

〈① **국방비의 산업 연관 효과:** 적정 국방비 확보를 통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는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방비는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지출되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국방비 가운데 군인 · 군무원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는 가계지출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산업 생산을 활성화시킨다. 무기체계 획득, 군수물자 보급, 군사시설 건설 등을 위한 사업비는 제조업, 건설업 등 각종 산업 부문으로 지출되어 산업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내소득을 창출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방 부문의 산업 연관 효과는 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1709원의 생산 유발이 일어나고 764원은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방비 지출은 10억 원당 약 21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와 국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② **국방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통한 민간 산업 기술 발전:**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첨단기술은 민간 부문으로 파급되어 민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1986년 이후 군수용으로 개발된 첨단기술은 민간 업체로 이전되어 전자통신 및 기계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했다.

③ **사회간접자본(SOC), 기술인력 등의 제공:**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공항, 항만, 교량 등은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사용되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軍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자를 배출하고 자체 병과교육을 통해 '국가기술 인력의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1975년부터 2007년까지 기계, 화공, 전기, 전자 분야 등 120여 개 분야에 걸쳐 산업기사, 기능사 등 27만 6000여 명의 국가기술자격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통신, 항공,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5만 4000여 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첨단 기술의 이전, 사회간접자본 및 기술인력 제공 등으로 요약되는 국방비의 사회 · 경제적 順(순)기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 스며들어 발휘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본래의 기능은 말할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아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空氣(공기)처럼, 國防 역시 우리가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비야말로 진정한 '평화 비용'으로 불려야 할지 모른다. 더불어 국방비의 증가에 대한 원망의 화살은 쉴 새 없이 軍力 증강 및 核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함께 보기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刊)
《6 25와 베트남戰 두 사선을 넘다》 (이대용 著, 기파랑刊)
《6 · 25 派兵 결단으로 한국을 살린 트루먼 이야기》 (조갑제 著, 조갑제닷컴刊)
《광주사태와 공수부대》 (조갑제 著, 조갑제닷컴刊)
《고마운 나라 고마운 사람들》 (김동현 著, 조갑제닷컴刊)
《2008 국방백서》 (국방부刊)

9장

철저한 계급 史觀

1. 노동자 · 농민 · 貧民 중심의 서술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설명하며 기업 · 기업인의 기여 외면
反기업-反자본주의적 관점, 사회주의 특유의 '계급 史觀'에서 우러나온 듯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업 · 기업가에 대한 서술은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이다. 지난 60여 년간의 기적과 같은 한국 경제의 발전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 主體(주체)와 주인공에 대한 설명은 얼버무린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면서 기업 · 기업가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日帝(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설명하면서 독립 운동가들을 묵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제 발전 주체인 기업 · 기업인들의 역할 묵살 폄하

교과서의 反기업 정서는 천재교육과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그 공을 노동자와 유학생, 공무원으로 소개할 뿐, 경제 발전의 주체였던 朴正熙(박정희) 대통령과 기업 · 기업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거나 '정부', '한국 기업', '대기업 집단' 등 대략적으로만 표현했다.

외자 도입 이후 경제 성장은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수출은 연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잠재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였다.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우수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근면성과 열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유학생**들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해외 연수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 공무원**들이 경제 개발 관련 부서에 배치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375페이지)

정부는 1967년 한 · 일 협정으로 얻게 된 자본의 일부를 제철소의 설립에 투자하였다. 제철소 설립은 1973년 포항 제철소의 준공으로 결실을 맺었다. … 한편 1970년 준공된 경부 고속 국도는 수출 물량의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376페이지)

같은 해(1973년) **정부**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고 철강, 비철 금속,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376페이지)

1973년부터 이듬해까지 국제 유가가 4배 이상 급등하는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나 여기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

었다. 1977년 말에는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4년 앞당겨 달성하였다. (376페이지)

외환위기 이후 각 **대기업 집단**은 부실 부분을 정리하고 주력 기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휴대전화, LCD,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들 주력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입어 세계에서 1~6위 안에 들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383페이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자동차, 선박 산업과 세계 점유율 2위의 휴대 전화 생산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406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도 朴正熙 정부 대신 그냥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기업 및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全無(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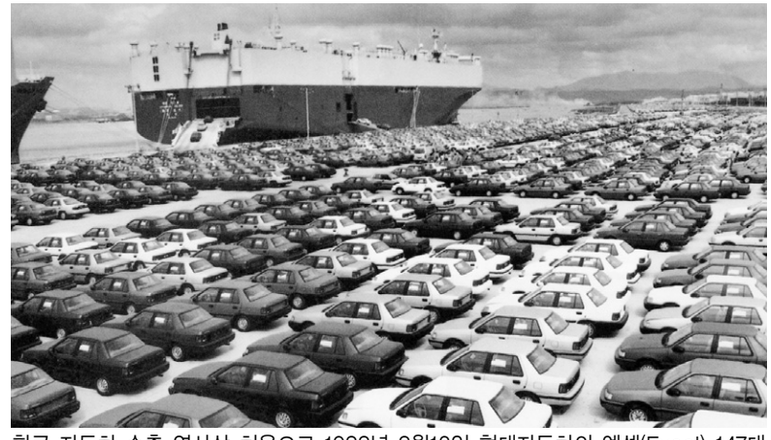
사진자료: 1960~70년대, 성장 신화의 숨은 주역들

베트남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우리 **근로자들**: 총 40여 만 명의 병사와 산업 인력이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특수를 얻어냈다.

이란에서 조선소를 세우고 있는 우리 **기술자들**(1976): 산유국들은 유가 폭등으로 풍부해진 재정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였다. (375페이지)

우리나라가 1960~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가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9년 1인당 국민 소득은 1962년에 비하여 20배나 성장하였다. (376페이지)

교과서 내 기업 관련 서술은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구조, 政經(정경)유착 등을 중



한국 자동차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1988년 8월13일 현대자동차의 엑셀(Excel) 147대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1986년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2년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미래엔컬처교육刊 교과서 역시 정부가 대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결과, 고도성장은 유지했으나 국민들의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低임금에 시달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 천재교육

무역 적자와 더불어 무리한 외국 자본의 도입은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 자본은 수출품 생산의 단기적인 증대를 위해 주로 대기업에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가로막았다. 이는 결국 대규모 기업 집단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냈다. (377페이지)

…이 과정에서 경제의 자율화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권력에 의한 인위적 산업 구조 재편은 오히려 정부와 대규모 기업 집단 간의 유착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경 유착에 대한 부정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377페이지)

…1997년 1월 한보 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여러 대기업 집단이 도산하였다. 이는

이들 대기업 집단이 과도하게 은행 빚과 외자를 차입하여 몸집 불리기를 해온 결과였다. 게다가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투자한 자금을 거두어가기 시작하였다. (383페이지)

▲ 미래엔컬처그룹

그 결과 1979년 1인당 국민 소득은 1962년에 비하여 20배나 성장하였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도 커졌다. 영호남 간 개발의 불균등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확대도 문제였다. 한편,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은 재벌 중심의 한국적 기업 문화를 형성하였다.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서로 다른 업종에까지 진출하여 재벌이 되었다. 이때 기업이 정부의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부적절한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내수보다 수출입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재벌 중심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직면한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었다. (376페이지)

경제 분량, 민주화의 약 40%

분량 면에서도 '경제' 는 '민주화' 보다 적다. 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경우, 경제 분량은 민주화의 약 40% 정도였다.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경우, 분량 상 민주화 과정을 다루는 부분은 20페이지인 데 비해, 경제 발전 과정을 다루는 부분은 10페이지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2페이지는 노동 · 농민운동과 사회 · 시민운동을 다루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20 對 8 페이지의 비율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2페이지 분량의 각종 노동 · 사회운동 부분 서술이

다. 전태일이 썼던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이 부록으로 길게 소개되는가 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크리스천아카데미' 나 '도시산업선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같은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경제 관련 서술 중 기업이나 기업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1997년 IMF 사태에 대한 설명 중 등장하는 '한보 철강' 뿐이라는 것과 비교된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원하였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나 **도시산업 선교회** 같은 기독교 단체들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 운동은 1980년 **군사 정부**의 등장으로 다시 주춤하였지만,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잇따랐으며,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새로이 등장한 노동조합은 1995년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을 결성하여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시대를 열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조직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각 지역별로 농민회를 조직하였으며, 이는 1990년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380페이지)

그런 가운데 1997년 1월 **한보 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여러 대기업 집단이 도산하였다. 이는 이들 대기업 집단이 과도하게 은행 빚과 외자를 차입하여 몸집 불리기를 해온 결과였다. (383페이지)

이런 反기업-反자본주의적 관점은 사회주의 특유의 계급史觀(사관)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正體性(정체성)으로 담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기업인들을 미워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불신과 반감을 갖게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에는 新자유주의를 악마로 묘사해 지구를 비틀어 돈을 짜내는 삽화가 등장했다.

될 것이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 경우 분량 상으로는 16 對 10(민주화:경제발전)이지만, 경제 부분 10페이지 중 4페이지가 도시빈민 문제, 노동 · 농민운동 등을 다루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6 對 6페이지의 비율이다. 이 교과서 역시 전태일을 한 페이지 반의 분량으로 다뤘으며, 철거이주민의 천막촌 사진이나 단식 농성 중인 농민들의 사진이 등장한다. '新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라는 제목이 붙은 단원에서는 新자유주의를 악마로 묘사해 지구를 비틀어 짜서 돈을 빼내는 삽화와 함께 "新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377페이지)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 교과서는 '역사 추적' 이라는 코너에서 한국에 대해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 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에 미국의 학자인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의 말을 인용했다.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는 미국의 대표적인 反戰(반전) 운동가이자 左派(좌파) 지식인이다. 미국을 '帝國(제국)주의' 라고 비판하고, 新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교과서는 노엄 촘스키의 이름 앞에 '세계에 양심적 지성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라는 편향된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했다.

"국가의 富를 축적시키는 主役은 기업인"

조재호 울산대 교수는 著書(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약 근대 공업국가로 도약하며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을 만들어 냈다. 이런 경제기적에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적' 개발 전략이 주효했다. 그리고 조국 근대화에 동참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기업가, 그 기업가와 뜻을 같이 하는 근로자의 동참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 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가 정신》)

조 교수에 따르면,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이 '국가발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휘했던 기업가 정신은 無形(무형)문화재와 같은 국가적 資産(자산)이다. 조 교수는 '국가의 富를 축적시키는 주역은 기업인' 이라고 말한다. 人的(인적)자본, 제도, 경제정책 자체가 경제 성장을 자동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요소들이 기업가 정신과 화학적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 1960년대 初만 해도 한국이 30~40년 후에 자동차, 造船(조선), 철강,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이라고 예측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저력 있는 기업가들이 등장하면서 꿈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기업가들의 업적은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쓴 반면, 노동자 · 농민들의 희생은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로 공부했을 때, 기업가는 惡(악), 농민 · 노동자는 善(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힐 우려가 있다.

자료 '산업화 世代'가 일군 한국의 주요 산업들

다음은 교과서에서 간략히 소개된 주요 성과들을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이다.

▲ **철강 산업:** 우리나라가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의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산업 경쟁력 뒤에는 포항제철(現 포스코)이라는 버팀목이 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40년 만에 세계 일류 수준으로 발전했다. 朴泰俊(박태준)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빼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朴 회장은 한국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 굴지의 철강회사를 이룩했다. 그는 포항제철소를 건설하면서 對日청구권 자금의 轉用(전용), 제2종합제철 사업의 획득, 설비 및 원료 구입선의 확보, 건설工期의 단축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 **조선 산업:** 16~17세기에는 스페인이 바다를 지배했고 18~19세기에는 영국이 조선강국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1950년대부터는 일본이, 그리고 21세기는 한국이 조선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 鄭周永(정주영)은 외국의 선진 조선업체들과 합작으로 대형 조선소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을 접촉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조선소의 운영권을 요구해오자 합작 투자를 포기하고, 장기 低利(저리)의 차관을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한국 조선산업의 성공은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鄭周永의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 조선업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適時(적시)에 기회를 포착한 결과이다. 만일 鄭周永이 前後方(전후방) 효과가 큰 조선공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발전 인프라들은 지금보다 뒤쳐졌을 것이다.

▲ **자동차 산업:**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완제품을 그대로 수입하거나 선진국 자동차 업체를 대행,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현재 자동차를 독자 개발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10여 개국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선진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성공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동차 산업은 기계, 철강, 전자, 유리, 섬유, 고무, 화학, 정유, 운수, 관광 등 前後方 연관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산업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鄭周永은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서 해외 大메이커와 제휴를 모색했으나, 각각의 견해차에 부딪히자 合作(합작)투자 자체에 회의를 품고 독자경영의 길을 모색했다. 국제규모의 量産(양산)체제를 갖추고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고유 모델의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공했다. 현대 자동차는 2010년, 포드를 젖히고 세계 4위의 자동차 메이커가 되었다.

▲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후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것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30여 년 정도 늦은 1970년대 중반이었다. 현재는 수출 1위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한국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산업 등을 기반으로 IT강국이 되는 데 초석이 되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초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철강, 조선, 자동차와 다르게 민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룩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창업자 李秉喆(이병철)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한 기업인의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건립된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업계의 매출과 기술발전에 있어서 많은 신화를 창조했다.

2. 전태일 vs. 이병철 · 정주영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 전태일에 가장 많은 비중 할애
천재교육刊, 노조의 강경투쟁이 옳다는 式으로 記述
삼화출판사刊, 교과서 中 유일하게 이병철 · 정주영 사진 게재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과 기업인 이병철 · 정주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 · 분석한 결과, 전태일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전태일은 노동운동의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로 크게 취급되는 반면, 이병철 · 정주영은 6種 교과서 중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만 짧게 다뤄지고 있었다.

구분 / 출판사	전태일		이병철 · 정주영	
	내용 분량	사진수	내용 분량	사진수
미래엔 컬처그룹	6줄+별면 한 페이지 (382페이지~383페이지)	2장 (전태일 모친, 전태일 동생)	–	–
천재교육	11줄 (380페이지)	1장 (전태일 사건 동판)	–	–
삼화출판사	7줄 (368페이지)	1장 (신문기사 지면)	2줄 (사진설명)	2줄 (이병철 1, 정주영 2)
비상교육	7줄 (370페이지)	1장 (전태일 모친)	–	–
지학사	3줄 (316페이지)	1장 (전태일 모친)	–	–
법문사	2줄 (354페이지)	–	–	–

6種 교과서에서 전태일 및 이병철 · 정주영을 다룬 분량 및 사진 게재 현황 비교

계급 史觀으로 쓰인 교과서

교과서의 이런 기술방식은 계급투쟁적 史觀(사관)에서 기인한다. 사회주의적 이념의 핵심이 바로 계급투쟁說인데, 이들은 역사의 발전을 계급투쟁의 결과로 본다.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간주하며, 국가보다 계급을 우선시한다. 左派(좌파)는 노동자 · 농민 · 민중 같은 특정 계급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대한민국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계급적 特權(특권)을 부정한다. 어떤 계급이나 계층보다도 국가와 憲法(헌법)을 우선시 한다. 노동자, 농민, 민중, 자본가란 이유로 어떠한 특혜도 차별도 주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左派(좌파)적 관점에서 쓰인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자연히 이승만, 박정희, 군인, 기업인들보다 노동자, 농민들을 우대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계급주의적 사관이 전태일과 이병철 · 정주영을 다룰 때 어떻게 드러났는지 각 교과서별로 살펴보았다.

미래엔컬처그룹刊: 전태일의 탄원서까지 실어

전태일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룬 것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였다. 교과서는 '시련 속에서 성장한 노동운동' 이란 小제목 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60~70년대 고도성장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땀 흘린 대다수 노동자의 희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죽었다(1970). 그 후 지식인과 대학생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운동이 본격화되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382페이지)

같은 페이지 하단 '탐구활동' 에는 1970년 전태일이 朴正熙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도 실었다. 그 밑에는 "전태일이 위와 같은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에서 추론해보자"라는 유도성 질문을 달았다.

이어 교과서는 383페이지에서 아예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라는 제목 下에 전태일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글에는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 '지켜지지 않은 근로 기준법',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라는 小제목이 달려있다.

천재교육刊: 노조의 강경투쟁이 옳다는 式으로 記述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도 전태일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과 전태일의 焚身(분신) 장소인 청계천 6街(가)에 세워진 동판 사진도 첨부해 전태일의 生涯(생애)를 부각시켰다.

1970년 11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1960년대까지 노동 쟁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쟁의를 주도할 노동조합조차 극소수였다. 그런데 전태일의 죽음이 있은 직후인 1971년에는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후 노동자들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380페이지)

비상교육刊 교과서도 전태일의 焚身을 크게 다뤘다. 본문과 함께 같은 페이지 하단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제목 下에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과 전태일의 영정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전태일의 모친(이소선 씨) 사진이 함께 소개됐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1970년대 평화시장 재단사인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다. 이에 큰 자극을 받은 지식인과 학생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 참여하였고, 노동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370페이지)



법문사를 제외한 5種의 교과서들은 전태일 관련 사진을 싣고 비중있게 처리했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 역시 본문에 전태일 관련 내용을 수록한 후 페이지 하단에《전태일 평전》을 인용하여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실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노동 운동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1970년 11월에 한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등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학생들과 지식인들도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노동조합이 속속 결성되면서 노동 운동은 점차 활성화되었다. (368페이지)

지학사와 법문사刊 교과서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간략히 기술했다.

李秉喆 (1910~1987)	鄭周永 (1915~2001)
	
生涯	生涯
이병철은 경남 의령 地主家(지주가)에서 출생했다. 1930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 入學했으나 1931년 身病으로 중퇴했다. 1934년 기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1945년 정미소, 농지개간, 양조장을 경영했다. 해방 後, 1948년 무역회사 삼성물산을 창업했다. 1953년 제일제당, 1954년 제일모직을 설립해 우리나라 생산재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1957년 한일은행 인수, 1958년 삼척시멘트 인수 등으로 한국 최대의 資産家(자산가)가 되었다. 5·16 혁명 직후 軍事정부에 의해 不正(부정)축재자로 몰렸으나 박정희 정부는 그와 협력해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現 전경련의 前身)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방송국, 신문사, 병원, 製紙(제지)공장 등 많은 사업체를 만들었다. 1967년 密輸(밀수)사건으로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1967년 삼성전자를, 1974년 삼성중공업을 설립했다. 1978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삼성반도체를 설립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 육성에 功을 세웠다. 이병철은 '事業報國'(사업보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에 앞장 선 대표적 기업인이었다. 그는 人才(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해 인재개발에 주력한 뛰어난 경륜가이기도 했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오늘 날 삼성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全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주영은 강원도 통천의 貧農(빈농)의 집안에서 출생했다. 1933년까지 세 차례 가출해 철도·부두·건물 공사판을 전전했다. 1938년 최초의 사업체 경일상회를 열어, 1945년까지 자동차수리업, 화물운송사업을 했다. 해방 後,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했다. 1950년에는 두 회사를 합병하여 현대건설을 설립, 한때 국내 건설업체 도급한도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1967년에는 현대자동차 설립에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1972년 현대자동차 설립에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독려로 현대조선소를 起工(기공)했다. 1977년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승용차인 포니를 생산해 해외수출에 성공했다. 197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被選(피선)됐으며, 1978년 서산 간척사업에 착수, 1984년 완공했다. 1983년엔 전자사업, 1991년엔 석유화학사업에도 진출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후 사망하기까지 對北(대북)사업에 매진했다. 그가 남긴 저돌적 경영 일화는 고도성장기 한국인의 개척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의 선박 경영자와 담판을 벌인 일화, 서산 간척지 매립에 유조선을 이용한 이른바 '정주영工法' 등은 그의 도전적 경영리더십을 잘 보여준다. 현대그룹은 1990년 후반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이어갔다.

위 내용은 조갑제닷컴이 정리한 이병철·정주영의 업적. 삼화출판사를 제외한 5種의 교과서에서는 이병철·정주영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 1970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섬유, 전자, 의류 등 경공업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지학사刊, 316페이지)

▲ 1970년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의 죽음은 당시의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법문사刊, 354페이지)

삼화출판사刊: 교과서 中 유일하게 이병철·정주영 사진 게재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6種 교과서 中 유일하게 이병철·정주영을 소개하고 사진을 실었다. 본문에서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을 대표

자료 사진분석: '경제 人士'보다 '민주화 人士'가 더 부각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는 '민주화 人士'가 '경제 人士'보다 더 부각되어 있었다. 現 6종 교과서 중 현대사 부분인 8~9과의 사진 이미지 1195건을 분석한 결과다. (사진에 등장한 주요 인물은 총 88명, 등장횟수는 266회) 빈도수 10위권 內로는 박정희(17회)–이승만(16)–김구(15)–김대중(13)–김일성·김정일(각 12)–모택동(10)–여운형(8)–전두환(7)–고르바초프·김규식(각 6) 순이었다. 6種 모든 교과서에서 한 번 이상 사진이 실린 인물은 김구(15), 김대중(13), 김정일(12), 모택동(10)이었다.

등장한 인물 중 민주화 및 노동 운동 관련자는 전태일(5), 박종철(3), 이한열(3), 이경해(1), 장준하(1) 등이었다. [삼화출판사刊 344페이지에 소개된 이경해는 농민운동가로, 2003년 9월, 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自殺(자살)한 인물이다]

반면 산업화 기여 인물이 사진에 실린 경우는 정주영(3), 이병철(1) 뿐이었다. 3회 등장한 정주영의 경우 2회는 소를 몰고 北을 방문하는 사진으로, 경제 부분이 아닌 남북 교류 부분에 실렸다. 대한민국의 建軍(건군) 주역이자 6·25 남침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기업가인 이병철은 삼성을, 정주영은 현대를 창업하여 한국 경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끌어 올렸다"(364페이지)는 내용이 사진 설명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고도성장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제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와 '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들었을 뿐 기업인의 기여는 외면했다. 이런 계급적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를 검·인정한 敎科部(교과부)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좌파는 계급투쟁설을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의 기초로 공유하므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反北좌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이런 親緣性(친연성) 때문이다. 左傾(좌경), 左派(좌파), 左편향은 모두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다.

3. 용산放火사건을 도시貧民 문제처럼 소개

放火사건을 廣州대단지 사건과 비교
전문 시위꾼 주도의 도심테러… 화염병 제조·투척

미래엔컬처그룹刊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도시貧民(빈민) 관련 부분에서 1971년의 '광주 대단지 사건'과 2009년 용산放火(방화)사건을 同質(동질)로 다루었다. 전문 시위꾼이 주도한 용산放火사건을 슬그머니 도시貧民 문제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주 후 새 주거지의 기반시설 부족과 분양가의 非합리적인 책정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광주 大단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광주 大단지 사건은 서울시의 판자촌 주민들을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971년 8월 10~12일, 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조치에 항의,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朴正熙 대통령이 내무부(現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경기道지사를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요구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 시위는 3일 만에 진정되었다.

용산放火사건은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의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김남훈(30) 경장과 양회성(56) 씨 등 농성자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항거가 아닌, 철거민 시위현장마다 나타나 불법 과격시위를 선동하는 전문 시위꾼이 일으킨 도심테러 수준의 것이었다.

放火의 主犯인 전국철거민연합회, 화염병 제조해 투척

사건의 배경이 된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관련된 세입자는 모두 890명이었는데, 이 중 85.7%인 763명의 보상이 완료되었고(약 84억 원 지급), 보상에 반발하는 86세대 상가세입자들은 2007년 용산세입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2008년 2월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에 가입했다. 두 달 후인 2008년 4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여기에서 탈퇴하고 26세대만 남아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009년 1월19일, 세입자 10명과 외부인 22명이 복면을 쓴 후 재개발 구역 內에 있는 남일당 건물을 점거했다. 수백 개의 화염병, 염산병 등을 무차별적으로 투척해 인근 상가와 차도·인도 등을 放火(방화)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을 설득했지만 거부당하자 경찰 특공대를 진입시켰다. 농성자들은 시너를 통째로 부으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불이 옮





2009년 1월19~20일 용산의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한 농성자들이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투척하고 신나를 뿌리며 저항했다. 망루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이들이 뿌린 신나로 추정되었다.

겨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경찰 20명이 다쳤다. 사망 농성자 5명 중 용산 세입자는 2명뿐이었으며, 현장에서 연행한 화염병 시위 가담자 28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인 세입자는 7명, 나머지 21명은 전철연 회원들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1년 4월28일, 사건 당시 망루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前 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의 용산放火사건을 다룬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1999년에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2002년의 제2차 연평해전, 2009년의 대청해전, 2010년의 천안함 爆沈(폭침) 등 北의 對南 도발은 다루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설의 主役(주역)인 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가혹하게 비판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북한 정권의 만행을 덮었다. 이는 전형적인 계급투쟁적 역사관의 기술이다. 계급투쟁적 역사관은 학생들에게 法治(법치)주의보다는 혁명을 위해선 폭력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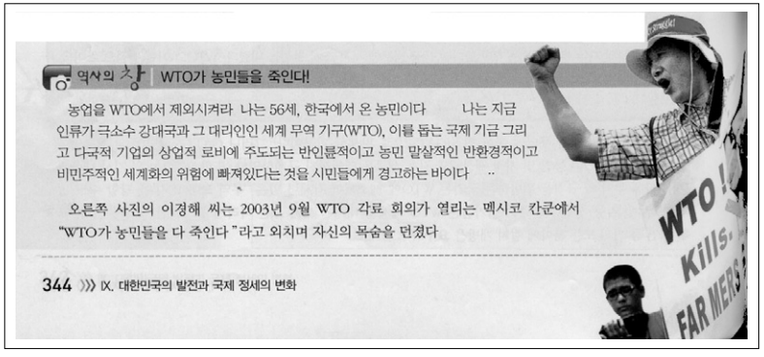
4. 反세계화 시위로 '할복자살' 한 농민도 등장

한국의 주력산업이 농업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성
전체 산업 합계(2605조 원)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 비중은 1.8%에 불과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WTO의 국내 농업개방에 반대하며 할복자살한 농민 이경해 씨의 사진(344페이지)과 설명을 게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출신의 이 씨는 2003년 9월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개방협상에 반대하며 시위 도중 할복자살 했다. 전북 장수 출신의 이 씨는 1989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됐고, 1991년에는 전북道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했다. 1990년 유럽 제네바에서 열린 GATT 반대 시위에서도 할복한 바 있으며, 2003년 2월에는 제네바 WTO본부 앞에서 單身(단신)으로 단식농성을 벌였던 전업 농민운동가다.

12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농연의 원래 명칭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였다. 1981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한 농어민 후계자들이 전국적 조직을 갖추면서 1987년 출범했다. 회원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아 中農(중농) 이상의 규모를 갖췄으며, 이 씨 본인도 대학을 졸업한 學士(학사)농민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농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의 창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다 나는 지금 인류가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 무역 기구(WTO), 이를 돕는 국제 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주도되는 반인륜적이고 농민 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

오른쪽 사진의 이경해 씨는 2003년 9월 WTO 각료 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344 》》 IX.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WTO Kills FARMERS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는 자극적인 제목 下에, 2003년 WTO 각료회의가 열렸던 멕시코에서 자살한 이경해 씨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한농연은 그러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앞두고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및 韓-칠레 FTA체결반대(2001년), 韓美 FTA협상 저지 미국 원정투쟁단 파견(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2005년) 등 反美, 反자유무역, 反세계화 운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제11, 12대 회장인 서정의 씨가 親北(친북)좌파 단체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의 공동회장으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수호 前 민노총 위원장, 정재돈 前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한농연의 現 회장인 박의규 씨의 경우 2008년 5월 '남북농민대표자회의'에 남측 단장으로 농민 20여 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 북한의 강창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등과 함께 反헌법적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 및 실천을 협의하기도 했다. 현재 한농연의 연대 단체로는 전국농민회총연대(전농)를 비롯,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 등의 좌파단체로 이들은 모두 국보법 폐지, 남북한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세계화 문제 부분에 이경해 씨의 할복자살 사건을 다룸으로써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마치 농업인 것과 같은 착각과 함께,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서술했다.

2010년 농협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농림수산업 총산출(47.9조 원)이 전체 산업 합계(2605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 관련 산업 부가가치도 1995년 55.5조 원, 2000년 69.8조 원, 2005년 80.2조 원, 2008년 86.4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5.0%, 2000년 13.0%, 2005년 10.3%, 2008년 9.4%로 계속 감소해왔다.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은 1989년 GATT 쇠고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물량의 쇠고기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됨에 따라 시작됐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여러 FTA 협상을 통해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왔다. 물론 이 같은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국내 농민들은 강도 높게 저항했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국내 참다래(키위) 농업의 발전이 보여주듯,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대체로 취약한 편이지만 부문별로는 적지 않은 잠재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2000년과 2005년 농업센서스를 비교하면, 고학력 농업 경영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규모가 커지고 있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축산물, 과일,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가 증대했다. 뿐만 아니라 과일과 화훼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2000년 이후 매년 7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작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 단위로 농촌을 개발하려는 전략도 지방자치 단체와 농민 단체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2000년부터 시작된 농촌관광 사업에 따라 전국 500여 곳이 관광마을로 지정됐다. 한국 농업의 이 같은 변화는 한 농민의 할복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시장 환경을 개선해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선진국의 노동조합과 외국 기업 진출에 위협을 느낀 후진국의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통합은 지식기반 IT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부터 朴正熙 대통령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선택해 한국은 자유무역의 확산과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다. 1980년대부터는 정부주도형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화 흐름에 상당한 수준의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동 작성하는 'G20 주요 경제지표(PGI)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은 43.4%로, G20 회원국 가운데 1위(사우디아라비아 제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5년 33.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34.2%, 2007년 35.4%, 2008년 45.3%로 거의 매년 증가해왔다. 2010년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1172조 8000억 원으로, 달러 기준으로 全 세계 15위 규모다.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보기

《대한민국 기업사》 (신산업전략연구원 지음, 주영사刊)
《박정희와 대한민국 경영》 (설봉식 著, 중앙대학교 출판부刊)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著, 제삼기획刊)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조동성 外 著, 월간조선刊)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조재호 著, 울산대학교 출판부刊)
《湖巖自傳(호암자전)》 (이병철 著, 중앙일보사刊)

10장

北의 잘못 덮어주기

1. 교과서가 빼버린 사실들

스탈린 앞에서 시험 친 김일성
신의주 反共 학생 의거
헌법도 소련의 만들어 줘

새로 발간된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거의가 북한 정권의 출범과정에서 일어났던 反민족적, 反민주적 사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김일성을 소련군대가 조종한 사실, 김일성이 스탈린 앞에서 시험을 친 뒤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결정된 사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다는 사실, 북한 정권의 國號(국호) 및 憲法(헌법)도 스탈린이 만들어준 사실 등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의 反민족성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建國(건국)

과정에서 李承晩(이승만)이 한 역할을 格下(격하)시키려고 애쓰면서 김일성이 한 못되고 못난 짓들은 덮어주었다. 예컨대 아래 사실들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거의 묵살되고 있다.

▲ 소련군은 소련군에 편입되어 있던 중국공산당 산하 抗日 빨치산 출신 장교 金日成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발탁하여 1945년 9월 북한에 데리고 들어왔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일본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적은 없다. 《朝鮮戰爭(조선전쟁)》을 쓴 일본 공산당 기관지 기자 출신 하기와라 료(萩原 遼) 씨는 "이때 김일성은 조선인의 의식을 갖지 않은 일종의 이방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이 시기 李承晩은 34년째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과는 반대로 미국 정부는, 미래의 대통령이 귀국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李承晩은 1945년 초 흑해 연안 얄타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한반도를 소련에 넘겨주기로 스탈린에게 약속했다는 폭로를 한 적이 있다. 그 전부터 李承晩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를 묵인했듯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인정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親蘇的(친소적)이고 좌경적인 인물들이 박혀 있었던 美 국무부를 화나게 했었다.

▲ 냉전이 끝난 뒤 공개된 舊소련 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이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에 '민주정권', 즉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한 것은 1945년 9월20일이었다. 스탈린은 그해 8월 초순 런던에서 열린 외상회담에서 미국이 反蘇的(반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미국과의 대결을 결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북한에서 공산정권을 공고화한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당국은

김일성을 시켜 북한에서 행정조직과 군대를 만드는 등 정권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단독정권 수립 방침에 따라 소련군은 군사 관할 분계선에 불과한 38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만들어 한민족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킨다. 南北분단의 全的(전적)인 책임은 소련과 김일성이 져야 한다. 李承晩이 남한에서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스탈린의 分斷(분단) 결정 그 1년 뒤였다.

▲ 1945년 11월23일 신의주에선 6개 남녀중학교 학생들이 소련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산당 타도' 시위를 벌이다가 보안군과 소련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23명이 죽고 700여 명이 다쳤으며 2000명이 체포되었다.

▲ 1945년 12월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美 · 英 · 蘇 3國 外相(외상) 회담은 남북한에 대한 5년 기한의 신탁통치안을 발표하였다. 金九(김구), 李承晩이 주도한 反託(반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朴憲永(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熱火(열화)와 같은 민심에 동요하여 贊反(찬반)을 정하지 못했다. 소련의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朴憲永은 서울주재 소련영사관을 찾아가 지침을 받으려 했으나 영사관측은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헌영은 12월28일 밤 비밀리에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다. 그는 김일성 등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간부들에게 신탁통치에 대한 남한의 민심이 반대쪽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일성도 어쩔 줄 몰라했다. 모스크바에 갔던 북한 주둔 소련군 民政(민정)사령관 로마넨코가 평양으로 돌아온 다음날 朴憲永에게 지침을 하달했다. 신탁통치를 결의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라는 것이었다. 朴憲永은 1946년 1월1일 밤 평양을 출발, 2일 새벽 서울에 도착, 김일성과 보조를 맞추어 조선공산당 이름으로 모스크바 협정, 즉 신탁통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산당 세력은, 民心을 거역하고 소련의 지령에 충직하게 복무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敗着(패착)을 두었다. 좌익은 賣國세력, 우익은 民族진영이 된 것이다.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 이때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건의했다.

▲ 金學俊(김학준) 前 동아일보 회장(前 서울대 교수)이 쓴 《북한의 역사》(1, 2권)는 東西 냉전이 끝난 후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연구한 책이다.

1946년 7월에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모스크바로 불러 일종의 면접시험을 치게 한 뒤 김일성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선택하는 장면은, 李承晩이 왜 김일성을 무시하고 스탈린과 상대하려 했고 북한을 항상 北傀(북괴)라고 불렀는지를 깨닫게 한다. 金學俊 박사에 따르면 "스탈린은 우선 金과 朴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 남조선의 정세, 북조선의 정세를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시험 준비를 단단히 했다. "레베제프는 이 경우에 대비해 이미 金을 '꼼꼼하게 준비시켰었다'"고 한다. 스탈린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예측한 뒤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미리 마련했었다는 것이다. 그는 金에게 특히 군사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충고했었다고 한다. 그 결과 김일성의 대답은 대체로 충실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특히 "군사 및 전략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가장 완벽하게 내보일 수 있었다"라고 레베제프는 회상했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소련군에 대해 호의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스탈린의 배려, 그리고 소련군의 주둔 및 협조가 북한에서 여러 개혁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스탈린의 환심을 사려 했다.

朴憲永의 통역을 맡았던 샤브신의 부인 샤브시나의 회상에 따르면, 스탈린의 지시에 대해 朴이 "인민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대답하자, 스탈린은 그 자리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인민이라니? 인민이야 땅을 가는 사람들이잖소. 결정은 우리가 해야지"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스탈린은 자신의 별장으로 김일성과 朴憲永의 일행을 초청해 연회를 베푼 뒤 朴을 모스크바에 며칠 머무르게 해 기업소들과 공장들을 견학시키라고 지시했다. 스탈린의 통역들의 회상에 따르면, 金은 '무서운 지도자' 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中級의 黨간부처럼 보였으며 '아첨하는 어조' 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내 스탈린에게 동의하곤 했다. 金은 긴장해 있었고 언제라도 스탈린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으며 스탈린은 金이 마음에 들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자신의 학생처럼 대하면서 강의하고 지시했다. 통역들에 따르면 스탈린은 군사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金을 감동시키면서 戰爭史(전쟁사)로부터 예들을 자주 인용했다. … (중략) 金은 진심에서 우러난 감격과 환희를 나타내며 입을 벌린 채 그것을 들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金은 열광적인 단어를 그치지 않고 반복했다. … (중략) '어린 지도자' 는 스탈린의 손에 의해서 그가 차지한 '영웅' 의 권위가 '커다란 지도자' 의 작은 손짓만으로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했다》 (《북한의 역사》, 김학준 著)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면 김일성은 스탈린에 대하여 아부했고, 朴憲永은 깐깐한 자세였던 듯하다. 김일성은 생전에 黃長燁(황장엽) 비서에게 자신이 스탈린에게 불려가 시험을 잘 쳐서 박헌영을 누르고 지도자로 뽑혔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李承晩 대통령은 1954년 미국을 방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할 때 미국 측이 韓日수교를 압박하자 "내가 살아 있는 한 수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화가 난 아이젠하워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자 李 대통령은 그의 등을 향하여 "저런 고얀 X이 있나, 저런"이라고 호통을 쳤다. 미국 대통령에게 호통 친 한국 대통령과 소련 독재자에게 아부한 북한 지도자의 차이가 오늘의 남북한 차이이다.

▲ 일본의 호세이(法政) 대학 교수 시모도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가 쓴 《아시아 冷戰史》에 따르면 1948년 4월24일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그의 별장에서 스탈린은 몰로토프와 주다노프 등 소련공산당 간부들과 만나 북한 헌법 제정 등의 절차를 결정했다.

"헌법은 1947년부터 소련 헌법을 기초로 하여 준비되었으나, 일부는 스탈린 자신이 집필했고, 또 당초 있었던 임시헌법에서 임시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스탈린이었다. 이 회의에는 북한 지도자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소련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4월 회의의 결정에 따라 8월에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이뤄지고 9월2일에 제1회 회의를 소집했으며, 8일엔 헌법을 채택, 9일엔 인민공화국 창설이 선언되었다. 國名이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러시아語를 直譯(직역)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총선으로 구성된 制憲 국회가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만든 것이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가 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선출,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북한 정권은 스탈린에 의하여 제조되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다. 한국의 정통성은 民意(민의)에 의하여 탄생한 국가라는 점에 있고, 북한 정권의 이단성은 외국인 독재자에 의한 被造物(피조물)이란 데 있다.

▲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세우면서 위대한 독립투사이자 민족지도자인 曺晩植(조만식) 선생을 숙청한 사실을 생략한 교과서도 있다.

2. 민족공멸의 北核도 비호

北의 核실험도 빼버려
美國의 對北경제제재를 北 경제 실패 원인으로 왜곡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核실험을 기술하지 않았다. 비상교육刊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核개발을 '핵 개발 의혹'으로 표현하는 등 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라는 왜곡된 제목과 함께 先軍(선군)정치와 核개발을 옹호하는 듯이 서술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유훈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를 앞세운 선군 정치를 통해 북한이 마주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다. 선군 정치의 방침에 따라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강성 대국을 목표로 내걸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으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천재교육刊, 400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 역시 핵개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문맥상 '핵개발'이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경제 상황의 호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핵개발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관리 개선 · 개조 조치'(2002)를 발표하여 기업소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생필품 교류를 위한 시장을 허용하는 등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유럽 연합 등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그러나 핵 개발 등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각종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89페이지)

지학사刊 교과서의 경우도 '북한의 통일정책'이라는 小제목 하에 짧게 처리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설정하고 해외 세력을 포섭해 대대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 정책은 核무기 개발 문제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326페이지)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남북이 '비핵화 공동 선언'(1992년)을 체결했으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고 서술했다. 2000년 이후 실행된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비핵화 공동 선언에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시험 · 생산 · 보유 등을 금하며,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자 한반도에도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383페이지)

비상교육刊 교과서 역시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내용은 간략히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다. 2000년대에 벌어진 제2차 核위기, 두 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언급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비균형적 발전, 기술 수준의 낙후, 고질적 물자 부족

등의 문제로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핵 개발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대외 협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78페이지)

그러나 핵개발 의혹을 받아 오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을 전격적으로 탈퇴하자 남북관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 사회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핵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382페이지)

북한 核개발의 실체

姜錫柱(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02년 10월 訪北(방북)한 제임스 켈리 美 특사에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어 2006년과 2009년 북한은 플루토늄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核실험을 실시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核과학자인 헤커(Hecker) 박사를 초청해 중국의 도움을 받아 구축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

북한의 核개발은 역사가 길다. 舊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 1955년 核물리연구소를 창설한 북한은 1956년 소련과 '핵에너지 평화 이용 협력협정'을 맺었다. 같은 해 북한은 핵물리학자 30명을 소련의 '드브나(Devuna) 핵 연구소'에 파견해 연수를 받게 했다.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110㎞ 떨어진 드브나市에 위치한 이 과학기지에는 소련 최대 核실험실이 있었다. 1964년 중국 최초의 核실험을 성공시켜 '중국 核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핵물리학자 王淦昌(왕감창) 등 중국의 주요 核과학자들도 이곳에서 길러졌다. 1956년 설립 이후 1990년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연구 협력이 중단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모두 250여 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1960년대부터 북한은 핵물리학 연구진을 자체적으로 길러냈다. 1962년 평북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데 이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핵물리학원을 설립해 核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했다. 1965년에는 소련의 도움으로 영변에 IRT-2000 연구용 核反應爐(핵반응로)를 건설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核연구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1979년에는 자체 기술로 실험용 核반응로 건설에 착수해 1986년 정식 운전을 시작했다.



북한이 대포동 1호의 후속으로 개발 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 700~1000kg이 나가는 탄두를 탑재하고 3500~6000km를 날아갈 수 있다.

1985년에는 영변 核시설에 사용한 核연료봉을 써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실험실 건설에 착수했다. 북한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영변 核시설 내부의 모래밭에서 核무기 개발에 필요한 高爆(고폭) 실험을 130여 차례 실시했다. 북한의 초기 핵 연구는 都相錄(도상록), 韓仁錫(한인석), 李升基(리승기) 등 越北 과학자들이 주도했다.

일본 京都(교토)대학에서 이론물리학을 전공한 도상록(1903~1990)은 해방 후 서울대 교수를 지내다 1946년 5월 월북,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 주임을 맡았다. 한인석은 해방 후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越北한 뒤 김일성종합대학 고급 교사를 맡았으며, 모스크바에서 첨단 물리학을 배우고 돌아와 1960년대 다량의 핵물리학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리승기는 1939년 교토대학에서 응용화학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공과대 학장으로 재직 중 6 · 25 때 월북했다. 1940년

대 초반 석탄으로 합성섬유 1호(비날론)를 개발한 그는 1961년 비날론 생산을 주도했고 영변원자력연구소장(1967년)과 과학원 함흥분원장(1987년)을 지내는 등 북한 과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북한은 현재 核개발 핵심 고급인력 200명을 포함, 전문 인력 3000명, 기술 인력 6000명 등 총 9000여 명의 核과학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核물리학 분야의 핵심 교육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성이과대학이다. 평성이과대학은 핵물리학, 화학, 수학 등 총 다섯 개 학과로만 구성된 특수대학이다. 이 외에 평양고등물리학교, 김일성고등물리학교 등도 물리학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주요 교육기관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이 정말 核武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核武器 제조 기술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1950년대 이미 모든 원리가 밝혀진 기술이다. 원자로 기술과 核무기 기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한 핵물질을 사용해 원자로는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는 반면, 核무기는 짧은 시간에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열 시간의 조절 기술에 불과하다.

과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의한 核武器 개발 당시, 현대와 같은 대용량의 슈퍼컴퓨터가 아닌 手記(수기)식으로 계산해 설계했으나 큰 문제점은 없었다. 북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자체 기술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설계해온 만큼 어떠한 모형의 핵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히 묘사, 계산 가능한 核계산 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核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異說(이설)이 있을 수 있으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핵실험의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낮아졌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무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다수 核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3. 北의 사회주의 건설 운동에 대해 긍정적 서술 일관

실패한 北 천리마 운동 · 붉은기 쟁취 운동 美化
北의 과도한 국방비, '韓美日 공조체제' 때문이라고 왜곡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慢性(만성)적인 북한 경제의 고립과 파탄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실패로 돌아간 사회주의 건설 운동 '천리마 운동'과 '붉은기 쟁취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 경우 "북한이 1980년대 이후 합영법 등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핵 개발 등 무력 도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기술해 북한 경제의 파탄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北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도 韓美日 공조체제 때문이라고 왜곡했다.

다음은 6종 한국사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제의 부분이다.

▲ 한 · 미 · 일 공조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중한 국방비의 부담과 에너지의 부족, 사회 간접 시설의 미비, 기계 설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북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았다. … (중략) 19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건설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관리 개선 · 개조 조치(2002)'를 발표하여 기업소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생필품 교류를 위한 시장을 허용하는 등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89페이지)

▲ 북한은 1957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천리마 운동이 시작되었다.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 되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이후 북한 전역의 생산 현장에는 속도전과 경쟁이 지배하였다. … (중략) 1970년대에는 천리마 운동의 뒤를 이은 3대 혁명 운동과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 전개되

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은 경제 부분에서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시작하였다. 여러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의 경제 성장을 과시하기 위한 건축물들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천재교육刊, 391~392페이지)

▲ 1956년 말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이라는 구호 아래 인민들을 일치단결시켰다. 이때의 경이적인 속도를 '천리마 속도' 라고 불렀다 한다. 평양시 건설 때는 14~16분에 한 채씩 주택을 조립하였기 때문에 '평양속도' 라는 말이 나왔다. … (중략) 1974년부터는 '속도전' 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 노력 경쟁의 공식 구호로 채택되었다. (삼화출판사刊, 330페이지)

▲ 북한은 6 · 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았다. 먼저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복구 및 경제 건설 3개년 계획(1954~1956)을 추진하였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북한은 이어서 추진한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도 1년 앞당겨 완료하였다. … (중략) 북한은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영화 · 집단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수도 평양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선전하는 상징도시로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었다. (지학사刊, 284페이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북한의 경제개혁

북한은 6 · 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한다는 미명 하에 경제재건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주민들은 절대빈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경제건설의 중점을 군사력 건설에 두었다. 이에 崔昌益(최창익) 부수상은 "기계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정책에 반대했으나 김일성에게 수정주의자로 낙인찍혀 숙청당했다.

김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57~1961년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세웠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스탈린식 강제 대중동원으로 '천리마 운동' 이라는 생산독려 운동을 추진했는데 이는 1958년 중국의 毛澤東(모택동)이 추진했던 '대약진운동' 과 유사한 것이었다.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을 통해 철강생산량 2억 톤, 곡물생산량 5억 톤을 생산하여 급진적인 이상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인민공사' 를 만드는 등 이 운동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대약진운동 중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4害' , 즉 파리 · 모기 · 쥐 · 참새를 퇴치하는 '4害 퇴치운동' 이었다. 경제 문외한인 김일성은 모택동의 생산운동을 모방하면 경제건설의 목표가 쉽게 달성될 것으로 믿고 '천리마 운동' 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기계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동력 동원만으로는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결국 '천리마 운동' 은 집단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한 운동이라는 汚名(오명)을 낳았다.

북한의 경제 실패는 1961~1967년 사이 진행된 제1차 7개년 계획에서 또 다시 나타났다. 1956년 2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 대립을 거듭하던 중국과 소련은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소련은 對중국 원조협정을 파기시켰으며 1969년에는 국경에서 무력충돌까지 빚었다. 당시 김일성은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다가 중국과 소련간의 等距離(등거리) 외교를 지향했으나, 내심 중국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김일성을 비판하게 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됐고, 북한은 결국 中蘇 양국 모두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됐다.

기대했던 경제원조가 없어지자 제1차 7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은 실패

로 이어졌고, 북한은 窮餘之策(궁여지책)으로 소위 自力更生(자력갱생)을 경제 건설 노선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全軍(전군)의 현대화를 위한 첨단무기 개발은 물론 부족한 기계설비와 원재료를 보충하는 데도 실패했다. 국내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노후화된 채광 설비를 개선할 수 없어 철광과 석탄 생산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에너지 부족은 생산 공장의 가동에 차질을 가져와 기간을 3년이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제1차 7개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일성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해소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해소 ▲여성의 가사노동 해방 등을 목표로 한 제1차 6개년 계획(1971~1976년)을 내세우게 된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대중동원을 위한 슬로건 '100일 전투'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내놓은 궁여지책이었다. 이 기간에 7·4 남북공동선언(1972년)이 합의되면서 南北 고위관리가 南과 北을 왕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朴正熙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보고 초조해진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플랜트(생산시설 및 공장) 수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아연 등의 국제가격이 폭락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中東의 오일쇼크로 극도의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북한은 외화 부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외채상환과 수입대금의 지불이 곤란하게 되어 국제 사회의 신용을 잃게 됐다. 1975년 북한은 5억 5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1977년 대외부채는 30억 달러에 달했다. 결국 김일성은 1977년 신년사를 통해 철강, 시멘트 등의 생산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으며 수송부문의 부진 등으로 6개년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3번의 경제 계획이 연달아 실패한 것이다.

우상화 사업으로 경제난 가중

북한은 1978년부터 1984년 동안 제2차 7개년계획을 진행한다. 이 계획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수립된 계획으로, 목표는 경제의 자립 및 과학화, 운송 부문의 현대화와 더불어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민들의 소득을 1.9배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 농산물 생산목표는 1000만 톤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임야개간과 간척사업이 실시됐다. 계획의 슬로건은 '속도전'이었는데 이는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한 것으로써 김정일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김일성의 70세를 기념하기 위해 거액을 투입해 170미터 높이의 주체사상탑을 건립하는 등 불필요한 곳에 자금을 집중했고, 이로써 경제적 곤란은 더욱 가중됐다. 또한 외자도입을 위해 제정했던 한 合營法(합영법)이 1984년 공포됐으나 자본의 도입은커녕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북한은 1985년 2월, 성과 발표도 없이 제2차 7개년 계획의 종료를 선언했다.

북한은 재차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을 세웠다. 이 계획은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과제로 정했다. 이 시기는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하고,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때였다. 국제 정세는 북한에 매우 불리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자유화의 시대가 전개됐고, 1991년에는 소련도 사회주의를 포기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 수립한 7개년 경제계획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정

적인 원인은 對소련 무역의 격감과 무역 결제방식의 변화에 있었다. 과거에는 우호적 가격에 의한 무역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지만 소련이 개방경제가 되자 硬貨(경화)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외화 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으로서는 소련과의 무역거래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제3차 7개년 계획도 1993년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종료하게 된다.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북한 경제상황의 악화를 보고했던 姜成山(강성산)은 전력, 철강, 화학섬유, 농산물 생산의 부진을 시인하고 제3차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장계획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1961년 이래 한 번도 북한의 계획경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이후 북한의 경제악화는 더욱 심화되어 극도의 곤란에 직면하게 됐고, 주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金正日, 中의 개혁개방을 수정주의라고 비판

상황이 이런데도 1983년 6월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金正日은 6월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견학 결과 보고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완전히 없게 됐다. 오직 있는 것은 수정주의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중국의 鄧小平(등소평)은 분노했다.

등소평은 수차례에 걸쳐 경직된 북한의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일례로 1993년 5월30일 등소평은 산동성 청도에서 북한의 강성산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7, 8년 후에는 남한에 흡수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제가 파탄나면 공산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며 북한에 대해 개혁 · 개방을 권유했다.

등소평의 충고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1994년 7월 김일성의 장례의식 조문사절로 장관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 보내 喪主(상주)인 김정일에게 경제개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등소평은 자신의 비서인 王瑞林(왕서림)을 북한에 보내 ▲경제발전과 국가건설 ▲조선반도의 비핵화 ▲휴전선에서의 군사 활동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對北정책 6개항을 김정일에게 전달했다. (1994년 7월22일자 〈홍콩신보〉 인용)

중국 지도자의 이러한 간곡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혁이 '사회주의 왕조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한 김정일은 논문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반대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994년 11월1일자 보도에서 김정일의 논문을 소개하며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를 비난했다.

〈과학으로서 사회주의의 실패는 아니고,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수정주의자들의 파산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수정주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과학성 · 진리성에 의해 반드시 재생하여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개혁 · 개방을 수정주의로 치부해버린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권좌에 앉아 자신의 私利私慾(사리사욕)만 채우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김정일이 권좌에 오르자마자 시작한 것이 일명 '고난의 행군' 운동이다. 이 운동은 餓死之境(아사지경)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김정일 독재체제 존속을 위한 대중동원 운동이었다. 그러나 정치운동으로 피폐한 북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빈곤이 자신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반영했는지, 북한은 2002년 7월 배급

제 폐지, 물가 · 임금 · 환율의 현실화 및 기업의 자율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核을 부둥켜안고 경제 회생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空念佛(공염불)에 불과하다. 북한 경제는 지금보다 더 심한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4. 실패한 北 토지개혁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南은 부정적으로

北 토지개혁, 개인의 소유권 인정한 적 없어
李承晩의 '농지개혁'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분수령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남북한의 토지개혁 문제와 관련,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성공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6種 교과서 모두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실시해 농민에게 유리한 개혁이었던 것처럼 서술했다. 교과서에 실린 남북한의 토지개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군정은 쌀 공출제를 폐지하여 곡물의 자유시장제를 실시하고, 소작료를 3분의 1로 낮춘 3 · 1제를 채택하여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책은 토지 개혁, 소작료 추가 인하와 금납제 등을 바라는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 (중략) 38도선 이북에서는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전신이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광복 당시 남북에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였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천재교육刊, 314페이지)

▲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이 단행되자 미군정도 농지 개혁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민주당과 지주층이 반발하여 전면적인 농지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 농지에 한하여 원래의 소작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중략) (남한의) 농지개혁은 농민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주가 미리 땅을 팔아치운 경우도 있어 농지 개혁 대상 토지가 줄기도 하였다. (비상교육刊, 318~319페이지)

▲ 북한에서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은 토지 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입법을 서둘렀으나, 지주층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미군정청은 결국 1948년 총선거를 앞두고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귀속 농지 분배를 실시하였다. … (중략)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38선 북측 지역에 자신들의 안정된 정권과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 및 일본인, 친일파,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분배한 결과, 이후 농가는 평균 약 16,137㎡ 정도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수확량의 30%를 현물세로 내었다. (삼화출판사刊, 315페이지)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의 소유지, 친일 민족 반역자와 지주의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 (중략) 몰수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준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 노동자, 소작농, 소지주에게 가족 수와 노동력에 따라 점수를 매겨 나누어 주었다. (미래엔컬처그룹刊, 341페이지)

▲ 1946년에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남한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중략) 농지개혁의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으며,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벗어나 자기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갚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



6種 중 3種의 교과서에 실린 북한의 토지개혁 선전 포스터

운 농민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중략)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친일파를 숙청하였으며,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한 노동법과 남녀평등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 5정보를 상한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법문사刊, 317~318페이지)

▲ 북한의 토지개혁은 국가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영세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많은 지주들이 토지는 물론 가축과 주택 등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토지는 농민에게 가족의 노동력에 비례하여 분배되었다. 분배된 토지는 매매 · 대차 · 저당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경작권만 갖는 셈이었다. … (중략) 북한의 토지개혁은 지주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농민이 국가의 땅을 경작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의 감퇴를 가져왔다. (지학사刊, 272페이지 '도움자료')

농민에게 주었다가 빼앗아

1946년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건설하겠다는 스탈린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북한은 급속도로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에 편입됐다.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소련군 점령사령부는 가장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같은 해 3월5일 토지개혁법이 공포되어 사원을 비롯한 개인소유의 농지를 모두 몰수해 과도적 조치에 따라 무상으로 소작인들에게 분배했다. 이러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김일성이 武裝(무장)된 소련 점령군을 앞세워 불과 20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김일성의 명의로 발표된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의 기본내용은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5町步(정보, 1만 5000평)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소작제를 철폐한 뒤, 몰수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分與(분여)하는 것이었다.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道인민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토지대장에 登載(등재)하게 했다.

북한은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제5조를 통해 "몰수한 토지전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잉여한다"고 규정하여 명목상으로나마 소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同법령 제10조를 통해 "농민에게 분양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을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流動化(유동화)를 금지했다. 애초부터 사회주의 방식으로 이뤄져 분배농가(소작농)에게 분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한 남한의 토지개혁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46년 10월1일 '토지개간법령'을 공포해 토지개간의 허가제 시행과 개간 토지의 소유권 인정 개간 토지의 매매 금지조치를 취했다. 토지재산의 처분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농민에게 耕作權(경작권)만을 부여하는 조치였다. 1947년 3월22일 북한은 산림에 대한 결정서와 대지 및 잡종지에 관한 결정서를 공포해 묘지 등을 제외한 모든 산림을 국유화하고 주택의 사적 임대제를 폐지했다. 1948년 3월12일에는 '대지 및 공지 이관에 관하여'를 공포해 도시 토지의 국유화를

준비했다.

토지개혁으로 북한의 농업은 소규모 개인 농업이 중심이 된 소상품 생산구조로 전환됐다. 북한은 이후 개인농을 협동농장으로 흡수하는 농업 집단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6 · 25 전쟁 이후 4~5년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급속하게 진행됐다.

첫 번째 단계(1953년)에서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토지, 가구, 농기구 등을 공동 이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확물을 투입된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하는 '노동 상호부조' 형태를 취했다.

두 번째 단계(1954~1957년)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토지를 협동조합에 출자, 집단 경영케 하고 노동의 기여도와 토지 출자량에 의거해 생산물을 분배하는 反사회주의적 형태를 취했다.

세 번째 단계(1958년)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 수단의 집단화로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집단 소유와 집단 경영체제를 이루었다. 북한에는 현재 약 3000여 개의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 경지 면적 중 협동농장이 90%, 국영농장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형식상 농업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무원의 농업위원회, 道농촌경리위원회,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1946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의해 실시된 북한에서의 토지의 개인소유화는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끝마친 농업협동화와 함께 종결됐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김일성의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토지개혁 법령 5조에서 밝힌 '무상 분배한 땅을 영원히 농민의 소유로 한다'는 김일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승만, "우리의 '자유화' 조치에 놀랄 것"

이승만의 사회개혁을 위한 계획 중 농지개혁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사안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한국 사회의 탈농-상공업화를 주장했다. '일제에 의해 몰수된 모든 토지를 소농에게 분배할 것'과 '대지주制를 혁파해 소농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R. Ol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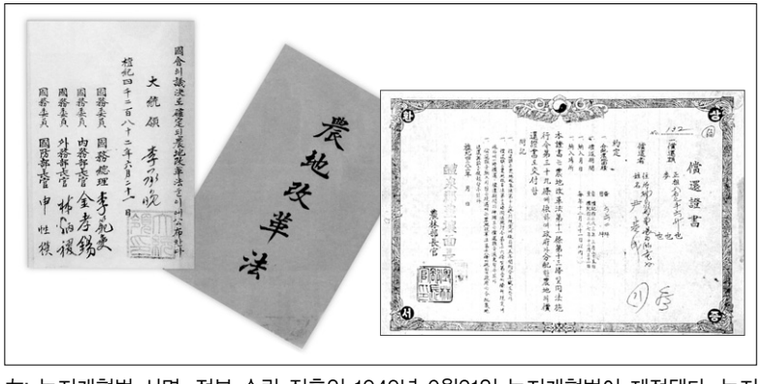
이승만은 농지개혁에 한평생에 걸친 자신의 사상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존의 지주제 해체가 사회경제적 평등화에 기여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승만에게 지주제 몰락이나 평등화의 실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을 신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자본주의 산업화를 위한 조건이나 계기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농지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절약을 위해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토지소유자가 국가적 차원의 개발을 어렵게 할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이 개발을 보장하고 또 토지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의 입장은 좌익계 정치집단과도 달랐고, 지주제를 배경으로 한민당과도 같지 않았다.

특히 이승만은 5 · 10 총선거를 앞두고 미군정 당국이 1948년 봄에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歸屬(귀속)농지 拂下(불하) 결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평등주의와 산업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던 이승만의 생각에 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귀속농지 불하결정이 내려

진 직후 이승만은 올리버(R. Oliver)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신생 정부가 파시스트적, 반동적, 극우적일 것이라고 지껄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조국을 '자유화' 하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착수하게 될 것은 바로 토지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군정 당국이 한국 국회의 동의 없이 귀속농지를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다가, 총선거를 불과 6주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편지에서 언급된 '자유화' 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평등주의와 산업주의의 병행 추진이라는 이승만의 평소 지론을 감안할 때 그는 토지개혁에 관해 자신만의 心算(심산)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이승만은 귀속농지를 국가주도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또 일반 농지에 대한 개혁 역시 지주들에 대한 확실한 전업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자본가 형성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려 했다. 이와 같은 이승만의 구상이 현실화됐다면 농지개혁의



左: 농지개혁법 서명.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6월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다. 농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어 농민생활이 향상되고 자본주의 경제의 균형과 발전에도 기여했다. 右: 농지상환증서

全 과정이 일제가 남긴 산업생산 및 기술수준과 결합되어 한국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산업화가 정부 수립과 함께 바로 시행됐을 것이다.

농지개혁에 관한 이승만의 초기 구상은 차질을 빚었다. 미국이 군정 말기에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속농지 분배를 일방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체는 본격적인 토지개혁의 예고편이 되었고, 이승만도 정부 수립 직후 농지개혁에 착수했다. 그가 당시 지주 계급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與黨(여당)인 한민당의 입장을 극복하고 농지개혁을 단행한 것은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6 · 25 전쟁 발발 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 을 통해 재개되어 남한 전역에 실시됐다. 그 결과 총 경지의 약 40%에 달하는 89만 2000정보의 땅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현한 농지개혁은 삼림과 임야 등 非경지를 제외한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문자 그대로의 '농지개혁' 이었다.

柳永益(유영익) 연세대 명예교수는 李 대통령의 농지개혁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농지개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개혁은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양반지배층의 몰락을 초래하며 地主 배경의 한국 민주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사회 · 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셋째, 6 · 25 발발 직전에 개시되어 전쟁 중에 완료된 이 개혁은 전쟁기간 남한 농민들이 북한군에 호응하는 것과 같은 내부동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유영익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 통치하에서 완결된 농지개혁은 조선왕조 건국기에 李成桂(이성계)가 단행했던 科田法(과전법) 이래 최대의 토지 개혁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5. '화폐개혁' 은폐하고 '북한식 개혁개방' 선전

한국의 경제 失政은 과장, 北의 失政은 은폐
실패한 北의 화폐개혁, 교과서 모두 다루지 않아
北정권이 '개혁 개방' 추진한 것처럼 거짓말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경제를 다루면서 '합영법'(합작회사경영법)과 '개성공단' 등은 집중적으로 다룬 반면 실패한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11월 시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1947년 단행된 1차 화폐개혁의 목적은 日帝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화폐를 1:1로 교환하는 것이었으며, 2차(1959년)는 6·25 전쟁에서 비롯된 인플레 방지, 3차(1979년)는 遊休(유휴)화폐의 유통, 4차(1992년)는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각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화폐개혁은 주민 경제생활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철저히 黨의 이익만을 추구한 정책이었다.

이 가운데 4차와 5차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조치였다. 1992년 11월 단행된 4차 화폐개혁은 新券(신권)과 舊券(구권)을 교환한다는 명목 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쌈짓돈을 당이 착취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2009년 11월30일자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은행들은 만 17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300원씩 교환해줬고 개인 돈은 2만 원까지 적금으로 받아주었으나 그 이상은 전면 무효화했다. 한도를 넘어간 나머지 돈은 은행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출금해 주지 않았다. 이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조선족들까지 상당수 피해를 입었으며,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북한 화폐 또한 교환해 주지 않은 것으로 〈데일리NK〉는 보도했다.

가장 최근 실행된 2009년 11월의 5차 화폐개혁 역시 실패로 끝났다. 화폐개혁 두 달여 만인 2010년 2월1일,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시장 통제를 풀고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를 허용해 反시장 정책을 철회했다. 화폐개혁을 담당했던 박남기 조선노동당 계획경제부장까지 총살되는 등 북한 내부에서도 화폐개혁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5차 화폐개혁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쌀을 포함한 물가 폭등 ▲위안화 거래에 따른 중국 경제로의 예속화 ▲지급되는 급여와 배급 감소에 따른 餓死者(아사자) 증가 ▲노동당의 경제지배 구조 강화를 들 수 있다. 실제로 화폐개혁 직전(2009년 11월22일) 2200원(舊券 기준)이었던 평양의 쌀값(kg당)이 화폐개혁 이후(2010년 3월8일) 1300원(舊券 13만원 해당)이 되었다. 2200원에서 13만원이 되었으므로 약 59배나 뛴 셈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졌다.

6種 교과서 중 북한의 실패한 화폐개혁과 그 부작용을 다룬 교과서는 없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특구'를 언급하며 이렇게 평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 활용한다는 실리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북한식 개혁·개방은 국제 사회의 신뢰 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401페이지)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로 미루어 볼 때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위와 같은 기술은 사실 왜곡이다. 북한은 그간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마다 개성공단 계약 무효와 금강산 관광 철폐를 주장하며 억지를 부렸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黨 주도에 의한 화폐개혁 역시 시장과 정부 간의 정상적 역할로 보기 어렵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포괄적으로만 서술해 북한이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적절히 혼합해 운용하는 것처럼 기술했다. '북한식 개혁 개방'이란 표현도 터무니없는 美化다. 북한이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 親北세력이 북한 정권보다 더 북한을 선전해 주기 위하여 만든 용어 같다. 북한은 개혁 · 개방을 수령체제 붕괴로 여긴다.

'외화 부족'으로 식량난 악화?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북한의 식량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북한의 경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다. 매년 600만 톤이 필요하지만, 생산력 저하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400만 톤을 밑돌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화 부족과 국제 식량 가격 폭등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390페이지)

이 교과서는 북한 식량난에 대해 '생산력 저하'와 '자연재해' 탓이라고만 설명할 뿐 黨이 지배하는 一黨(일당) 독재체제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외화 부족'과 '국제 식량 가격 폭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화폐개혁에 대한 설명은 물론, 이로 인한 쌀값의 폭등과 식량난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비상교육刊 교과서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었고 생필품 시장을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경제 체제도 일부 도입하였다"(378페이지)라고 적었다. 시장경제를 부인한 화폐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다.

법문사刊 교과서는 '북한 경제의 문제점'(363페이지)이라는 小제목 하에 북한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비교적 자세히 다뤘다. "군사와 경제의 병진 정책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군사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주민의 소비 부분이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화폐개혁의 실행과 실패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지학사刊 교과서에도 화폐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2002년 7 · 1 조치와 1991년 나진 · 선봉 경제특구,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소개하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 정책은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323페이지)는 기술뿐이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서도 화폐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북한 경제가 발전을 거듭하다 침체에 빠진 것처럼 간단히 기술했다.

> 1970년대에는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1971~1976년)을 수립하고 생산력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지속적인 사상적 독려와 노력경쟁을 동반하여 이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전 기간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증대되었고, 노동자 · 농민의 실질 소득도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났다. (379페이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년)을 추진하면서 북한 경제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자체의 자원과 기술만으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의 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없었다. … (중략) 1980년대 초부터 경제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380페이지)

역사는 민족과 국가의 興亡(흥망)과 그 因果(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左편향 교과서는 계급적 시각과 친북적 성향에 집착, 사물을 편향적으로 보니 역사의 흐름과 진실을 놓친다. 그런 左傾(좌경) 이념적 집필 방침이 적용되니 사실 왜곡이 일관성 있게 전면적으로 일어났다. 이건 역사가 아니라 선전물이다.

6. 北의 주체사상 선전영화가 교과서에 등장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9장 '북한의 사회와 문화'(392페이지)에서 공산 혁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영화 '꽃 파는 처녀'를 소개했다. 교과서는 '꽃 파는 처녀'에 대해 "현재까지도 북한이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며 "김정일은 이외에도 수많은 영화와 연극 작품들의 제작에 관여하면서 주체사상에 기반 한 북한만의 독특한 예술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사진과 함께 문제의 영화를 소개했다.

'꽃 파는 처녀'는 농민과 地主(지주) 사이의 계급투쟁을 기반으로 공산사회 건설의 정당성을 선동하는 북한의 '5대 혁명 가극' 가운데 하나다. 1989년 개최된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는 북한의 적십자 대표들이 '꽃 파는 처녀'와 '피바다' 등의 혁명 가극을 서울에서 3시간 10분씩 4회에 걸쳐 공연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고향방문단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보법 위반 문제작이 버젓이 교과서에

2007년에는 헌책방을 운영하던 김 모 씨가 '꽃 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 등을 인터넷상에서 거래해 국보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연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선동하는 문제작이 이제는 버젓이 高校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이다.

1972년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던 '꽃 파는 처녀'는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를 배경으로 '꽃분이'라는 어린 처녀가 공산주의 혁명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꽃분이' 일가와 지주와의 계급적 갈등을 통해 이들이 겪는 生活苦(생활고)를 反日(반일)-反封建(반봉건)의 계급투쟁으로 연결시킨 뒤, 마지막에서 김일성의 抗日 빨치산 투쟁을 부각시킨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 출판사刊《백과전서》는 '꽃 파는 처녀'를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 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명작"이라고 소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공산혁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영화 '꽃 파는 처녀'를 소개했다.

개하고 있다. 북한의 잡지 〈조선화보〉는 이 영화에 대해 "나라를 빼앗긴 인민의 민족적 수난과 지주-자본가 계급의 횡포와 억압, 착취 밑에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예술적으로 그리면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혁명의 위대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현재 북한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대부분 1970년대에 창작되었다. 1970년대가 북한에서 집단주의 생활이 정착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꽃 파는 처녀'가 제작된 1972년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해였다. 환갑을 맞이한 김일성이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올랐고, 헌법에는 '주체사상'이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본격적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김정일은 1972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 같은 후계자 경쟁과정에서 예술 · 문화의 선동부문을 활용했다.

김정일의 주도하에 제작된 '꽃 파는 처녀'는 '피바다'와 함께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김정일 후계작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은 2009년 5월1일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을 비롯,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등과 함께 '꽃 파는 처녀'를 관람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이외에도 수많은 영화와 연극 작품들의 제작에 관여하면서 주체사상에 기반한 북한만의 독특한 예술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설명은 북한 정권의 선전문을 연상시킨다.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모든 예술적 활동이 철저하게 黨의 독재를 위하여 복무하는 우상숭배 체제에서 '예술'은 존재할 수 없다. 독특한 예술이 아니라 '선전 선동 연극'이라고 설명해야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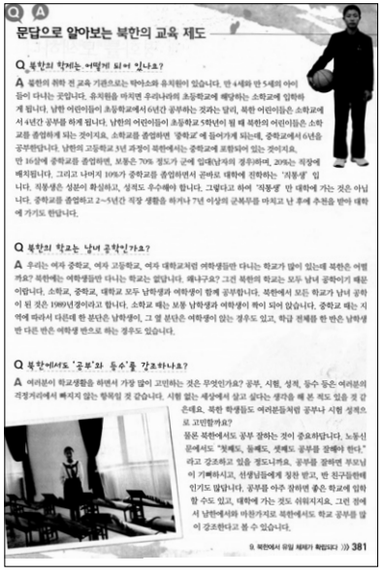
7. 北의 전체주의 교육을 비판 없이 소개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한의 교육제도'에서 북한의 학제 및 학생들의 일상생활 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 시험, 성적, 등수 등은 여러분의 걱정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일 것 같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학생들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나 시험 성적으로 고민할까요? 물론 북한에서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노동신문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칭찬 받고, 반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 할 수도 있고, 대학에 가는 것도 쉬워지지요. 그런 점에서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학교 공부를 많이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1페이지)

북한의 교육목표는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제43조)된 것처럼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로, 智德體(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김일성은 1977년 9월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한의 교육 제도

Q 북한의 학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북한의 취학 전 교육 기관으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만 4세와 만 5세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유치원을 마치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남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6년간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 어린이들은 소학교에서 4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남한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 북한의 어린이들은 소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에서 6년을 공부합니다. 남한의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북한에서는 중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 16살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70% 정도가 군에 입대(남자의 경우)하며, 20%는 직장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 입니다. 직통생은 실은이 확실하고, 성적도 우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직통생' 만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가기도 한답니다.

Q 북한의 학교는 남녀 공학인가요?

A 우리는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처럼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에는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없답니다. 왜냐구요? 그건 북한의 학교는 모두 남녀 공학이기 때문이랍니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합니다. 북한에서 모든 학교가 남녀 공학이 된 것은 1980년경이라고 합니다. 소학교 때는 보통 남학생과 여학생이 싸우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서로에 대하여 다른에 한 끝난은 남학생이, 그 덜 분단은 여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학급 전체를 한 반은 남학생 반 다른 반은 여학생 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북한에서도 '공부'와 '등수'를 강조하나요?

A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 시험, 성적, 등수 등은 여러분의 지정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일 것 같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학생들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나 시험 성적으로 고민할까요?

물론 북한에서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노동신문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칭찬 받고, 반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대학에 가는 것도 쉬워지지요. 그런 점에서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환경을 美化한 삼화출판사刊 교과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金氏 一家 찬양은 뺀 채 "북한에서도 공부를 강조한다"는 式으로 기술했다.

서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지침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았다. 테제란 '어떤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서술적 강령'으로 풀이된다. (1992년版《조선말 대사전》) 이 테제는 북한의 교원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계급성, 혁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黨性(당성)과 노동계급적 성격이 교육에서 나타나야만 黨과 革命에 충실한 혁명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육을 통해 북한 당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및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무한 충성을 바치는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 교육과 기술 교육의 양대 과목을 위주로 편성되는데, 인민학교는 4년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 시절'을 비롯해 '공산주의 도덕', '국어', '수학' 등 총 12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6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 활동', '黨 정책', '수학' 등 총 23개 과목을 교육한다. 북한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당과 수령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사상 교육을 충실히 받을 권리만 주어지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세계관과 창조적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수령의 총과 폭탄이 되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개인 독재에 순응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자율적 · 창조적 능력을 말살하는 교육이다. 더불어 출신 성분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주민들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어, 抗日혁명 유가족 및 黨 · 軍 간부의 자녀들은 별도의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교과서가 크게 부족하고, 교사나 학생들이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하는데 몰두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를 포기한 아이들은 꽃제비가 되어 流浪(유랑)하고 있다. 북한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회다.

8. 실패한 北의 비날론 생산, "北 의복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소개

삼화출판사刊 한국사 교과서는 380페이지 '역사의 창'에서 북한의 核과학자인 李升基(리승기)와 그가 개발한 비날론(주체섬유)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리승기(1905~1996)는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합성 섬유인 비날론을 발명하였다. 이 섬유는 카바이드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석회석과 무연탄이 풍부한 북한에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 1960년에 김일성은 "모든 것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공장 건설을 진두지휘하였다. 비날론의 생산으로 무명 · 삼베 · 아마 등과 같은 천연 섬유에 의존하던 북한의 의복 생활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380페이지)

代를 이어 北 정권에 충성한 월북 核과학자 리승기

李升基는 6 · 25 전쟁 발발 직후 李鍾玉(이종옥, 前 북한 부주석)의 포섭에 넘어가 제자들과 함께 越北(월북)한 과학자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력영웅', '인민과학자' 칭호를 받았다. 1905년 전남 담양군 출생인 리승기는 중앙보통학교를 거쳐 1928년 일본의 마츠야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31년 교토(京都) 제국대학에 진학해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교토 제국대학 화학연구소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리승기는 1939년 사쿠라다 이치로(櫻田一郎) 등과 함께 비날론 합성에 성공, 아시아 최초로 합성 섬유를 만들었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 공대 학장을 지냈으며, 越北 후 1962~1990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기도 했다. 리승기는 비날론 개발로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1959년 제1회 과학부문인민상을 받았다. 1962년에는 사회주의권의 노벨상이라 불리던 레닌 상까지 수상했다. 김일성은 리승기가 잠시 병으로 누웠을 때 100년 된 산삼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비날론의 개발자 리승기를 소개했다. 교과서는 실패한 北의 비날론 생산을 성공한 것처럼 기술했다.

북한은 비날론의 상용화를 위해 1961년 5월 흥남에 '2 · 8 비날론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비날론은 북한 정권의 선전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석탄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일론 등 다른 합성섬유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2 · 8 비날론공장'은 삼화출판사刊 교과서가 서술한 것처럼 북한의 의복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커녕, 70억 달러를 투자한 '남포갑문', 40억 달러를 투자한 1989년의 '세계청년학생축전'과 함께 북한 경제를 파탄시킨 대표적 상징물로 전락했다.

리승기는 1967년 영변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초대 연구소장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북한은 리승기의 연구소장 재직 시절 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1979년 5MWe(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착공해 19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영변 원자력연구소장은 핵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직책으로 리승기는 내폭형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핵공학 기술이라기보다는 화공학 기술이기 때문에 리승기의 역할은 상당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리승기

를 통해 자체 양성된 핵개발 인력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 가운데 특출한 인재들은 연간 수십 명씩 소련의 드브나(Devuna) 핵 연구소에 파견되어 현장 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했다.

북한 원자력공업부 공무원 출신 탈북자 김대호 씨는 著書(저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다》에서 리승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93년 여름, 본인은 평양 101 핵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간부로부터 북한이 低爆雷管(저폭뇌관)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핵탄두 폭발 시 통상 3만도 이상의 고온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저온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황장엽 씨도 북한 고위관료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본인에게 최근 이야기한 적 있다. 당시 연구자들 사이에선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리승기 박사는 그 전범자의 한사람으로 재판 받게 될 것' 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리승기는 생전 함흥과학원 근처 2층 고급빌라에서 살았으며 사망 후 남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북한의 '애국열사릉' 에 안장됐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代를 이어 북한 정권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 북한의 대외홍보잡지 〈금수강산〉(2008년 1월호)은 리승기의 맏아들인 이종과(교수)가 '공훈과학자' 로 화력발전소에 촉매법에 의한 발전기냉각용 수소정제체계를 도입했으며, 抗日투쟁 구호가 새겨진 '구호나무' 보존에 기여하는 등 중견 과학자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과의 맏아들 이승일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둘째 아들 이명일은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교수이며, 딸 이옥이는 김책공대 교수로 알려져 있다.

함께 보기

《북한의 진실과 허위》 (황장엽 著, 시대정신刊)
《김정일 로열패밀리》 (이한영 著, 시대정신刊)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著, 월간조선사刊)
《북한을 선점하라》 (김성욱 著, 세이지刊)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조갑제 著, 조갑제닷컴刊)
《1984》 (조지 오웰 著)

11장

천안함 폭침 등 北의 도발 은폐

1. 南 인권문제는 신랄하게, 北 인권문제엔 침묵

'내재적 관점'으로 北의 反인류적 범죄 비호

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남한 인권 문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 1990년대 발생한 300만 대량餓死(아사) 사태를 비롯해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식량난 등 현존하는 북한 문제의 핵심인 인권유린 문제와 탈북자 문제가 수업시간에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아예 '內在的(내재적) 관점'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했다.

지학사刊 교과서는 중국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 망명하려다 중국 공안

에 제지당하는 탈북자의 사진을 소개했으나 탈북 이유를 경제난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국제교류의 축소와 자연재해 때문에 기아와 탈북이 일어났다고 소개할 뿐,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북한 경제는 국제 교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겹치면서 식량, 에너지, 생필품, 외화 획득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탈북자가 속출하였지만 북한 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323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北의 경제 실상, 식량난, 인권 실태를 다뤘다. 그러나 식량난의 이유로 '생산력 저하' 및 '거듭되는 자연재해'와 함께 '외화 부족'과 '국제 식량 가격 폭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인도적 식량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굶주림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對北지원을 촉구하는 듯이 서술했다. 이어 교과서는 김일성-김정일 1인 독재에 의한 인권유린이 아니라 '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 문제만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국제 사회에서 바라본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약을 비롯하여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거주 ·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 분류에 의한 인민들의 차별 대우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인권 문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 문제이다. 韓中 국경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역사추적', 390페이지)

‘코리아 인권’, ‘우리식 인권’

가장 왜곡이 심한 것은 천재교육刊 교과서였다. 교과서는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 라는 제목 하에 경제난과 북한 주민의 飢餓(기아) 문제를 간략히 다룰 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아 문제의 원인은 자연 재해와 경제난이며, 이 경제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와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 의 탓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자연재해,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홍수와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의 가동률도 크게 떨어졌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이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 획득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피해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일부는 한국으로 건너왔다. (400페이지)

또한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단원의 ‘단원탐구’ (402페이지)에서 남북한의 인권觀 차이를 설명하는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3.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해 보자.

(가) 남북한 사이에는 인권관에 차이가 있다. 첫째, 인권을 대하는 관점에서 남한은 보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남한은 개인주의적 인권관을 갖는 데 비해 북한은 집단주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남한이 시민 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 데 비해 북한은 사회 경제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서보혁,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나)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의 주요 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권을 설명할 때, 언론 · 출판 · 집회 ·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여행의 자유 등 시민적 · 정치적 권리보다 완전 고용, 무상 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의식주 보장, 문화 시설 보장, 남녀평등 등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북한 현대사)

자료 (가)의 출처인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의 著者(저자) 서보혁(現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화여대 연구교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북한인권법안’ 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서 씨는 2009년 4월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을 보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과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은 결국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운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동 법안 제14조 민간단체의 非정치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최근 對北 삐라살포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법안의 취지와 달리 남북갈등, 국내여론 분열만 초래



2010년 10월 다큐멘터리 'KBS스페셜'에서 방영된 23세 '꽃제비'(女)의 모습. 평안남도에서 촬영된 장면이다. 이 꽃제비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다.

하고 북한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0년 10월20일字, 참여연대 칼럼(제목: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외교적 방법을 總동원하여 對北 제재에 나섰다"며 북한에 의한 천안함 爆沈(폭침)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남한 정부의 南北 합의 이행 무시와 북한의 先핵포기 요구로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천안함 사태로 최악의 상태를 지내고 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때이나, 명분과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며 始終一貫(시종일관) 북한을 옹호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2007년 10월17일, 코리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포럼에 참석해 남북경제공동체 수립, 남북한 軍備(군비)통제, 남북연합단계 준비를 골자로 하는 통일 정책과 非核化(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씨는 "안보에서는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韓美군사동맹 위주에서 多者(다자)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 합동 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軍으로의 변경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화외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연결 짓기 위해 국보법 개폐, 징병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병역제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발맞춰 募兵制(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등을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서 씨는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총 6728명 서명)에서 학계인사(민교협, 교수노조) 자격으로 국보법 폐지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정일 정권의 '우리식 인권'을 비판 없이 소개

한편 천재교육刊 교과서 '단원탐구'(402페이지)의 자료(나)는 '역사문제연구소' 기획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를 인용한 내용이다. 자료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은폐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우리식 인권'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반발하며 내세워진 북한 金正日 정권의 핑계에 불과하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의 著者인 김성보(충북대 사학과 교수), 기광서(조선대 정외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東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은 각각 역사문제연구소 副소장, 연구위원,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이신철은 천재교육刊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다.

역사문제연구소는 강만길, 임헌영, 박원순, 이종석 등의 親北인사들이 각각 고문, 운영위원, 감사, 연구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 가운데 임헌영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등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임 씨는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로 출소,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원순은 2008년 2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했던 인물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국가보안법연구》(全3권)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親北 · 左派단체를 후원해왔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이처럼 左편향적 사고를 가진 학자와 左派단체의 글을 인용하고,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인권문제 자체의 본질을 흐리는 기술로 사실을 왜곡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을 그대로 소개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및 단체의 보고서나 탈북자 및 북한 주민의 증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김일성 · 김정일의 만행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정권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남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사진까지 곁들여 자세하게

이에 비해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6種의 모든 교과서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中北 국경에서 목격되고 있고, 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거나 점잖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가, 과거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고 날카로웠다.

각 교과서마다 민주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 있는데, 각각 6페이지에서 많게는 16페이지까지의 분량이다. 교과서들은 이 단원에서 사진 및 구체적 사례까지 첨부해가며 남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진보당 사건(조봉암)-4 · 19 시위-유신체제 당시-5 · 18-삼청교육대-박종철-이한열-철거민 문제-전태일 焚身(분신) 사건이 6種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등장한다.

▲ 미래엔컬처그룹

그러나 시위 진압 경찰에 의해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되자(1960. 4. 11) 격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59페이지)

미국 대통령 카터를 비롯한 국제 사회도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난하였다. (366페이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 1987년 1월 경찰은 한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발표하였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이었다. 국민들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야만적 고문과 이를 은폐하려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였다. 또한, 민주화 요구를 폭력과 살인으로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 분노들은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승화되었다. 과연 고문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전개되었을까? (368페이지)

삼청교육대: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집단 수용하여 군대식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었다.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행사로서 인권을 유린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368페이지)

전태일은 평화 시장의 노동 실태를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언론도, 정치인도 이들을 외면하였다. 반공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자칫하면 공산주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들은 남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교과서의 차별을 느끼게 해준다.
6種 교과서에 쓰인 남한 인권탄압 사례 사진(上)은 4 · 19 혁명, 5 · 18 사태, 박종철, 이한열 사건 등 많은 데 비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사진(下)은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선 북한 주민들, 중국 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在中 탈북자 등 두 장으로 두 교과서에만 등장했다.

속에서 근로 기준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는 약자였다. 이에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383페이지)

▲ 지학사

유신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306페이지)

▲ 천재교육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과 무기 징역이 확정되자 가족들이 절규하고 있다. 사형 선고 후 20여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7년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363페이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광주 시민군 궐기문, 1980. 5.25) (367페이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369페이지)

▲ 비상교육

(사진설명)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경찰: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다. (349페이지)

김형은 체불 임금 요구하며 농성 중에/ 사장 놈 흔들다 고발되어 잡혀오고/ 열다섯 난 송군은 노가다 일 나간/ 어머니 마중 길에 불량배로 몰려 끌려오고/ 딸라 빚 밀려 잡혀온 놈/ 시장 좌판 터에서 말다툼하다 잡혀온 놈/ 술 한잔하고 고함치다 잡혀온 놈/ 춤추던 파트너가 고관 부인이라 잡혀온 놈… –박노해 '삼청교육대' 중 일부– (358페이지)

▲ 삼화출판사

선거 당일인 3월15일 오후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다. 경찰은 이를 무차별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종된 학생이 약 한 달 뒤 마산 앞바다에 참혹한 시신으로 떠올랐다.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격렬하게 시위를 일으켰다. (347페이지)

국제여론도 점차 나빠졌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다. (354페이지)

▲ 법문사

약 한 달 후인 4월11일,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43페이지)

계엄군은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는 점차 시민 봉기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 군중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으며, 시위는 점차 전라도 일대로 확산되었다.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완전히 봉쇄하여 광주를 고립시켰다. (347페이지)

이에 반발하여 학생들의 시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6월9일에는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48페이지)

교과서 筆陣(필진), 의도적으로 南韓 폄하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 자료로도 남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교과서의 차별을 느낄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상황이 담겨 있는 사진은 6種 교과서를 통틀어 단 두 종류뿐인 것에 비해 남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사진은 무수히 많았다.

교과서 집필진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보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의 인권을 더 가혹하게 평가했다. 이는 전체주의적 독재집단인 북한의 인권에 침묵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북한의 진실

▲ **북한 인권문제:** 1990년대 심각한 식량난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餓死(아사)하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1996~1997년 절정에 달했는데, 당시 在中(재중) 탈북자는 20만~30만 명에 달했다. 북한 당국은 검거된 탈북자를 심하게 고문하고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가혹하게 처벌했다. 그 이후로도 낙후되고 억압적인 독재 체제로부터 탈출하려는 이들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 탈북자의 경우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이나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치외법권 지역인 중국 주재 외교공관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남 아시아 및 몽골 등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 **북한 정치범수용소:** 북한은 '정치적 죄'를 범한 자와 그 가족을 사회와 격리시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관리소, 완전통제구역, 닫힌 구역, '0000부대' 등으로 불린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 후반 남한을 도운 치안대나 적대계급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70년대부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반대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공포정치로 사회를 통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소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쇄 및 통합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6곳이 운영 중이며,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용소는 수감되면 출소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과, 일정기간 동안 강제노동을 한 후 수형 기간이 끝나면 석방되는 혁명화 구역(15호 요덕수용소 혁명화 구역, 18호 북창수용소)으로 구분된다. 죄명은 정치적 발언, 탈북과 한국행, 反정부 행위, 김일성 父子에 대한 비판 등이다. 당사자 외 대부분의 수감자는 수감 사유와 죄명을 알지 못한 채 부모, 조부모, 친척의 잘못 때문에 수감된다.

▲ **북한의 마약 생산 및 판매:** 북한은 국가 주도로 마약을 제조, 몰래 해외에 팔고 있다. 1970년대부터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1992년 김정일이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국가 공식사업으로 부각시키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마약을 100만 달러 이상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거나, 마약 수출을 위해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의 범죄 조직과 손을 잡기도 했다.

▲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및 유통:** 1989년 필리핀에서 북한 외교관의 외교행낭에서 북한産으로 보이는 위조지폐가 처음 발견되었다. 1994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북한 지도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위조지폐가 적발되었다. 1996년 3월에는 일본 적군파였다가 북한에 망명한 이가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동남아에서 위조지폐 300만 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5년 미국은 중국계 범죄 조직을 단속하면서 100달러짜리 북한産 위조지폐 400만 달러 상당을 압수했다. 2006년 美 의회의 연구소는 북한이 매년 약 1500만~2500만 달러에 이르는 위조지폐를 찍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어도 4500만 달러 이상의 위조 달러가 적발되었다고 보고했다.

▲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는 6·25 전쟁 당시 납북자 8만 2641명, 전쟁 이후 납북자 514명, 외국인 납북자 286명 등이 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남조선의 인테리를 데려오라'는 김일성의 지령으로 정치인, 공무원, 학자, 교육자, 의료인, 법조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납치됐다. 戰後(전후)에는 KAL기 및 어선 납치 등을 통해 많은 민간인들이 납치되었다. 북한은 납치 사실에 대해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500여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생사확인 요청도 거부하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납치의 경우 김정일이 1976년 외국인 납치를 지시한 이후 대거 일어났다. 일본인 납치자 17명 등을 포함해 중국·프랑스·이탈리아·레바논·네덜란드·루마니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요르단·태국 등 10여 개국에서 286명이 납치되었다. 2002년에 있었던 고이즈미-김정일 회담에서 김정일은 납치를 시인하고 5명의 일본인 납치자들을 돌려보낸 바 있으나, 그 이후로 납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金正日의 비자금:** 북한은 1990년 초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초래된 경제난으로 인해 전례 없는 외화 고갈의 시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와중에도 군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해마다 김정일의 비자금은 중단 없이 충전돼 왔다. 한국 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정일이 매년 6000만~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김정일의 비자금은 20억~40억 달러에 이른다. 김정일이 비자금을 벌어들이는 주요 통로는 ①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 제3세계 나라들에 미사일과 핵물질, 핵무기 기술 수출 등을 통한 외화 획득 ② 양귀비 등의 재배 및 해외 범죄 조직과 공모한 마약밀매 ③ 외화난을 타계하기 위한 초정밀 위조달러(일명 슈퍼 노트) 제작 및 해외 불법 유통 ④ 헌납금, 생일 충성자금 등 북한 주민들의 '충성의 외화벌이'를 통한 비축 ⑤ 조총련, 남한을 통한 외화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 **금수산 기념궁전:** 1994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김일성의 시신은 영구보존 처리되어 금수산 의사당에 안치되었다. 김정일은 금수산 의사당에 화강석 70만 개를 깔고 주요시설을 순금으로 치장하는 데 9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당시 북한 주민 대부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액수의 돈이었다.

2. 對南 도발에 침묵

미래엔컬처그룹·법문사·삼화출판사刊, 7대 주요 對南도발 사례 전부 묵살

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건국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테러 사례는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독자노선' 등을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美 EC-121機 피격사건'(1969년), '8·15 대통령 암살미수사

	1 · 21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EC-121機 격추	8 · 15 저격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테러	천안함 폭침
미래엔 컬처그룹	-	-	-	-	-	-	-
법문사	-	-	-	-	-	-	-
비상교육	'청와대 습격 시도' (379페이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379페이지)	-	-	-	-	-
천재교육	'1 · 21 청와대 습격사건' (394페이지)	'푸에블로호 나포' (394페이지)	-	-	-	-	-
삼화출판사	-	-	-	-	-	-	-
지학사	'1 · 21 사건' (324페이지)	'푸에블로호 나포' (324 페이지)	-	-	'아웅산 테러 사건' (325 페이지)	-	-

교과서가 묵살한 북한의 7大 주요 도발 분석표

건'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74년),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1983년), 'KAL기 폭파 테러사건' (1987년), '천안함 爆沈' (폭침)(2010년)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7대 주요 도발사건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

6種의 교과서 중 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삼화출판사刊 교과서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된 사례를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를 "무장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상황을 고조시켰다"면서 포괄적으로 서술했다. 이 서술 바로 앞에는 남한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이 같은 서술은 마치 강경한 남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인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1960년대 남한에서는 5 · 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가 반공을 내세워 4 · 19 혁명 이후 분출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평화 통일 운동을 탄압하고, '승공 통일'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도 남조선 혁명론을 바탕으로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391페이지)

법문사刊 교과서 역시 구체적인 사례의 언급 없이 '대남 도발'로 짧게 처리했다. '군부 내의 강경파'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 군부 내의 강경파에 의한 대남 도발이 자행되면서 남북간의 갈등은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340페이지)

삼화출판사刊 교과서에도 '대남 도발을 자행했다'는 표현만 등장했다. 이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반공정책과 대남도발을 '대결'로 표현, "결과적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편향적 해석을 했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강력한 반공 정책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대남 혁명 전략으로 무장간첩을 파견하는 등 대남 도발을 자행하였다. 남북한의 한치도 양보 없는 대결은 결과적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되었다. (382페이지)



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중 북한의 조종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총탄에 육영수 여사가 맞아 쓰러진 직후, 청와대 경호원들이 연단 앞으로 나와 보호막을 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연단 뒤로 잠시 몸을 감췄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1 · 21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짧은 설명과 함께 생포된 무장간첩 김신조의 사진을 좌측 상단에 게재했다.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도 본문에 짧게 기술돼 있었다. 위의 7대 주요 도발 사건 외로는, 1968년 11월에 일어난 울진 · 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실렸다. 도발 내용 후에는 '실미도 사건'(북파 공작원 관련)이 몇 줄에 걸쳐 다뤄졌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간첩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게다가 이틀 뒤엔 미국 정보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북미 관계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해 11월에는 북한이 무장 부대를 울진 삼척 지역에 세 차례나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혼란을 꾀하였다. 1 · 21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남한에서는 대북 경각심이 고조되어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또한 실미도에 특수 부대원을 모아 북한을 기습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취소되자 부대원들이 탈주하여 무장 난동을 부리다 군경과 교전 끝에 대부분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1960년대 말 이후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다. (394페이지)

지학사刊 교과서는 1 · 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본문에 다뤘으며, 교과서 중 유일하게 아웅산 테러사건을 사진과 함께 본문에 실었다.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내세워 경제 발전을 통한 국력 증강에 주력하였고, 밖으로는 외교 강화를 통해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1 · 21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 ·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으로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 (324페이지)

전두환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아웅산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남북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아웅산 테러사건(사진 설명): 북한이 1983년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대상으로 폭탄을 터트려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325페이지)

비상교육刊 교과서도 1 · 21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대해 언급을 했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가 1987년 12월15일 자살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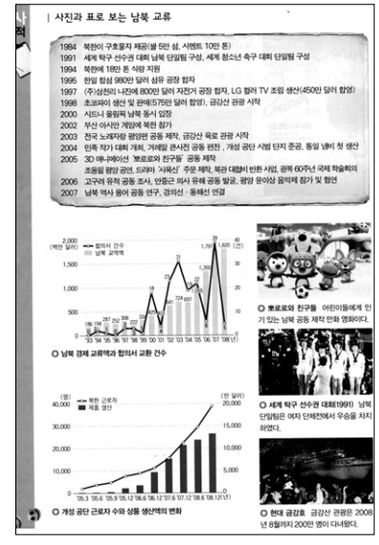
그러던 중 남한에서 4 · 19 혁명이 일어나자 북한은 당분간 남북한 양 체제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과도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1960). 그러나 북한은 청와대 습격 시도, 무장간첩 침투,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등 대남 도발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다.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1968년 1월에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다. 북한은 납치 후 약 11개월 후에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하였다. (379페이지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보충 설명 부분)

南北교류의 장점만 강조, 對北 불법 송금 사건 묵살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짧게 처리한 북한의 對南도발에 비해,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를 들인 '사진과 표로 보는 남북 교류'(395페이지) 등을 싣는 등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해가 갈수록 남북한의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프상의 증가하는 수치만을 소개하며 성공한 듯 묘사되고 있을 뿐, 개성공단 근무자가 북한에 억류된 사례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적자 상황 등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는다. 金大中 정권이 '남북교류'를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에게 몰래 보낸 對北송금 사건 역시 찾아볼 수 없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후 2010년까지 북한은 要人(요인) 암살, 항공기 테러, 육상과 해상 도발, 대량살상무기 발사 등 무려 42만 5000여 차례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중 武力도발은 470여 건으로, 휴전 이후 북한의 큰 도발이 없었던 해는 1954년, 1956년, 1972년, 1988년, 1989년으로 단 5년에 불과하다. 年 평균 8.2회 꼴이며 이로 인해 軍警(군경), 민간인 합쳐 4119명이 납치되거나 사망했다. 연대별 주요 도발 건수를 보면 1950년대 10건, 1960년대 78건, 1970년대 35건, 1980년대 18건, 1990년대 45건, 2000년대 35건이다.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 등의 신종 대남도발도 발생하고 있다.

앞에선 웃고, 뒤에선 도발을 꾀하는 북한의 和戰兩面(화전양면) 전술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1960년대에는 연방제 제의 후 1·21 무장공비 및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7·4 남북공동성명 후 땅굴을 굴착하는 한편 8·18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다. 1980년대에는 3者회담 제의 후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탄테러가 일어났고, '민족단합 5개항'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AL 858機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1990년대에는 정주영 씨의 소떼 방북과 차관급 회담 제의 직후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이 일어났다. 2002년의 서해교전이 있었던 날은 韓日월드컵의 4강전이 있었던 날이었으며,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중 일어났다.



미래엔컬처그룹刊의 '사진과 표로 보는 남북교류'. 이 내용으로는, 남북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점차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북한의 서해 도발, 6種 교과서 中 한 곳에서만 취급

6種의 高校 한국사 교과서 중 북한의 서해 도발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천재교육刊 교과서뿐이었다. 천재교육刊에서도 '서해교전'이라는 용어는 1회에 그쳤다.

서해교전은 통상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을 말한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15일, 북한 경비정 2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여 척과 함께 남한 NLL을 침범한 사건이다. 해군 초계함과 고속

자료 〈북한의 對南도발 주요 日誌〉

1955년	5월, 대성호 납북(10명 피랍)
1958년	2월16일, KNA機 납치(3월6일, 탑승자 32명 중 24명 송환)
1967년	1월19일, 해상분계선 인근에서 순찰 중인 해군 '당포함' 격침. 39명 사망, 40명 부상
	9월5일, 포천 경원선 철도 폭파. 열차 5량 중 3량 탈선
1968년	1월21일, 청와대 습격기도 124군부대 무장간첩 31명 침투. 경관 2명, 민간인 5명 살해
	1월23일, 美 푸에블로호 납북(12월에 승무원 82명 전원 송환)
	10월30일~11월16일, 울진 · 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 120명이 출몰, 이승복 등 18명 살해
1969년	4월15일, 美 정찰기 EC-121기 격추. 승무원 31명 전원 사망
	12월11일, KAL 'YS-11' 기 납북(1970년 2월14일 탑승자 · 승무원 51명 중 39명 송환, 12명 억류)
1970년	6월5일, 해군함정 'I-2 정' 연평도 근해 공해상에서 납북. 미귀환 승무원 20명 전사 처리
	6월22일,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간첩 1명 폭사, 1명 도주
1974년	2월15일, 어선 '수원 32호' 격침, '수원 33호' 피랍(어부 30명)
	8월15일, 북한의 조종을 받은 在日동포 문세광, 朴正熙 대통령 저격 미수. 육영수 여사 사망
	11월15일, 임진강 고랑포 제1땅굴 발견
1975년	3월24일, 철원 제2땅굴 발견
	9월11일, 전북 고창 무장공비 침투. 아군 경계병 3명 전사
1976년	8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도끼 만행. 미군 2명 피살, 韓美 양국군 경비병 8명 중상
1977년	7월31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 영화배우 윤정희 부부 납치 미수
	8월~1978년 8월, 서해 고교생 납치. 5명 납북
1978년	1월14일, 영화감독 신상옥 · 영화배우 최은희 부부 납치. 5년간 억류
	10월17일, 판문점 제3땅굴 발견
1979년	4월15일, 노르웨이에서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 씨 납치
1980년	3월23일, 한강 하구 무장공비 침투. 3명 전원 사살
	6월21일, 충남 서산에서 무장간첩선 격침, 9명 사살, 1명 생포
1981년	3월27일, 강원도 금화에 3인조 무장간첩 침투, 1명 사살
1982년	5월15일, 동해안 2인조 무장공비 침투. 1명 사살, 1명 생포
1983년	10월9일, 버마(現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全斗煥 대통령 수행원 17명 순직, 15명 중경상
	12월3일, 부산 다대포 간첩 침투. 2명 생포
1984년	11월23일, 판문점 총격사건. 北경비병 3명, UN경비병 1명 사망
1986년	9월14일, 김포공항 폭탄 테러. 5명 사망, 32명 중경상
1987년	1월15일, 백령도 근해 조업 중 '제27동진호' 납북(김만철 일가 귀순에 선원 12명 억류)
	10월7일, 북 경비정에 어선 '제31진영호' 피침. 11명 실종
	11월29일, KAL 858기 폭파. 탑승자 115명 전원 사망(12월1일 폭파범 김승일 자살, 김현희 생포)
1990년	3월3일, 양구 제4땅굴 발견
1991년	2월5일, 韓中 합작어선 '남해호' 납북(2월28일 한국인 5명, 중국인 13명 전원 귀환)
1992년	5월22일, 무장군인 3명 비무장지대(DMZ) 침투. 3명 전원 사살
1993년	11월30일, 강화 교동도 무장공비 3명 침투
1995년	5월30일, 북한 경비정 서해에서 '1986 우성호' 납치(12월26일 선원 5명 송환, 3명 사망)
	7월9일, 중국 연길에서 안승운 목사 납북
	10월17일, 임진강 무장간첩 침투. 1명 사살, 1명 도주 복귀
	10월24일, 충남 부여 무장간첩 2명 침투. 1명 사살, 1명 생포(김동식)
1996년	9월18일, 잠수정(350t)으로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13명 사살, 11명 집단피살, 1명 도주, 1명 생포)
	10월1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
1997년	7월16일, 국군 경고를 무시하고 14명의 북한군 남하. 23분간의 격렬한 총격전 발생
	10월17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2명 납북(10월21일 송환)
	10월27일, 직파 부부간첩 최정남 · 강연정 검거. 강연정 음독 자살
1998년	6월22일, 노동당중앙위작전부 산하 잠수정 속초 근해 침투. 승조원 · 공작원 9명 선내 자살
	7월12일, 동해시 무장간첩 침투. 잠수복 착용 무장간첩 사체 1구 발견
	11월20일, 강화도 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아군에 발각되자 도주
1999년	3월15일, DMZ 내 북한군 11명, 유엔司측 관리 군사분계선 표지물 상판 북측으로 가져감
	6월15일, 1차 연평해전. 20~30명 북한군 사망, 해군 수 명 부상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 해군 6명 전사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1명 사망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북한군 1명 사망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승조원 46명 순직
	11월23일, 연평도 포격. 해병 2명, 민간인 2명 사망

정 10척은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기式 충돌로 대응했다. 이어 北 경비정이 선제사격을 개시, 양측 간에 交戰(교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북한 어뢰정 한 척이 침몰, 2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아군 측 해군 7명이 부상당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한 NLL을 침범해 일어난 사건이다. 북한 경비정은 남측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계속 南下, 우리 측 참수리號에 선제공격을 가했다.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戰死(전사)했다. 대청해전은 2009년 11월10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383호가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25호에 조준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모두 북한의 의도적인

NLL 침범으로 발생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서해 교전'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했을 뿐, 북한의 원인 제공, 우리 해군의 희생(6명 戰死)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듬해 금창리 핵 시설 의혹 문제, 서해 교전 사건 등이 일어나 긴장이 고조되었다. (397페이지, 9단원 4장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강행 등 잦은 군사 도발로 남북관계는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392페이지)라고만 했을 뿐,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비상교육刊 교과서도 "2007년에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384페이지)고만 썼을 뿐 서해교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법문사, 지학사刊 교과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6 · 15 공동선언 관련 내용은 있으나 北의 서해도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삼화출판사刊 교과서 역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추진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자…"라고만 언급했다.

이처럼 6種 교과서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자세히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한 서해 도발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2010년 3월26일, 北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爆沈(폭침)사건도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 6종 교과서의 검정 날짜가 2010년 7월30일이므로 저자의 의지가 있었다면 기술이 가능했을 것이다.

反共을 惡으로 가르친다

高校 한국사 교과서가 남한 군사정부의 부정적인 면은 자세히 기술하면서 북한의 도발행태는 수록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남북관계'하면, 과거 6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북한의 對南도발이 아닌, 그럴싸하게 포장된 채 소개되는 남북교류만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실행됐던 反共(반공)정책의 원인이 북한에 있었음을 모른 채 '반공=惡'으로 인식하게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생들이 북한의 전술을 올바로 깨닫고 反共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對南도발 내용이 반드시 교과서에서 다뤄져야 한다.

함께 보기

《천안함과 연평도》 (김성만 著, 상지피앤아이刊)
《국민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김구섭 著, 한국국방연구원刊)
《수용소의 노래》 (강철환 著, 시대정신刊)
《북한인권백서 2010》 (통일연구원刊)
《만화 김정일》 (이우정 著, 시대정신刊)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장진성 著, 조갑제닷컴 刊)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Kimjongilia) (N. C. 헤이킨 감독, 2009년 作)
뮤지컬 '요덕스토리' (정성산 감독)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

펴낸이 | 趙甲濟
펴낸곳 | 조갑제닷컴(chogabje.com)
초판1쇄 발행 | 2011년 8월8일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3호

전화 (02)722-9411~3
팩스 (02)722-9414

등록번호 | 제300-2005-202호
ISBN 978-89-92421-76-8

값 13,000원

*파손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